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2025. 11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 1

Ⅱ. 심사경과 ····· 2

Ⅲ.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6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 임> 참조 ····· 115

Ⅴ. 대체토론의 요지 ····· 115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16

Ⅶ. 찬반토론의 요지 ····· 120

Ⅷ. 심사결과 ····· 120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21

Ⅹ. 부대의견 ····· 121

※ 첨부: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139

※ 붙임: 202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213

2026년도 정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정무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출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라. 금융위원회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Ⅲ.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국가보훈부 】

Ⅰ.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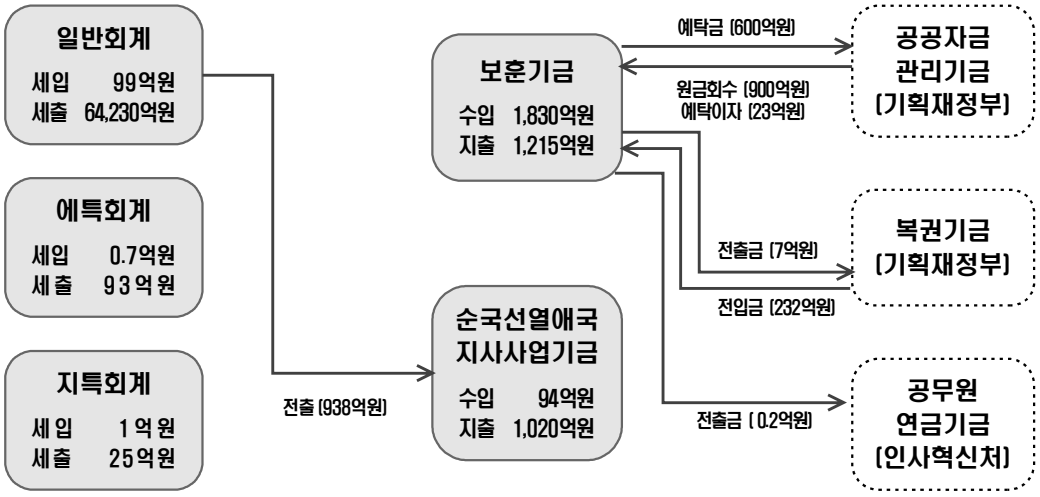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6,582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3% 증가함.

○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4,23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원, 보훈기금 1,215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20억원임.

〈 총지출 6조 6,582억원 〉



2.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6년도에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2026년도 중점과제 〉

■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 강화
  ○ 보훈보상·취업(生), 요양(老), 보훈의료(病), 국립묘지 안장(死)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보훈문화 조성사업 추진
  ○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국민적·역사적 자산으로 기억·보전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 실현,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보훈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80.2%)에 집중되어 있고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14.2%)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화된 의료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음.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1.4%)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포상, 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지원 등 예우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0.6%)을 위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군인에 대한 각종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3.6%)하기 위해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52,308	80.2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35	14.2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944	1.4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381	0.6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58	3.6
합 계	**65,226**	**100**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0.2% 감소한 98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국립묘지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2025년 대비 14.2% 증가한 7억 6,500만원이고, 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금 등으로 2025년 대비 1.0% 감소한 87억 300만원이며,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은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2025년과 동일한 3억 6,500만원이며, 관유물 매각대는 차량 매각대 등으로 2025년 대비 62.9% 감소한 1,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61	9,846	△15	△0.2
□ 재산수입	670	765	95	14.2
- 토지대여료	65	66	1	1.5
- 건물대여료	94	98	4	4.3
-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601	90	17.6
□ 경상이전수입	8,791	8,703	△88	△1.0
- 과태료	88	11	△77	△87.5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변상금	23	12	△11	△47.8
- 위약금	28	2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365	365	-	-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	-
- 기타잡수입	362	362	-	-
□ 관유물 매각대	35	13	△22	△62.9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35	-	-

2)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3.3% 증가한 6조 5,167억 4,8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309,226	6,516,748	207,522	3.3
□ 국가보훈부 운영	6,216,643	6,422,994	206,351	3.3
- 인건비	106,652	113,166	6,514	6.1
- 기본경비	12,375	12,735	360	2.9
- 주요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내부거래(기금전출)	92,583	93,754	1,171	1.3

※ 총계기준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운영 예산안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6조 4,229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5년 대비 각각 65억 1,400만원(6.1%), 3억 6,000만원(2.9%)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994억 7,700만원(3.3%)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산안은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 예산으로 2025년 대비 11억 7,1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5억 1,400만원(6.1%) 증가한 1,131억 6,6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12개 국립묘지) 공무원 등 인건비임.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06,652	113,166	6,514	6.1
□ 보수(110-01)	103,123	109,884	6,761	6.6
□ 기타직보수(110-02)	2,718	2,403	△315	△11.6
□ 연가보상비(110-05)	811	879	68	8.4

(3) 기본경비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6,000만원(2.9%) 증가한 127억 3,5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374	12,734	360	2.9
□ 인건비(110)	184	199	15	8.2
□ 운영비(210)	9,136	9,452	316	3.5
□ 여비(220)	1,655	1,672	17	1.0
□ 업무추진비(240)	477	473	△4	△0.8
□ 직무수행경비(250)	812	820	8	1.0
□ 보전금(310)	29	32	3	10.3
□ 민간이전(320)	65	70	5	7.7
□ 유형자산(430)	16	16	-	-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94억 7,700만원(3.3%) 증가한 6조 2,970억 9,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17,699	94,361	△23,338	△19.8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보훈행정	19,056	19,076	20	0.1

□ 보훈심사및보상(1100)

○ 보훈심사및보상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수당·수시보상금과 같은 보훈급여금과 등록·신체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2.3% 증가한 5조 2,18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가장 비중이 큰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 지표를 감안 5.0% 인상하고, 상이7급 보상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1.5% 인상하였으며 재해부상군경7급 부양가족수당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3% 증가한 3조 7,175억 500만원이 편성됨.

○ 상시·수시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8.1%)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 감소한 527억 2,400만원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단가는 동결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8.9% 증가한 1,092억 8,700만원임.

○ 6·25자녀수당은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 단가를 5.0% 인상하고, 신규 승계유자녀는 격차 해소를 위해 7.3%를 추가 인상 반영하였으며, 인원 감소분(△7.9%)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1% 감소한 4,198억 300만원임.

○ 고엽제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3.1%)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8% 증가한 3,218억 2,400만원임.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지급액을 3만원 인상하고, 각각 인원 변동분(△19.8%, △14.0%, △10.8%)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5.1% 감소한 391억 4,600만원, 8.3% 감소한 5,380억 9,900만원, 4.9% 감소한 13억 6,700만원임.

○ 유공자(유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2025년과 동일한 96억 9,400만원이며,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등이 복무 중 사망·상이 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도 2025년과 동일한 1억 7,800만원임.

○ 보상금 지급관리는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례연구 등 경비로 2025년 대비 5.2% 감소한 9,200만원임.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및 상이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2.0% 감소한 15억 9,800만원임.

○ 등록관리는 무인민원발급기 보훈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4.3% 증가한 41억 4,500만원임.

○ 고엽제환자 검진은 검진인원 및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9.6% 감소한 24억 1,200만원, 고엽제 역학조사는 제7차 역학조사 완수를 위한 마지막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9.8% 감소한 1억 5,2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심사및보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수당	1,518,748	1,482,250	△36,498	△2.4
- 간호수당	54,513	52,724	△1,789	△3.3
- 생활조정수당	84,754	109,287	24,533	28.9
- 6·25자녀수당	428,693	419,803	△8,890	△2.1
- 고엽제수당	316,267	321,824	5,557	1.8
- 무공영예수당	46,117	39,146	△6,971	△15.1
- 참전명예수당	586,966	538,099	△48,867	△8.3
- 4·19혁명공로수당	1,438	1,367	△71	△4.9
○ 수시보상금	9,969	9,964	△5	△0.1
- 사망일시금	9,694	9,694	-	-
- 재해보상금	178	178	-	-
- 보상금지급관리	97	92	△5	△5.2
○ 보훈심사	1,631	1,598	△33	△2.0
-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31	1,598	△33	△2.0
○ 등록심사	6,306	6,709	403	6.4
- 등록관리	3,336	4,145	809	24.3
- 고엽제환자검진	2,667	2,412	△255	△9.6
- 고엽제역학조사	303	152	△151	△49.8

□ 보훈단체지원(1200)

○ 보훈단체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6.0% 증가한 384억 5,4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 복지지원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7% 증가한 379억 5,400만원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2025년 대비 75.0% 감소한 5억원임.

〈 2026년도 보훈단체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281	37,954	3,673	10.7
- 지방보훈회관건립	2,000	500	△1,500	△75.0

□ 보훈의료복지(2100)

○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병원 진료비 인상과 준보훈병원 도입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5.0% 증가한 7,693억 2,400만원이 편성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3.0% 증가한 217억 7,600만원임.

○ 보훈병원 진료는 진료비 인상 및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4.8% 증가한 4,504억 8,300만원임.

○ 위탁병원 진료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병원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2% 증가한 2,694억 8,600만원임.

○ 보철구 지급은 2025년과 동일한 60억 2,600만원임.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제대군인 보철구 사업을 국가유공자 보철구 사업과 통합 운영으로 2025년 대비 2.7% 감소한 23억 100만원임.

○ 종합재활체육센터 관리·운영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체육지원 프로그램 다각화로 인한 경비 절감으로 2025년 대비 2.9% 감소한 25억 9,900만원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서관동 증축 4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9.7% 증가한 67억 2,100만원임.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확충 3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30.0% 증가한 99억 3,2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의료복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의료지원	649,800	728,296	78,496	12.1
- 보훈병원진료	392,296	450,483	58,187	14.8
- 위탁병원진료	249,113	269,486	20,373	8.2
- 보철구지급	6,026	6,026	-	-
-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01	△64	△2.7
○ 의료환경개선	8,236	19,252	11,016	133.8
-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678	2,599	△79	△2.9
-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4,490	6,721	2,231	49.7
-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1,068	9,932	8,864	830.0

□ 생활안정지원(2200)

○ 생활안정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립능력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한 교육·취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 대비 6.7% 감소한 270억 7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중 수업료면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0% 감소한 224억 500만원이며, 학습보조비는 지원인원 현실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3.1% 증가한 15억 2,800만원임.

○ 취업지원은 취업능력 개발비 인상, 직업상담사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9.1% 증가한 30억 7,400만원임.

〈 2026년도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교육지원	26,134	23,933	△2,201	△8.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24,893	22,405	△2,488	△10.0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1,241	1,528	287	23.1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보훈문화(3100) 및 회계기금간거래(8400)

○ 보훈문화 및 회계기금간거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2.2% 증가한 1,892억 6,800만원이 편성됨.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사업 이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7.7% 증가한 350억 9,000만원임.

○ 보훈문화 조성은 국외 사적지탐방 확대, 보훈문화관 건립 연차소요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7.8% 증가한 166억 1,700만원임.

○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사업 효율화를 통한 참여형 게임 등 예산 감액으로 2025년 대비 29.9% 감소한 42억 1,000만원임.

○ 현충시설 건립은 독립의 전당 건립 연차소요를 반영하고 종료사업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0% 감소한 46억 5,900만원임.

○ 현충시설 관리는 LA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사업 연차소요, 노후 현충시설 안전진단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8.3% 증가한 102억 9,900만원임.

○ 기념관 관리운영은 기념관 직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백범김구기념관 노후시설 교체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0% 증가한 84억 1,100만원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은 유사·중복 사업인 국외사적지 탐방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7% 감소한 87억 9,200만원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은 2025년과 동일한 7억 1,600만원임.

○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현실화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5% 증가한 40억 5,400만원임.

○ 호국보훈의달 행사는 소속기관 행사비 및 민간단체 계기행사 지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8% 감소한 10억 800만원임.

○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은 광복 80주년 계기 행사 종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0% 감소한 16억 5,800만원임.

○ 순애기금 전출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5년 대비 1.3% 증가한 937억 5,4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문화 사업 및 회계기금간거래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85,113	189,268	4,155	2.2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 독립기념관	27,479	35,090	7,611	27.7
-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7,479	35,090	7,611	27.7
○ 보훈문화진흥	20,108	20,827	719	3.6
- 보훈문화조성	14,104	16,617	2,513	17.8
-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6,004	4,210	△1,794	△29.9
○ 현충시설	28,709	32,161	3,452	△12.0
- 현충시설건립	4,756	4,659	△97	△2.0
- 현충시설관리	6,944	10,299	3,355	48.3
- 기념관관리운영	7,785	8,411	626	8.0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운영	9,224	8,792	△432	△4.7
○ 기념사업	16,234	7,436	△8,798	△54.2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716	716	-	-
- 보훈기념행사	3,954	4,054	100	2.5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호국보훈의달행사	1,130	1,008	△122	△10.8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745	1,658	△87	△5.0
- 광복80주년기념사업	8,689	-	△8,689	순감
□ 회계기금간거래	92,583	93,754	1,171	1.3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출금	92,583	93,754	1,171	1.3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3200)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예우 지원, 12개 국립묘지 관리 및 3개 국립묘지 조성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19.8% 감소한 943억 6,100만원이 편성됨.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은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전산화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5.7% 증가한 26억 1,500만원임.

○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는 공적 전수조사 연구원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1% 증가한 28억 1,400만원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실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7.4% 감소한 60억 400만원임.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은 디지털 미디어월 영상 제작,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7.2% 증가한 12억 8,600만원임.

○ 국립서울현충원은 상수도관 교체사업 종료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6.7% 감소한 105억 7,400만원임.

○ 국립대전현충원은 노후 순환버스 교체, 원내 기와 보수공사 연차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3% 증가한 119억 5,900만원임.

○ 민주묘지(3개소)는 유가족과 참배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경비 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4% 증가한 27억 4,400만원임.

○ 국립호국원(6개소)은 묘역 확충사업 완료(영천·임실·이천)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1.4% 감소한 241억 6,800만원임.

○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1% 증가한 7억 2,300만원임.

○ 국립묘지 조성은 연천현충원 및 횡성·장흥호국원 조성 연차소요와 충남권 국립묘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7% 증가한 314억 7,4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17,699	94,361	△23,338	△19.8
○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예우	10,957	11,433	476	4.3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795	2,615	820	45.7
-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2,678	2,814	136	5.1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484	6,004	△480	△7.4
○ 국립묘지조성및관리	106,742	82,928	△23,814	△22.3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937	1,286	349	37.2
- 국립서울현충원	11,333	10,574	△759	△6.7
- 국립대전현충원	11,352	11,959	607	5.3
- 민주묘지(3개소)	2,604	2,744	140	5.4
- 국립호국원(6개소)	49,759	24,168	△25,591	△51.4
- 국립신암선열공원	708	723	15	2.1
- 국립묘지조성	30,049	31,474	1,425	4.7

□ 제대군인지원(4100)

○ 제대군인지원은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국제교류협력, 참전 관련 기념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1.4% 증가한 353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행사 등 통합 개최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2.0% 감소한 152억 3,300만원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최근 3년('22~'24) 평균 신청 인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9.8% 증가한 95억 8,3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은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 증가한 82억 5,300만원임.

○ 참전기념행사는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제작 및 수여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9% 증가한 22억 6,200만원임.

〈 2026년도 제대군인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제대군인생활안정	24,692	24,816	124	0.5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7,310	15,233	△2,077	△12.0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382	9,583	2,201	29.8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10,168	10,515	347	3.4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7,991	8,253	262	3.3
- 참전기념행사	2,177	2,262	85	3.9

□ 보훈행정(7100)

○ 보훈행정은 청관사 임차 및 시설개선, 기관운영 등 일반행정, 정보화 사업 등으로 2025년 대비 0.1% 증가한 190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은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준공에 따른 노후 집기류 교체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3.2% 증가한 10억 200만원임.

○ 송무 지원은 의학자문·신체감정료 단가 인상 및 패소사건 소송비용

현실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0.7% 증가한 5억 6,000만원임.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청년인턴 인원 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1% 감소한 12억 3,200만원임.

○ 보훈정책홍보는 모두의 보훈 확산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7.4% 감소한 7억 8,400만원임.

○ 이동보훈팀 운영은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과 이동보훈차량 임차료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2.0% 증가한 22억 9,000만원임.

○ 나라사랑신문 발간은 우편요금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8% 증가한 22억 1,400만원임.

○ 정보화사업은 통합보훈시스템 등 보훈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4.0% 감소한 42억 5,3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행정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행정	19,056	19,076	20	0.1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236	5,486	250	4.8
- 청사유지보수	1,302	1,302	-	-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752	1,002	250	33.2
- 관사임차	3,182	3,182	-	-
○ 일반행정	4,932	4,596	△336	△6.8
- 송무지원	398	560	162	40.7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40	1,232	△108	△8.1
- 보훈정책개발	1,278	1,161	△117	△9.2
- 사회복무요원운용	836	859	23	2.8
- 보훈정책홍보	1,080	784	△296	△27.4
○ 보훈서비스지원	4,456	4,741	285	6.4
- 이동보훈팀운영	2,044	2,290	246	12.0
- 보훈상담센터운영	237	237	-	-
- 나라사랑신문발간	2,175	2,214	39	1.8
○ 정보화	4,432	4,253	△179	△4.0
- 정보화사업	4,432	4,253	△179	△4.0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2025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7	67	-	-
ㅇ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	28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8	28	-	-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2) 세출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감면, 친환경차량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5.7% 감소한 92억 8,800만원임.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9,854	9,288	△566	△5.7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2025년 대비 34.4% 감소한 1억 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101	△53	△34.4
-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101	△53	△34.4

2) 세출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9% 증가한 24억 5,300만원임.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제주보훈업무지원	2,384	2,453	69	2.9

Ⅲ.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임무를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보훈부는 5가지 전략목표(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1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현황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9	11	1	-	1	9	5
		100%	9.1%	-	9.1%	81.8%	(45.5%)

〈 2026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보상	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1.0	일반 재정	99.96 (%)	정량	투입	
프로그램목표Ⅰ-2. 보상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행정환경을 조성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0.5	정보화	88 (%)	정량	산출	
	②정보화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0.5	정보화	91.2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1.0	일반 재정	90.03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골프장 1인 객단가	1.0	일반 재정	200.1 (천원)	정량	결과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0.4	일반 재정	91.0 (%)	정량	결과	
	②대부지원 만족도	0.6	일반 재정	82.9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활용한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1.0	일반 재정	81.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일반 재정	67.9 (%)	정량	결과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의식 개선도	1.0	일반 재정	75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추진한다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1.0	일반 재정	74.3 (점)	정성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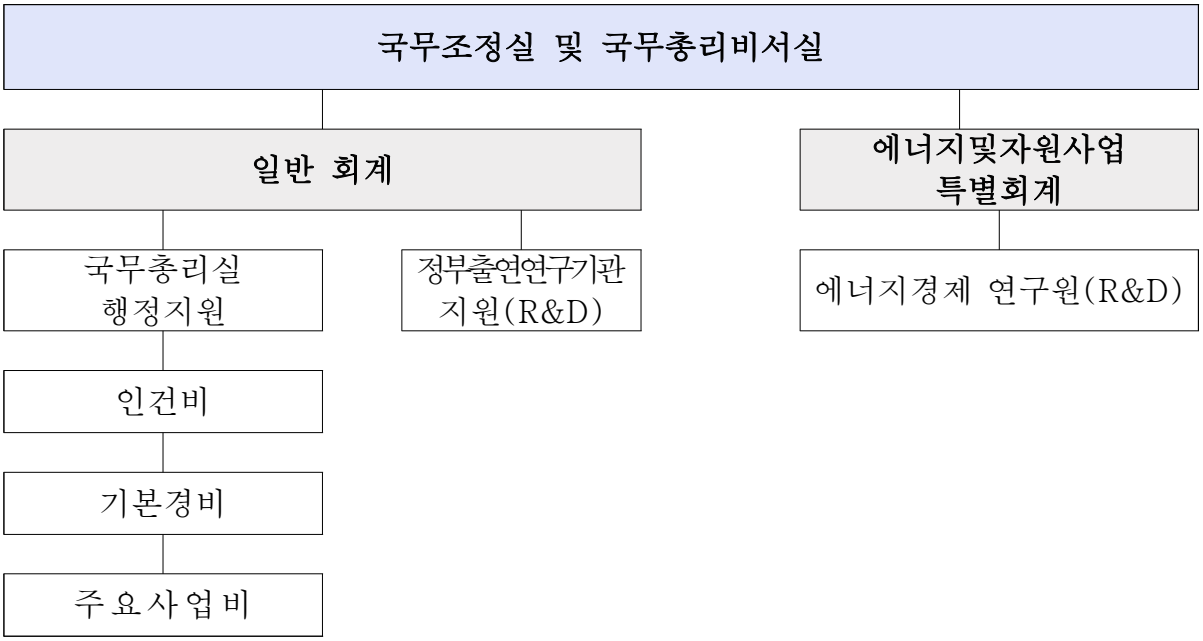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1. 총 괄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구조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7,9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26억 8,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54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합 계	279	279	-	-
일반회계	279	279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합 계	671,480	838,171	166,691	24.8
일반회계	659,106	812,685	153,579	23.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25,486	13,112	106.0

주) 총계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로 두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5대 중점과제>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 국정과제의 체계적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 제고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원활한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대테러·미세먼지 대책 등의 조정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호

3 규제개혁
- ○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4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적 중장기 과제 이행 지원

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 국무총리 국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증진

(자료: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에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 1 :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5,548	100.0
합 계	**45,548**	**100.0**

(출처: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금 및 국고계좌 이자 세입조치 등 기타재산이자수입 200만원과 과오지급금 반납 및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7,700만원을 합하여 2억 7,9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임

<2026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79	279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	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77	277	-	-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26억 8,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1,535억 7,900만원(23.3%)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는 19억 7,600만원(3.3%)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1,200만원(0.1%)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서 23억 2,000만원 증액되는 등 24억 5,700만원(4.8%)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70억 7,7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연금이 124억 6,200만원 증액되는 등 1,491억 3,400만원(28.0%) 증가함.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59,106**	**812,685**	**153,579**	**23.3**
인건비	60,274	62,250	1,976	3.3
기본경비	14,235	14,247	12	0.1
주요사업비	51,579	54,036	2,457	4.8
출연금	533,017	682,152	149,134	28.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인건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622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9억 7,600만원(3.3%) 증가함.

○ 보수, 기타직보수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 반영으로 인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각각 12억 8,900만원, 6억 7,400만원, 1,200만원 증가함.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0,274	62,250	1,976	3.3
○ 세목별	60,274	62,250	1,976	3.3
- 보수(110-01)	58,468	59,757	1,289	2.2
- 기타직보수(110-02)	1,343	2,017	674	50.2
- 연가보상비(110-05)	463	475	12	2.6
○ 기관별	60,274	62,250	1,976	3.3
- 국무조정실	38,485	40,286	1,801	4.7
- 국무총리비서실	9,546	9,499	△47	0.5
- 조세심판원	12,243	12,465	222	1.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기본경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42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200백만원(0.1%) 증가함.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0억 2,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1억 8,700만원(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상용근로자 신규채용 등에 기인한 것임.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2억 2,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원(△1.9%)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편성되어온 특수활동비(1억 7,200만원) 예산이 “공직복무 관리” 사업비로 이관된 것 등에 기인한 것임.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4,235	14,247	12	0.1
○ 기본경비(총액)	4,835	5,022	187	3.9
- 국무조정실	2,950	3,012	62	2.1
- 국무총리비서실	1,170	1,233	63	5.4
- 조세심판원	715	777	62	8.7
○ 기본경비	9,400	9,225	△175	1.9
- 국무조정실	6,525	6,209	△316	△4.8
- 국무총리비서실	1,435	1,456	21	1.5
- 조세심판원	1,440	1,560	120	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40억 3,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4억 5,700만원(4.8%)이 증가함.

○ 주요사업비가 2025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시행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 예산 대비 23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 예산 대비 16억 2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51,579	54,036	2,457	4.8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97	197	-	-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1,346	1,295	△51	△3.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3,204	359	12.6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242	1,200	△42	△3.4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139	139	-	-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40	△10	△2.9
숙의공론화기구 운영	-	3,635	3,635	순증
대테러센터 운영	710	794	84	11.8
인권보호관 지원	410	273	△137	△33.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537	87	△450	△83.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2,830	841	42.3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528	899	△1,629	△64.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	△3,795	순감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96	79	△17	△17.7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5,396	2,649	△2,747	△50.9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7	98	△9	△8.4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44	146	2	1.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460	3,918	458	13.2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4	9,354	2,320	33.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049	6,564	1,515	30.0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42	411	△31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628	2,230	1,602	255.1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33	32	△1	△3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1,958	2,558	600	30.6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17	△50	△29.9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53	999	△154	△13.4
내부 정보화(정보화)	2,472	3,055	583	23.6
공직복무 관리	954	1,129	175	18.3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401	1	0.3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00	1,550	150	10.7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303	303	-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7	713	6	0.8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1,949	486	△1,463	△75.1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0	1,191	621	108.9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852	822	△30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217	338	121	55.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9,700만원이 편성됨.

○ ‘국정운영 정보화’는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100만원(△3.8%) 감액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억 5,900만원(12.6%) 증액된 32억 400만원이 편성됨.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200만원(△3.4%) 감액된 12억원이 편성됨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은 정책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3,900만원이 편성됨.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민간분야 지원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2.9%) 감액된 3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숙의공론화기구 운영’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대테러센터 운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건 대응, 테러 대상시설·이용수단 관리, 교육·홍보·실전 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8,400만원(11.8%) 증액된 7억 9,400만원이 편성됨.

○ ‘인권보호관 지원’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3,700만원(△33.4%) 감액된 2억 7,300만원이 편성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조정·수립, 계절관리제 실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국민건강 보호 방안 시행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억 5,000만원(△83.8%) 감액된 8,7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4,100만원(42.3%) 증액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시스템(내부)과 규제정보포털·규제개혁신문고(외부)를 구축·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억 2,900만원(△64.4%) 감액된 8억 9,900만원이 편성됨.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추진단 활동 종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

○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17.7%) 감액된 7,900만원이 편성됨.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전략·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7억 4,700만원(△50.9%) 감액된 26억 4,900만원이 편성됨.

○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900만원

(△8.4%) 감액된 9,800만원이 편성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은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새만금위원회 운영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1.4%) 증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됨.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억 5,800만원(13.2%) 증액된 39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3억 2,000만원(33.0%) 증액된 93억 5,400만원이 편성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5억 1,500만원(30.0%)이 증액된 65억 6,400만원이 편성됨.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100만원(△7.0%)이 감액된 4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연구·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억 200만원(255.1%)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3.0%)이 감액된 3,2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원(30.6%)이 증액된 25억 5,800만원이 편성됨.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29.9%)이 감액된 1억 1,700만원이 편성됨.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솔선하는 총리실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5,400만원(△13.4%) 감액된 9억 9,900만원이 편성됨.

○ ‘내부 정보화’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8,300만원(23.6%) 증액된 30억 5,500만원이 편성됨.

○ ‘공직복무관리’는 공직비위 상시점검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예방 및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통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원(18.3%) 증액된 11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는 공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0.3%) 증액된 4억 1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은 국무총리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5,000만원(10.7%) 증액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됨.

○ ‘조세심판 정보화’는 조세검색서비스 제공 및 사건접수, 배정, 발송, 통계작성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300만원이 편성됨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부패사각지대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등 기존 반부패 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0.8%) 증액된 7억 1,300만원이 편성됨.

○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4억 6,300만원(△75.1%)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이 편성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2,100만원(108.9%) 증액된 11억 9,100만원이 편성됨.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000만원(△3.5%) 감액된 8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2,100만원(55.8%) 증액된 3억 3,800만원이 편성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31억 1,200만원(106.0%) 증액된 25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임.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세입예산	-	-	-	-
세출예산	12,.74	25,486	13,112	106.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도 임무로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를 기관 임무로 설정하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가지 전략목표(‘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1	1	6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사업코드	비고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7000-7031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7000-7032	
	(3) 규제개혁	7000-7033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000-7035	정보화 세부사업포함
	(5) 행정지원	7000-7036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00-703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성인지 예산[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 2026년도 예산안 규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의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안 규모는 7,076억 3,800만원으로 2025년도의 5,453억 9,200만원에 비해 1,622억 4,600만원(29.7%)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545,392	707,638	162,246	29.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비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45,392	707,638	162,246	29.7
기본사업비	454,931	602,530	147,599	32.4
○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 경상운영비	56,132	72,020	15,888	28.3
○ 기관고유사업비	56,232	56,632	400	0.7
특수사업비	93,516	110,555	17,039	18.2
○ 일반사업비	92,200	110,355	18,155	19.7
○ 시설비	1,316	200	△1,116	△84.8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본사업비는 6,02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4%인 1,475억 9,900만원이 증가함.

○ 인건비: 전년대비 1,313억 1,100만원(38.3%) 증가한 4,7385억 7,800만원

- 출연금 체재 개편(PBS폐지) 반영: 1,134억원

- 2026년도 처우개선분(3.5%) 등 반영: 164억원

- 2025년도 신규인력 자연증가분(17명): 6억원

- 2026년도 신규인력(21명): 8억원

○ 경상운영비: 전년대비 158억 8,800만원(28.3%) 증가한 720억 200만원

- 출연금 체재 개편(PBS폐지) 반영: 154억원

-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위한 비경직성 경상운영비 10% 감액(공통): △6억원

-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15개 기관*): 8억원

  * 연구회, 과학, 대외, 산업, 통일, 교통, 노동, 보건, 육아, 직능원, 청소년, 해양, 형사, 환경, 건축

- 재산세 증감분(대학원): △2억원

- 공공요금, 어린이집 경비 등 기관별 소요 반영(13개 기관*): 1억원

  * 국토, 에너지, 정보, KDI, 대학원, 교육, 평가원, 농촌, 법제, 여성, 조세, 직능연, 행정

○ 기관고유사업비: 전년대비 4억원(0.7%) 증가한 566억 3,200만원

- 연구기관 평가 증액(연구회): 1억원

- R&D 정책수요 증가를 고려한 증액(과학): 5억원

- 국가승인통계 수행 필수경비 증액(노동): 4억원

- 한시소요 등 사업효율화 감액(대외, 법제): △6억원

□ 특수사업비는 1,105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170억 3,900만원이 증가함.

○ 일반사업비: 전년대비 181억 5,500만원(19.7%) 증가한 1,103억 5,500만원

- 종료·감액 △182억(196건), 신규・증액 364억(76건)*: 182억원

○ 시설비: 전년대비 11억 1,600만원(△84.8%) 감소한 2억원

- 노후장비 교체, 시설보수 등 공사비 지원(국토): 2억원

- 장비 교체, 시설보수 완료에 따른 감액(3개 기관*): △13억원

* 에너지, 대학원, 행정

□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는 54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100만원(78.3%)이 증가함.

○ '24년 집행잔액(이월금) 출연금 대체 : △54억원

3. 예산안 내역

<기관별 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36,192	545,392	707,638	162,246	29.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777	22,122	24,215	2,093	9.5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14	17,123	21,504	4,381	25.6
2. 국토연구원	22,185	24,323	35,443	11,120	45.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816	31,340	35,521	4,181	13.3
4. 산업연구원	24,965	23,973	30,230	6,257	26.1
5. 에너지경제연구원	11,631	12,374	25,486	13,112	106.0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217	15,665	27,320	11,655	74.4
7. 통일연구원	10,926	9,015	11,932	2,917	32.4
8. 한국개발연구원	71,714	68,723	84,197	15,474	22.5
- 본원	46,106	47,316	61,268	13,952	29.5
- 국제정책대학원	25,608	21,407	22,929	1,522	7.1
9. 한국교육개발원	22,219	22,079	28,624	6,545	29.6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327	26,021	38,483	12,462	47.9
11. 한국교통연구원	18,858	18,505	30,138	11,633	62.9
12. 한국노동연구원	15,849	16,244	21,017	4,773	29.4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285	17,071	22,919	5,848	34.3
14. 한국법제연구원	13,874	15,154	17,898	2,744	18.1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006	32,289	39,114	6,825	21.1
- 본원	23,871	23,786	29,578	5,792	24.4
- 육아정책연구소	8,135	8,503	9,536	1,033	12.1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87	16,933	19,549	2,616	15.4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818	38,278	47,360	9,082	23.7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543	23,586	28,923	5,337	22.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959	10,350	11,518	1,168	11.3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05	21,103	31,267	10,164	48.2
21. 한국행정연구원	13,906	14,292	16,515	2,223	15.6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379	13,688	14,135	447	3.3
23. 한국환경연구원	21,745	22,900	30,282	7,382	32.2
24. 건축공간연구원	11,887	12,241	14,048	1,807	14.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증감 내역(3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 14억 5,200만원

○ 국토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3억 8,000만원

○ 산업연구원: 정부지원사업 4억 4,400만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산업정책 체계 구축 연구 3억 7,400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37억 1,600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지원사업 33억 1,600만원

AI 생태계의 동태적 분석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3억 7,7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47억 900만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지원사업 8억 7,000만원

○ 한국교통연구원: 정부지원사업 8억 3,000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지원사업 6억 8,800만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지원사업 8억 7,800만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9억 2,000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부지원사업 11억 3,4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지원사업 13억 2,300만원

○ 한국환경연구원: : 정부지원사업 6억 700만원

<주요 증액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 11억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본연구사업 4억 5,900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 KEI 운영 5억원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4억원 4,8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가족패널조사 10억원 900만원

<주요 감액・완료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8억원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5억원

○ 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 △4억 3,800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열펌프(GHP) 시설 교체 6억 8,8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 및 전략 제시 사업 △3억 2,400만원
국제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3억 2,0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노후 기숙사 누수 방지공사 4억 9,3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 △5억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전략 구축 사업 △3억 3,500만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적 대안개발 △3억 8,3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702억 5,800만 원(13.0%) 증가한 6,096억 8,400만 원임.

- 세부내역을 보면, 과징금·위약금·가산금·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상이전수입이 6,096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이자로 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 (B-A)	(B-A)/A
재산수입	6	6	-	-
- 기타재산이자	6	6	-	-
경상이전수입	539,420	609,678	70,258	13.0
- 과징금 및 과태료	537,516	607,774	70,258	13.1
- 위약금	1	1	-	-
- 가산금	496	496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407	1,407	-	-
합 계	539,426	609,684	70,258	1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안

1) 개 요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866억 4,8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32억 7,800만 원(14.2%)이 증가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 건 비	56,152	63,544	7,392	13.2
□ 기 본 경 비	8,935	10,109	1,174	13.1
□ 사 업 비	98,283	112,995	14,712	15.0
○ 계속사업	31,830	32,621	791	2.5
(조정원 출연)	12,757	14,509	1,752	13.7
(소비자원 출연)	53,696	57,146	3,450	6.4
○ 신규사업	-	8,719	8,719	순증
○ 완료사업	-	-	-	-
합 계	**163,370**	**186,648**	**23,278**	**1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2026년 중점 투자 분야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분석 정확도 향상, 입찰정보 수집 대상 확대 등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 예산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의 재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실태조사 참여 기업 응답 편의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예산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27.2월 시행)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심의 문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심의정보 및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예산으로 공정거래 전 분야에 원스톱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 주요 예산구조 개편 사항

① 신규사업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6,842백만원), 공정거래 조사 지원 운영(1,877백만원)

② 사업명칭 변경 : 해당 없음

③ 사업 이동 : 해당 없음

2) 인건비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635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25년 예산인 561억 5,200만 원보다 73억 9,200만 원(13.2%)이 증액된 수준임.

○ 인건비의 예산편성인원은 2025년의 684명 대비 146명이 증가한 830명으로, 직제상 정원 797명, 별도정원 15명, 기타직 공무원 18명(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 13명)을 각각 반영하였음

- 2026년도 보수(110-01목) 예산안은 635억 4,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3.1%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안은 6억 5,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4.4%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연가보상비(110-05목) 예산안은 4억 8,6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5.0%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건비	56,152	63,544	7,392	13.2
- 보수(110-01)	55,157	62,404	7,246	13.1
- 기타직보수(110-02)	572	654	83	14.4
- 연가보상비(110-05)	423	486	63	1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기본경비

○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억 7,400만 원(13.1%)이 증액된 101억 900만 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B-A)/A
□ 기본경비 합계	8,935	10,109	1,174	13.1
- 인건비(110)	1,062	1,136	74	7.0
- 운영비(210)	3,753	3,983	230	6.1
- 여비(220)	1,028	1,015	△13	△1.3
- 업무추진비(240)	382	463	81	21.2
- 직무수행경비(250)	1,770	2,098	328	18.5
- 보전금(310)	22	54	32	145.5
- 민간이전(320)	180	197	17	9.4
- 건설비(420)	311	446	135	43.4
- 유형자산(430)	156	348	192	123.1
- 무형자산(440)	271	370	99	3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기본경비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4억 4,0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규 관사 임차를 위한 무형자산 3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4)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55,614	163,370	186,648	23,278	14.2
【일반회계】	155,614	163,370	186,648	23,278	1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58,366**	**158,429**	**158,429**	**164,791**	**163,392**	**4,963**	**3.1**
7001 인건비	**52,068**	**56,152**	**56,152**	**63,544**	**63,544**	**7,392**	**13.2**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001-100)	52,068	56,152	56,152	63,544	63,544	7,392	13.2
7011 기본경비	**8,441**	**8,935**	**8,935**	**10,152**	**10,109**	**1,174**	**13.1**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2,931	3,316	3,316	3,699	3,699	383	11.6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66	74	74	74	74	-	-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2)	34	51	51	46	46	△5	△9.8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3)	20	26	26	26	26	-	-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5	20	20	20	20	-	-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17	20	20	22	22	2	10.0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6)	20	20	20	20	20	-	-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5	85	85	90	90	5	5.9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8)	15	23	23	23	23	-	-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9)	290	281	281	299	299	18	6.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0)	111	92	92	118	118	26	28.3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1)	77	70	70	82	82	12	17.1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2)	70	59	59	73	73	14	23.7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3)	68	56	56	72	72	16	28.6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4)	58	60	60	63	63	3	5.0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15)	32	27	27	30	29	2	7.4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0)	1,455	1,346	1,346	1,820	1,819	473	35.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1)	549	325	325	388	388	63	19.4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2)	652	716	716	753	716	-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3)	377	376	376	376	374	△2	△0.5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4)	187	198	198	200	200	2	1.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5)	123	145	145	145	145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6)	108	119	119	133	133	14	11.8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7)	111	138	138	165	165	27	19.6
기업협력정책관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8)	88	80	80	93	93	13	16.3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9)	195	231	231	202	202	△29	△12.6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0)	228	211	211	574	574	363	172.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1)	96	348	348	79	78	△270	△77.6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2)	72	87	87	90	89	2	2.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3)	80	81	81	81	81	-	-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4)	95	136	136	163	163	27	19.9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65)	127	118	118	133	133	15	12.7
7031 행정지원	**6,674**	**7,109**	**7,109**	**8,374**	**8,374**	**1,265**	**17.8**
공정거래지원(7031-300)	1,298	1,157	1,157	1,248	1,248	91	7.9
행정소송수행(7031-301)	3,248	3,886	3,886	3,890	3,890	4	0.1
전산운영경비(7031-302)	2,129	2,066	2,066	3,236	3,236	1,170	56.6
7032 공정위정보화	**6,562**	**4,746**	**4,746**	**13,366**	**11,262**	**6,516**	**137.3**
정보화기반확충(7032-501)	3,239	3,259	3,259	2,833	2,833	△426	△13.1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3,323	1,487	1,487	1,587	1,587	100	6.7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7032-504)	-	-	-	8,946	6,842	6,842	순증
1231 선진 경쟁정책 추진	**1,746**	**1,947**	**1,947**	**3,660**	**3,659**	**1,712**	**87.9**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정책연구개발(1231-310)	331	289	289	349	349	60	20.8
대외활동 강화(1231-311)	390	618	618	435	435	△183	△29.6
개도국기술지원(1231-312)	69	79	79	57	56	△23	△29.1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1231-313)	-	-	-	1,877	1,877	1,877	순증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1231-503)	956	961	961	942	942	△19	△2.0
1241 카르텔대응강화	**373**	**842**	**842**	**1,752**	**1,521**	**679**	**80.6**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373	842	842	1,752	1,521	679	80.6
125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3,718**	**5,557**	**5,557**	**5,597**	**4,117**	**△1,440**	**△25.9**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1,738	3,470	3,470	3,470	2,111	△1,359	△39.2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356	402	402	415	321	△81	△20.1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1251-332)	1,624	1,685	1,685	1,712	1,685	-	-
1261 시장구조개선	**901**	**629**	**629**	**822**	**822**	**193**	**30.7**
경쟁제한 규제개선(1261-340)	901	629	629	822	822	193	30.7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2,757**	**14,509**	**14,509**	**1,752**	**13.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11,742	12,757	12,757	14,509	14,509	1,752	13.7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3,072**	**3,219**	**3,219**	**3,846**	**3,846**	**627**	**19.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31-400)	2,094	1,718	1,718	2,696	2,696	978	56.9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978	1,501	1,501	1,150	1,150	△351	△23.4
143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37**	**1,792**	**1,792**	**1,453**	**1,453**	**△339**	**△18.9**
선진소비자정책추진(1431-600)	1,337	1,792	1,792	1,453	1,453	△339	△18.9
1441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1,172**	**1,234**	**1,234**	**1,221**	**1,221**	**△13**	**△1.1**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1,172	1,234	1,234	1,221	1,221	△13	△1.1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 운영	**4,965**	**4,755**	**4,755**	**5,065**	**5,065**	**310**	**6.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3,592	3,527	3,527	3,877	3,877	350	9.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1,373	1,228	1,228	1,188	1,188	△40	△3.3
1461 한국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53,696**	**57,146**	**57,146**	**3,450**	**6.4**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52,842	53,696	53,696	57,146	57,146	3,450	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가지 전략목표(‘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12개로 일반재정 10개, 정보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4	12	10	-	2
비율(%)	-	-	100	83.3	-	1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번호	비고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쟁촉진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Ⅰ-1	
	(4) 카르텔대응강화	Ⅰ-1	
	(5) 시장구조개선	Ⅰ-1	
프로그램목표 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공정거래 행정지원	(1) 행정지원	Ⅰ-2	
	(2) 공정위 정보화	Ⅰ-2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전략목표 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Ⅱ-1	
전략목표 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소비자후생 증진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Ⅲ-1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Ⅲ-1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Ⅲ-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포함
	(4) 한국소비자원 출연	Ⅲ-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가율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5,255	5,255	8,506	8,275	57.5
<일반회계>	5,255	5,255	8,506	8,275	57.5
전산운영경비 (7031-302)	2,066	2,066	3,236	3,236	56.6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842	842	1,752	1,521	80.6
경쟁제한 규제개선 (1261-340)	629	629	822	822	30.7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1331-400)	1,718	1,718	2,696	2,696	56.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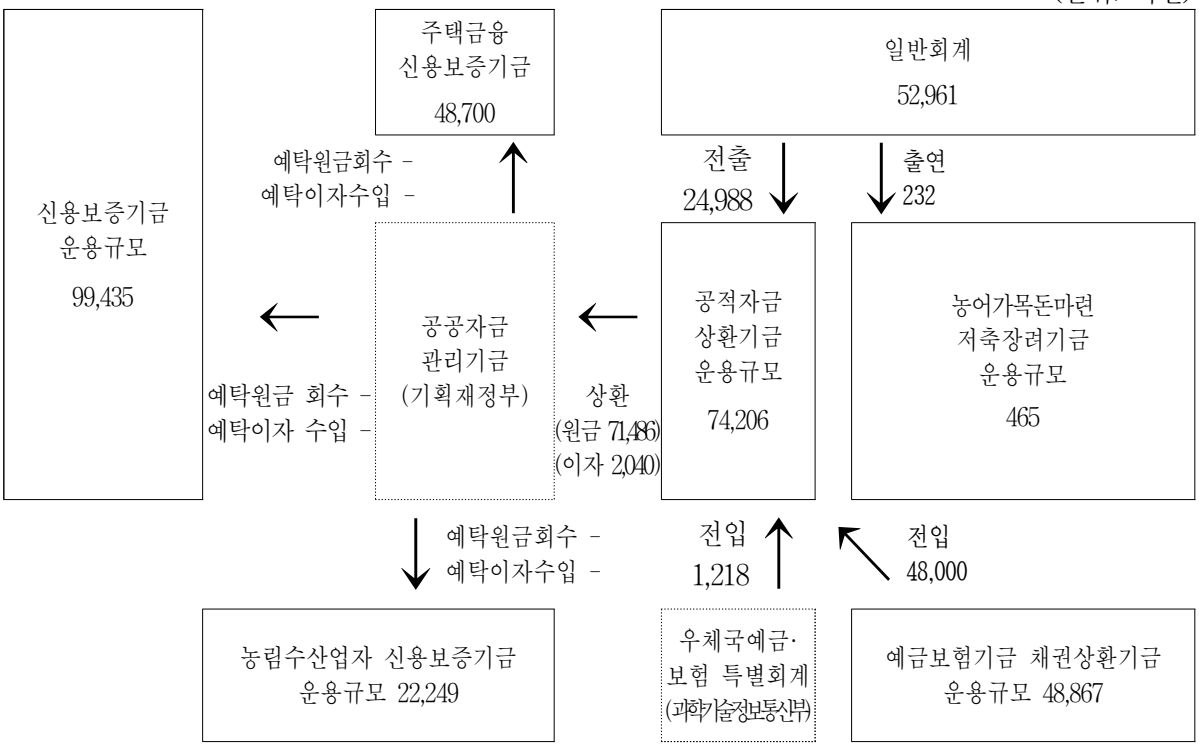
1. 총괄

□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6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 4,988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32억원을 출연함.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조 1,486억원의 예수원금과 2,040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 8,000억원을 전출함.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있으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최종예산 대비 547억원(54.1%) 증가한 1,558억원,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조 1,124억원(26.6%) 증가한 5조 2,961억원임.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1,011	1,558	547	54.1
○ 일반회계	1,011	1,558	547	54.1
□ 세출예산안	41,838	52,961	11,124	26.6
○ 일반회계	41,838	52,961	11,124	26.6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5,318억원 감소한 29조 3,922억원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5년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기금은 2025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용계획안	298,259	299,240	293,922	△5,318	△1.8
○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	64,384	74,206	9,822	15.3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11	492	465	△27	△5.4
○ 신용보증기금	115,126	116,126	99,435	△16,690	△14.4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651	22,651	22,249	△402	△1.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092	48,092	48,700	608	1.3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7,496	47,496	48,867	1,371	2.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총지출[2]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025년 대비 1조 349억원 증가(26.4%)한 4조 9,558억원이며, 총지출은 2025년 대비 1조 1,135억원 증가(66.1%)한 2조 7,974억원임.

2) 총수입·총지출은 회계·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금·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26년도 금융위원회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수입	39,209	49,558	10,349	26.4
○ 일반회계	1,011	1,558	547	54.1
○ 공적자금상환기금	38,198	48,000	9,802	25.7
□ 총지출	16,838	27,974	11,136	66.1
○ 일반회계	16,837	27,974	11,137	66.1
○ 공적자금상환기금	1	0	△1	△92.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10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3],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으로 7조 1,486억원 규모임.

<금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당초)	2025년 추경(A) (수정)	2026년도 예산안(B) (계획안)	증감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	59,977	59,977	71,486	11,509	19.2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예보)	38,000	38,000	48,000	10,000	26.3
비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35,069	36,069	37,125	1,056	2.9
일반보증대위변제(신보)	26,452	26,452	26,939	487	1.8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일반)	25,000	25,000	24,988	△12	△0.0
통화금융기관예치(주신보)	20,021	20,018	18,463	△1,555	△7.8
통화금융기관예치(농신보)	17,139	17,126	16,563	△563	△3.3
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4,381	24,288	14,568	△9,720	△40.0
대위변제(주신보)	13,364	13,364	13,130	△234	△1.8
국민성장펀드(일반)	-	-	10,000	1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3) 기관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제외

2.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57억 7,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46억 6,400만원(54.1%)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44,616**	**101,107**	**101,107**	**155,771**	**54,664**	**54.1**
기타재산이자수입	175	58	58	99	41	70.7
과태료	29,230	37,104	37,104	31,969	△5,135	△13.8
과징금	113,736	59,907	59,907	122,003	62,096	103.7
가산금	322	150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1,152	3,888	3,888	1,550	△2,338	△60.1

(자료: 금융위원회)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대비 51억 3,500만원(△13.8%)이 감소한 319억 6,9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징금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대비 620억 9,600만원(103.7%)이 증가한 1,220억 3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가산금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소송비용 보전금 등 기타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도 예산대비 23억 3,800만원(△60.1%)이 감소한 38억 8,8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961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5조 6,706억 2,000만원 대비 3,744억 7,300만원(6.6%)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3,999,431	4,183,766	5,670,620	5,296,147	△374,473	△6.6
□ 금융위원회 운영	1,499,431	1,683,766	3,170,620	2,797,353	△373,267	△11.8
○ 인건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기본경비	8,616	9,639	9,639	9,478	△161	△1.7
○ 주요사업비	1,459,814	1,640,916	3,127,770	2,753,294	△374,476	△12.0
□ 내부거래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2조 7,974억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2025년 예산 대비 3,744 7,600만원(△12.0%)이 증액 편성됨.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 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조 4,988억원)로 2025년 예산 대비 12억 600만원(△0.1%)이 감액 편성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회계기금간거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26년에는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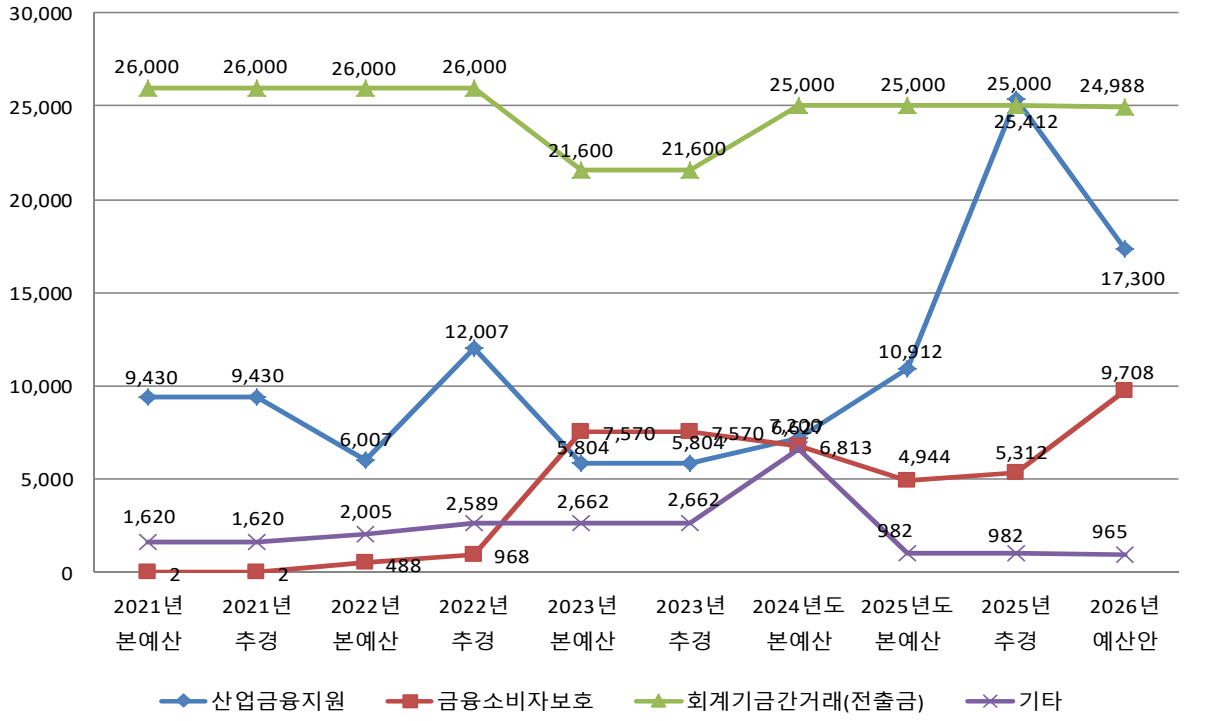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84	184	146	145	140	140
서민금융지원(1200)	-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92	92	82	81	77	77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40	40	37	36	29	29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6	6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342	342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2	2	488	968	7,570	7,570
산업금융지원(2400)	9,430	9,430	6,007	12,007	5,804	5,804
주택금융지원(2600)	500	500	500	1,590	1,668	1,668
금융행정효율화(7100)	456	456	741	737	750	750
회계기금간거래(8400)	26,000	26,000	26,000	26,000	21,600	21,600
합 계	**37,052**	**37,052**	**34,500**	**41,564**	37,636	37,636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금융정책(1100)	123	123	129	129	121
서민금융지원(1200)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74	74	78	78	77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9	9	10	10	9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6,813	6,813	4,944	5,312	9,708
산업금융지원(2400)	7,200	7,200	10,912	25,412	17,300
주택금융지원(2600)	-	-	-	-	-
금융행정효율화(7100)	810	810	765	765	759
회계기금간거래(8400)	25,000	25,000	25,000	25,000	24,988
합 계	45,640	45,640	41,838	56,706	52,961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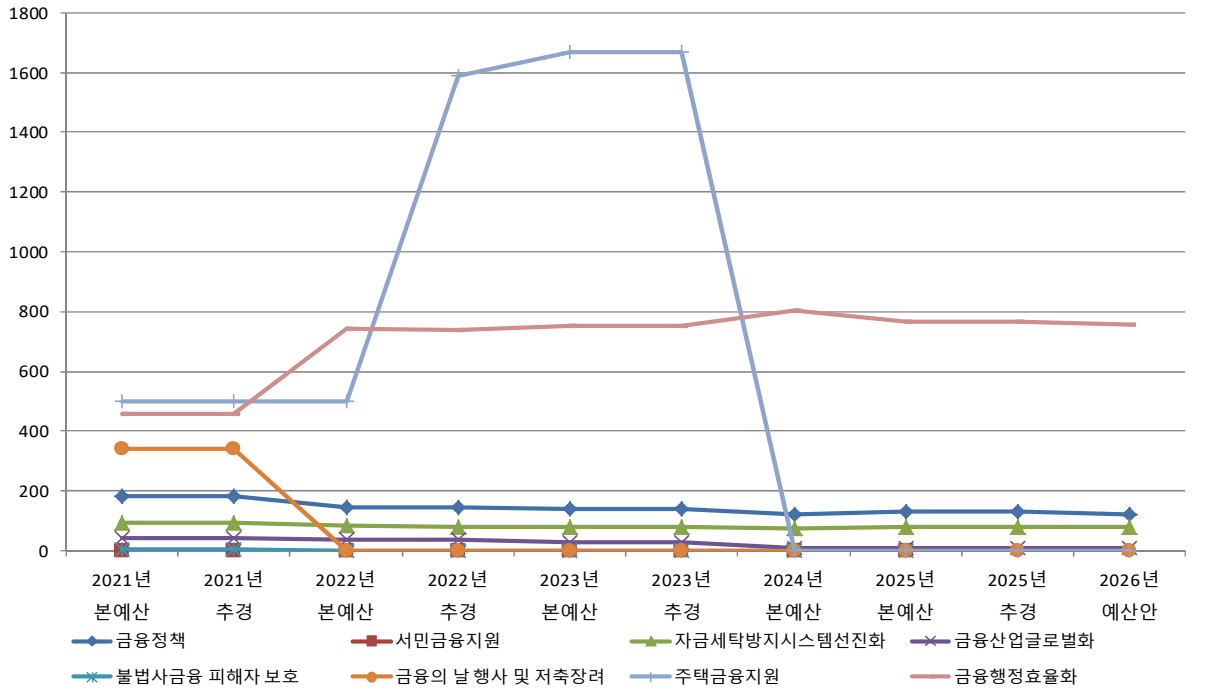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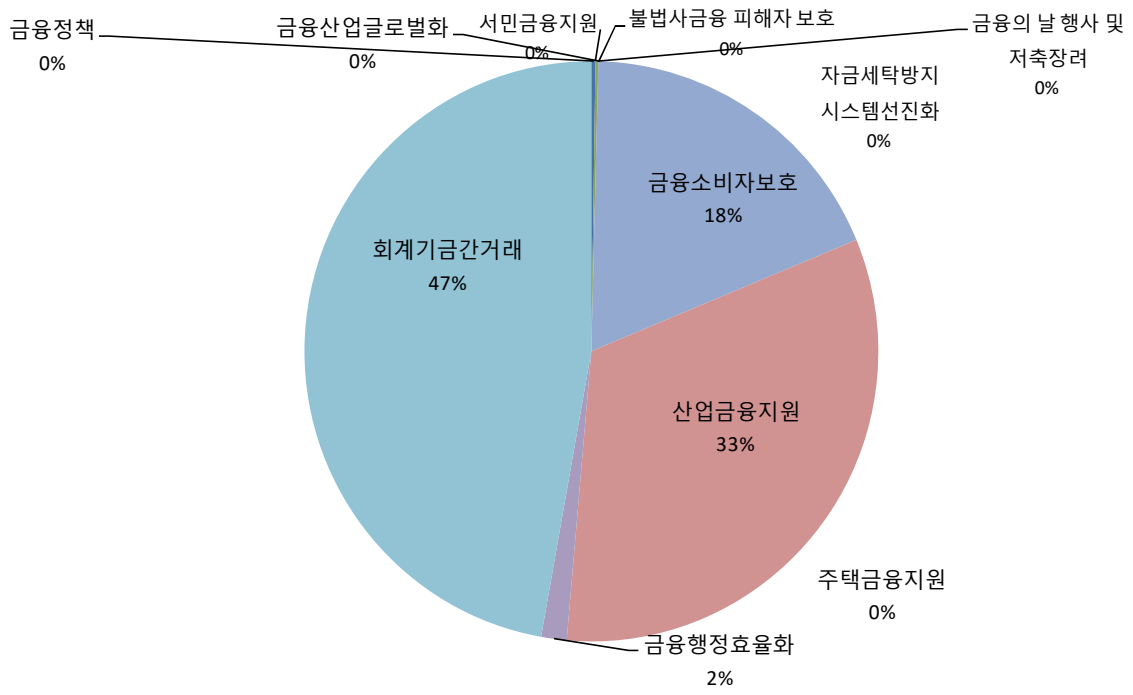
〈기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2) 인건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45억 8,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332억 1,1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4.1%) 증가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세목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보수(110-01)	28,428	32,170	32,170	33,491	1,321	4.1
○ 기타직보수(110-02)	574	799	799	829	30	3.8
○ 연가보상비(110-05)	184	242	242	261	19	7.9
□ 기관별	31,001	33,211	33,211	34,581	1,370	4.1
○ 본부 인건비	25,504	26,818	26,818	28,602	1,784	6.6
○ FIU 인건비	5,497	6,393	6,393	5,979	△414	△6.4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94억 7,800만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억 6,100만원(△1.7%)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3,101	3,222	3,222	3,233	11	0.3
		대변인실	8	8	8	8	-	-
		금융정책국	49	77	77	77	-	-
		자본시장국	45	115	115	120	5	4.3
		금융소비자국	21	37	37	37	-	-
		금융산업국	46	76	76	76	-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93	719	719	745	26	3.6
	소 계(A)		3,863	4,254	4,254	4,296	42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2,461	2,718	2,718	2,475	△243	△8.9
		대변인실	241	289	289	308	19	6.6
		금융정책국	658	712	712	712	-	-
		자본시장국	388	427	427	433	6	1.4
		금융소비자국	151	158	158	158	-	-
		금융산업국	299	386	386	386	-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55	695	695	710	15	2.2
	소 계(B)		4,753	5,385	5,385	5,182	△203	△3.8
합 계(A+B)			8,616	9,639	9,639	9,478	△161	△1.7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9,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4,200만원(1.0%)이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1억 8,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2억 300만원(△3.8%)이 감소함.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조 7,533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3,745억원(△12.0%)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459,814	1,640,916	3,127,770	2,753,294	△374,476	△12.0
핀테크 지원 사업	12,252	12,933	12,933	12,086	△847	△6.5
자금세탁방지추진	756	846	846	857	11	1.3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1,998	2,018	2,018	2,018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26	4,947	4,947	4,801	△146	△3.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26	981	981	870	△111	△11.3
금융소비자보호	94	101	101	90	△11	△10.9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7	35	35	-	△35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00	56,000	92,500	-	△92,500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347,015	347,015	124,182	△222,830	△64.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90,000	90,000	-	△90,000	순감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	-	100,000	100,000	순증
청년미래적금	-	-	-	744,625	744,625	순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628	1,205	1,559	1,906	347	22.3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0,000	176,200	176,200	-	△176,2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30,000	30,000	-	△30,0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	△450,000	순감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35,000	35,000	-	△35,000	순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 자금지원 특별프로그램)	-	-	100,000	-	△100,000	순감
국민성장펀드	-	-	-	1,000,000	1,000,000	순증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	630,000	630,000	순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1,200,000	-	△1,200,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	△50,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400,000	-	△400,000	순감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055	3,012	3,012	2,189	△823	△27.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1,500	1,461	1,461	1,290	△171	△11.7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318	286	286	286	-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03	117	117	11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671	575	575	525	△50	△8.7
정책연구개발	632	599	599	509	△90	△15
금융정책알리기	821	885	885	876	△9	△1.0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450	450	1,240	790	175.6
회계의날	60	59	59	77	18	30.5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200	200	194	△6	△3
금융의 날 행사	75	69	69	90	21	30.4
소송수행비용	800	900	900	1,100	200	22.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	430	430	171	△259	△60.2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	445	445	-	△445	순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31,463	24,147	24,147	23,192	△955	△3.9

(자료: 금융위원회)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예산안은 2조 4,988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2억 600만원(△0.1%)이 감소함.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내부거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1,206	△0.1

(자료: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조 4,988억원이 편성됨.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를 ‘경제활력 뒷받침’, ‘금융산업혁신’,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설정하고,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는 4가지 전략목표(‘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4	11	20	63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Ⅰ-1 산업금융지원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Ⅰ-2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Ⅰ-3 신용보증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 경제 전반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1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2 저축장려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3 주택금융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4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Ⅲ-1 금융정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Ⅲ-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Ⅲ-3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Ⅳ-1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5. 성인지 예산[4)]

□ 금융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4)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 국민권익위원회 】

1. 총 괄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5,800만원(△6.4%) 감소한 8억 5,400만원,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7억 9,800만원(0.8%) 증가한 1,058억 8,800만원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9.1	8.5	△0.6	△6.4
○ 일반회계	9.1	8.5	△0.6	△6.4
□ 세출예산안	1,050.9	1,058.9	8.0	0.8
○ 일반회계	1,050.9	1,058.9	8.0	0.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9	13.9	13.8	0.8	△0.6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33.5	33.5	39.0	5.5	16.4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67.8	67.8	74.1	6.3	9.3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12.7	12.7	순증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18.2	18.2	순증
종합상담창구운영	95.3	95.3	102.8	7.6	7.9
고충민원조사활동	16.0	16.0	19.0	3.0	18.7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9.8	29.8	27.4	△2.4	△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	24.1	29.7	5.6	23.1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55.0	55.0	49.9	△5.1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5,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800만원(△6.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합 계	**684**	**912**	**912**	**854**	**△58**	**△6.4**
기타재산이자수입	2	-	-	-	-	-
과태료	73	180	180	120	△60	△33.3
위약금	49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21	682	682	701	19	2.8
기타잡수입	33	50	50	33	△17	△34.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	-	-	-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과태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태료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6,000만원(△33.3%) 감소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과 과오지급금 반환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에는 2025년도 예산 대비 1,900만원(2.8%) 증가한 7억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청렴연수원 숙소 사용료로 구성되며,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34.0%) 감소한 3,3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58억 8,8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050억 9,000만원 대비 7억 9,800만원(0.8%)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07,996	105,090	105,090	105,888	798	0.8
□ 국민권익위원회	107,996	105,090	105,090	105,888	798	0.8
○ 인건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기본경비	7,197	8,128	8,128	8,065	△63	△0.8
○ 주요사업비	51,323	44,830	44,830	44,383	△447	△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은 1,058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만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25년 예산 대비 6,300만원(△0.8%), 사업비는 2025년 예산 대비 4억 4,700만원(△1.0%) 감액 편성됨.

2) 인건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534억 4,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521억 3,200만원 대비 13억 800만원(2.5%) 증가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인건비 합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세목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보수(110-01)	48,.616	51,339	51,339	52,608	1,269	2.5
○ 기타직보수(110-02)	599	394	394	421	27	6.9
○ 연가보상비(110-05)	262	399	399	411	12	3.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80억 6,500만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6,300만원(△0.8%) 감소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10목)	876	1,055	1,055	1,122	67	6.4
	운영비(210목)	1,059	1,404	1,404	1,383	△21	△1.5
	직무수행경비(250목)	916	953	953	910	△43	△4.5
	민간이전(320목)	158	183	183	197	14	7.7
	소 계(A)	3,008	3,595	3,595	3,610	15	0.4
총액인건비 비대상	운영비(210목)	2,451	2,667	2,667	2,616	△51	△1.9
	여비(220목)	689	650	650	642	△8	△1.2
	업무추진비(240목)	362	391	391	372	△19	△4.9
	연구용역비(260목)	364	385	385	375	△10	△2.6
	보전금(310목)	99	110	110	111	1	0.9
	건설비(420목)	30	35	35	30	△5	△14.3
	유형자산(430목)	193	285	285	311	26	9.1
	무형자산(440목)	-	10	10	-	△10	순감
	소 계(B)	4,189	4,533	4,533	4,455	△78	△1.7
합 계(A+B)		7,197	8,128	8,128	8,065	△63	△0.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6억 1,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0.4%)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4억 5,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7,800만원(△1.7%) 감소함.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443억 8,300만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4억 4,700만원(△1.0%) 감소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51,323	44,830	44,830	44,383	△447	△1.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54	1,390	1,390	1,382	△8	△0.6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9,057	7,665	7,665	2,670	△4,995	△65.2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4,653	3,346	3,346	3,895	549	16.4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	6,784	6,784	7,412	628	9.3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	1,274	1,274	순증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	1,822	1,822	순증
반부패기술지원(ODA)	286	250	250	-	△250	순감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670	670	540	△130	△19.3
청렴권익민간협력	453	318	318	315	△3	△0.9
부패·고충제도개선	99	83	83	89	6	7.2
종합상담창구운영	11,129	9,526	9,526	10,283	757	7.9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299	18.7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984	2,741	△243	△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411	2,967	556	23.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1	78	78	85	7	9.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5,500	4,994	△506	△9.2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323	206	206	217	11	5.3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4	2.4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93	210	210	190	△20	△9.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77	100	100	94	△6	△6.0
행정심판운영	999	1,543	1,543	1,344	△199	△12.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를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설정하고, ‘국민 권익구제, 청렴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 목표 내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1	1	7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Ⅰ-1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 성인지 예산[5)]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규범자문단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8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4	2.4
청탁금지제도운영 지원	6	8	8	8	-	-

5)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Ⅰ. 총 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됨.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1억 2,400만원(27.1%) 증가한 52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300만원(7.0%) 증가한 704억 4,700만원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 세입예산안	41,010	41,010	52,134	11,124	27.1
○ 일반회계	41,010	41,010	52,134	11,124	27.1
□ 세출예산안	64,548	65,844	70,447	4,603	7.0
○ 일반회계	64,548	65,844	70,447	4,603	7.0

(자료: 개인정보위)

□ 2026년도에 개인정보위는 신뢰받는 AI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주요 추진 과제>

□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 분석 등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안정적 마이데이터 지속 지원

○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자율주행·블록체인 등 핵심분야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및 법·정책·기술을 겸비한 개인정보 핵심인재 양성 추진

□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 개인정보 유·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신속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한 조사·분석 강화로 신속·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 대응

○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 비용

□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글로벌 차원 프라이버시 규범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 및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네트워크 강화

(자료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서)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은 521억 3,400만원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32,366	41,010	41,010	52,134	11,124	27.1
기타재산이자수입	324	64	64	129	65	101.6
과태료	612	790	790	746	△44	△5.6
과징금	29,768	38,800	38,800	49,909	11,109	28.6
위약금	335	1	1	1	-	-
가산금	3	23	23	18	△5	△21.7
기타경상이전수입	1,323	1,330	1,330	1,329	△1	△0.1
면허료및수수료	-	1	1	1	-	-
기타잡수입	-	1	1	1	-	-

(자료 : 개인정보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억 4,6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499억 9백만원이 편성됨.

○ 위약금은 계약 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지출반납,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소송비용 회수액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억 2,9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및수수료는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2.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704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658억 4,400만원 대비 46억 300만원(7.0%)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65,067	64,548	65,844	70,447	4,603	7.0
□ 인건비	14,053	14,592	14,592	15,360	768	5.3
□ 기본경비	2,107	2,408	2,408	2,520	112	4.7
□ 사업비	48,907	47,548	48,844	52,567	3,723	7.6

(자료 : 개인정보위)

2) 인건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53억 6,0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45억 9,200만원 대비 7억 6,800만원(5.3%) 증가함.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및 직제상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인건비 합계	**14,053**	**14,592**	**14,592**	**15,360**	**768**	**5.3**
보수(110-01)	13,524	14,060	14,060	14,580	520	3.7
기타직보수(110-02)	447	422	422	664	242	57.3
연가보상비(110-05)	82	110	110	117	7	6.4

(자료 : 개인정보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5억 2,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4억 8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4.7%)이 증액 편성됨.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6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18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기본경비 합계	2,107	2,408	2,408	2,520	112	4.7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25	24	24	29	5	20.8
위원회총액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16	16	16	22	6	37.5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56	66	66	72	6	9.1
위원회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10	12	12	15	3	25.0
위원회총액기본경비(대변인)	6	7	7	8	1	14.3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457	524	524	552	28	5.3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261	285	285	335	50	17.5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194	250	250	268	18	7.2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196	226	226	231	5	2.2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178	274	274	270	△4	△1.5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107	143	143	152	9	6.3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602	581	581	566	△15	△2.6

(자료 : 개인정보위)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25억 6,700만원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2,300만원(7.6%)이 증가함.

<2026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주요사업비 합계	**48,908**	**47,548**	**48,844**	**52,567**	**3,723**	**7.6**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017	1,938	1,938	1,888	△50	△2.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4,232	3,714	3,714	3,714	-	-
개인정보 교육 지원	1,339	1,134	1,134	1,284	150	13.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531	150	△381	△71.8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41	2,376	2,376	1,442	△934	△39.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328	3,564	3,564	6,456	2,892	81.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6,050	6,050	5,364	△686	△11.3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446	6,045	6,045	6,176	131	2.2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	1,500	1,500	2,660	1,160	77.3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	-	6,138	6,138	순증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	-	-	-	1,482	1,482	순증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	-	3,000	3,000	순증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5,883	5,188	5,188	-	△5,188	순감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228	2,000	2,000	-	△2,000	순감
개인정보침해방지	9,353	7,486	8,782	7,265	△1,517	△17.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1,596	1,596	350	△1,246	△78.1
위원회송무지원	397	420	420	800	380	90.5
위원회운영지원	1,955	2,020	2,020	2,162	142	7.0
위원회법무지원	95	65	65	65	-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13	1,921	1,921	2,171	250	13.0

(자료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5,000만원(△2.6%) 감소한 18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37억 1,4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종사 인력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5천만원(△13.2%) 감소한 12억 8,4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3억 8,100만원(△71.8%) 감소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과 국외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9억 3,400만원(△39.3%) 감소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8억 9,200만원(81.1%) 증가한 64억 5,6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6억 8,600만원(△11.3%) 감소한 53억 6,400만원이 편성됨.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이종 산업·분야 간에도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3,100만원(2.2%) 증가한 61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및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1억 6,000만원(77.3%)이 증가한 26억 6,0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61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R&D)’ 사업은 글로벌 데이터 환경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및 표준화 기반 구축·확산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시대 선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14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은 AI 성패를 좌우하는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기술·법·경영 등 다각도로 접근·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및 글로벌 기술·정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30억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대응하고,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 2,100만원(△3.0%) 감소한 72억 6,500만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신속·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2억 4,600만원(△78.1%) 감소한 3억 5,0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송무지원’ 사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전년대비 3억 8,000만원(90.5%)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법령상 운영하는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포럼, 세미나 등 정책 혁신활동 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위원회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4,200만원(7.0%) 증가한 21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판례, 법률 해석자료 등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6,5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한 21억 7,100만원이 편성됨

Ⅲ. 성과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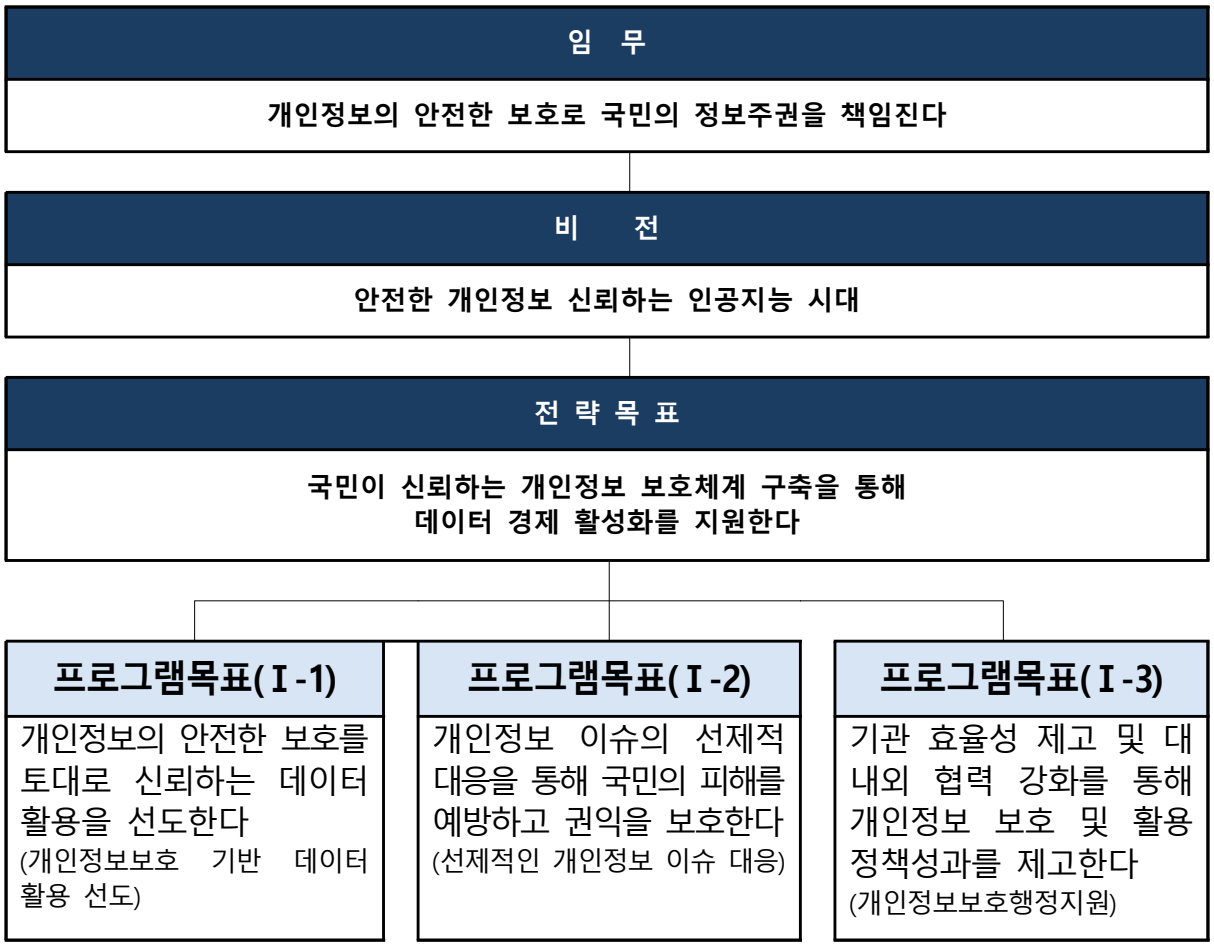
1. 임무와 비전

□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인공지능 시대’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전략목표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성과를 제고한다’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6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자료: 개인정보위)

○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단위 사업은 5개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3	5	18

프로그램명	성과계획
	단위사업명
전략목표 Ⅰ.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1031)
	개인정보활용지원 (1032)
	개인정보보호연구 (1033)
프로그램목표 Ⅰ-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2034)
프로그램목표 Ⅰ-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성과를 제고한다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7041)

(자료: 개인정보위)

Ⅳ. 성인지 예산[6)]

□ 개인정보위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6)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붙 임> 참조

(수석전문위원 : 정명호, 전문위원 : 이선주, 최기도)

Ⅴ. 대체토론의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경기남부(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증액 필요

○ 월남참전자 아카이브 구축 소홀, 해외유적지 관리 필요

○ 고속철도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예산 증액 필요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전세사기 등을 다룰 청년 주거안정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대책 마련, 예산 반영 필요

○ 통일연구원 기관 정상화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사건처리건수 과다로 사건지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원 보강 및 전문성 향상 필요

○ 서울사무소 외 경인사무소 필요

4. 금융위원회 소관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주가조작근절을 위해 포렌식 장비 확보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 예산 심사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를 위한 예산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나, 높은 연체율과 대위변제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상환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및 적정금리 산정 필요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포괄주의) 시 예산 증액 필요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유출 기술분석센터 구축 필요

○ ISMS-P예산 증액되었으나, 그 외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 예산도 증액 필요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정문 위원장)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3월에 시행됨에도 12개월분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생활조정수당 예산을 23억 6,300억원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2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432억 1,000만원 증액하는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2,499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17억 3,200만원과 25억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7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사업 중 '연구기관·지원 강화'는 인쇄 및 제작단가의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사업'은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정책연구 지원을 위하여 45억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0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일부 장비구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 다른 세부사업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서 20억 2,600만원 감액하였고,

- 경인사무소 신설과 관련하여 50명의 정규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확보를 위하여 '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 세부 사업내용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3,150억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650억원을 감액하였고,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인하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예산 1,067억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1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 이행강제금의 평균 수납률을 고려하여 과태료 예산을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중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을 감액하고,

- 비긴급 상담전화 110통합 시스템 개편 및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콜센터 시스템운영 사업 예산을 71억 6,900만원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서 97억 6,900만원 증액하였으며,

-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예산을 110억원 증액하고,

-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중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44억 1,000만원

증액하는 등 8개 사업에서 151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Ⅶ. 찬반토론의 요지

○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반영 필요(한창민위원)

※ 회의록 참조

Ⅷ.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 원안의결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4.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수정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수정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Ⅹ.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념관의 경우 세입으로 계상할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IC국가보훈등록증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원활한 검진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문

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 등 감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운영 또는 임직원의 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의 자체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인건비 등 운영비 자체 조달 방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직군경 유족 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충에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터미널 전산망 통일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실적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경로할인 등 일반 할인과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준보훈병원 도입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증가함이 예측 가능함에 따라 적정 예산 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후 재지정된 위탁병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한다.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미지급금 누적 방지를 위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근무 태만, 시설 사유화,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퇴근 등 논란으로 현재 국가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장의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의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외 사적지 탐방'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별 인원을 균형감있게 배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 "라이브 온 보훈" 콘텐츠를 역사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제작·운영하도록 하여야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간 교육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본부 보훈문화정책과,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분야별 특화를 유지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그 추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 주관형 보훈문화 확산 사업이 연례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 안전 예산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적극 노력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명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사업 추진 시 유족에게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원인 분석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심사기준 등에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소송비용 각자부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 홍보의 이념화 논란이 있는 나라사랑신문 발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의전단 처우 개선 방안 및 실무원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2026년 2월 국회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24년 시행령 개정 이후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소급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신규 기부금 모집 시 기부자명·기부용도·집행내역을 시스템상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2025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훈급여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운영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이 셧다운이 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 또한 전면 재검토한다.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평가 재도입 및 기관별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석자 사례금 및 전문가 정책자문 사례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사업'이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과 목적 및 활동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격

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병행하며, 정책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과정에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권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추후 기후시민회의 설치를 포함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기후시민회의에서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달되고, 실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회의 입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및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현행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의 성과관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플랫폼의 운영 성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점검·보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 공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K-토론나라 운영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K-토론나라가 일회성 행사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청취 의견 속에서 향후 과제 도출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단체 선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2026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결산 심사 시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검찰개혁추진단의 구성원에 검찰 출신을 충분히 증원하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 전세사기 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사후 구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공론화 의제 설정 및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PBS 폐지로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저하되거나, 정부의 정책 수요 반영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용 표준지침’에 따라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한시적 사업을 위한 일반사업비에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연구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외부용역 또는 자문의 저자, 기여 표기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원의 대외활동에 제한을 두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은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연구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예산 집행 및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LLM 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LLM 사용에 따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본사업비 중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에 대해서는 과제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3,600만원의 과제 예산을 수시연구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산업연구원은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자 대행비용은 해당 기관이 직접 지출하도록 조정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통일연구원은 김천식 원장의 사의표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폐지한다.

○ 통일연구원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전략’ 사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 및 일본 군사대국 역할

론에 대해 용인하는 연구관점을 자제한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용인경전철 사업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노력하며, 청년인턴 운영 예산이 불용되지 아니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노동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년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 운영사업’ 내 신규편성된 국외출장예산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교재제작, 교육교재 설명회 등으로 집행한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을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를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한국환경연구원은 특수사업비 중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을 일반사업

이 아닌 기관고유사업 내 연구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수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재산조사의 강화, 납부독촉, 현장조사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효과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율,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반영률 등을 제고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결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채널 콘텐츠에 단순 출연시키는 방식의 홍보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민간 채널 협업형 홍보로 방향을 전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자심의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조사 데이터의 소산(remote backup)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는 국제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국제분담금 예산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특례보증 사업의 급격한 대위변제 증가로 인하여 연내 신규 대출 보증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발생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병행한다.

○ 금융위원회는 유사 상품의 신규 출시 및 청년도약계좌 사업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 금융상품 출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피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6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가족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사업계획 변경,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계획과 그 실적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세입을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이며, 근무성적평가 조작 의혹 건, 대웅제약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급여체계가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추진의 효과 극대화,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사 중도 퇴사 방지, 적정 상담 인원 적시 확보, 콜센터 인지도 제고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 등 처우 합리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설치가 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 방안 및 보호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시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 위반이 선택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은 기본경비가 아닌 관련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만으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의 성과지표를 부활시키거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조속히 이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청렴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수납실적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추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매년 세입 예산안 산출시 최신 실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구축 사업 예산(신규, 28억 9,200만원)이 연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8억 1,000만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관련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검증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 보안성을 확보하고, 표준화 및 고도화 검증 상황에 대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주권 보장이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이 서비스 개발·지원이 아닌 표준화·안전성·연계체계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한다.

○ 현재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일부 한정된 분야와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 내역을 조회·철회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 주권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026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당 단가가 전년 대비 상향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에 이미 연구개발기관과의 상호 합의 하에 기존 단가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과업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철저하게 과제 관리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1월에 수립·공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의 12개 핵심 표준 중 나머지 6개 표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로드맵 개정 시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 시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하

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최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 시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관리자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위 과정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보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민의 권리 신장과 기업·기관의 안전조치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단순 위탁·대행 방식의 사업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핵심 역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한다.

※ 첨부 :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11

Ⅰ.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일반회계	-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	-	-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	-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	△60	△6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11,000	-	11,000
	합 계		11,000	△60	10,940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249,997.6	△12,294.94	237,702.6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무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일반회계	16,836	△1,847	14,98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7,716	△2,026	5,69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211,340	△365,000	△153,660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9,769	△100	9,66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15,123	-	15,123
	합 계		510,781.6	△381,267.94	129,513.66

Ⅱ.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생활조정수당 (1133-302)	84,754	84,754	109,287	133,335	△2,363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287억 7,400만원, 전년 대비 245억 3,200만원 증액)은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도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법률 시행 전 2개월분에 해당하는 23억 6,300만원 감액	
						26,411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생계지원금 지급단가 월 10만원 인상을 위해 264억 1,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6·25자녀수당 (1133-303)	428,693	428,693	419,803	421,136	1,333	○ 동 사업은 전쟁고아로 어렵게 성장한 '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을 2만원 인상하기 위해 13억 3,300만원 증액	
3	무공영예수당 (1133-306)	46,117	46,117	39,146	46,357	7,211	○ 동 사업은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액 10만원 추가 인상을 위해 72억 1,100만원 증액	
4	참전명예수당 (1133-307)	586,966	586,966	538,099	650,203	112,104	○ 동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10만원 추가 인상을 위해 1,121억 400만원 증액	
5	4·19혁명 공로수당 (1133-308)	1,438	1,438	1,367	1,645	278	○ 동 사업은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10만원 추가 인상을 위해 2억 7,800만원 증액	
6	등록관리 (1143-328)	3,336	3,336	4,145	5,006	△290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사업(20억 2,200만원, 전년 대비 8억 7,700만원 증액)은 대통령 명의 증서, IC국가보훈등록증을 제작·발급 등을 하려는 것임. ○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이 저조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작용 IC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발급 구매액 중 2억 9,000만원 감액	
						1,151	○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업무 보조인력 채용 및 개별 안내문 발송을 위해 11억 5,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1238-315)	34,281	35,081	37,954	52,122	7,349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를 지부 운영비 수준(월 50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73억 4,900만원 증액	
						3,514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 임직원(819명)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직원 추가 증원(45명)을 위해 35억 1,400만원 증액	
						2,310	○ ‘호국영웅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을 위해 23억 1,000만원 증액	
						500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은 ‘월남전 참전자회’의 ‘월남전 참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	
						495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내 순직군경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별도 전담 인원 19명 배치를 위해 4억 9,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8	지방보훈회관 건립 (1238-321)	2,000	2,000	500	4,300	750	○ 인천광역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7억 5,000만원 증액	
						500	○ 충청북도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	
						500	○ 전라남도 담양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	
						36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3억 6,000만원 증액	
						25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강원도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경상북도 상주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대구광역시 남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전라남도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40	○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원 증액	
						200	○ 충청북도 제천시 재향군인회 지회 건물 시설 보수를 위해 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9	교통시설 이용지원 (2139-318)	10,729	10,729	21,776	27,612	5,836	○ 동 사업은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업자 부담 해소를 위한 실제 소요된 비용 지급을 위해 58억 3,600만원 증액	
10	위탁병원 진료 (2150-366)	249,113	283,686	269,486	312,696	43,210	○ 동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차질없는 위탁병원 진료를 위해 진료비 432억 1,000만원 증액	
11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2,365	2,365	2,301	8,900	6,599	○ 상이등급 기준 미달 제대군인의 진료비 예산이 부족하므로, 상이처 진료비 현실화 및 2024년도 미지급액 반영을 위해 65억 9,900만원 증액	
12	종합재활체육시 설관리운영 (2156-380)	2,678	2,678	2,599	3,450	851	○ 내역사업인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은 훈련시설 개보수 및 생활관 등의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8억 5,100만원 증액	
13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2156-393)	4,490	4,490	6,721	6,221	△500	○ 동 사업은 2025년 4월 착공을 목표로 2026년 공사비 99억 2,200만원(국비 6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설계 지연으로 공사가 2026년 3월로 지연되었으므로 2026년 공사비 5억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4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2156-397)**	1,068	1,068	9,932	11,782	1,850	○ 내역사업(신규) '비상발전 설비' 는 비상 시 전력 수급을 위해 병원별 비상 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 발전기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되어 노후화 되었으므로, 부산병원 신관과 대전병원 각 2대씩 비상 발전기 교체를 위한 18억 5,000만원 증액	
15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3144-333)**	27,479	27,479	35,090	32,956	△4,594	○ 내역사업인 '활성화사업비'(78억 9,800만원, 전년 대비 41억 900만원 증액)는 상설전시관 전시내용 교체 및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을 하려는 것임. ○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45억 9,400만원 감액	
						1,000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10억원 증액	
						880	○ 독립기념관 노후 비상 발전기 교체를 위해 8억 8,000만원 증액	
						400	○ 신흥무관학교 역사자료 DB구축 3년차 사업 진행을 위해 4억원 증액	
						180	○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 학술연구를 위해 1억 8,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6	보훈문화조성 (3145-401)	14,104	14,104	16,617	13,570	△3,541	○ 내역사업인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57억 5,500만원, 전년 대비 34억 6,500만원 증액)은 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보훈문화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및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의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35억 4,100만원 감액	
						424	○ 보훈문화포털(아카이브) 유지보수를 위해 4억 2,400만원 증액	
						70	○ 내역사업인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1억 3,600만원, 전년 대비 9억 8,100만원 감액)은 민간 주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내실있는 보훈문화상 시상과 홍보를 위해 7,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7	현충시설건립 (3146-405)	4,756	4,756	4,659	11,328.6	5,349.6	○ 만해기념관 건립을 위해 53억 4,960만원 증액	
						500	○ (가칭)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 증액	
						210	○ 장성군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신규)을 위해 2억 1,000만원 증액	
						210	○ 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신규)을 위해 2억 1,000만원 증액	
						200	○ 강원 호국광장 조성(신규)을 위해 2억원 증액	
						100	○ 몽양 여운형선생 추모관 건립을 위해 내역사업 몽양 여운형 선생 추모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신규) 1억원 증액	
						100	○ 김영옥 대령 기념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신규) 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8	현충시설관리 (3146-406)	6,944	6,944	10,299	11,080	781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실태조사를 위한 1년차 예산 7억 8,100만원 증액	
19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3146-410)	9,224	9,224	8,792	8,902	110	○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안내 서비스 앱 구축' 사업(신규)을 위해 1억 1,000만원 증액	
20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3147-340)	716	716	716	768	52	○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를 위해 5,200만원 증액	
21	보훈기념행사 (3147-411)	3,954	3,954	4,054	5,284	695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계기행사'(6억 1,600만원, 전년 동)는 6·10만세운동 100주년 계기 민간단체 주관 기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6억 9,500만원 증액	
						535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행사'(30억 6,7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는 6·10만세운동 100주년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해 5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2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1,745	1,953	1,658	2,569	320	○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9억 1,600만원, 전년 대비 8,700만원 감액)은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선양사업(신규)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원 증액	
						208	○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억 800만원 증액	
						180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선양사업(마라톤·걷기대회,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다큐멘터리 제작)(신규)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 증액	
						103	○ 운암 김성숙선생 선양문화제 지원을 위해 1억 300만원 증액	
						100	○ 만해 한용운 선생 공훈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 증액	
23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3248-345)	1,795	1,795	2,615	3,191	576	○ 내역사업인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사업(9억 8,000만원, 전년 대비 9,500만원 증액)은 독립유공자 발굴 조사인력 증원을 위해 5억 7,600만원 증액	
24	독립유공자등 자료수집관리 (3248-346)	2,678	2,678	2,814	3,039	125	○ 내역사업인 '후손찾기 및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사업(1억 4,300만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전담팀 운영을 위해 1억 2,500만원 증액	
						100	○ 내역사업인 '독립운동사료수집' 사업(5억 2,000만원, 전년 동)은 프랑스 소재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전수조사(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등)를 위해 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5	국립서울현충원 (3250-351)	11,333	12,581	10,574	10,763	189	○ 내역사업인 '경상경비'(13억 6,600만원,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는 최적의 참배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무인제례시스템 · 홈페이지 유지보수, 셔틀버스 임차, 현장직원 안전물품 구매를 위해 1억 8,900만원 증액	
26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3250-352)	937	937	1,286	4,486	3,200	○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개선을 위해 배수시설 개선, 재안장 필요 장비 구입 및 용역비, 친환경 유골함 구매 예산 32억원 증액	
27	국립대전현충원 (3250-353)	11,352	13,134	11,959	12,729	770	○ 국립대전현충원 내 해양경찰 충혼탑 건립을 위해 7억 7,000만원 증액	
28	국립4 · 19묘지 (3250-354)	622	861	659	851	192	○ 국립 4 · 19묘지 내 생태호수의 안정성 강화 및 방문객 · 참배객 친화적 생태호수 조성을 위해 1억 9,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9	국립이천호국원 (3250-360)	20,857	22,938	5,450	5,443.06	△6.94	○ 내역사업인 '경상경비' 사업(5억 9,600만원, 전년 대비 1억 9,700만원)은 최적의 참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시설 · 장비 구입 등을 하려는 것임. ○ 카트 구매 예산은 타 세부사업(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50-352)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통합 편성하되, 카트 구매 단가를 고려하여 694만원 감액	
30	국립묘지조성 (3250-364)	30,049	20,325	31,474	30,474	△1,000	○ 내역사업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19억 6,100만원, 전년 대비 19억 6,100만원 증액)은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신규 조성하려는 것임. ○ 2026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2026년에는 타당성 재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감리비 등 10억원 감액	
31	제대군인사회 복귀지원 (4160-390)	17,310	17,310	15,233	15,283	50	○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수업료지원' 사업(7,100만원,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은 2025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감액 규모가 과도하므로,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4160-391)**	3,954	3,954	4,054	10,395	6,341	○ 동 사업은 최근 신청자 추이 및 지급 단가 인상(장기 81→90만원, 중기 58→78만원)을 고려하여 63억 4,100만원 증액	
33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 (4161-395)**	7,991	7,991	8,253	9,198	500	○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예산 증액 관련 실사단 방한(26년 4월) 대응 및 영국 현지 경쟁(26년 6월) PT 실행을 위해 5억원 증액	
						300	○ 내역사업인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8억 300만원,,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감액)은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미군 7,500명의 프로파일을 구축,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를 교육 자료집으로 제작하려는 ‘디지털 교육자료집 제작(신규)’ 사업을 위해 3억원 증액	
						145	○ 내역사업인 ‘참전국 교류협력 강화’ 사업(5억 6,900만원,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감액) 내 내내역사업인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보훈외교 및 평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홍보하고 국제적 신뢰도와 국격 제고를 위해 예산을 2025년 수준인 2억 9,000만원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4,500만원 증액	

(2)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총액) (7011-201)	1,170	1,170	1,233	1,298	65	○ 동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대한 인터넷·우편·방문 등을 통한 비법정 민원이 월 7천여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기존 총리실 인력에 전담 전화 응대 인력이 없어 민원 응대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민원합리성위원회 행정실무원 2명 (위원회 운영보조, 전화상담)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 6,500만원 증액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신규) (7032-302)	-	-	3,635	1,800	△1,835	○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18억 3,500만원 감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301)	350	350	340	640	300	○ 동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중앙부처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 증액 ※ 1인당 반학기별 500만원씩 지원	
4	대테러센터 운영 (7032-303)	710	710	794	784	△10	○ 동사업 중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사업(일반용역비 5천만원)은 관련 결과보고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므로 1천만원 감액	
5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 (7032-305)	537	537	87	489	402	○ 동사업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 연장 추진(활동기한 5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회부) 등을 고려해 2026년도 잔여기간(10.5개월) 예산 4억 200만원 증액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	1,989	1,989	2,830	3,218	388	○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14억 7,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7,100만원 증액)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임 ○ 동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관련 개정안 정무위회부) 추진에 맞춰 위원 수당 등 3억 8,8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5-316)**	7,034	7,034	9,354	9,374	20	○ 내역사업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4억 1,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300만원 증액)은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전 중앙행정기관 및 사도의 청년정책책임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으로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00만원 증액 **※ 실무위원회(1,900만원 → 2,850만원), 지역책임관협의회(1,050만원 → 1,575만원), 중앙책임관협의회(1,100만원 → 1,650만원)**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628	628	2,230	2,530	300	○ 내역사업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사업(1억원, 전년동)은 지속가능발전 포털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및 콘텐츠 보강·개선 등 지속가능발전 포털을 고도화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한국 지속가능목표 성취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지식/소통 플랫폼(START) 구축 예산 3억원 증액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목명
(000-00)</th><th colspan="2">2025</th><th rowspan="2">2026(안)
(A)</th><th rowspan="2">수정안
(B)</th><th rowspan="2">증감액
(B-A)</th><th rowspan="2">수정이유</th><th rowspan="2">비고</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9</td><td>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td><td>852</td><td>852</td><td>822</td><td>984</td><td>162</td><td>○ 내역사업 ‘시민단체 해외정책연수 지원’을 신설하여, 시민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1억 5,000만원 증액
○ 내역사업인 ‘국화정당·업무협의’(2,300만원, 전년동)는 대정부 질문, 예결위 등 국무총리의 대국회업무 및 소통업무 보좌, 국회의원 요구자료 대응, 여야 정치권 정무동향 파악 등 국회 및 정당과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현 정부 국정과제(09-1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를 위한 對국회·정당 실무 소통 강화 및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200만원 증액</td><td></td></tr>
<tr><td>10</td><td>검찰개혁추진단 운영(신규)</td><td>-</td><td>-</td><td>-</td><td>1,732</td><td>1,732</td><td>○ 동 사업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추진단 예산 반영을 위하여 17억 3,200만원 증액
※ 증액내역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예산안(백만원)</th></tr>
<tr><th>1안</th><th>2안</th></tr>
<tr><td>추진단 운영경비</td><td>1,004</td><td>1,008</td></tr>
<tr><td>자문위원회 등 회의 추진</td><td>728</td><td>728</td></tr>
<tr><td>합 계</td><td>1,732</td><td>1,736</td></tr>
</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목명
(000-00)</th><th colspan="2">2025</th><th rowspan="2">2026(안)
(A)</th><th rowspan="2">수정안
(B)</th><th rowspan="2">증감액
(B-A)</th><th rowspan="2">수정이유</th><th rowspan="2">비고</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11</td><td>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신규)</td><td>-</td><td>-</td><td>-</td><td>850</td><td>850</td><td>○ 동사업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및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지원을 위하여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비 8억 5,000만원 증액
※ 증액내역
<table>
<tr><th>비목</th><th>예산안</th><th>비목</th><th>예산안</th></tr>
<tr><td>상용임금 (110-03목)</td><td>38</td><td>국내여비 (220-01목)</td><td>100</td></tr>
<tr><td>일반수용비 (210-01목)</td><td>80</td><td>사업추진비 (240-01목)</td><td>65</td></tr>
<tr><td>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td><td>40</td><td>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td><td>22</td></tr>
<tr><td>특근매식비 (210-05목)</td><td>20</td><td>직책수행경비
(250-02목)</td><td>30</td></tr>
<tr><td>임차료 (210-07목)</td><td>152</td><td>일반연구비 (260-01목)</td><td>50</td></tr>
<tr><td>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td><td>10</td><td>정책연구비 (260-02목)</td><td>63</td></tr>
<tr><td>복리후생비 (210-12목)</td><td>1</td><td>고용부담금 (320-09목)</td><td>4</td></tr>
<tr><td>일반용역비 (210-14목)</td><td>150</td><td>공사비 (420-03목)</td><td>20</td></tr>
<tr><td>기타운영비 (210-16목)</td><td>5</td><td>합 계</td><td>850</td></tr>
</table></td><td></td></tr>
<tr><td>12</td><td>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운영(신규)</td><td>-</td><td>-</td><td>-</td><td>2,500</td><td>2,500</td><td>○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25억원 증액
<table>
<tr><th>구분</th><th>예산안</th></tr>
<tr><td>추진본부 운영비 등</td><td>13억 4,700만원</td></tr>
<tr><td>자살예방대책 자문단 분과별 운영</td><td>9,900만원</td></tr>
<tr><td>우수사례집 발간 및 세미나 등 운영</td><td>1억 8,400만원</td></tr>
<tr><td>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td><td>8억 7,000만원</td></tr>
<tr><td>합 계</td><td>25억원</td></tr>
</table></td><td></td></tr>
</table>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3	경제인문사회 연구회(R&D) (1531-301)	22,122	22,122	24,215	28,913	△2	○ 특수사업비 중 '연구기관 지원 강화'의 경우 일부 인쇄 및 제작단가를 인상하였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2025년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삭감 필요	
						200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선진·효율경영 제고를 통한 연구몰입환경 조성과 연구생산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특수사업비 중 '연구기관 지원 강화' 사업 증액 필요	
						4,500	○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정책연구과제 지원을 위하여 특수사업비 중 '협동연구사업' 증액 필요	
14	대외경제정책 연구원(R&D) (1534-301)	31,340	31,340	35,521	36,021	500	○ 한미간 경제·통상정책 현안에 대해 미국 내 정책결정 구조와 여론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비 중 '미 KEI 운영'의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프로그램 확대 예산 증액 필요	
15	산업연구원 (R&D) (1535-301)	23,973	23,973	30,230	30,630	400	○ 중국을 생산기지 및 판매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의 선도자라는 인식 하에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수사업의 과제로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對중국 산업전략 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증액 필요	
16	정보통신정책 연구원(R&D) (1537-301)	15,665	15,665	27,320	27,546	226	○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예산 2억 2,600만원의 증액 필요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7	**통일연구원** **(R&D)** **(1538-301)**	9,015	9,015	11,932	12,937	500	○ ‘KINU 통일의식조사’는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와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를 특정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2025년 사업 종료 예정임. ○ 사업을 지속하고 국외 여론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기관고유사업으로 ‘KINU 글로벌 통일의식조사’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기본사업비(기관고유사업비) 5억원 증액	
						200	○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일반인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3개년 단계형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공존형 교류·협력 종합연구: DMZ 기반 단계형 교류에서 남북연계 평화경제특구까지’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특수사업비(일반사업비) 2억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00	○ 상호 존중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메타합의 모델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 2.0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구’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특수사업비(일반사업비) 2억원 증액	
						46	○ ‘통일대계’(1억 5,400만원, 신규사업)는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평화·공존 중심의 통일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임. ○ 남북관계, 국제정세, 환경협력, 인도주의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의 모든 분야를 아울러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통섭적·실효적 통합연구 추진을 위하여 특수사업비(일반사업비) 4,600만원 증액	
						44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4,400만원 증액	
						15	○ 2025년도에 삭감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기본사업비(경상운영비)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8	한국개발연구원 (R&D) (1539-301)	65,741	65,741	82,818	83,562	156	○ 규제 사후평가 안건 수 확대 및 추가적인 사후평가 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특수사업비 중 '규제 사후평가 검증 및 제도 연구' 예산 증액 필요 - 산출내역: 사후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비정규직 인건비 600만원	
						588	○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6년도 예산안에 감액된 특수사업비 중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은 한미, 한-유럽 내 지한 인력 양성과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증액 필요	
19	한국법제연구원 (R&D) (1545-301)	15,154	15,154	17,898	17,929	31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3,100만원 증액	
20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D) (1546-301)	32,289	32,289	39,114	39,149	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3,5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1	한국여성정책 연구원(R&D) (1547-301)	16,933	16,933	19,549	19,601	52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5,200만원 증액	
22	한국조세재정 연구원(R&D) (1548-301)	38,278	38,278	47,360	47,860	500	○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시기의 재정정책의 전문성과 고도화를 위하여 특수사업비 중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사업' 예산 증액 필요	
23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R&D) (1550-301)	10,350	10,350	11,518	11,714	196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1억 9,600만원 증액	
24	한국해양수산 개발원(R&D) (1551-301)	21,103	21,103	31,267	32,075	800	○ 지방 이전(2015년 3월) 당시 대비 인력 급증에 따른 업무공간 추가 임차를 위하여 기본사업비(경상운영비) 8억원 증액	
						8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8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5	한국행정연구원 (R&D) (1552-301)	14,292	14,292	16,515	17,165	250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체계의 지원과 현안 대응 강화, 국정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 자체평가 성과지표 DB 구축 · 관리 및 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특수사업비(일반사업비) 2억 5,000만원 증액	
						238	○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직원들의 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특수사업비(시설비) 2억 3,800만원 증액	
						94	○ 국내외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정보 자료실 운영 유지보수료 1,400만원, 웹메일 클라우드 SaaS 서비스의 안전적 운영 및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 인공지능 데이터 사용료 8,000만원 등 기본사업비(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 9,400만원 증액	
						68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6,8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D) (1553-301)	13,688	13,688	14,135	14,276	141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1억 4,100만원 증액	
27	건축공간연구원(R&D) (1555-301)	12,241	12,241	14,048	14,177	129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클라우드 전환 이후 MSP 이용료를 편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클라우드에서 舊서버로 재이관하여야 하므로 1억 2,900만원 증액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다. 공정거래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대외활동강화 (1231-311)	618	618	435	486	51	○ 내역사업인 '2030자문단 운영'은 2030자문단 회의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임. ○ '2030자문단 운영'은 그 실적이 우수하므로 사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5,100만원 증액이 필요	
2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1231-313)	-	-	1,877	-	△1,877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 사업과 중복되므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으로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3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961	961	942	2,699	1,757	○ 신규사업인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본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 다만, 포렌식 장비의 경우 현장 투입 및 데이터 분석 업무는 6급 이하 직원이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원 인력 19명이 아닌 16명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는 바, 1억 2,000만원 감액한 17억 5,700만원만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3,470	3,470	2,111	2,121	10	○ 기존의 홍보와 차별화된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1,000만원 증액	
5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2)	402	402	321	350	29	○ 내역사업인 '제도설명회'는 대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 및 수범자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임. ○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설명 공론의 장을 최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2,900만원 증액	
6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출연 (1271-350)	12,757	12,757	14,509	14,900	300	○ 분쟁조정을 위한 사업비가 7억 8,8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분쟁조정 사건접수가 증가하여 사건처리 지연이 발생하므로 계약직 변호사 4명 채용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91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방소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8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9,1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31-600)	1,792	1,792	1,453	1,438	△35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은 국제회의 참가,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또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사업임. ○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를 위하여 편성된 4,200만원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에 집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만 반영하고 3,500만원은 감액	
						△28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사업임. ○ 이의제기 재심사 건수와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개최 건수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300만원,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수당 1,240만원 감액 ○ ‘소비자 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와 신규 편성된 ‘평가내용 컨설팅’이 중복되므로 1,250만원 감액	
						△86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임. ○ 감리용역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8,6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34	○ 내역사업인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은 SNS 등 신유형의 온라인 광고매체를 이용한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 신유형 광고 감시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하여 9,400만원 증액 ○ 동향분석, 연구조사 비용와 모니터링 횟수 확대를 위하여 4,000만원 증액	
8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1451-620)	3,527	3,527	3,877	4,223	346	○ 내역사업인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은 상담위탁수당, 관리자인건비, 상담원 교육, 상담원 카운슬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상담위탁수당으로 2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4년부터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위탁수당 미지급 방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4,600만원 증액	
9	한국소비자원 출연 (1461-630)	53,696	53,696	57,146	57,296	150	○ 한국소비자원의 7개 지방지원은 지역별 피해구제 및 실태조사, 지역밀착형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원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처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업무로서의 실태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0	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6)	-	-	-	177	177	○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사무소(50명 규모) 신설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정보시스템 사업비 등을 위한 사업임. ○ 서울사무소의 사건처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과부하 해소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경인사무소 설립예산을 증액(총 48억 4,800만원)함. - 이 중 전산운영경비(7031-302)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내역사업에 대하여 8억 500만원 증액함.	
11	경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6)	-	-	-	1,674	1,674		
12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001-100)	56,152	56,152	63,544	65,736	2,192		
13	전산운영경비 (7031-302)	2,066	2,066	3,236	4,041	805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라. 금융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자금세탁방지 추진 (1331-303)	846	846	857	997	140	○ 내역사업인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사업' (7억 7,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따라 3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임. ○ 예산안 편성 시기와 분담금 확정 시점의 차이 및 환율 변동 등으로2026년도 확정된 분담금 대비 예산안 편성액이 부족하므로, 국제기구 정회원 자격 유지 및 국회 지적사항 이행 등을 위해 1억 4,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981	981	870	1,058	188	○ 내역사업인 '금융관련 국제 협력사업' (5억원 2,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300만원 감액_국외업무여비 4,700만원 감액)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면담, FTA 금융협상,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금융 관련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1억 8,800만원 증액 ※ 증액 소요 산출내역 - 국외업무여비 1억 2,700만원(고위급 금융외교 5,500만원, 국제회의 참여 7,200만원) - 금융통상 전담 통역사 채용 인건비 6,100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세부사업명
(0000-000)</th><th colspan="2">2025</th><th rowspan="2">2026(안)
(A)</th><th rowspan="2">수정안
(B)</th><th rowspan="2">증감액
(B-A)</th><th rowspan="2">수정이유</th><th rowspan="2">비고</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3</td><td>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신규)
(1831-889)</td><td>-</td><td>-</td><td>100,000</td><td>206,700</td><td>106,700</td><td>○ 동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임.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되,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하여 예산 1,067억원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햇살론 특례보증 연 공급규모 2.33조원 중 사회적 배려자 비중 15%(0.35조원) 예상
※ 증액 산출근거
<table><tr><th></th><th>현행(15.9% 이내)</th><th>금리 인하</th></tr><tr><td>일반
(85%)</td><td>2.33조원(공급규모) × 85% × 17.3%(사업손실률) = 3,433억원</td><td>2.33조원(공급규모) × 85% × 25.4%(사업손실률) = 4,218억원</td></tr><tr><td>사회적배려자
(15%)</td><td>2.33조원(공급규모) × 15% × 17.3%(사업손실률) = 606억원</td><td>2.33조원(공급규모) × 15% × 25.4%(사업손실률) = 888억원</td></tr><tr><td>재정소요</td><td>4,039억원</td><td>5,106억원</td></tr></table>주) 사업손실률 = 순대위변제율 – 보증료수입률 + 운영비</td><td></td></tr>
</table>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1,205	1,559	1,906	2,006	100	○ 동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사업 홍보 유지를 위해 최소 홍보비 총 1억원 증액	
5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414-320)	10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 동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임. ○ 2024년, 2025년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0억원 감액 ※ (2025년 11월 10일 기준)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의 **잔여 약정총액은 2,789억원/3,00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6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신규) (2414-327)	-	-	630,000	315,000	△315,000	○ 동 사업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 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신규사업임 * 조선협력 펀드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향후 미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투자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 ○ 세부 사업내용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3,150억원 감액	
7	스케일업 펀드 (신규)	-	-	-	100,000	100,000	○ 동사업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태펀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후기 벤처·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는 사업임 ○ 국민성장펀드가 유사목적의 혁신산업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흡수·통합하되, 성장지원펀드는 별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재정 당국 심의 과정에서 성장지원펀드를 별도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성장 중·후기 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 신규 반영 * 1조원: 재정 1천억원+산은 자체 2천억원+민간자금 7천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8	자본시장조사 인프라 운영 (정보화) (7132-504)	286	286	286	339	53	○ 동사업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인프라로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025. 7.) 이후 기존 포렌식 장비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일부 매체의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장비 도입을 위하여 5,300만원 증액	
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35-309)	450	450	1,240	4,430	3,190	○ 동사업은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① 2025년도에 이미 지급이 결정되었거나 결정 예정인 포상금 소요, ②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재산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 소요, ③ 2026년 신규 발생할 포상금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과소편성었으므로 31억 9,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0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7135-316)	200	200	194	1,000	806	○ 동사업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현재 2025년 예산(2억원)의 98%가 소진된 상황에서 약 1.2억원의 추가적인 포상수요가 발생한 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2025. 7. 30.) 이후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른 포상수요 증대로 내년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억 600만원 증액	
11	소송 수행 비용 (7135-318)	900	900	1,100	1,263	163	○ 동사업은 금융위원회 상대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 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현실화를 위해 1억 6,300만원 증액	

마. 국민권익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과태료 (56-563)	180	180	120	60	△60	○ 동 사업은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임. ○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960만원임을 감안하여 6,000만원 감액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1131-300)	1,390	1,390	1,382	1,282	△100	○ 내역사업인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1억 8,000만원, 신규 내역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활동 성과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을 위한 예산은 중복성이 높고 홍보 예산 감액 기조와 상반되므로 1억원 감액	
2	통합콜센터 시스템운영 (정보화) (1132-322)	6,784	6,784	7,412	14,581	4,640	○ 비긴급 상담전화 110통합 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 등을 위해 46억 4,000만원 증액	
						2,529	○ 통합콜센터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25억 2,900만원 증액	
3	종합상담창구 운영 (1134-341)	9,526	9,526	10,283	12,426	1,503	○ 비긴급 상담전화 110통합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협의, 홍보 및 상담조직 보강을 위해 15억 300만원 증액	
						640	○ 국민콜110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6억 4,0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136-360)	2,984	2,984	2,741	3,132	391	○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의 내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사업'(23억 4,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원 감액)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진단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2026년은 지방의회 전수평가 3년차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3억 9,100만원 증액	
5	공직자 행동강령운영 (1136-363)	78	78	85	101	16	○ 동 사업은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홍보물 발간,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기관별 운영·이행실태 점검 등을 하는 사업임. ○ 청렴기반 조성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은 지속적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24년 집행액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1,600만원 증액	
6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1136-368)	210	210	190	220	30	○ 동 사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담당자 교육, 전문가 자문,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 등을 하는 사업임.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법 위반신고 처리 등을 위한 예산 3,000만원 증액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운영 (1136-369)**	100	100	94	114	20	○ 동 사업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임. ○ 채용비리 근절은 청렴사회 기본적 사업에 속하므로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예산 2,000만원 증액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과징금 (56-565)	38,800	38,800	49,909	60,909	11,000	○ 동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수납하는 사업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과징금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밝혀져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입 예산 110억원 증액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1031-301)	3,714	3,714	3,714	4,814	1,100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24억 7,400만원, 전년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체계평가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사업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2억원, 전년동)은 최근 인증기업의 해킹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ISMS-P 인증*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증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11억원** 증액 * ISMS-P 인증은 기업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 증액 산출내역: 현장심사 4억원, 인증심사원 교육 등 2억원, 인증 의무화 기준 개발 5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1031-305)**	2,376	2,376	1,442	2,042	600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5억 7,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7,500만원 감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 중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3억 4,600만원, 전년동)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 디지털 통상 확대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증가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령 준수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6억원** 증액 * 현재 중국 및 EU 2개소(기관당 1억 7,300만원) 운영 중 ** 증액 산출근거: 중국 1억원, EU 1억원, 아세안 4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1032-302)	3,564	3,564	6,456	10,866	4,410	○ 내역사업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57억 4,2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5억 2,800만원 증액)은 가명정보 처리 지원 및 안전성 검증, 전문인력 공급 지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설·분석도구 지원 등을 위한 것임. ○ 사업내용 중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15억원 증액 ※ 증액 산출근거 - 국비지원형 3개소 × 2억원 = 6억원 (정부안: 개소당 1억원씩 총 3억원 반영) - 자체구축형 3개소 × 3억원 = 9억원 (정부안: 미반영) ○ 사업내용 중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 9,400만원 증액 ※ 증액 산출근거 - 가명(익명)처리 전담인력: 5인 × 12개월 × 8억 9,000만원 = 5억 5,400만원 - 적정성 판단 전담인력: 4인 × 12개월 × 8억 8,000만원 = 4억 4,000만원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2개기관 × 2억원 = 4억원 ○ 사업내용 중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위한 예산 15억 1,600만원 증액 ※ 증액 산출근거 - 클라우드 전환 지원: 2개소 × 3억 200만원 = 6억 400만원 - 연계 허브 구축: 9억 1,2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032-303)	6,050	6,050	5,364	6,364	1,000	○ 내역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41억 9,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7,600만원 감액)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혁신 서비스 발굴 및 중계 인프라 실증지원 등 연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중 내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및 실증을 위한 것임.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시,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API를 활용한 안전한 전송방식·규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API 개발을 위한 예산 10억원 증액 - 2개 기관 × 5억원 = 1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	개인정보 침해방지 (2034-301)	7,486	8,782	7,265	9,640	2,375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30억 4,200만원, 추경 대비 17억 4,600만원 감액)은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임. ○ 다크웹 등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 탐지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 23억 7,500만원 증액 * 23억 7,00만원 증액 산출근거 -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 탐지체계 신규 도입: 6억원 - 불법유통 탐지 데이터 분석·공유 시스템 마련: 14억 6,600만원 - 사업자 국민 대상 신속 공유·대응 체계 구축: 3억 900만원	
6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1,596	1,596	350	4,350	4,000	○ 동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는 사업임. ○ 스마트홈, 배달로봇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유 및 국외이전 여부 등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검증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40억원* 증액 * 증액 산출근거 - 신사업서비스 개인정보 처리현황 기술분석 환경 구축: 20억원 - 신규 침해위협 신산업 분야 선정·분석: 2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위원회운영지원 (7041-300)	2,020	2,020	2,162	2,462	300	○ 내역사업인 '위원회홍보지원'(3억 5,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원 증액)은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홍보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에 따라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국민의 일상적 개인정보 보호 실천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수칙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3억원 증액 - 디지털 콘텐츠 영상 제작: 2천만원 × 10회 = 2억원 - 정책 홍보 라이브 제작: 1천만원 × 10회 = 1억원	
8	위원회 정보화지원 (정보화) (7041-302)	1,921	1,921	2,171	3,509	1,338	○ 내역사업인 '정보화 체계 구축'(2026년도 예산안 미반영)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된 하드웨어 교체 및 분쟁조정제도 개편 관련 기능 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3,800만원 증액 - H/W 노후에 따른 교체 등: 11억 3,100만원 - 분쟁조정, 안건관리 기능 개발 및 감리: 2억 700만원	

Ⅳ.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념관의 경우 세입으로 계상할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IC국가보훈등록증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원활한 검진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등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 등 감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운영 또는 임직원의 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의 자체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인건비 등 운영비 자체 조달 방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직군경 유족 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충에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터미널 전산망 통일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실적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경로할인 등 일반 할인과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준보훈병원 도입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증가함이 예측 가능함에 따라 적정 예산 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확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후 재지정된 위탁병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한다.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료지원 미지급금 누적 방지를 위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근무 태만, 시설 사유화,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퇴근 등

논란으로 현재 국가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장의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의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외 사적지 탐방’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국가별 인원을 균형감있게 배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 “라이브 온 보훈” 콘텐츠를 역사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제작·운영하도록 하여야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간 교육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본부 보훈문화정책과, 보훈교육연구원, 독립기념관, 임시정부기념관 간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분야별 특화를 유지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그 추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 주관형 보훈문화 확산 사업이 연례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 안전 예산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직지원금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에 적극 노력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명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사업 추진 시 유족에게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 분석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심사기준 등에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소송비용 각자부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 홍보의 이념화 논란이 있는 나라사랑신문발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의전단 처우 개선 방안 및 실무원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축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2026년 2월 국회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24년 시행령 개정 이후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소급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신규 기부금 모집 시 기부자명·기부용도·집행내역을 시스템상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2025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훈급여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운영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이 셧다운이 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 또한 전면 재검토한다.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평가 재도입 및 기관별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석자 사례금 및 전문가 정책자문 사례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사업'이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사업'과 목적 및 활동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격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병행하며, 정책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과정에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권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추후 기후시민회의 설치를 포함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기후시민회의에서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탄소중립녹

색성장위원회로 전달되고, 실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회의 입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및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현행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의 성과관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플랫폼의 운영 성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점검·보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 공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K-토론나라 운영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K-토론나라가 일회성 행사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청취 의견 속에서 향후 과제 도출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단체 선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2026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결산 심사 시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검찰개혁추진단의 구성원에 검찰 출신을 충분히 증원하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청년 전세사기 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사후 구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공론화 의제 설정 및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PBS 폐지로 연구자의 성과 제고 유인이 저하되거나, 정부의 정책 수요 반영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용 표준지침’에 따라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한시적 사업을 위한 일반사업비에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연구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외부용역 또는 자문의 저자, 기여 표기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원의 대외활동에 제한을 두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은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연구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예산 집행 및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LLM 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LLM 사용에 따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본사업비 중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에 대해서는 과제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3,600만원의 과제 예산을 수시연구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산업연구원은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자 대행비용은 해당 기관이 직접 지출하도록 조정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통일연구원은 김천식 원장의 사의표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폐지한다.

○ 통일연구원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 사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 및 일본 군사대국 역할론에 대해 용인하는 연구관점을 자제한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용인경전철 사업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노력하며, 청년인턴 운영 예산이 불용되지 아니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노동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년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 운영사업’ 내 신규편성된 국외출장예산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교재제작, 교육교재 설명회 등으로 집행한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을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를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한국환경연구원은 특수사업비 중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을 일반사업이 아닌 기관고유사업 내 연구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수행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재산조사의 강화, 납부독촉, 현장조사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효과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율,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반영률 등을 제고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결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채널 콘텐츠에 단순 출연시키는 방식의 홍보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민간 채널 협업형 홍보로 방향을 전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자심의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조사 데이터의 소산(remote backup) 등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제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국제분담금 예산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특례보증 사업의 급격한 대위변제 증가로 인하여 연내 신규 대출 보증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발생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병행한다.

○ 금융위원회는 유사 상품의 신규 출시 및 청년도약계좌 사업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 금융상품 출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피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6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가족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사업계획 변경,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지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계획과 그 실적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세입을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이며, 근무성적평가 조작 의혹 건, 대웅제약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급여체계가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 추진의 효과 극대화,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사 중도 퇴사 방지, 적정 상담인원 적시 확보, 콜센터 인지도 제고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 등 처우 합리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보다 빠르게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 방안 및 보호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시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 위반이 선택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은 기본경비가 아닌 관련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만으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의 성과지표를 부활시키거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조속히

이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청렴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수납실적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추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매년 세입 예산안 산출시 최신 실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구축 사업 예산(신규, 28억 9,200만원)이 연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8억 1,000만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관련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검증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 보안성을 확보하고, 표준화 및 고도화 검증 상황에 대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주권 보장이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이 서비스 개발·지원이 아닌 표준화·안전성·연계체계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한다.

○ 현재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일부 한정된 분야와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 내역을 조회·철회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 주권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026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의 과제당 단가가 전년 대비 상향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에 이미 연구개발기관과의 상호 합의 하에 기존 단가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과업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철저하게 과제 관리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1월에 수립·공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의 12개 핵심 표준 중 나머지 6개 표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로드맵 개정 시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 시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 영역

의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최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 시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관리자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위 과정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보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민의 권리 신장과 기업·기관의 안전조치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단순 위탁·대행 방식의 사업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핵심 역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한다.

【 첨부 】

2026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11

【 국가보훈부 소관 】

Ⅰ. 총 괄

1.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 보훈체계 현황[7)]

□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제정 이후, 1961년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 지원목적의 군사원호청이 발족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독립, 6·25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에 굵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음.[8)]

□ 상이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생계지원에서 출발했던 보훈 정책은 유공자들에 대한 자활시책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예우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1985년 시혜적 원호에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업무로 전환(원호처 - 국가보훈처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제대군인지원 업무는 군인보험 지급, 일선장병 위문에서 취업·생활지원, 국립묘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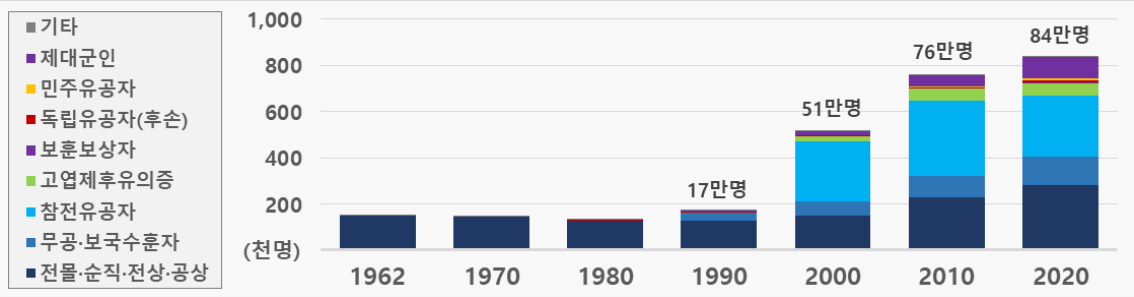
7) 홍익표,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01 및 제4차 보훈발전기본계획에서 발췌·정리

8) - 60년대: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 80년대: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90년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제대군인
- 200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장, 전직지원금까지 확대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새로이 진입됨.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4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

<보훈대상자 구성 및 규모 추이>



(자료: 국가보훈부)

○ 2005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으며,[9]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함.[10]

9)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0) 현재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 2012년에는 50여 년 간 이어져온 보훈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음.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시작함.[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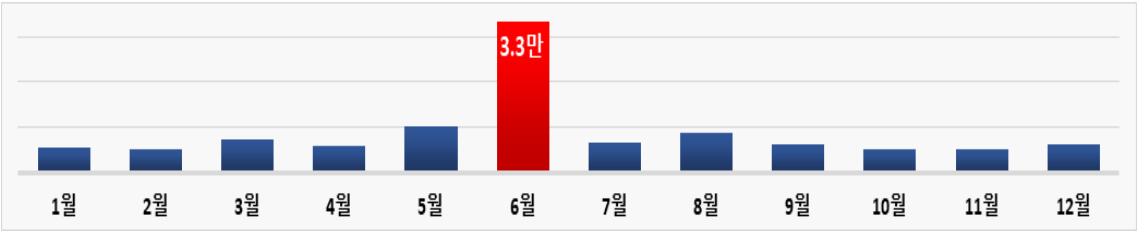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아직 저조함.

○ 국민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는 응답은 31.9%로, '그렇지 않다' 42.1%보다 낮게 나타남.

○ 보훈이 일상 속 문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월별 "보훈" 키워드 언급량('17.~'21. 5년간)>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 확대에도 불구,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정체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답하고 있음.

11) 이는 보훈의 정체성 문제, 보훈과 복지의 경계 문제, 예우와 보상 분류 문제, 보훈 대상의 문제 등(한국법제연구원, 200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

- 보훈정책 만족도: ('18.) 18% → ('21.) 18.2% / 3년간 0.2%p 상승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18.) 63% → ('21.) 51.7% /
3년간 △11.3%p 하락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1위(64.9%)

2) 보훈예산 현황

□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대상과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보훈대상은 1962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15만 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80만명, 2025년 83만명으로 3.75%가 증가했음.

□ 보훈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5조원, 2023년 6조원을 각각 돌파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6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6,582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 3.3% 증가하였는 바, 정부 예산안 728조원 중 0.91%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2,289	63,125	64,347	2,058	3.3
기 금	2,178	2,178	2,235	57	2.6
총지출	64,467	65,304	66,582	2,115	3.3

(자료: 국가보훈부)

□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점유비율(미국 4.6%, 호주 1.2%, 캐나다 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우리나라 보훈예산과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6년 예산안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3,014,172	7,280,059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3,186	66,582
B/A	1.08	1.65	1.44	1.71	1.76	0.9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부문 예산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보훈부문이 속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율(24.5%)이나 전체 총지출 증가율(20.7%)보다 현저히 낮으며, 2026년

예산안의 경우도 보훈부문 예산은 3.3% 증가함에 그쳐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율(8.2%)이나 전체 총지출 증가율(8.1%)보다 낮은 실정임.

<보훈부문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지출	558.0 (8.9)	558.0 (8.9)	638.7 (5.1)	656.6 (2.8)	673.3 (2.5)	728.0 (8.1)
보건·복지·고용분야	199.74 (10.6)	217.67 (9.0)	226.00 (3.8)	242.94 (7.5)	248.75 (4.7)	269.14 (8.2)
보훈부문	5.87 (2.7)	5.93 (0.8)	6.25 (5.3)	6.48 (3.7)	6.44 (0.6)	6.65 (3.3)

주: 본예산 기준, 각 연도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증가분 괄호 안은 해당 기간 증가율임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보훈예산 중 보훈급여금 예산의 비율은 78.2%에 이르고 있음.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구분	보훈예산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1990	3,742억원	3,195억원	85.4
2000	1조2,464억원	1조284억원	82.5
2010	3조4,325억원	2조6,449억원	77.1
2020	5조5,078억원	4조3,715억원	79.4
2026(안)	6조6,582억원	5조2,096억원	78.2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인원: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192,964	3,197,518	190,606	3,325,248	191,448	3,468,124
간호수당	2,503	56,610	2,357	56,243	2,195	55,045
생활조정수당	16,473	42,027	21,365	55,899	31,505	89,526
6.25자녀수당	27,398	299,431	27,952	328,809	31,460	403,289
고엽제수당	35,115	298,384	34,614	310,694	32,883	309,760
무공영예수당	10,668	52,957	10,134	55,163	8,821	51,170
참전명예수당	144,756	608,794	138,010	646,292	124,123	625,993
4.19혁명공로수당	276	1,196	275	1,323	258	1,334
사망일시금	6,818	8,304	7,171	8,748	8,011	9,694
재해보상금	8	78	8	178	8	178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 2026년 예산안: 정부 예산안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

□ 2026년 예산안을 프로그램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사업 기준으로는 8개 중 ‘생활안정지원(△6.7%)’ 및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19.8%)’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보훈심사및보상’, ‘보훈문화’, ‘제대군인지원’ 및 ‘보훈행정’ 사업은 증가율이 0.1%~3.2%에 그침.

〈 2026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97,616	6,297,093	199,477	3.3
○ 보훈심사및보상	5,099,473	5,218,026	118,553	2.3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보훈의료복지	668,765	769,324	100,559	15.0
○ 생활안정지원	28,952	27,007	△1,945	△6.7
○ 보훈문화	92,530	95,514	2,984	3.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17,699	94,361	△23,338	△19.8
○ 제대군인지원	34,860	35,331	471	1.4
○ 보훈행정	19,056	19,076	20	0.1

(자료: 국가보훈부)

<2026년도 단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보상금	3,562,819	3,717,505	154,686	4.3
○ 수당	1,518,748	1,482,250	△36,498	△2.4
○ 수시보상금	9,969	9,964	△5	△0.1
○ 보훈심사	1,631	1,598	△33	△2.0
○ 등록심사	6,306	6,709	403	6.4
○ 보훈단체지원	36,281	38,454	2,173	6.0
○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21,776	11,047	103.0
○ 의료지원	649,800	728,296	78,496	12.1
○ 의료환경개선	8,236	19,252	11,016	133.8
○ 교육지원	26,134	23,933	△2,201	△8.4
○ 취업지원	2,818	3,074	256	9.1
○ 독립기념관	27,479	35,090	7,611	27.7
○ 보훈문화진흥	20,108	20,827	719	3.6
○ 현충시설	28,709	32,161	3,452	12.0
○ 기념사업	16,234	7,436	△8,798	△54.2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0,957	11,433	476	4.3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106,742	82,928	△23,814	△22.3
○ 제대군인생활안정	24,692	24,816	124	0.5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10,168	10,515	347	3.4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236	5,486	250	4.8
○ 일반행정	4,932	4,596	△336	△6.8
○ 보훈서비스지원	4,456	4,741	285	6.4
○ 정보화	4,432	4,253	△179	△4.0

(자료: 국가보훈부)

□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개 과제와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년과 동결되었고, 보상금은 2025년과 같이 5% 인상하였으나 2024년 인상률 5.5%보다는 낮음.

○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계속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오고 있음. 최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고시에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12] 2024년에는 10% 인상된 바 있으

12) 3인가구 이하 : 50%이하 242천원, 40%이하 277천원, 32%이하 311천원
4인가구 이상 : 50%이하 300천원, 40%이하 336천원, 32%이하 370천원

나,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은 동결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에는 중기복무자 78만원, 장기복무자 9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중기복무자 58만원, 장기복무자 81만원만 편성됨.[13)]

(2)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2026년도 예산안 중 신규 세부사업은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1개 사업만 편성됨에 그침.

○ 정전 7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인 기념사업을 제외하고 2017년 예산부터 2026년 예산안까지 총 10년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단위사업 단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2026년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1개 뿐임. 이를 내역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역사업조차 신규사업은 총 4개에 불과함.

13) p. 201,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필요 참조

<최근 10년간 신규 내역사업 목록>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2018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 지원	국립묘지 외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 강화
202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념사업 기획·대국민 홍보
202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위로행사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격려

(자료: 국가보훈부)

□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2020년 1.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놓여 있으며, 미국 4.6%, 캐나다 1.4%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또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후술한 개별 사업의 검토 내용과 같이, 의료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은 실제 소요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등을 통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주요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5,074	±26,318	±1,133	±52,915	±99,004
보훈심사 및 보상	△29,497	△26,318	△1,133	△52,915	△96,505
보훈단체지원	△2,404	-	-	-	-
보훈의료복지	34,270 △400	26,318	-	49,815	92,131
생활안정지원	29 △160	-	-	-	-
보훈문화	△1,662	-	-	-	△61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227	-	218	-	△514
제대군인지원	△724	-	915	3,000	2,909
보훈행정	775	-	-	100	2,590
회계기금간 거래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보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은 월평균 189,065명으로 편성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상금’ 사업 예산에서는 71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국가보훈부는 이 중 711억 8,300만원을 ‘보훈병원 진료’(469억원), ‘위탁병원 진료’(200억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42억 8,300만원) 사업에 각 이용하였음.

〈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예산액(A)	2,743,789	2,813,124	2,944,364	3,059,336	3,197,518	3,325,248	3,468,124
집행액(B)	2,695,588	2,794,347	2,941,338	3,034,761	3,127,504	3,258,090	3,396,849
집행잔액 (A-B)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이·전용	8,150	1,202	3,020	24,565	35,153	64,247	71,183
불용	40,051	17,575	6	10	35,311	2,911	62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의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업의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오고 있음.

- ‘교통시설이용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지원금이 과소 추계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보전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14]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지급이 미루어진 미지급 이월액 99억 2,600만원은 전년도의 이월금액 40억 1,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15][16]

〈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0	2,365	2,365	910	3,275	3,275	138.5	100.0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14) P.117 참고
15) 2024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진료비 등 지원금액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금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16) P.142 참고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2025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훈급여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성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

□ 국가보훈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 목표(9개)-성과지표(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table>
<tr><td>임무</td><td colspan="2">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td></tr>
<tr><td>비전</td><td colspan="2">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td></tr>
<tr><td rowspan="8">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td><td colspan="2">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td></tr>
<tr><td></td><td>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td></tr>
<tr><td></td><td>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td></tr>
<tr><td colspan="2">전략목표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td></tr>
<tr><td></td><td>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td></tr>
<tr><td></td><td>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td></tr>
<tr><td></td><td>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td></tr>
<tr><td colspan="2">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td></tr>
</table>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3) 검토의견

(1) 성과달성률 저조

□ 국가보훈부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7개(70.0%)임.

○ 60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507개 중 415개(81.9%)가 달성되고 92개(18.1%)가 미달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는 전체 평균인 81.9%보다 낮은 70%를 기록함.

- 국가보훈부는 2023년 75점, 2024년 75점에 이어 2025년에도 70점

으로 전체부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달성률도 2022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 전략목표Ⅱ(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의 경우 성과지표 4개 중 1개(25.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점)’, 국가유공자 등 대상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88골프장의 ‘자기자본 이익률(%)’과 ‘내장객 수(명)’의 성과지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49,266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9,296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1/3
		달성률	25.0%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110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8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0%
총 계	62,698	지표 수	10
		달성/미달성	7/3
		달성률	70.0%

(자료: 국가보훈부)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5.35%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6.35%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처 평균
2024	5	8	10	7	3	75	81.9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평균	5	9	14.50	11.00	3.50	75.35	76.35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0.43%), 제대군인국(99.90%)은 100%에 미달함.

〈성과지표별 · 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100.0	90.43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100.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8.4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대부지원 만족도(점)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91.3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84.4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점)					100.3	101.7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101.0	100.0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학술회의· 문헌발간 신진연구인력 참여 노력도(점)(25년 신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인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99.90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100.3	100.0	100.6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			103.0	100.8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					103.8	

(자료: 국가보훈부)

(2) 성과계획서와 다른 성과지표 실적 측정 및 측정기간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Ⅵ-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제대군인지원)’의 성과지표로 ‘제대군인 취·창업률(%)’을 설정함.

〈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전략목표) Ⅵ.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목표)** Ⅵ-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제대군인 취·창업률(%) **(측정산식)** (제군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군인 수 / 제대군인 센터 회원 수)*100 - 측정대상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를 제시할 경우, 표본추출 방법, 규모, 조사방법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측정대상 기간을 2022. 12. 1.부터 2023. 11. 30.까지로 설정하였는데도 2022. 12. 1.부터 2024. 11. 30.까지의 ‘제군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군인 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음.

□ 그 결과 국가보훈부의 성과보고서에 프로그램 목표Ⅵ-1(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에 해당하는 예산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과 관련한 재정활동 성과가 왜곡되었음.

□ 2025년 성과 측정의 경우에도 ‘20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측정대상 기간을 2023. 12. 1.부터 2024. 11. 30.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2025

년의 실적이 아니라 2024년의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측정대상기간을 설정할 때 회계연도 성과를 반영하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측정대상기간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프로그램 성과와 인과관계가 낮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 「202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산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목표 Ⅲ-1을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단위사업으로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 성과지표>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 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측정산식) 전체 국립묘지 방문인원 합산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로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만을 설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독립유공자 등 발굴 포상’ 세부사업은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단위 : %)’을 성과지표로 설정·운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삭제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세부사업 등은 성과지표를 설정·운용하지 않고 있음.

□ 향후 국가보훈부는 위와 같이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세부사업별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7]’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18]’ 등 세부사업 구조변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7,300만원(10.7%) 증액된 37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5,071	34,281	37,954	3,673	10.7

(자료: 국가보훈부)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3.3%)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 편성됨.

17)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18)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4100) 내의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단위사업(4161)에 속한 세부사업이나, 8개의 내역사업 중 제대군인국 소관 사업은 1개에 불과함. 나머지 7개의 내역사업 중 6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복지증진국 소관임.

<2026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실	9,342	7,991	8,253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2,285	2,303	2,303
현지참전 기념사업	기획조정실	1,222	1,121	1,121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기획조정실	2,641	2,387	2,387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기획조정실	700	714	569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기획조정실	1,268	963	803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200	187	187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348	250	809
공무직등 인건비	기획조정실	63	66	7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 위의 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1)[19]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6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규모는 ‘보훈단체 운영 및

19)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

선양활동등’ 사업에 378억 3,100만원,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2억 4,400만원임.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비해 36억 499만원 증가하였고,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2025년보다 2억 400만원이 감소함.

<각 세부사업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협력관	29,196	29,647	451
	보훈단체선양 활동등	보훈단체협력관	5,031	6,395	1,384
	보훈단체 복지지원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	1,789	1,789
	소 계		34,227	37,831	3,604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	-	-
	현지참전 기념사업		-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81	81	-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290	145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60	-	-
	공무직등 인건비		-	-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18	18	-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	-	-
	소 계		449	244	△205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함.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비목전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부 내역사업은 정부가 시행주체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20][21]

□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각의 내역사업[22]에 대해,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였음.[23]

---

20) 동 평가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86p)

21) 같은 평가에서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도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음.(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375)

22)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

2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p.376, p.377, p.381, p.386)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사업 통폐합 필요성 지적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376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

· 개선사항(377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췌)

〈통폐합 필요 지적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수행주체	사업 수혜자	비고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보훈단체선양활동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국제보훈 교류사업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워리어 게임) 출전 경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자료: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사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에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특히,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찰 발주

및 위탁계약, 수탁사업 구분계리,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 등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 절차[24]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별개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음.

○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2026년 예산안은 2024년 및 2025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없이 종전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역사업들을 별도로 편성되었는바, 국가보훈부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통합방안 및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 「국가재정법」 제21조[25]는 세출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 관 · 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24)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98~p.200,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별 지침

25)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세출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1개의 프로그램에 1개의 '실' 또는 '국'이 포함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26]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은 보훈단체협력관 및 복지증진국 소관이고,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세부사업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 소관이며,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 소관임.

□ 국가보훈부의 2015년 예산의 경우 38개의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의 경우 32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동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많이 통폐합하였음. 그러나 통폐합된 단위/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다른 세부/내역사업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가 있음.

---

26)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27] 이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을 알기 어렵게 됨.

□ 또한,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각 사업들의 과거 예산투입규모, 결산내역, 사업추진 성과 등 사업이력의 추적이 어렵게 되고, 각 사업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27) 2025년도 예산안에도 '현충시설건립세부사업'내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건립 등 3개 내역사업,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세부사업'내에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4. 부대의견 조치결과

1) 개요

□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은 총 34건으로, 국가보훈부는 29건을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힘.

□ 부대의견 중 조치 중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5번]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성과지표(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 [27번]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전직지원금은 계획과 달리 2026년 지급액은 동결되었으며,[28]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단 1건만 편성됨.[29]

○ [29번]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

28) p. 20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참조
29) p.33,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참조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30]

○ [31번]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

30) p.58,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세부사업 구조변경 필요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 조치 결과>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1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보상금 인원 추계항목 세분화(보훈대상별, 지급대상별, 상이등급별) 및 증감률 선별적용 '26년 예산 인원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3.3% 정상집행 중(12월 해외 보상금 지급예정) ** '25년 189,728→ '26년 188,188명 (△1,540명)	조치완료
2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추이 등 반영 생계지원금 예산 인원 추계 * '25년 3,535→ '26년 8,095명(본인) '26년15,883명(배우자) ** 배우자 생계지원금 예산은 법률 시행을 1월 계산하여 12월분이 편성한것임 (보상금) 보상금 인원 추계항목 세분화(보훈대상별, 지급대상별, 상이등급별) 및 증감률 선별적용 '26년 예산 인원 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3.3% 정상집행 중(12월 해외 보상금 지급예정) ** '25년 189,728→ '26년 188,188명 (△1,540명)	조치완료
3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참전명예수당 사업의 이·전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참전유공자 지급인원 평균 감소인원 적용 '26년 예산인원 추계 * '25년도 10월 현재 보상금 집행률 82.0% 정상집행 중(12월 해외보상금 지급 예정) ** '25년 108,621→ '26년 93,420명 (△15,201명)	조치완료
4	○국가보훈부는 내역사업인 '검진비'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음 -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확대, 전담의사 추가 채용, 서면 검진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겠음	조치 중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5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과거 실적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 현재 보훈단체 ①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 ②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로 성과를 평가 중임 -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마련하겠음 - ’26년도 목표치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실적의 경우 ’26년도 목표치 상승률이 9.6%로 ’25년 상승률 5.3%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 호감도의 경우 ’26년도 목표치 상승률은 2.0%로 ’25년도 1.3% 수준을 상회하도록 목표 설정하였음	조치 중
6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이견 조율 여부, 건립부지 타당성, 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보조금을 편성·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이 교부된 지자체의 보훈회관의 공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훈회관 적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집행 부진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계자회의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독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지(방)청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 지방보훈회관 건립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확보 노력	조치완료
7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o ’26년 예산 정부안에 ’23, ’24년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99억 2,600만원 반영	조치완료
8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시 간호간병 인력 충원 등 병상 운영 한도 증설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24년 대비 105병상 확대하여, 운영 가능 병상의 41.6% 운영중이며, 인력은 ’24년 대비 59명 증원하였음 ○‘25년 내 대구보훈병원 45병상 추가 확대를 위한 필요 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27년까지 운영가능병상의 51%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9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5년 2차 추경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예산안에는 '25년 본예산 대비 563억원, 추경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함	조치완료
10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가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26년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이 8.2%('25년 2,491억 → '26년 2,694억) 증가하며,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조치완료
11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적극 시행 - 보훈제도 안내 책자 수록('25.1월) - 보훈단체(상이군경회, 5.18 등) 대상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25.8월) - 국가보훈부 블로그 게시('25.9월) -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게시('25.9월) - 나라사랑 신문 안내('25.10월)	조치완료
12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학교 248,000원, 고등학고 372,000원, 대학교 472,000원, 특수교육 718,000원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추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 학습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25~'29년 중기사업계획 제출하였음 - 단가 100% 인상 요구 * 중 248천원, 고 372천원, 대 472천원, 특수 718천원 ○ 단가 인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조치완료
13	○국가보훈부는 '2025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이 광복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로 집행하고, 사업 집행 전 국무조정실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한다.	○2025년도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사업은 광복 80주년 계기로 카자흐스탄 및 유럽 3개국(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중복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음	조치완료
14	○국가보훈부는 2026회계연도'보보의 집 유지관리'예산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부지 무상 사용 승인, 행안부(경찰청, 소방청)는 계기별 체험 행사(5월(어린이날), 6월(호국보훈의달) 등)에 인력·장비(경찰차, 소방차 등) 지원하여 예산 분담 대안으로 협업 추진, 2026년도에도 협업 적극 추진하겠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15	○국가보훈부는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o ‘25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광복 80주년 행사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를 설정	조치완료
16	○국가보훈부는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인력증원 예산 증액 요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 체계 구축 노력 ○ 재외공관, 지자체, 지역박물관 등에 후손찾기 홍보 협조 등 지속	조치완료
17	○국가보훈부는 국립5·18묘지 내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묘역 배수 등 시설관리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립5·18민주묘지 시설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출 완료 - 묘역 배수 개선 공사 ‘25년 2차 추경예산 반영(163백만원)하여 공사 진행 중 (’25년 12월 완료 예정) -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반영 지속	조치완료
18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조성사업의 2년간 4:6 비율로 편성한 공사비를 3년간 3:4:3 비율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공사비 예산을 ’25년-’27년(3개년) 3:4:3 반영하였으며 공사 착공(‘24.12.) 후 정상 추진 중	조치완료
19	○국가보훈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묘소 조사 관련 인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25년 청년인턴 채용시 독립유공자 묘소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부서 및 본부 사업부서에 청년인턴 채용 및 배치 완료 * 상·하반기 및 단기형 청년인턴 44명 채용	조치완료
20	○국가보훈부는 2030 자문단의 투명한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다.	○ 자문단 활동사항은 분과별, 개인별 정책 자문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자문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	조치완료
21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000만원)은 국가보훈부장관, 차관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감액 내역 반영하여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완료○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22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o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 분석 연구용역 추진 중('25.7월~11월) o 최근 언론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제기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전면 재검토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음	조치 중
23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25년부터 국가유공자대부(융자) 등 세부사업을 '직접대부 융자금'과 '위탁대부 채권양수'로 분리하였으며, '26년 예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회 심의 예정임 * '25년 확정예산 II-1 사업설명자료, '25년 보훈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각목명세서, '25~'29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조치완료
24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o '25년 친일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송출 실시 및 캠페인 진행, 친일귀속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반영한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친일귀속재산 매입을 위한 협조 공문(시행: 10.28) 등 기금 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 추진 중 ('25기준 입찰 31개 필지 매각)	조치완료
25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QR코드 연동시행 및 SNS 홍보 강화 실시('25.1월)	조치완료
26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기존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보완,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예정 - 지자체 보훈수당 정책포럼 실시 ('25.9.26., 국회도서관) ○ 상이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해 소득평가액에 미포함('26년 시행 예정)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통과('25.7.31.)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27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25년 2차 추경으로 보훈병원 진료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예산안에는 '25년 본예산 대비 563억원, 추경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위해 노력	조치완료
28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 등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노력, 각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담당 부서 등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달성률 제고 노력	조치완료
29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고려하여 '27년도 예산 편성 시 개선 노력	조치중
30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납률 추이 및 최근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25.3월 상임위 보고) * 과태료: ('25) 88백만원 → ('26) 11백만원 기타고정자산매각: ('25) 35백만원 → ('26) 13백만원	조치 완료
31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과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의 사업내용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7년도 편성 시 개선 노력	조치중
32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은 독립기념관 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한다.	○ 독립기념관 내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33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설립되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의 전시 구성내용의 경우 독립기념관의 운영 및 전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독립기념관 내 「광복80주년 특별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	조치완료
34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광복80주년 특별관 개관 전 국민 의견 수렴 계획 예정	조치완료

Ⅱ. 일반회계

[세입]

1. 건물대여료[31)]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물대여료’는 국가보훈부 소유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 대여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만원(4.3%) 증가한 9,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건물대여료	98	94	-	98	4	4.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 동 사업의 연도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3,700만원, 2024년 4,1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또한 2023년 4,900만원, 2024년 9,800만원,

31)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025년 10월 기준 1억 8,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3	94	49	37	39.5	76.2	12	-
2024	94	78	41	43.6	52.6	37	-
2025.10	94	183	156	151.1	78.5	27	-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보다 건물 내에 임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 또한 현실화하여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예를 들면, 서울현충원의 경우 꽃집 임대를 2024년부터 시작하였고, 임대료는 2024년 1,100만원에서 2025년 6,3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5년 기준으로 서울·대전현충원, 영천·임실·괴산호국원, 임시정부기념관 등에서 건물대여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건물대여료 상세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대전현충원	1,760	1,760	-
영천호국원	1,188	1,188	-
임실호국원	1,155	1,155	-
괴산호국원	748	748	
임시정부기념관	3,807	1,027	2,779
서울현충원	9,686	9,686	-
합계	18,344	15,564	2,77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최근 건물대여료 상승 추세 및 수납액 증가 규모를 감안하여 건물대여료 수입계상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 교육 강화 필요

□ 건물대여료 상세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의 경우 2024년도에 2024년 대여료 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5년도 대여료를 징수결의하여 징수함.

2025년도에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입이 2024년도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재산이전수입 상세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시설명	수납상세내역	최초납기일	수납액	미수납액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2024년도 국유재산(매점, 자동판매기)	2024-02-16	100	-
	2025년도 국유재산(매점, 자동판매기)	2024-12-27	100	-
산청호국원	2024년도 국유재산(매점, 식당)	2024-07-21	100	-
	2025년도 국유재산(매점, 식당)	2024-07-21	359	
괴산호국원	2024년도 국유재산(매점, 식당)	2024-08-31	728	
	2025년도 국유재산(매점, 식당)	2024-12-31	780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가보훈부는 2022~2023년도에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반영하지 못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에 산청호국원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여료를 각각 435만원과 1,374만원을 반환함.[32)]

○ 괴산호국원의 경우, 2024년에 2024년 및 2025년도 대여료를 징수결의하여 수납처리한 후, 2025년에 4차례에 걸쳐 2024년과 2025년 부과분 사용허가 변경 처리를 통해 대여료를 수정하여 징수함.

32) 0월 징수결의 후 과오납 반환으로 처리함.

<환급 또는 대여료 수정 내역>

(단위: 만원, %)

시설명	사유	최초납기일	수납액
산청호국원	2022년도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율 경감에 따른 국유재산(식당 및 매점) 건물 사용료 환급	2022-11-30	△435
임시정부 기념관	2023년도 카페 및 기념품샵 사용료 환급	2023-12-31	△1,375
괴산호국원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3차	2025-02-28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4차	2025-04-30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5차	2025-06-30	182
	2024~2025 사용허가 계약변경 6차	2025-08-29	2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대여료 산정 및 연도별 수납 고지를 함에 있어 위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재산이자수입[33)]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금 및 국고보조금 예탁 시 발생한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정산 반환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0만원 증가(17.6%)한 6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052	511	-	601	90	17.6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독립기념관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지연 문제

□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금액을 정산하여 당해 납부하는게 원칙이나,[34)]

---

33)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기념관의 경우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 달리 연례적으로 전년도 정산액을 당해에 납부하고 있지 않음.

○ 2020년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납은 2022년에, 2021년 및 2022년 이자 및 환급금 반납은 2024년에 각각 이루어졌으며, 2025년 10월 기준 2023년 및 2024년 이자 및 환급금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최근연도 독립기념관 이자 · 수익금 · 환급금 반납일>

(단위: 만원, %)

연도별	징수 결의일	수납일	수납액
2020년 독립기념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022-04-11	2022-04-20	2,280
2020년 독립기념관 운영지원 수익금 반납	2022-04-11	2022-04-20	492
2021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2024-01-22	2024-01-27	1,764
2022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 반납	2024-01-22	2024-01-27	6,530
2022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024-01-22	2024-01-27	4,884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결산잉여금 결산 등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잉여금 확정은 모두 차년도 2월에 확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결산잉여금 발생액	처리내역		확정시기 (이사회 의결일)
		차기 이월 (이월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2020년	819	819	-	'21.2.23
2021년	559	559	-	'22.2.23
2022년	662	662	-	'23.2.27
2023년	383	383	-	'24.2.28
2024년	855	680	175	'25.2.26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과 달리,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광복회 등 다른 기념관 또는 단체의 경우 2023년 국고보조금 정산금은 2024년에, 2024년 정산금은 2025년에 각각 납부를 완료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기념관의 결산잉여금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국고보조금 이자 및 환급금의 수납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3. 징계부과금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 등에 의해 국가가 수납할 징계 관련 부가금 수입으로,[35]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음.

<2026년도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징계부과금	6	-	-	-	-	-

(자료: 국가보훈부)

3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검토의견: 과거 징수실적을 고려한 수입계획안 계상 필요

□ 국가보훈부 세입예산안에는 징계부과금 수입이 장기간 계상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이 2021년부터 매년 부과(징수결정)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수납되고 있는 실정임.

○ 2021년, 2023년 및 2024년에는 징수결정을 12월 31일에 각각 고지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수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의료지원비 과오급금'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건을 담당자의 착오로 징계부과금으로 징수결정(6,874,100원)함.

<최근 4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1	-	-	-	9	-	-	0.0	9	-
'22	-	-	-	9	9	-	100.0	-	-
'23	-	-	-	10	5	-	49.8	5	-
'24	-	-	-	13	6	-	47.5	7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과거 징계부과금 징수 실적 및 지속 여부에 대한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징계부과금 수입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연말 징수결정 고지를 지양하는 등 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으로 매년 징계부과금을 수입 계상하고 있으며, 2026년도 편성액은 4,200만원임.

4. 기타경상이전수입[36]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6억 5,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4,537	8,652	8,652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보훈급여금 과오급 수납률 제고 및 발생 축소 노력 필요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항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37] 환수사유는 ① 범죄,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36)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신상변동신고를 지연·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38] ② 지급제도 변경, 담당자 변경 및 실수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③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정정, 범죄경력 통보 등을 누락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분류됨.[39]

□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 및 수납률은 2020년 142건/20.5% → 2021년 254건/20.2% → 2022년 164건/23.6% → 2023년 312건/24.8% → 2024년 218건/23.1% → 2025년 9월 기준 181건/16.1%임.

<2020~2025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착오		군기록 정정·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42	632	55	364	27	164	60	104
2021	254	3,514	87	1,664	41	411	126	1,439
2022	164	2,423	53	688	22	337	89	1,398
2023	312	1,520	225	1,010	36	322	51	188
2024	218	1,021	96	670	29	101	93	250
2025.9	181	1,259	58	818	37	208	86	233

(자료: 국가보훈부)

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38) 신상변동 사항 신고 지연 및 누락의 경우 4개월 이상에 한함

39)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범죄경력 통보 누락 등, 상이등급 (직권)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동, 3개월 이내 신상변동 사항 등 신고 지연 · 누락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20년	3,048	632	625	2,393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2025.9월	4,297	1,259	691	3,389	217	16.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3년간 국회(정무위, 예결위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포함)에서 수 차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실적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국가보훈부는 여러 과오급금 수납 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과오급금 분할납부제, 납부기피자 연체금 징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연계,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납률은 여전히 20%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건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① '부정 수급'은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분 고액[40]인 과오납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며, 수급권자

가 사망한 이후 확인되어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② ‘행정착오’의 경우 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담당자의 착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③ ‘군기록 정정·기타 소관기관이 통보를 누락한 경우’는 범죄 등과 같은 신상변동사유 발생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행정착오’의 경우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체계의 철저한 확립 및 지휘·감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3년 7월부터 자체교육을 강화한 이후인 2024년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은 29건, 1억 100만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보훈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보훈급여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키고 보훈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41]에 따라 엄격하

40) 2024년 기준 징수결정 건수(429건) 대비 평균 발생액 약 955만원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42]

□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2)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

연번	부정수급액	발생경위
1	5,800만원	·유공자의 조카이나, 허위부정 등록 ·2018.11. 경찰서 고발 후 2018.12. 혐의없음 통보
2	7,900만원	·개가 및 이중호적 취득한 유공자의 배우자가 부정수급 ·2018.8. 경찰 수사 의뢰 후 검찰 송치, 2019.7. 징역 1년 6개월 선고
3	8,300만원	·유공자의 배우자 2005.1월 사망 후 자녀가 보상금 부정수급(사망 미신고) ·2018.11. 경찰서 고발 조치 후 2019.9. 징역 1년 선고

자료: 국가보훈부

5. 기타잡수입[43)]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잡수입’은 불용물품 매각 대금 및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구성된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6,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타잡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잡수입	277	362	362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기념관 수입 세입 계상 필요

□ 2024년 기타잡수익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결산액 2억 7,700만원 중 대부분이 윤봉길의사기념관 주차장 수입(1억 9,700만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수입(5,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윤봉길의사기념관 주차장 수입은 2024년도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수입은 2023년도부터 각각 기타잡수익으로 계상되고 있음.

43) 세부사업: 기타잡수입(69-691)

□ 국가보훈부 산하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념관은 총 8개소가 있는데, 이 중 독립기념관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호남호국기념관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 대상에 편입이 불가능함. 나머지 6개 기념관 중 윤봉길의사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외에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4개 기념관은 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기념관별로 세입 대상에 편입 여부가 다른 것에 관해 국가보훈부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경우 서울시 시정요구에 따라 주차장 수입만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 어려움.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은 일부 금액을 수입처리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처리하지 않는 등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각 기념관의 자체수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수입액 (징수액)
백범김구기념관	413 (-)	499 (-)	971 (-)	1,162 (-)	1,253 (-)
안중근의사기념관	7 (-)	10 (-)	17 (-)	18 (-)	27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33 (-)	234 (-)	289 (-)	318 (197)	322 (176)
유엔평화기념관	5 (-)	3 (-)	6 (-)	24 (-)	26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1 (-)	-	0.4 (0.4)	0.4 (0.4)	1 (-)
호남호국기념관	-	-	-	-	-

※ 징수액은 국고 수입처리된 금액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기념관별 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세입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17조[44]의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므로, 국가보훈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념관의 경우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4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출]

1. 보상금[45)]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상금’ 사업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6억 8,600만원(4.3%) 증가한 3조 7,175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상금	3,396,879	3,562,819	3,717,505	154,686	4.3

(자료: 국가보훈부)

□ 보상금 사업의 예산은 독립유공자 또는 상이군경 등, 본인 또는 유족, 상이등급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각 지급대상자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지급할 보상금 지급액에 해당연도에 예상되는 지급 인원을 추계하여 편성되는데,

45) 세부사업: 보상금(1132-300)

그 중 예상 지급 인원은, 예산 편성 당시의 결산 인원에 최근 n개년 지급 인원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법·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증감하게 되는 예상인원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보상금의 지급 예상인원(편성인원)을 24년 결산인원에 2개년('23~'24)~5개년('20~'24) 평균증감률 중 더 적은 인원이 산출되는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총 188,188명으로 추계하였고, 위 인원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을 적용하여 총 3조 7,175억 5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함.

<보상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

예산안 편성 기준	=	각 대상 유형별 보상금 지급액	×	각 대상 유형별 예상 지급 인원
2026년도 예산안 편성	=	2026년도 지급액 ('25년대비 5% 인상)	×	**[24년 결산 인원 × 2개년~5개년 평균증감률^2]**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보상금 지급 예상인원(편성인원) 추계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 가장 최근의 결산인원(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도 결산인원)을 기준값으로 하여, 이 값에 향후 예상되는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n개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편성인원을 추계하는 방식임.[46]

○ 보상금 지급 예상인원 추계에 n개년 평균증감률을 사용하는 것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보상금 지급 인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신규등록하는 인원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보상금 지급 인원 등 제도적 변화 없이 발생하게 되는 지급 인원 변화 추세를 편성인원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 인원 변동 추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발생하는 일시적 인원 증가분은 추세를 반영하려는 평균증감률 측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2024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개정으로 종전에는 고엽제수당을 지급받는

46) 보상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대규모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2~5개년 평균증감률 중 가장 적은 인원이 추계되는 n개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7개년 보상금 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23	’24
집행잔액	48,201	18,777	3,026	24,575	70,014	67,158	71,275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4개 질병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됨에 따라,[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4개 질병 대상 누적 등록인원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2024년도에 상이군경 본인 등의 결산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024년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 인원>

(단위: 명)

구분	상이군경 본인								유족		합계
유형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6급3항	7급	1-5급	6급	
계	3	186	16	105	148	662	893	47	118	75	2,253

* 유족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결산인원 증가는 해당 연도에만 발생하는 일시적 증가요인으로, 향후 유사한 규모의 증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연적 인원 변동 추세를 반영하려고 하는 평균증감률 계산에는 되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런데, 2026년도 각 유형별 보상금 지급 인원 추계에는 고엽제법 개정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인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각 유형별 평균증감률이 계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유형별 증감 추세를 반영하는 평균증감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47) 2024년 법률 개정(2024. 2. 13.)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수당을 받는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함.

○ 예를 들어, 보상금 지급대상 중 고엽제후유증 전환인원이 포함된 상이군경 본인 6급 2항의 경우, 2023년까지의 결산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4년의 경우에도 제도 변화에 따른 전환 인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는데도, 제도변화에 따른 전환 인원 증가분까지 추세에 반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급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상이군경 6급 2항 결산인원 및 증감 추세>

(단위: 명, %)

구분		결산인원					평균증감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5개년
						(전환인원 제외)	(전환인원 제외)	(전환인원 제외)
상이 군경 본인	6급2항	35,649	35,461	35,155	34,999	35,657	0.7	0.01
						34,995	△0.2	△0.5

*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선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향후 제도 변화로 인한 보상금 지급 인원의 일시적 증가 요인이 예상인원 증감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조정수당[48)]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3,300만원(28.9%) 증가한 1,092억 8,7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생활조정수당’ 내역사업과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억 3,200만원이 증가(578.3%)한 287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생활조정수당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생활조정수당	82,171	84,754	109,287	24,533	28.9
- 생활조정수당	73,911	80,512	80,512	0	-
- 생계지원금	8,260	4,242	28,774	24,532	578.3

(자료: 국가보훈부)

48)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2) 검토의견: 법 시행일에 따른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은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지급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와 관련하여, 현재는 나이 기준(80세 이상)과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음(2025년 9월 16일 일부개정).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참전유공자법 개정 내용>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일부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신 설>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을 15,883명으로 추계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 6월 기준 생계지원금 지급 인원 8,095명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 15,883명을 더한 23,978명을 편성인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12개월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총 28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생계지원금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구분		편성인원 (A)	지급금액 (B)	지급월 (C)	편성금액 (A×B×C)
생계 지원금	기존 지급대상자	8,095명	월 10만원	12개월	97억 1,40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15,883명**	월 10만원	**12개월**	190억 5,96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상인원 추계를 살펴보면, 기사망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전체 인원[49] 중 80세 이상 12만 6,657명에 2022년 기준 전국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13.2%를 적용한 16,719명을 지급 예상인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총 12개월 중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1분기(1월~3월)에는 지급

49)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예상인원의 80%만을 적용하여 월 평균 편성인원 15,883명을 산정하였음(2~4분기 100%).

<법률 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 추계>

구분	80세 이상 (A)	적용비율 (B)	지급 예상인원 (C=A×B)	월 평균 편성인원 [D=(C×0.8×3)/12+(C×9)/12]
참전유공자 배우자	121,083명	13.2%	15,983명	15,184명
고엽제 배우자 (월남참전)	5,407명	13.2%	714명	678명
고엽제 배우자 (**국내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67명	13.2%	**22명**	**21명**
합계	126,657명	13.2%	16,719명	15,883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위 개정 참전유공자법은 2025년 9월 16일에 공포되어, 2026년 3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50] 실제 개정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시기는 2026년 3월분부터가 될 것임.[51][52]

□ 결국,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생계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50)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부칙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2) 생계지원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므로, 동 개정 법률 시행 전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나, 참전유공자법은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 15일 이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3월분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됨.
* 참전유공자법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편성한 1월·2월 2개월분의 생계지원비 지급액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생계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중 법 시행 시기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진 부분은 그 편성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당초 지급 예상인원 추계 시, 3월 편성인원을 예상인원의 80%만 적용하였으나, 10개월분으로 조정할 경우 3월 편성인원을 100%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하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인원(22명)도 고엽제법 개정을 전제로 지급 예상인원에 포함하여 추계하였으므로,[53] 이를 수정하여 금액을 재계산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편성금액은 약 23억 6,2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금액 조정 필요분>

구분	편성인원 (A)	지급월 (B)	참전유공자 배우자 부분 예산안 (C=A×B×10만원)
예산안 편성	15,883명	12개월	190억 5,960만원
조정안	16,697명*	10개월 (3월~12월)	166억 9,700만원
차이			23억 6,260만원

* 편성인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급 예상인원(15,983명)+고엽제 배우자(714명)
** 편성인원에서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 예상인원 22명을 감하였음.

53) 월남전쟁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도 해당하게 되므로, 참전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므로, 참전유공자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음.

3. 등록관리[54)]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 대통령 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생활수준조사 통지 및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00만원(24.3%) 증가한 4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IC국가보훈등록증 등을 발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700만원(76.6%) 증가한 20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등록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록관리	6,309	3,336	4,145	809	24.3
- 증서관리	2,724	1,145	2,022	877	76.6

(자료: 국가보훈부)

54)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구매 수요 산정 필요

□ 내역사업인 ‘증서관리’의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은 신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기존 보훈대상자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교체 발급하는 사업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 기존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55]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하였고, 같은 해 6월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기존 발급자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등록증을 교체 발급하기로 계획하였음.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계획 〉

구분	발급 시기		대상	계획
시범발급	2023년	6.~7.	신규등록자	2,000명
정식발급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명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명
	2024년	1.~3.	1946년~1949년생	127,000명
		4.~6.	1950년~1955년생	124,000명
		7.~9.	1956년~1965년생	114,000명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000명

(자료: 국가보훈부)

55)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을 위한 제작 매수 66만 매 구매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신규 발급분으로 6만 매 구매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교체 발급 사업의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5년 9월 기준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의 재고 보유량은 약 41만 매[56]에 이름.

〈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 편성 현황 및 발급 건수 〉

(단위: 매)

구분	합계	연도별 발급 건수		
		2023년	2024년	2025년(8월말)
편성 매수	720,000	300,000	360,000	60,000
발급 매수	290,050	66,655	151,747	71,648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위한 발급기를 2022년 31대 구매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 구매하여, 현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보유량은 50대임.[57]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보유 현황〉

(단위: 대)

구입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매예정)
구입 대수	31	7	6	6
총 보유 현황	31	38	44	50

(자료: 국가보훈부)

56) 2025년 편성 매수 중 현재 5만 매만 구매한 것을 반영한 결과임.
57)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에 6대 구매 비용을 편성하였고, 이를 10월에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힘. 보유량 50대에는 2025년 구매 예정분 6대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한 국가보훈등록증 재고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5,800원×60,000매=348백만원	5,800원×60,000매=348백만원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추가 구매	7,300천원×6대=43.8백만원	7,300천원×6대=43.8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 구매는, 연간 발급실적 및 재고 보유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보유량만으로 2026년도 발급 분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분량을 우선 소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는, 2022년부터 구입을 시작하여(내용연수8년) 교체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청, 지청의 수(지방청 6곳, 지청 21곳, 총 27곳)를 감안할 때, 현 보유량을 고려하여 추가 구매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58)]

58) 고장 등에 따른 예비분을 감안하더라도, 총 54개 보유 시 각 지청 및 지방청당 2개의 발급기를 보유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사업은 사업의 집행실적, 제작용 국가보훈등록증과 발급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관련 예산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집행실적 및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구매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4.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5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선양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7,300만원(10.7%) 증가한 37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6,400만원(27.1%) 증가한 6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인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억 8,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35,071	34,281	35,081	37,954	3,673	10.7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5,914	5,031	5,831	6,395	1,364	27.1
- 보훈단체복지지원	-	-	-	1,789	1,789	100

(자료: 국가보훈부)

59)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2) 검토의견

(1)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내실있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2026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으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당사자 부담 1천원 제외)와 보훈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부에 지원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약 110개(시·구 80개, 군 30개)로 예측하여 점심 지원 인원을 연간 총 72만 9,600명으로 추계하였고, 위 인원에 식대단가 5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점심 지원 인원 추계>

구분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1회당 참여 인원*	연간 지원 횟수**	연간 참여 인원
시·구	**80개**	80명	96회	61만 4,400명
군	**30개**	40명	96회	11만 5,200명
계	**110개**	-	-	**72만 9,600명**

* 국가보훈부는 1회당 참여인원을 지자체별 1일 평균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함.
** (연간 지원 횟수) = 주 2회 × 4주 × 12개월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복지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점심지원	2천원* × 729,600명 = 1,45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 110개 = 330백만원

* 식대단가 : 5천원(자부담 1천원, 국비 2천원, 지방비 2천원)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을 5:5로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약 1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였는 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수의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동 사업의 수요 파악을 위하여 2025년 7월 실시한 '보훈회관 내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보훈단체는 248개 중 107개 단체가 점심 지원 사업에 찬성한 반면,
정작 지방비를 부담하고,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업을 찬성하였고, 19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60] 실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률이 계획대비 저조할 수 있음.

60)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훈회관 내 식당 부존재로 인한 지원 공간 확보의 어려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함.

○ 계획대비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면, 이는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편성된 예산의 불용 발생 등 집행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보훈회관 내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사업 수요조사>

(단위: 개)

구분		찬성	반대	미회신
보훈단체	지부(18)	9	9	0
	지회(230)	98	114	18
	계(248)	107	123	18
지방자치단체	광역(17)	4	13	0
	기초(228)	24	183	21
	계(245)	28	196	21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현재 248개 보훈회관 중 식당을 보유한 곳은 10개소[61]에 불과하고, 그 중 1회당 지원 인원 80명(시・구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곳은 서울 강북구(83석)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식사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인근 식당을 활용하거나 도시락 제공 등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자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는 국가보훈부가 책정한 식대 단가 5천원으로 외부 식당을 연계하거나 적정 수준 이상의 도시락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62] 이러한 방안을 활용

61) 서울 중구・강동구・노원구・동대문구・강북구・광진구・성동구(7개소), 인천 미추홀구, 광명시, 평택시

62) 식당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2곳(성동구, 광명시)을 제외하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식대 단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보훈회관 현황>

구분	서울 중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북구
식당 규모	184.79㎡, 40석	122.4㎡, 48석	50㎡, 24석	110.5㎡, 44석	154.6㎡, 83석
식대 단가	5,000원	5,000원	7,480원	5,400원	5,000원
구분	**서울 광진구**	**서울 성동구**	**광명시**	**인천 미추홀구**	**평택시**
식당 규모	46.74㎡ 20석	25㎡ 32석	18㎡ 40석	36석	36석
식대 단가	4,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 서울 성동구와 광명시의 경우 식당 운영비 중 일부(성동구 식당 운영비에 대한 구 보조율 약 53%, 광명시 식당 인건비 시 지원)를 지원받고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률 제고, 식사 지원을 위한 식당 등 제반 여건 마련 등 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되기 위하여 사업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면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평균 식대단가도 5,000원을 넘는 현실에서, 외부 식당 등에서 단가 5,000원으로 식사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4 직장인 점심식사 및 구내식당 관련 인식 조사'(엠브레인), 모바일 식권 서비스 회사의 점심 식대 결제 데이터 기반 조사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점심 값은 약 9,000원~1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동아일보 2025. 1. 14. 기사, 연합뉴스TV 2025. 7. 1. 기사, 매일경제 2024. 4. 24. 기사 등 참조).

(2)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선정 기준 마련과 절차 준수 필요

□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은 각 보훈단체의 선양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2026년도에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보훈의 가치를 계승하는 보훈단체가 독립, 호국, 민주의 대표적인 단체 특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16개 보훈단체[63]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계획임.

□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보훈단체별 특화 선양사업을 발굴·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2025년에 신규 편성되었던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 3,600만원, 2026년도 폐지)과 그 목적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데, 2026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25년에 집행된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동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63) (독립) 광복회, (호국) 상이군경회, 저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민주) 4·19관련 3개 단체, 5·18관련 3개 단체

○ 첫째, 2025년도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5개의 보훈단체 지부의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 사업은 당초 보훈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선양활동을 발굴·지원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의 시행 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64]

<2025년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선정 사업(일부)>

지방청	보훈단체명	사업내용	교부액
서울	A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400만원
대구	B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용 교육	5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각 지방청별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65]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66]

64)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추진계획의 충실성,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 행사추진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사업대상자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각 보훈단체별 특화된 선양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5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현황>

사업명	일시	위원	내용
보훈회관 이음+	'25. 4. 13.	7명 (외부 4, 내부 3)	이음플러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부 작성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특화 선양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보조사업, 사업 수행방식 등이 2025년에 추진한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선양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67]

66) 국가보훈부 답변에 따르면, 2025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훈회관 이음+"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개최(4.13.)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최된 바 없음.

67) 2025년 10월 말 현재,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년 11월에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5. 교통시설 이용지원[68)]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억 4,700만원(103.0%) 증가한 217억 7,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통시설 이용지원	10,730	10,729	21,776	11,047	103.0
- 민영버스	8,464	8,484	19,531	11,047	130.2
- 고속철도	2,163	2,163	2,163	-	-
- 내항여객선	102	82	82	-	-
- 무인발매기 개발 등	1	-	-	-	-

(자료: 국가보훈부)

68) 세부사업: 교통시설 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민영버스’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예산은 110억 4,700만원 증액 편성[69]되었고, ‘시외·고속버스’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민영버스 내역사업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5 예산	’26 예산안	증감	산출근거
시내버스	7,200	18,247	11,047	-시내버스 미정산액 9,926백만원 (’23년 4,017, ’24년 5,909)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등 반영 8,321백만원
시외·고속버스	1,284	1,284	-	-’23년 추계액 1,222백만원+요금인상 5% 반영
합계	**8,484**	**19,531**	**11,047**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전국버스연합회와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하여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는 사후정산으로 변경되었고, 시외·고속버스는 추계로 산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69)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에 대한 미지급금 누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으로, ’23년 및 ’24년 미정산액 99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증액 반영된 것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절차(신용카드사 정산)〉

이용지원 협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정산
시내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신용카드사 (교통복지카드 버스이용금액 청구)		국가보훈부 (본부)		신용카드사

〈시외 · 고속버스 이용 지원 절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산)〉

이용지원 협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정산
시외·고속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국가보훈부 (본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비대면 승차권 발권 확대 및 무인 터미널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시외·고속버스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음.

○ 기존에는 매표소에서 국가보훈등록증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을 받았으나, 매표소와 발매기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받게 되었음.

○ 또한, 이용자 실적도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데, 정산 방식을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정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2025년 현재 기준 전체 283개 터미널 중 245개 터

미널은 전산망 연동으로 집계가 되나, 제3자 전산망[70]을 사용하는 38개 터미널[71]은 집계가 불가하기 때문임.

□ 무인발매기 및 현장 발권 전산 연계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발 완료되어, 7월부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데, 245개 터미널의 7월~8월 이용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쳐 1억 3,000만원 수준임.

<시외 · 고속버스 이용 지원 현황(2025년 7~8월)>

(단위: 회, 천원)

구 분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액 총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7월	10,702	48,695	2,446	15,190	63,885
8월	11,053	50,714	2,711	16,929	67,643
계	**21,755**	**99,409**	**5,157**	**32,119**	**131,528**

* 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의 할인이용 내역은 미포함(38개소, '24.12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70) 국가보훈부가 연계한 전산망은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2개 전산망으로, 그 외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은 집계가 불가함.

71)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현황(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자료, 2024.12월 기준)

구 분	터미널 명	개 수
특·광역시	인천 강화	1
경기	연천 전곡	1
강원	영월 상동, 평창 장평	2
충남	천안 성환	1
전북	고창 대산, 익산 금마, 임실 강진·관촌, 완주 고산·대둔산	6
경북	포항 기계·죽장, 안동 풍산·길안, 구미 해평·장천·도개·고아, 영천 신녕·고경·북안, 상주 화령, 의성 금성·안계·가음, 울진 삼근, 청송 부동·현동·부남·화목·월정·동곡, 청도 대천·운문사·청도,	25
경남	진주 반성, 산청 덕산	2
계		**38**

○ 245개 터미널의 2개월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이용액을 추정하면 9억 1,200만원으로, 계약 금액인 12억 8,400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남.

□ 또한,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9년 117,716명→'24년 110,604명)에 있고, 전국버스연합회 측의 최근 감면 추계액 현황을 보아도 8억 5,000만원~6,00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인원 및 감면 추계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상인원*	시내버스 추계액	시외·고속버스 추계액**
2019년	117,716	18,262	1,336
2020년	116,931	13,360	722
2021년	115,789	14,354	663
2022년	114,398	13,440	705
2023년	**112,066**	**11,154(실집행액)**	**852 / 1,222(계약액)**
2024년	**110,604**	**13,088(실집행액)**	**861 / 1,284(계약액)**

(자료: 국가보훈부)

* 전년 12월말 기준

** 추계액에는 제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 실적 미포함

□ 국가보훈부는 2023년 계약금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억 3,600만원)과 2022년(7억 5백만원) 추계액을 평균(10억 2,100만원)하였고,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비율(13%, 1억 785만원),

간이 정류장[72], 요금 인상률(7.5%)을 고려하여 12억 2,200만원, 2024년 계약금액은 2023년 요금 인상분(5%)을 반영하여 12억 8,400만원[73]으로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 245개 터미널의 2개월 이용액을 전체 283개 터미널 1년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추계하는 것은 엄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버스업계가 손실을 감수하며 상이유공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원 대상인원 감소, 전산 집계 실적 현황, 수송시설 간 형평[74]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적정 계약 금액 산정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가보훈부는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 하반기 이용 실적과 대상인원 감소를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전산망 통일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연계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실적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72) 간이정류장 현금승차 예상액은 2019년 7월~2020년 6월까지의 시외버스 총수입 대비 현금수입 비율(0.89%)을 적용해 745만원 반영함.

73)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안도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됨.

74) 고속철도의 최근 5년 평균 보조율은 36.9%에 불과함.

6. 보훈병원 진료[75)]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 정보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1억 8,700만원(14.8%) 증가한 4,504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보훈병원 진료	452,939	392,296	442,138	450,483	58,187	14.8
- 보훈병원 진료비	442,460	385,278	435,120	441,576	56,298	14.6
-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4,883	7,018	7,018	8,907	1,889	26.9
- 보훈병원 의료공백 해소(예비비)	5,596	-	-	-	-	-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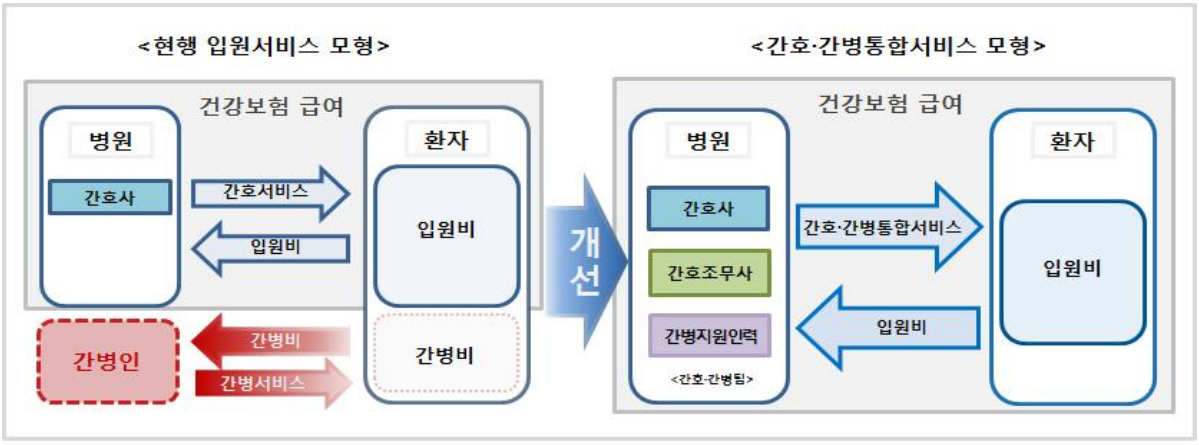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는 국비·감면 진료비 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 25억 1,400만원이 편

75)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76]로, 사적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기존의 입원서비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교〉



2) 검토의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의료법」[77]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9월말 기준 간호간병 전환 가능 병상 수의

7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7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1.6%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23년 30.8% → '24년 36.7% → '25년 9월 41.6%).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병상, 25년 9월말 기준)

구 분	합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총 병상 수(A)	3,517	1,374	584	645	447	337	130
제외병상 수(B)	1,377	727	232	276	73	69	-
간호·간병 전환가능 병상 수(C=A-B)	2,140	647	352	369	374	268	130
간호·간병 병상 수(D)	890	181	201	180	120	120	88
간호·간병 운영비율(D/C)	**41.6%**	28.0%	57.1%	48.8%	32.1%	44.8%	67.7%
간호·간병 병상 가동률	89.0%	91.3%	93.0%	88.9%	91.75%	88.9%	80%

* 제외병상: 요양병동(638), 중환자실(104), 재활병동(462), 호스피스 및 임종(113), 폐쇄병동(60)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현황>

(단위: 병상,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월
병상수	581	629	659	659	785	890
운영비율	27.1	29.4	30.8	30.8	36.7	41.6

* 운영비율: '25년 간호간병 전환 가능 병상수(2,140병상)에 대한 비율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5년 국가보훈발전 실천계획'에 따르면 당초 2025년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률은 1,127병상(50%)을 목표로 하였고, 예산도 50% 확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9월말 기준 41.6%에 머물러 있는 것임.

□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심사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78]으로, 2024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료비를 편성하였고, 2025년은 전환 가능 병상의 50%에 해당하는 468병상 확대시 증가하는 진료비를 편성하였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임.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1,299백만원	2,514백만원	**미편성**
편성 기준	-전환 가능 병상의 40% -(확대 병상) 242병상 -(병상가동률) 92%	**-전환 가능 병상의 50%** -(확대 병상 수) 468병상 -(병상가동률) 92%	-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간호간병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80%)	ⓒ=ⓐ-ⓑ 본인 부담(20%)		
		소계	ⓓ진료보상금	ⓒ-ⓓ 환자 실부담
13,542	10,834	2,708	2,514	194

* ⓐ간호간병통합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본인 부담금)에 대해 보훈대상자별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간호간병통합병상 확대 시 증가하는 진료비(=간호간병병상과 일반병상 진료비 차액): (수가 차액) 86,170원 × (확대 병상 수) 468병상 × (병상가동률) 92% × (운영일수) 365일

(자료: 국가보훈부)

78)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 확장을 위한 인력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병상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이 소요되어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보훈병원의 병상 전환율(41.6%)과 향후계획(27년까지 51%) 등을 고려했을 때 50% 확대를 위한 예산이 2025년에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 반영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목표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은 부족한 국비·감면 진료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수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목표치 49.2% 달성을 위해서는 7억원[79]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안)>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간호·간병 운영병상 (전년대비 증감)	935병상 (+150)	1,052병상 (+117)	1,092병상 (+40)	1,228병상 (+136)
전환가능 병상 대비 운영비율	43.7%	49.2%	51.0%	57.4%
비 고	부산(105), 대구(45)	중앙(45), 광주(44), 대구(28)	대전(40)	중앙(89), 대구(47)

(자료: 국가보훈부)

79) (수가 차액) 86,170원 × (확대 병상 수) 117병상 × (병상가동률) 92% × (운영일수) 365일 × (본인부담금) 20% = 7억원

□ 한편,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고령의 환자 이용이 많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함에도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대비 저조한 실정[80]이므로 2026년 예산안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 국가보훈부는 병상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 시설 개선과 함께 앞으로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입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8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병상 기준 종합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46.0%임.

7. 위탁병원 진료[81)]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3억 7,300만원(8.2%) 증가한 2,694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위탁병원 진료	293,129	249,113	283,686	269,486	20,373	8.2
- 위탁병원 진료	290,746	246,715	281,288	267,103	20,388	8.3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2,383	-	-
- 우수위탁병원인증제	-	15	15	-	△15	순감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에는 위탁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고령・복합 질환자가 다수인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81)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9월
종합병원	87	89	87	87
병원	126	125	125	124
요양병원	32	39	53	59
의원	336	448	627	657
계	**582**	**702**	**892**	**927**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 예산안에는 의원급 180개소와 요양병원 20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반기 공모 지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를 고려하여 3개월분씩 반영하여 3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내역>

의원급(180개소×37백만원×1/4분기) + 요양병원 등(20개소×302백만원×1/4분기) = 31억 8,500만원 * 하반기 공모 지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고려, 3개월분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위탁병원 지정 절차 지연 개선 필요

□ 위탁병원 모집 공고는 배정계획 수립 완료 후 27개 보훈관서에서 공모 - 지정·적격성심사 - 보훈단체의견 수렴 - 지정승인 - 위탁진료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데[82], 당초 9월까지 지정·계약 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진료를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8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1조(위탁병원 공개모집)~제36조(계약체결)

<위탁병원 지정 절차>

관할 보훈관서	① 의료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 ② 위탁병원 신청 의료기관대상 지정심사 - (평가항목)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진료과목 등
⇩	
보훈병원	①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 - (평가항목) 의료인력, 의료장비, 약제사용 적정성, 의료시설 등 ②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훈관서에 통보
⇩	
관할 보훈관서	① 지정심사와 적격성 심사를 모두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보훈단체 의견 수렴 ② 합산 평가점수(지정 심사 25% + 적격성 심사 70% + 보훈단체 의견 5%)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보훈부에 승인 요청
⇩	
국가보훈부	① 검토 후 지정 승인 통보
⇩	
관할 보훈병원	① 지정승인된 의료기관과 계약체결

□ 그런데, 2024년도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에 따라 지정된 병원 총 169개 중 지정 절차 지연으로 10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55개, 11월 이후 진료를 개시한 병원이 58개이며, 연도 내 진료 개시를 못한 병원도 22개가 있음.

<2024년 신규 지정 위탁병원 진료개시 지연 현황>

모집 병원 수	지정 병원 수	10월 이후 계약체결		11월 이후 진료개시	
176개	169개	'24.10월 '24.11월 '25.12월 '25. 1월 '25. 2월	20개 12개 15개 6개 2개	'24.11월 '24.12월 **'25. 1월** **'25. 2월**	28개 8개 **15개** **7개**
계			55개		58개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지정 절차 지연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라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지정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83]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분기 내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탁병원 확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탁병원과 계약시 대면 계약에서 전자 계약을 도입하여 소요 시간 단축 등

(2) 재지정 위탁병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위탁병원 지정이 늘어나는 만큼 계약 해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의 사유로는 폐업, 휴업,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의원급은 5%)에 해당하는 경우[84] 등이 있음.

○ 그런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거나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된 사례가 있음.

---

8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8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 위탁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최근 3년 계약 해지 위탁병원 재지정 현황>

재지정 연도	해지 연도	해지 사유	재지정 사유
'23년	'15년	**제38조제4호(진료비 거짓청구)**	-공모시 단일 응모(동일 종별 대체 가능 종합 병원 없음) -2년 경과
	'23년	**제38조제5호(의료법 제64조에 해당)**	-공모시 단일 응모(대체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없음)
	'23년	**제38조제6호(적정성 평가 하위 10%)**	
'24년	'12년	제38조제9호(위탁병원 요청)	**-2년 경과**
	'16년	**제38조제6호(적정성 평가 하위 10%)**	
'25년	'23년	제38조제9호(위탁병원 요청)	
	'15년	**제38조제5호(의료법 제64조에 해당)**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규정상 2년이 경과되어 재지정이 가능하거나 단일 응모 등의 사유[85]로 재지정하였다는 입장임.

□ 기간이 경과하여 위탁병원 재심사대상이 될 경우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후 재지정된 위탁병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33조(지정대상 심사)**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8. 보철구 지급[86)]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60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철구 지급	5,919	6,026	6,026	-	-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5,845	-	-
- 보철구 지급사업 운영 등	6	6	6	-	-
-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68	175	175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집행실적 고려 적정 지원인원 산정 필요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86)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임.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등도, 고도)
내용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장비	·핸드 컨트롤러, 오토박스, 휠체어 슬로프 등

(자료: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개조 주요 장비>

구 분	내 용
좌측 엑셀 페달	·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핸드 컨트롤러	·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오토박스	·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슬로프	·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상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 집행률 24.8%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25년 9월말 기준 집행률도 17.7%로 저조한 실정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	250	62	**24.8**
2024	175	68	**38.9**
2025(9월말)	175	31	**17.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1인당 평균 지원액 대비 예산 편성 단가를 과다 계상했음을 지적한 바 있어 단가는 현실화하였으나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려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기준 및 집행내역>

연도	예산 편성기준	실제 집행내역
2023년	17명 × 1,500만원	21명(1인당 평균 295만원)
2024년	12명 × 1,500만원	27명(1인당 평균 250만원)
2025년(9월말)	12명 × 1,500만원	19명(1인당 평균 165만원)
2026년	**65명** × **270만원**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2025년 8월말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사업 안내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 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홍보 이후 2025년 9월 한 달간 1건도 신청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사용연한이 다양한 보철구와 달리 보철용 차량개조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87]과 고령자가 많은 유공자 특성상 차량 보유 및 직접 운행하는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비율 등을 확인하여 적정 지원 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87)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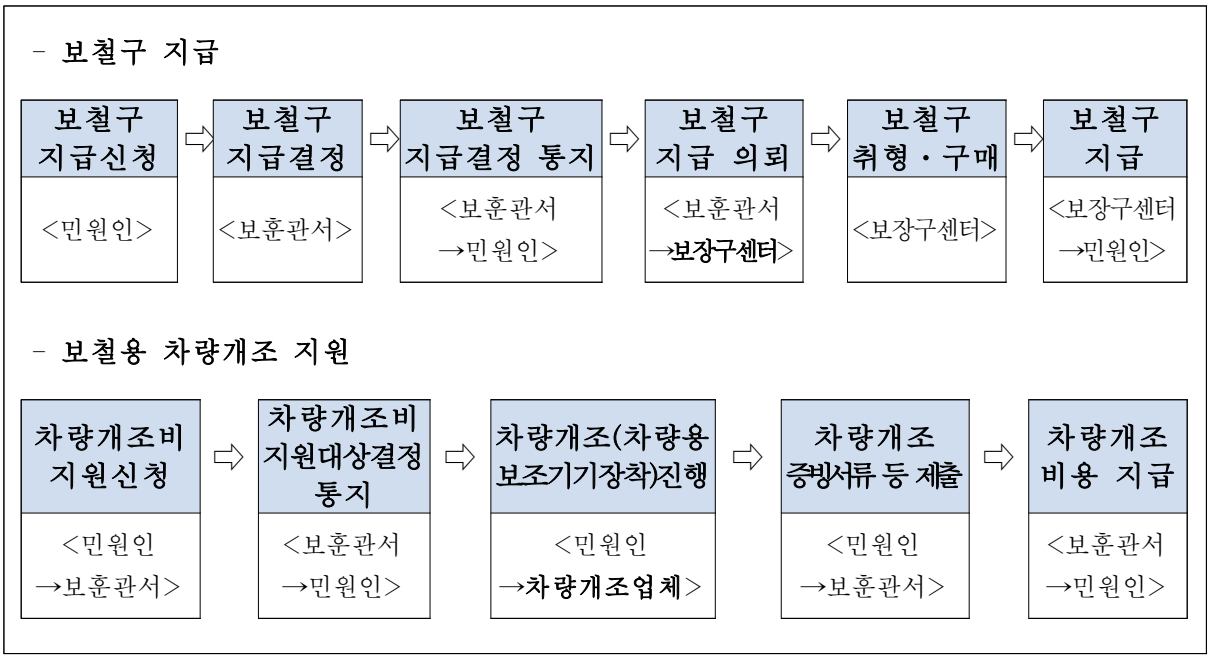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2)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보철구 지급은 보장구센터를 통해 지원하나,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은 민간 차량개조 업체에서 개조를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이 유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사업별 집행 절차>



□ 유공자가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에 따라 개조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개조 내역별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핸드 컨트롤러'의 경우 평균 단가가 2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최대 가격이 최소 가격의 3.5배 이상에 달함.

○ 동일 개조 내역이라도 업체, 제품의 차이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데, 업체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제품의 사양·기능의 차이라면 상이

등급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인부담금 없이 1인당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과다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가격 기준 설정이 필요함.

<동일한 개조 내역별 가격 편차 현황>

(단위: 천원)

개조 내용	최대 가격	최소 가격	가격 편차
좌측 엑셀 페달	121	35	86
핸드 컨트롤러	291	80	211
오토박스	855	759	96
휠체어 슬로프	1,450	1,400	50

(자료: 국가보훈부)

□ 참고로,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88]'은 보조공학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제품과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단가가 확정되면 지원제품으로 등록함. 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평가를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맞는 지원 제품을 결정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한 보철용 차량 개조 품목의 업체 지정 또는 가격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제24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 차량개조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철구 차량개조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체 조건에 적합한 보조장치를 제공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임.

9. 제대군인 의료지원[8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00만원(△2.7%) 감액된 23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2,301	△64	△2.7
- 보훈병원 진료	1,001	1,062	1,001	△61	△5.7
- 위탁병원 진료	1,300	1,239	1,300	61	4.9
- 보철구 지급	64	64	-	△64	순감[9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미지급금 정산 등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공단은 국가

89) 세부사업: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90)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은 전액 감하여 편성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6년부터 보철구 지급(2150-371)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한다는 설명임.

보훈부로부터 보전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최근 5년간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23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부족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음.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1	2,365	2,365	1,284	3,649	3,649	154.3	100.0
2022	2,365	2,365	1,408	3,773	3,773	159.5	100.0
2023	2,365	2,365	2,284	4,649	4,649	196.6	100.0
2024	2,365	2,365	-	2,365	2,365	100.0	100.0
2025	2,365	2,365	-	2,365	2,349	99.3	99.3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의 실제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배가 넘는 51억 5,2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당초 예산액인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였음. 미지급액 27억 8,700만원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됨이 지적되었고 향후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및 2025년 미지급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6년의 적정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가보훈부는 누적 미지급금 예상액을 예산액의 3배가 넘는 73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말 타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그 금액이 커서 미지급금이 2026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음.

<제대군인 진료비 누적 미지급금 예상액>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현액 (C=A+B)	(예상)실집행액 (D)	(예상)미지급금 (D-C)
2024	2,301	-	2,301	5,088	**2,787**
2025	2,301	-	2,301	6,844	**4,543**
계					**7,330**

* '25년 실집행액과 미지급금 예상액은 6월 가정산 집행액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진료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6년 예산안은 진료비 단가 상승, 진료 인원의 증가, 위탁병원 지정 확대[91] 등 진료비 지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보훈병원은 실소요의 77.3%, 위탁병원은 실소요의 29.3%만을 반영하는 등 적정 필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91) 전국 위탁병원 수는 2022년 말 582개, 2023년 말 702개, 2024년 말 892개, 2025년 9월 말 927개로 꾸준히 증가함.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인원 비교〉

연도	계획 인원	실제 인원
2022	32,691명 -보훈병원 7,522명 / 위탁병원 25,169명	34,432명 -보훈병원 6,619명 / 위탁병원 27,813명
2023	32,914명 -보훈병원 7,369명 / 위탁병원 25,545명	40,272명 -보훈병원 7,307명 / 위탁병원 32,965명
2024	24,224명 -보훈병원 6,704명 / 위탁병원 17,520명	45,298명 -보훈병원 7,001명 / 위탁병원 38,297명
2025	19,862명 -보훈병원 6,909명 / 위탁병원 12,953명	-
2026	17,860명 -보훈병원 5,488명* / 위탁병원12,372명** * 2024년 지원인원에 2020~2024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되, 인원을 **실소요의 일부(77.3%)만 반영** ** 2024년 지원인원에 2020~2024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되, 인원을 **실소요의 일부(29.3%)만 반영**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 누적 방지를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강화하여 공단에의 미지급금 지급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실제 소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92)]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사업과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억 6,400만원(830.0%) 증가한 99억 3,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사업	478	1,068	9,932	8,864	830.0
-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273	405	3,941	3,536	873.1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205	663	5,991	5,328	803.6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내역사업은 광주 보훈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확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년차 공사비의 국비 지원액 5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 국비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임.

92) 세부사업: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2156-397)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공사 개요〉

구분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목적	응급실 음압격리실 확충, 수술실 확장 등을 통해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건립 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365㎡
사업 기간	2024~2027년
사업비	18,359백만원(12,85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공사 내용 및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2024		293 (205)		12 (-)	305 (205)
2025		947 (663)		20 (-)	967 (663)
2026	8,259 (5,991)		912 (-)	10 (-)	9,181 (5,991)
2027	7,298 (5,992)		608 (-)		7,906 (5,992)
계	15,557 (11,983)	1,240 (868)	1,520 (-)	42 (-)	18,359 (12,851)

* 괄호 안은 국비 부담액

(자료: 국가보훈부)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당초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중 공사비 절감방안과 적정 공사 규모 재검토 등의 사유로 계획 대비 지연되어, 2025년 9월 14일 중간설계가 완료되었고 11월 현재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 중인 바, 공사기간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공사비를 고려할 때,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계획 대비 추진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2024년 2월	2024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등	2024년 2월~9월	2024년 2월~7월
-설계업체 계약 추진		2024년 8월~11월
-설계 실시(계획설계)	2024년 10월~2025년 6월	2024년 11월~2025년 3월
-중간설계		2025년 4월~2025년 9월
-실시설계		2025년 9월~2026년 2월
-공사 실시	2025년 11월~2027년 1월	2026년 5월~2027년 11월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실시설계 후 착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93]」상 공종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실시설계 기간(5.5개월)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예상됨.

○ 또한,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2026년 2월에 종료되어 5월에 착공하더라도 공사기간 대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되었는데, 전체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42.1%(8/19개월) 수준의 공정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비 국비 지원액(119억 8,300만원)의 50%에 달하는 5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9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종별 설계 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의 과소계상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과 2026년 공사 기간 대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지히 할 필요가 있음.

11.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94)]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600만원(124.1%) 증가한 57억 5,5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문화조성	14,693	14,104	14,104	16,617	2,513	17.8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0	2,290	2,290	5,755	3,456	124.1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동 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2024년 창원시는 2억 2,800만원, 포항시는 5억 3,200만원, 평택시는 6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94) 세부사업: 보훈문화조성(3145-401)

○ 그러나 2024년 창원시와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됨.

〈 연도별 실집행 상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보훈부		사업시행주체			보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394	760	760	-	760	2,290	534	1,294	490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228	228	228	-	228	587	-	228	23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532	532	532	-	532	1,703	534	1,066	467	
평택 평화수호 보훈문화관	634	-	-	-	-	-	-	-	-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2024년 건립 부지 확정·지방비 추경 편성·건축 설계 공모 완료 및 2025년 2월 용지 보상 완료를 전제로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하려는 것이었음.

<연도별 창원 진동리보훈문화관(국비 50%)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총사업비 (국 비)	6,325 (3,162)	456 (228)	1,787 (587)	4,082 (2,347)
보상비	1,200	-	1,200	-
설계비	456	456	-	-
공사비	4,458	-	557	3,901
감리비	200	-	27	173
부대비	11	-	3	8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의 계획보다 늦은 2024년 7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2025년 5월 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9월 건축 설계 공모 공고를 실시한 상태임.

국가보훈부는 작품 선정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2024년에 이월된 설계비 예산 4억 5,6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에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착수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연내 설계 용역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착공 또한 2026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창원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3.	2024. 7.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편성 필요에 따른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건축 설계 공모	2024. 9.	-	
용지 보상 완료	2025. 2.	2025. 5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2025. 12월 예정	
공사 착공	2025. 10.	2026. 10월 예정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이 착수되지 못함에 따라 2024년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 이와 같이 사업 1년차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도 전년도 실집행실적,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5] 2024년 교부된 금액전액이 이월된 바 있음.

□ 2025년 9월 현재 2024년에 이월된 2억 2,800만원 중 2,3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2025년 예산 5억 8,700만원은 교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국가보훈부는 연말까지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에 이월된 2억 2,8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2025년 예산 5억 8,700만원은 2026년도로 이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내에 2024년 이월된 설계비 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2026년도에 국비 23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6년내에 공사를 착공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편성한 1년차 공사비 집행이 최선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6년에 편성된 국비 예산 23억 4,700만원 중 상당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

95)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 진도를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

□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건립 부지 확정·지방비 추경 편성· 건축 설계 공모 완료를 전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는 연차별로 20%-40%-40%로 배분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국비 50%) 예산 투입 수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총사업비 (국 비)	18,100 (9,049)	1,064 (532)	3,406 (1,703)	6,816 (3,408)	6,814 (3,406)
보상비	530	530	-	-	-
설계비	1,061	531	530	-	-
공사비	14,143	-	2,464	5,840	5,839
감리비	2,335	-	408	964	963
부대비	31	3	4	12	12

주)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지방비 추경 편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건축 설계 공모 및 건축 설계 착수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착공은 빨라야 2026년 6월에 가능함에 따라 2025년에 편성된 국비 17억 300만원 중 설계비 5억 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포항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비 추경 편성 등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건축 설계 공모	2024. 9.	2024. 12	
건축 설계 착수		2025. 5	
공사 착공	2025. 12	2026. 6월 예정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창원 보훈문화관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2026년도에 국비 34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기존의 1년차 공사비만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2026년에 편성된 2년차 공사비 34억 800만원은 상당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공사 착공 시점을 2026년 6월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5년 8월 결산 심사 당시에는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계속 착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 바뀌는 국가보훈부의 계획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공사 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2026년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임.

12. 현충시설 건립[96)]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9,700만원(△2.0%) 감소한 46억 5,9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42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현충시설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3,806	4,756	4,659	△97	△2.0
- 독립의 전당	45	4,032	4,259	227	5.6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96) 세부사업: 현충시설 건립(3146-405)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 수정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7년(6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3,348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10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45	4,032	99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도 예산안 42억 5,900만원은 잔여 공사비(2년차) 37억 2,300만원, 감리비 4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5,2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42억 5,900만원 - (공사비) 잔여 공사비 배분(5:5)에 따른 2년차 공사비 37억 2,3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2년차 감리비 4억 8,400만원 -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5,2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독립의 전당 조성사업 추진일정 지연을 감안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실시설계비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1.07%)하였으며, 2025년은 10월 기준 실시설계비 등 9,9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0%)하였음.

○ 2024년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1억 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과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중 설계용역 대금 3,500만원과 설계의 경제성(VE) 용역 대금 1,000만원은 2024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충당한 5,800만원은 설계용역에 추가된 대금으로 완료되지 않은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25년으로 이월하였음.

○ 2025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비 등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말 기준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 상황임.

<2024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20	20	-	20	-
- 실시설계비(420-02)	-	45	58	103	45	58	-
- 공사비(420-03)	3,404	-	△78	3,326	-	-	3,326
- 감리비(420-04)	638	-	-	638	-	-	638
- 시설부대비(420-05)	104	4	-	108	-	22	85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5)	4,032	100	-	4,132	99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	-	20	20	-	-
- 실시설계비(420-02)	-	58	-	58	57	-	-
- 공사비(420-03)	3,404	-	-	3,404	-	-	-
- 감리비(420-04)	628	-	-	628	-	-	-
- 시설부대비(420-05)	-	22	-	22	22	-	-

(자료: 국가보훈부)

<2022~2025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07
2025.10.	4,032	100	-	4,132	99	-	-	2.40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2023년 8월),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2024~2025년)에 걸쳐 편성하였음.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당초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밝힌 바와 달리 서울시와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는 2025년 3월까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이러한 사정 하에서 국가보훈부는 또다시 2025년 12월 공사 착공을 전제로, 전체 공사비를 2025년 31.3%, 2026년 34.4%, 2027년 34.4%로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예산안에 4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국가보훈부의 완공예정시점까지 연도별 예산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공사비	3,404	3,723	3,723
감리비	628	484	484
시설부대비	-	52	53
소 계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대비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할 것을 규정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국가보훈부는 2025년 10월말 기준 입찰공고를 위해 조달청과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 계약을 위해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97]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되며, 입찰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공사 착공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계약 체결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독립의 전당 건립 추진계획 대비 집행현황>

구분	계획	현황
공공건축 사전검토	2022.6.	2022.6.
공공건축 심의	2022.9.	2022.8.
설계용역 계약	2022.12.	2022.12.
계획설계 완료	2023.3.	2023.4.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2023.3. ~ 2023.6.	2023.3. ~ 2023.6.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 2023.12.	2023.10. ~ 2024.8.
국가유산청 협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	2024.8. ~ 2024.9. *설계 변경에 따른 재허가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5.9
공사 계약 및 착공	2024. 상반기	2025.12 목표
준공	2025. 하반기	2027. 목표

(자료: 국가보훈부)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2026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된 독립의전당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13. 국외 현충시설 보존 · 관리 사업[98)]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내역사업은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외 현충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와 활성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5,500만원(77.4%) 증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비 58억 7,800만원의 내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2026년도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관리	6,944	6,944	10,299	3,355	48.3
- 국외 현충시설 보존·관리	4,075	4,075	7,230	3,155	77.4
·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비			5,878		

(자료: 국가보훈부)

98)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사업 관리 철저

□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은 2023년 2월 국가보훈부가 옛 본부건물을 매입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매입 시에는 2025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광복 80주년인 2025년 8월 15일에 맞추어 개관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은 2024년이 되어서야 총사업비 133억 9,600만원의 해외 직접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당초 사업 추진 시에는 2024년 설계 착수 - 2025년 8월 공사 착수 -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가보훈부는 2024년 편성된 실시설계비 예산 9억 3,900만원 중 2억 200만원만을 집행하고 7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편성된 공사비 24억 9,000만원 또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총 사업비 133억 9,600만원은 공사비 74억 9,800만원, 설계비 9억 3,900만원, 감리비 등 15억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1년차와 2년차에 33%와 67%의 비율로 배분하였음.

<연차별 · 비목별 총사업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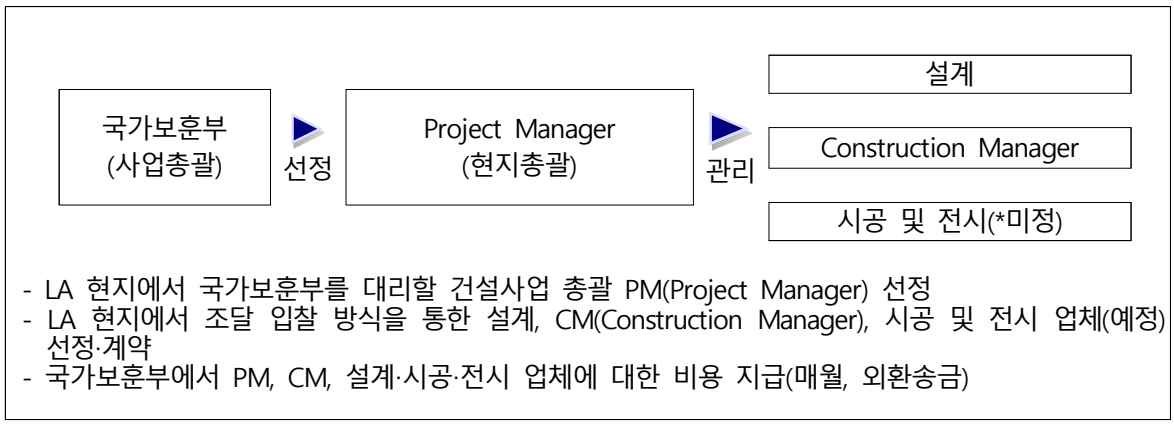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총사업비
	예산액(A)	집행액	예산액(B)	집행액	예산안(C)	(=A+B+C)
공사비	-	-	2,490	-	5,008	7,498
설계비	939	203	-	467	-	939
감리비 등	-	-	433	196	1,070	1,503
계	939	203	2,923	663	6,078	9,940

주) 2025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집행 프로세스>



- LA 현지에서 국가보훈부를 대리할 건설사업 총괄 PM(Project Manager) 선정
- LA 현지에서 조달 입찰 방식을 통한 설계, CM(Construction Manager), 시공 및 전시 업체(예정) 선정·계약
- 국가보훈부에서 PM, CM, 설계·시공·전시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매월, 외환송금)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은 해외 직접사업으로 현지 법률 검토 및 PM선정, RFP(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장시간 소요되었고,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건물 추가 증축에 따른 설계 변경, 현지 역사복원 관련 규제 준수, 주거지역 용도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등의 특수 사정이 발생하여 지연이 발생하여 공사 완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늦추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 기본 설계 완료 시기가 1달 정도 늦어지면서 국가보훈부는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 130일에서 107일로 단축하였음.

○ 변경 계획에 의하면 실시설계(2025. 10. 7.) 및 시공업체 우선협상(2025. 10. 10.)이 완료되어야 하나, 2025년 10월말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와 우선협상은 완료되지 않았음.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 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실제 추진
사전 설계	'24.9.16.~'24.10.30.	'24.9.16.~'24.10.30.	'24.9.16.~'24.10.30.
개념 설계	'24.10.31.~'25.1.24.	'24.10.31.~'25.1.24.	'24.10.31.~'25.1.24.
기본 설계	'25.1.25.~'25.3.26.	'25.1.25.~'25.4.25.	'25.1.25.~'25.4.25.
실시 설계	'25.3.27.~'25.8.5.	'25.6.23.~'25.10.7.	'25.6.23.~
시공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5.6.16.~'25.8.15.	'25.7.14.~'25.9.26.	'25.7.14.~'25.9.26.
우선협상 기간		'25.9.29.~'25.10.10.	'25.9.29.~
공사착수 검토		'25.10.11.~'25.12.9.	
공사	'25.8.16.~ '26.7.31.	'25.12.10.~ '26.12.10.	
시험 운용	'26.8.1.~'26.8.15.	'26.12.11.~'27.1.11.	

(자료: 국가보훈부)

□ 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당초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2026년에 공사 완료를 전제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10월 기준 사업이 변경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26년 내에 완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동 사업을 위해서는 LA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바, 국가보훈부는 아직 공사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임.

○ 2025년 1월 국가보훈부는 2025년 7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말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캐나다산 원목이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원재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99] 최근 미국의 출입국정책 변화로 인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건설노동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동 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른 연내 미집행 및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금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99) 트럼프, 수입 목재 10%·가구 최대 50% 관세…"산업 보호" 명분, 뉴시스, 2025.9.30.

14. 현충시설 관리 · 운영사업[100]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은 현충시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현충시설 등 실태조사,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국가보훈광장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28.9%) 증액된 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외 현충시설 보존 ·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 관리	6,944	6,944	10,299	3,355	48.3
- 현충시설 관리·운영	653	717	917	200	28.9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172	198	198	-	-

(자료: 국가보훈부)

100)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사업은 소규모 현충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인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등을 현충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현충시설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충시설 지킴이가 월 1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상태 확인, 참배안내 및 청소 등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안내판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대상 시설은 ① 소유·관리자가 기념사업회·문중·개인 등인 소규모 시설, ② 외진 곳 소재, 언론 등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된 시설, ③ 기타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보훈관서장이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이며, 회당 5만원, 연간 12회까지로 시설당 연 6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함.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관리 취약 현충시설에 대하여 민간단체, 보훈가족, 인근 지역주민 등을 현충시설 지킴이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

* 숭례문 방화사건('08.2.) 계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 연혁

○ '07년부터 일부 소규모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격려금(10만원) 지급, '09년에 지킴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활동비로 연 50만원 지원

* 시설관리자 격려금 지급('07.~ '08.), 지킴이 활동비 지원('09.~현재, '19.부터 60만원)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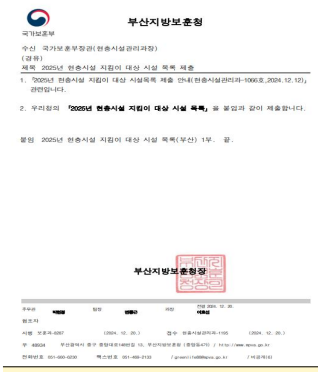
○ (대상시설) 외진 곳 소재, 소유·관리자가 관리능력이 없는 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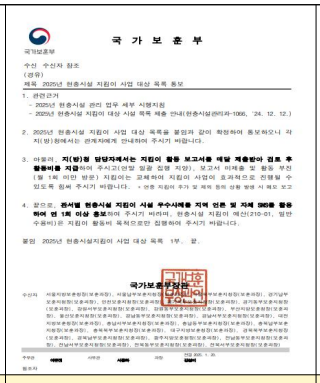
○ (소요예산) 169백만원 * 지킴이 당 활동비 연 최대 60만원(월 5만원×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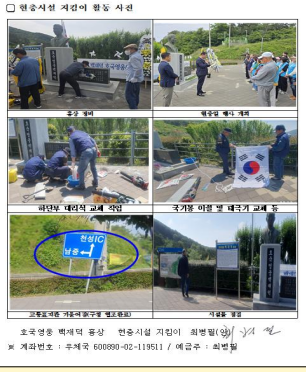
○ (사업내용) 월 1회 이상 해당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주변 정화활동, 시설 상태 모니터링, 참배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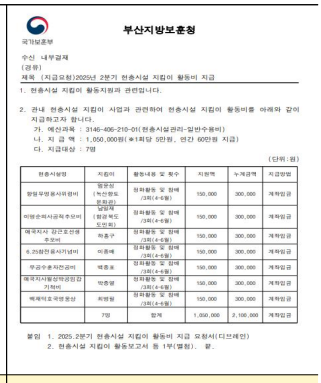
□ 운영 방식

○ 연초 지킴이 선정(1월), 관할 보훈관서에서 매월 지킴이 활동 보고서를 징구하고, 활동 내역을 점검한 후 분기별 활동비 지급


부산지방보훈청


국 가 보 훈 부


□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사진


부산지방보훈청

* 전년도 12월 경	* 당해연도 1월	* 월 1회	* 분기별 지급
대상 시설 목록 제출 (보훈관서)	지킴이 선정 통보 (본부)	활동 실적 보고 (지킴이)	활동비 지급 (보훈관서)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실적 및 예산액·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급 실적 및 집행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대상 시설의 경우 2021년 400개소에서 2022년·2023년 287개소, 2024년 286개소, 2025년 281개소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집행액 또한 2021년 4억원에서 2022년·2023년 2억 8,700만원, 2024년 2억 8,6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예상 집행액도 1억 6,86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대상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지킴이를 선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충시설 지킴이 실적(최근 10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시설 수(개소)	월 수당
2021년	240,000	240,000	400	50
2022년	240,000	172,200	287	50
2023년	240,000	172,200	287	50
2024년	240,000	171,600	286	50
2025년(예상)	198,000	168,600	281	50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매년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동 내내역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에 지원 현충시설 330개

소를 전제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1년 이후 매년 대상 현충시설과 지급 실적이 감소하였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최근 집행실적에 맞추어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101]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장례의전 등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묘소를 관리하며,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특별예우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7.4%) 감소한 60억 4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등특별예우사업’은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4.3%) 감소한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	6,166	6,484	6,484	6,004	△480	△7.4
- 국가유공자등 특별예우사업	448	439	439	420	△19	△4.3

(자료: 국가보훈부)

101)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2) 검토의견: 재고 보유량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 주도로 문구·디자인을 통일한 명패를 제작하여 달아드림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각 연도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연차별 지원 대상은 사업 초기인 2019년·2020년에는 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2021년~2023년에는 유공자 유족을 중심으로 각각 지원하여 2023년까지 기 등록 인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4년부터는 신규 등록인원 및 기존 교부 인원의 교체 수요만 남게 됨.

<각 연도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지원 계획>

연도	대상	계획 인원 (예산 편성인원)	비고
2019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공상군경,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208,236명	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2020년		182,617명	
2021년	전몰·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1급~6급2항),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19혁명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유족, 5·18유족, 특수임무유족	102,734명	유공자 유족 대상
2022년	전상군경유족(6급 3항~7급),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99,128명	
2023년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10,634명	
2024년	신규 등록자 및 교체(재교부) 신청자	10,634명	신규 등록자 및 교체 수요
2025년	신규 등록자 및 교체(재교부) 신청자	10,634명	

*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부착

(자료: 국가보훈부)

□ 기존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2024년·2025년 부착 건수 실적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년 명패 재고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음.

<각 연도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집행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제작건수	전년도 이월	부착건수*	잔여 물량
2019년	208,236	-	185,682	22,554
2020년	193,210	22,554	162,337	53,427
2021년	92,141	53,427	107,965	37,603
2022년	101,912	37,603	90,793	48,722
2023년	8,000	48,722	13,218	691**
2024년	10,500	691	9,012	2,179
2025년 (3분기 기준)	10,000	2,179	4,240	7,939

* 2019년~2023년 각 부착건수는 사업계획에 따른 지정대상자 교부 건수를 측정한 값으로, 동 기간(2019~2023) 신규 등록자 및 재교부자 부착건수는 38,520명임.

**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후, 기존 잔여물량 폐기건수는 4,293개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의 편성인원과 동일한 10,634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명패 제작 : 3억 9,100만원 = **10,634명** × 3만 6,800원

○ 홍보물 등 추진 비용 : 2,900만원 = 출장 여비 500만원 + 전달 비용 1,9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지급대상 인원의 감소와 이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잔여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계획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구매와 지속적인 재고 누적이라는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 신규 등록인원 및 재교부 인원만을 기준으로 명패를 지급하였던, 2024년부터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연간 지급 실적은 10,000명을 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4,240명)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고려하여 볼 때, 2025년도에도 10,0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하여 2024년 누적 재고량 2,179개가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제작건수(10,000건)에 비추어 누적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4년・2025년 신규 등록자 및 재교부자 명패 부착 현황>

(단위: 명,개)

구분	2024년		2025년	
	분기별 실적	연간 누적	분기별 실적	연간 누적
1분기	915	915	1,534	1,372
2분기	1,457	2,372	1,646	3,180
3분기	**2,369**	**4,741**	**1,060**	**4,240**
4분기	4,271	9,012	-	-
계	9,012		-	
잔여 물량	2,179		-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사업 수요, 집행실적,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 집행실적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6.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국립이천호국원[102)]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은 국립묘지의 현충선양활동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900만원(37.2%) 증가한 12억 8,600만원이 편성됨.

□ '국립이천호국원'은 품격있는 안장·추모 서비스 제공 및 최적의 참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이천호국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억 700만원(△73.9%) 감소한 54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및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781	937	937	1,286	349	37.2
국립이천호국원	19,686	20,857	22,938	5,450	△15,407	△73.9

(자료: 국가보훈부)

102) 세부사업: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250-352),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2) 검토의견

(1) 중복 편성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의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관리’는 국립묘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국립묘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동 내역사업에는 국립묘지 참배객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12개 국립묘지에 배부할 이동 카트를 일괄 구매하려는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 예산 2억 8,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당초 이동 카트 23대를 구매하여, 이를 각 국립묘지의 안장 현황과 기존 보유 카트의 노후화 수량을 고려하여 각 국립묘지별로 배부할 계획이었음.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 내 카트 구매 예산안 세부 내역〉

○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 2억 8,800만원 = **1,253만원 × 23대**

(자료: 국가보훈부)

〈국립묘지별 이동 카트 구입 및 배부(안)〉

(단위: 만기, 대)

구분	계	서울	대전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4·19	3·15	5·18	신암
안장현황	37.1	8.8	10.6	5.4	3.6	5.0	1.0	2.3	0.3	0.05	0.01	0.1	0.01
보유량	37	-	8	5	2	2	5	5	5	2	1	2	-
취득연도	-	-	’12(1) ’13(5) ’21(2)	’13(3) ’17(2)	’13(2)	’13(2)	’17(2) ’19(2) ’20(1)	’21(5)	’21(5)	’13(2)	’13(1)	’13(2)	
구매량	23	8	3	1	4	4	-	-	-	1	1	1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세부사업인 ‘국립이천호국원’의 2026년도 예산안에도 카트 2대의 교체를 위한 구입 비용이 편성되어 있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예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편성단가는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사업 내 편성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내 카트 구매 예산안 세부 내역〉

○ 전동카트 : 3,200만원 = **1,600만원 × 2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이천호국원이 확충사업 완료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카트 소요를 별도로 요구하였다는 입장이나,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천호국원의 카트 구매 이유는 차령 15년의 노후 카트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103] 동 수요가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소요라는 답변은 타당하지 않고,[104] 오히려 노후 카트를 교체하려는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과 중복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임.

○ 또한, 동일한 품목을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성격의 자산 취득

10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662.

104) 국립이천호국원은 노후 전동카트에 대한 교체 예산을 호국원 확충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인 2025년도 예산안에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652.), 2026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노후 전동 카트 교체에 대한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사업은 부처 차원에서 총괄하여 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립묘지 카트 구매 수요를 총괄하여 구매하려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국립묘지별 카트 구매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지 개별 국립묘지에서 별도의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이동 카트 구매를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 편성되어 있는 '국립이천호국원' 관련 예산안은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수립 전 사전 절차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각 국립묘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트 수량 및 보유 카트 노후화를 기준으로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각 국립묘지별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입장임.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천호국원 사례와 같이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각 국립묘지별 사전 수요조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배분 계획의 기준이 된 각 국립묘지의 카트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각 국립묘지별 보유 현황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립이천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18년과 2024년 예산으로 각각 카트를 구매하였으나,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카트 보유량 및 취득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카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은 각각 전동카트를 기업 등에게 기증받은 현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105)106)107)] 해당 연도의 카트 수량이 보유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05) "SK하이닉스, 국립이천호국원 참배객 수송용 전동카트 기증" (경인일보, 2018. 12. 30.), https://www.kyeongin.com/article/1348509

106) "보험개발원, 국립제주호국원에 참배용 전동카트 2대 기부"(FETV, 2023. 10. 12.),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49620

107) 그 외에도 2017년 국립영천호국원, 2019년 국립산청호국원도 각각 카트 2대를 기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연도 카트 보유량이 기록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국립묘지별 카트 보유 현황 누락 부분>

연도	국립묘지	내용	비고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8인승 2대	예산 구입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14인승 전동카트	기증
2018년	국립이천호국원	전동카트 2대	기증
2020년	국립임실호국원	전동카트 2대	
2023년	국립제주호국원	전동카트 2대	
2024년	국립괴산호국원	유족 안내 전동카트	예산 구입

□ 각 국립묘지별 카트 수요조사 및 보유 현황 파악은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과 적정한 배분 계획 마련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보다 면밀한 준비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립묘지 이동 카트 구매' 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부실하게 수행됨으로써, 예산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매 수량 및 각 국립묘지별 배분 수량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하지 못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과 관련된 수요 조사, 보유 현황 파악 등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절차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7.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비 예산[108)]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서울현충원’ 등 12개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상경비’는 각 국립묘지에 최적의 참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운영 및 환경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중 ‘피복비(210-03)’는 국립묘지 근무자에게 집례복, 안장복 등의 피복을 지급하려는 예산임.

□ 2026년도 각 국립묘지의 피복비 예산안은 총 3억 900만원으로, ‘국립서울현충원’ 5,900만원 등 각 세부사업에 피복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각 국립묘지 ‘경상경비’ 중 ‘피복비’ 비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립서울현충원	피복비	14	31	59	28	90.3
국립대전현충원	피복비	65	66	66	0	-
국립4·19묘지	피복비	7	7	7	0	-
국립3·15묘지	피복비	7	7	7	0	-
국립5·18묘지	피복비	15	15	15	0	-
국립영천호국원	피복비	24	24	24	0	-
국립임실호국원	피복비	25	27	28	1	3.7
국립이천호국원	피복비	12	12	18	6	50
국립산청호국원	피복비	23	25	25	0	-
국립신암선열공원	피복비	4	5	4	△1	△20
국립괴산호국원	피복비	26	26	26	0	0
국립제주호국원	피복비	22	31	30	△1	△3.2

(자료: 국가보훈부)

108) 세부사업: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국립대전현충원(3250-353), 국립4·19묘지(3250-354), 국립3·15묘지(3250-355), 국립5·18묘지(3250-356),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임실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2) 검토의견: 업무 시행지침에 반하는 피복비 단가 산정 개선 필요

□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 지급’은 국립묘지 근무자에게 집례복, 안장복 등의 피복을 지급함으로써, 담당 업무 수행 시 효율을 증대하고 국립묘지 품격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예산안은 각 국립묘지에서 근무하는 피복 지급대상 근무자 인원 및 피복 유형별 단가를 고려하여 각 국립묘지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복 지급이 필요한 인원 외의 인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거나 국립묘지 간 피복비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을 통하여 피복의 지급기준 및 상한액을 마련하고 있음.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피복 지급기준에 따르면, 실무원, 의전단, 경비원, 운전원, 시설물관리원 등에게 안장복, 의전복, 경비복, 운전복, 작업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피복별 단가의 상한액을 모든 국립묘지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급대상			상한액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및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호국원	
집례복	원장, 안장·참배 담당 과장 및 팀장, 전문 집례관	소장, 부소장	원장, 안장·참배 담당 과장 및 팀장	500
안장복	작업팀원 및 안장지원팀원	실무 직원	실무원	400

구분	지급대상			상한액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및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호국원	
의전복	의전단	의전단	의전단	1,000
경비복	경비원	-	경비원	500
운전복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500
안내복	보훈미래관 및 민원안내실 안내원	기념관 해설사	기념관 해설사	300
작업복 (청소복)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및 시설물관리원	300
청원경찰	-	청원경찰	-	300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300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6년도 각 국립묘지 근무자 피복비의 예산 편성 단가를 살펴보면, 각 국립묘지 간 동일한 피복의 단가가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단가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가를 산정한 사례가 있음.

○ 구체적으로, 실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장복의 경우 다수의 국립묘지가 단가 상한액인 40만원으로 편성한 반면, 3곳의 국립묘지는 단가 상한액인 40만원을 초과하여 50만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시설환경관리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의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피복임에도 단가 금액이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최대 20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4곳의 국립묘지에서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음.

○ 그 밖에, 일부 국립묘지에서는 집례복, 안내복 등의 단가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산정되었음.

<국립묘지 2026년도 피복비 단가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례복 (원장 등)	안장복 (실무원)	의전복 (의전단)	경비복 (경비원)	운전복 (운전원)	안내복 (해설사)	작업복 (시설환경 관리원)
상한액	500	400	1,000	500 (300)*	500	300	300
서울현충원	500	400	-	500	-	300	300
대전현충원	500	400	700	500		300	300
4·19묘지	500		-	300*		300	300
3·15묘지	-	400	-	300*	-	300	300
5·18묘지	600	400	-	350*	500	350	350
영천호국원		500	500	500	500	-	500
임실호국원	500	500	500	500	500	-	500
이천호국원	500	400	-	400	400	300	400
괴산호국원	500	400	850	500	500	-	300
산청호국원	500	500	1,000	500	500	-	300
신암선열공원	500	-	-	500	-	300	300
제주호국원	500	400	1,000	500	500	-	300

* 국립민주묘지의 경우 경비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30만원 상한) 단가를 기재함.

** 음영은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지급기준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례임.

(자료: 국가보훈부)

□ 각 국립묘지별로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동일한 피복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될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국립묘지 간 피복 단가는 동일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세부 유형별 피복비 예산안은, 국립묘지 간 피복비 단가 차이를 해소하고 국립묘지 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그 단가를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단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편성된 피복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편성단가 (A)	상한액 (B)	편성인원 (C)	초과 금액 [(A-B)×C]
국립묘지	피복				
5·18묘지	집례복	600	500	1	100
	사회복무/청원경찰	350	300	13	650
	안내복	350	300	9	450
	작업복	350	300	10	500
영천호국원	안장복	500	400	12	1,200
	작업복	500	300	11	2,200
임실호국원	안장복	400	500	15	1,500
	작업복	300	500	10	2,000
이천호국원	작업복	400	300	12	1,200
산청호국원	안장복	500	400	12	1,200
합계					1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피복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피복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일부 국립묘지에서 이와 달리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에는 단가를 통일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 근무지 피복 지급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립묘지 간에 피복비 단가를 다르게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18. 국립묘지 조성[10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천, 횡성, 장흥 등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2,500만원(4.7%) 증가한 314억 7,4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은 강원도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19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등록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묘지조성	8,782	30,049	20,325	31,474	1,425	4.7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4,884	-	-	1,961	1,961	-

(자료: 국가보훈부)

109) 세부사업: 국립묘지조성(3250-364)

2) 검토의견: 국립횡성호국원 조성공사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은 강원도 횡성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6년(사업기간: 2023년~2028년) 내에 약 2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임.

<국립횡성호국원조성 사업 개요>

사업 위치	부지면적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산46번지 일원	390,000㎡ (11.8만평)	2만기	’23~’28(6년)	495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9억 6,100만원으로, 설계비(설계보상비) 3억원, 공사비 15억 5,0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설계비 3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따른 설계보상비로 집행할 예정이고, 공사비, 감리비 등은 2026년 10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함으로써 집행한다는 계획임.

<2026년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예산안	1,961	300	1,550	100	11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 6월 중간설계 완료 후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2025년 9월 22일), 그 결과 공사비 6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어, 2025년 10월 말 현재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요청 중인 상황임.

○ 당초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는 495억원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공사비 65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인 500억 원 이상(495억원→560억원)이 되므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게 되었음.[110]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495→560	29	40	387→452	38	1

* 공사비 증액에 따라 감리비 및 부대비도 추가 증액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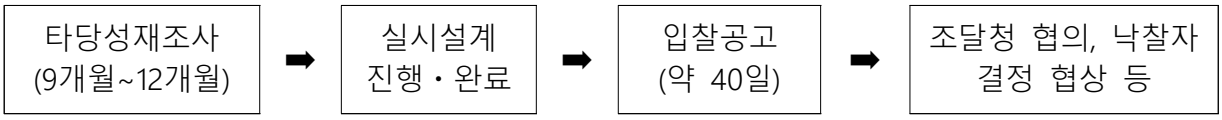
□ 이로 인하여, 동 사업은 향후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절차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타당성재조사 기간 및 후속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내 계획하였던 조성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1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111]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이후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도 공사 입찰 계약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공고 40일,[112] 그 외 조달청 검토·협의, 낙찰자 결정 후 협상 및 계약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사 입찰계약은 계획된 2026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공사계약 체결 전 향후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관련하여,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타당성 평가에만 약 1년의 기간(2023년 7월~2024년 7월)이 소요되었음을 참고할 때, 실시설계 진행 기간과 입찰계약 과정의 절차 등까지 고려하면

11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1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 추진 등을 진행하게 되어 이미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동 사업의 공사에 약 720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만일 2026년 내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못한다면 2028년 내 준공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호국원 안장대상자의 안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가보훈부는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의 2026년 내 공사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국립묘지 안장여력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113]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700만원(△12.0%) 감소한 152억 3,300만원이 편성됨.

○ 내역사업인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41.3%) 감소한 7,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8,273	17,310	15,233	△2,077	△12.0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63	121	71	△50	△41.3

(자료: 국가보훈부)

113)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예산 감액 규모 과다 및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역량강화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학입학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일정 생활 수준 이하 가구의 고교취학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의 경우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114]인 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취학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큰 편차가 없으나,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자녀 수업료 지원은 대상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집행액은 2020년 8,500만원(인당 평균 147만원)에서 2024년 1,500만원(인당 평균 375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임.

114)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대상 인원	집행액	평균 지원금액
2020	85	119	1.40	58	85	1.47	27	34	1.26
2021	49	96	1.96	14	53	3.79	35	43	1.23
2022	42	81	1.93	11	45	4.09	31	36	1.16
2023	28	59	2.11	7	32	4.57	21	27	1.29
2024	40	63	1.58	4	15	3.75	36	48	1.33
2025.10	48	74	1.55	7	28	4.01	41	46	1.13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모두 지원금액 한도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감소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2025년보다 5,000만원 감소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5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감액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대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집행액이 2023년 2,700만원, 2024년 4,8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15] 2026년에 편성된 금액 7,100만원은 2025년 10월 기준 집행액보다도 적은 금액임.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28세로,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

115)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2022년 4,640명 → 2024년 5,902명)

에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바,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 보다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6)은 대학교 수업료 지원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최근 3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연평균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7,508	9,170	7,639	9,481	10,388
장기복무 전역자	15,962	5,321	4,640	5,420	5,902
중기복무 전역자	11,546	3,849	2,999	4,061	4,486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중기복무 제대군인 미취업률>

(단위 : 명 / 2025.3.31. 기준)

전체 중·장기복무 회원 등록자	전체 중기복무 회원 등록자(A)	중기복무 등록자 중 미취업자(B)	중기복무 등록자 미취업률(B/A)
123,511	40,828	14,802	36.3

(자료: 국가보훈부)

20. 제대군인전직지원금[116)]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100만원(29.8%) 증가한 95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1,923	7,382	9,583	2,201	29.8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전년과 동일한 58만원으로,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도 1인당 월 지급액은 전년과 동일한 81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117)]

116)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117)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2026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안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95억 8,3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 6개월 × 1,705명 × 91.5%= 51억 4,800만원	58만원 × 6개월 × 1,705명 × 91.5%= 54억 2,900만원	58만원 × 6개월 × 2,414명 × 80%= 67억 2,1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 6개월 × 454명 × 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 6개월 × 454명 × 88.5%= 19억 5,300만원	81만원 × 6개월 × 736명 × 80%= 28억 6,200만원

(자료: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를 적용하여 장기복무자 736명, 중기복무자 2,414명으로 산출하였는바, 2025년 8월 기준 지급인원이 장기복무자 842명, 중기복무자 2,190명으로 지급인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예산 조기 소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2025년 8월달 기준 인원을 가정하면 예상 집행액은 약 93억원임.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신청자 수>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장기복무자	559	712	937	736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414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8.
계획인원 (A)	장기복무자	394	376	454	454
	중기복무자	1,802	1,710	1,705	1,705
지급인원 (B)	장기복무자	559	712	937	842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190
차이 (=A-B)	장기복무자	△165	△336	△483	△388
	중기복무자	△114	△826	△1,084	△485
	소 계	△279	△1,162	△1,567	△87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필요

□ 연도별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볼 때,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엽제 관련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더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가 적어 추후 보훈대상자의 증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중기, 장기 제대군인 현황〉

연도	계	중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18	6,392	2,851	3,541
2019	5,681	2,704	2,977
2020	5,664	2,132	3,532
2021	7,278	2,840	4,438
2022	8,701	2,830	5,871
2023	9,420	3,256	6,164
2024	10,388	4,486	5,902
2025.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및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군 인사체계의 특수성으로 비자발적 조기전역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118]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2008년 구직급여(상한액 월 120만원)의 41.7% 수준인 50만원에서 지급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이

1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르러서야 7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5년 81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도 2014년부터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까지 지급단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2022년에 5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5년에 58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반면,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는 2008년 월 12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65% 인상된 월 19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장기복무자의 1개월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40.9%,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29.3%에 불과함.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평균연령 29.1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8만원(구직급여 29.3%) 장기 : 81만원(구직급여 40.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중도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580	58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810	81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9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평균연령은 28세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취업·교육·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데 그쳐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중·장기복무자 제대군인 지원 비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9년)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2년 이상 복무 : 3세 ▌1~2년 복무 : 2세 ▌1년 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 권장사항
	의 료 지 원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취 업 알 선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직 업 훈 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실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취 업 알 선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 (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전직지원금 지급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중기(월 55만원), 장기(월 77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업 지 원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진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교 육 지 원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자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 이하자
	의료지원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대부지원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금액 : 300~8,000만원, 상환기간 : 3~20년(연리3.5~4.5%)
	주택분양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07.8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공공시설의 이용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고궁·능원·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 장 지 원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19. 10. 1. 시행)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었음.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전직지원금 확대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10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 국가보훈부 또한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히면서, 2026년에는 중기복무자 78만원, 장기복무자 9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한 전직지원금 예산 또한 반영되지 못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8월 기준 지급인원이 2026년에도 그

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예상집행액은 편성액보다 적은 바, 국가보훈부의 지원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빈약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함.

□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119]

119)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에 대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상태이며, 2025년 현재 5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한 초급간부전직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밝힘.

21. 지역별 · 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120]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명비를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00만원(△19.5%) 감소한 2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지역별 · 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참전기념행사	2,300	2,177	2,262	85	3.9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344	353	284	△69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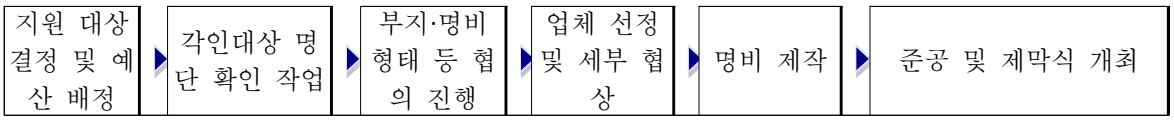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부)

□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명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121]

120) 세부사업: 참전기념행사(4161-420)

12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호국영웅 명비 건립 사업 지원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초·중·고교와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24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장한 바 있음.

○ 2024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6,0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9,300만원(2개소), 대학교 명비 건립에 3억원(3개소) 등 총 6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대학교 명비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지역별 명비 건립에 2억 5,3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1억원(2개소)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2026년에는 지역별 명비 건립에 1억 8,400만원(2개소), 초중고 명비 건립에 1억원(2개소) 등 총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빠른 사업 진행 필요

□ 2025년 명비 건립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8건 중 2025년 10월 현재 완료된 건은 4건에 불과함. 완료된 4건 중 3건은 2024년에 이월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2025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사업 5건 중 1건만이 완료된 상태임.

○ 미완료 4건 중 건립에 착수한 곳은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아직 계약 체결조차 못한 상태임.

○ 계약조차 못한 2건에 관해 국가보훈부는 10월말~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0월말~11월 계약 체결을 가정하더라도, 평균 공사에 65일~81일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5년 내에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2025년 사업 진행 현황>

연번	구 분	건립 대상	진행상황
1	대학교 ('24년 이월)	연세대	- 7.23. 준공 및 제막식 개최
2	대학교 ('24년 이월)	부산대	- 건립 업체 계약 체결 진행 중, 12월 둘째 주 준공 및 제막 예정 * 계약체결(10.24.예정) → 준공 및 제막식(12월 둘째주 예정)
3	대학교 ('24년 이월)	조선대	- 9.19 준공 및 제막식 개최
4	초·중·고	용산고	- 3.24 준공 및 제막식 개최
5	초·중·고	여수고	- 건립 착수(9.23), 12월 중 준공 및 제막 예정
6	초·중·고	김해 장유중	- 건립 착수(9.18), 11월 초 준공 및 제막 예정
7	초·중·고	서산 부석초	- 건립 업체 계약 체결 후 12월 초 준공 및 제막 예정 * 계약체결(10.29.예정) → 준공 및 제막식(12월 첫째주 예정)
8	지역	대구 남구	- 건립 업체 입찰공고 진행 중, 계약 체결 후 준공 예정 * 계약체결(11월 초) → 준공(12월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명비 건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명비 건립은 각인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적부 명단과 보훈부 참전유공자 명단을 대조하는 등의 작업, 학내 의견 수렴, 학사 일정과의 조율 등에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초중고 및 지역 명비 건립은 부지·명비 형태 등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연내에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2.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122)]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200만원(3.3%)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9,342	7,991	8,253	262	3.3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2,673	2,387	2,387	-	-
· 후손교류사업	1,121	1,285	1,285	-	-
·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382	393	393	-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유엔참전국 후손사업’은 ① 후손교류사업,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③ 유엔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① ‘후손교류사업’은 유엔참전용사 후손 및 국내 대학생 교류캠프(국내·외 각 1회) 및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를 개최하는 내내역

122)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됨.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은 저소득 참전국 및 국내 유학중인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내역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9,300만원이 편성됨.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 (2025 본예산) 2,387 → (2026 예산안) 2,387백만원 - (예산) 후손 교류캠프, 후손 장학사업, 참전국 학교 간 교육교류사업 지원 비용 등 반영 - (산출) ① 후손교류사업 1,285백만원(캠프 828백만원,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 450백만원, 공항영접 및 환송 3백만원, 캠프 및 총회 현장점검(17백만원), 업무협의 4백만원(14명×30천원×10회) ② 참전국 후손장학사업 393백만원 국외장학금 306백만원(850명×0.36백만원), 국내장학금 81백만원(22.5명×300천원×12월), 장학물품 구입 등 6백만원 ③ 유엔참전국글로벌아카데미 692백만원(학교운영비 500백만원(25개교×20백만원), 관련행사 개최 등 192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후손교류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지양 필요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후손교류사업’ 중 하나인 ‘후손캠프사업’은 유엔참전국의 후손 국내 초청 캠프와 국내 후손들의 참전국 방문 캠프를 통해 미래세대간에 직접 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은 8억 2,8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유엔군 참전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참전국 후손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1년에 국내캠프와 국외캠프를 각각 1번씩 개최함.

□ 최근 5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참전용사 후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2024년과 2025년은 참전용사 후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함.

○ 2025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참가학생 10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40명, 한국인 참가학생 5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5명으로, 총 참가자 150명 중 참전용사 후손은 45명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국내캠프 참여인원 〉

2025	UN참전국학생(외국인)		국내학생(한국인)		계
대 학	美 동부 명문대학교 재학생 (하버드 등 14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15개국)	국내 대학교 재학생 (전국 11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국내 참전용사 5명)	
인원	60	40	45	5	150

2024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국외참가자 및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국내 대학교 재학생 (전국 41개교)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인원	61	67	20	148

2023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전국 21개교)	
인원	72	62	134

2022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전국 15개교)	
인원	44	48	92

2021	외국인	한국인	계
대 학	해외참가자	국내 대학교 재학생	
인원	50	36	8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재외공관·참전협회 등을 통해 추천된 영어소통 가능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발자 대비 신청자 수가 차이가 거의 없는 등 제도의 홍보가 부진한 것도 참전용사 후손 참여 부진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신청자수 / 선발자수)>

2021	2022	2023	2024	20‘25
126 / 126	136 / 136	196 / 196	239 / 238	254 / 25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후손캠프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전용사후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참전용사후손 참여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참전용사후손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후손 장학사업의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액 조정 필요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내역사업 중 ‘후손 장학사업’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미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참전용사 후손에게 학습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내내역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3억 9,3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국내 대학(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후손에게는 월 3만원을 지원함.

○ 2026년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 재학 후손 22.5명에 8,100만원을, 국외 대학 재학 후손 850명에게는 3억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매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는데, 국외 후손 장학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예산액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국내 후손 장학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매년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2026년 예산의 경우 40% 이상의 불용이 예상됨.

〈최근 5년간 국외 후손 장학사업 집행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0
총계 (지원인원)	289백만원 (803명)	287백만원 (799명)	298백만원 (830명)	305백만원 (848명)	247백만원 (814명)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국내 후손 장학사업(국내 유학생 지원) 집행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0
총계 (지원인원)	81백만원 (22.5명)	72백만원 (20명)	69백만원 (19.2명)	54백만원 (15명)	43백만원 (12명)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10월 기준 집행액을 살펴보면, 국내 후손 장학사업은 12명에게 4,300만원을 집행함. 이미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2025년말까지 집행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국내 후손 장학사업은 2021년 22.5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했으나, 그 후로 집행액이 계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15명에게 5,400만원 집행에 그침.

□ 국가보훈부는 '후손장학상업' 대상자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앞으로 다른 대학교 재학생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학습장려금의 단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저개발국가 학생 초청 장학금 지급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습장려금이 일반 저개발국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학습장려금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개발 국가 대학생 장학금 및 학습장려금 지급 현황>

구 분	KDI대학원 저개발국 대학생 장학금	국가보훈처소관 유엔참전용사 후손 학습장려금	일본 JAICA
매월 지원액	매월 $1,000	매월 30만원	매월 $2,500

(자료: 국가보훈부)

(3) 성과지표 추가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이 중 유엔참전국 후손장학사업 내역사업과 유엔참전용사추모평화음악회 내역사업, 미래평화학술회의 내역사업, 유엔참전국내기념행사 내역사업 등 4개 내역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민간보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보조	한국전쟁 기념재단	81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보조	(사)호국문화 진흥위원회	-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보조	한미동맹재단	145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유엔참전국내기념행사	보조	6·25전쟁관련 민간단체	18	정액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세부사업은 2020년까지 성과지표로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을 사용하다가, 2021년부터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주관계 기행사 참여자 한국 호감도’를 사용 중임.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내역>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 (단위: 명)	목표	300	310	320					행사별 초청인원합산	초청행사 결과보고서
	실적	307	-	-						
	달성도	102.3		-						
민간주관계기행사참여자한국호감도 (단위: 점)	목표	-	86	86.5	91	91.5	92	92.5	조사기관 의뢰 민간주관 행사 참여자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87	90.7	91.2	91.7	-	-		
	달성도	-	101.2	104.9	100.2	100.2	-	-		

(자료: 국가보훈부)

□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사업 성과지표로 현재 지표에 ‘더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라고 지적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기존 성과지표에 추가가 아닌 기존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추가함.

○ 기존 성과지표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제도개선 실적에 ‘만족도 항목에 호감도 항목을 추가’하였다고 허위 기재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이행 여부>

2020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 평가결과: 감축, 사업방식 변경		
· 주요 지적사항: ③ 사업 성과지표로 현재 지표에 **더하여** 참전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 및 친밀도 등 국위선양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필요	반영	③ 성과지표 변경 - 민간주관계기행사 참여자 만족도 항목에 '호감도' 항목을 추가하여 국위선양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변경

(자료: 국가보훈부)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에 사용하던 '참전국교류행사 참여인원' 등 정량적인 지표를 복원하여 현행 '민간주관계기행사 참여자 한국 호감도' 지표와 함께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3. 송무지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송무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부 소관 소송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하여 보훈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40.7%)한 5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송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송무지원	441	398	560	162	40.7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패소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청 패소 시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800만원 증가한 3억 2,600만원이 편성됨.

<패소사건 소송비용 상세 편성 근거>

· 최근 3년('22~'24년)간 평균 패소비용 지급 건수(48건) × '25년 기준 평균 패소비용(6.8백만원) 반영 = 326백만원 · 패소비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며, 최근 평균 패소비용 증가 추세임을 반영하여 '25년 평균 패소비용으로 산출 ※ (평균 패소비용, 백만원): ('22년) 4.6 → ('23년) 5.1 → ('24년) 5.6 → ('25년) 6.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패소사건 소용비용을 패소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패소비용 지급건수(48건)'를 사용한 반면, 소송비용은 평균 패소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3년이 아니라 '2025년 기준 평균 패소비용(68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설명함.

2) 검토의견: 패소 원인 분석 등 대책 강구 필요

□ 국가보훈부의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송 패소율 및 평균 패소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행정소송 패소율의 경우 2022년 7.0%, 2023년 8.1%, 2024년 8.7%, 2025년 상반기 기준 10.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균 패소비용 또한 2022년 460만원, 2023년 510만원, 2024년 560만원, 2025년 상반기 기준 68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국가보훈부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6.
처리 건수(A)	428	419	391	184
패소 확정 건수(B)	30	34	34	18
패소율(=B/A)	7.0	8.1	8.7	10.0
패소비용 지급 건수(C)	57	43	43	33
패소비용 지급액(D)	261	220	239	226
평균 패소비용(=D/C)	4.6	5.1	5.6	6.8

주: 패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이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연내 패소 확정 건수와 연내 패소 비용 지급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소송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2025년 상반기 평균 패소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가 근거자료로 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정내역은 2020년 12월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나, 2025. 1. 1.부터 대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감정료가 2배로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예산부터 패소비용 단가를 인상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심급별 패소비용을 살펴보면, 1심 패소로 확정된 사건은 연평균 310만원~460만원, 2심 패소로 확정된 사건은 610만원~940만원,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비용이 발생한 건은 870만원~1,050만원으로 나타남.

○ 피고 항소 시 국가보훈부의 패소율은 연평균 56~78%이고, 피고 상고 시 국가보훈부의 패소율은 100%임.

<각 심급별 사건 처리 결과>

연도	심급	접수	처리				진행중	패소비용(사건당 평균비용)	심급별 패소비용	피고 항소 시 패소율	피고 상고시 패소율
			피고 승소	피고 패소	취하[123]	조정-취하[124]					
2021	1심	478	361	31	44	27	15	4.7	3.1	58%	100%
	2심	33	19	12	1	1	-		6.1		
	3심	11	9	2	-	-	-		10.5		
2022	1심	447	307	38	44	12	46	5.2	3.6	56%	100%
	2심	35	15	19	-	1	-		6.6		
	3심	11	9	2	-	-	-		10.3		
2023	1심	397	231	35	34	11	86	7.1	4.6	78%	100%
	2심	33	8	24	-	-	1		9.4		
	3심	11	7	4	-	-			8.7		
2024	1심	380	121	14	26	6	213	9.3	-	58%	100%
	2심	42	11	21	-	2	8		8.8		
	3심	13	5	7	-	-	1		9.7		
2025	1심	207	10	-	3	-	194	-	-	-	100%
	2심	19	1	1	-	-	17		-		
	3심	8	2	1	-	-	5		-		

(자료: 국가보훈부)

□ 즉, 패소비용이 증가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항소 제기한 사건이 많아지고 항소 또는 상소 시 패소율이 높은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의 행정쟁송 사건의 대부분은 질병·부상의 공무관련성(요건) 및 상이등급 심사와 관련되는바, 2023년 이후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과의

123) 원고가 단순 소취하한 사건만 기재
124) 조정이 성립한 사건 및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건 기재

해석의 차이, 의학적 진단 결과(상이의 정도 등) 증거 판단 등에서의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이 주된 패소 원인으로 나타남.

<2023년 이후 국가보훈부 주요 패소 확정 사건 현황>

(단위: 원)

연도(사건번호)	패소 원인	패소비용
2023년(2020구단7940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663,991
2023년(2021구합31939)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	13,408,150
2023년(2021구단21617)	독립유공자의 사실상 손자녀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846,380
2024년(2021구단59727)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3,901,292
2024년(2021누11809)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5,720,670
2024년(20구단102053)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보훈청과 법원 간 증거판단의 견해 차이	14,252,770

주: 연도별 패소비용이 가장 큰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작성

(자료: 국가보훈부)

○ 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심사에 적용되도록 할 필요도 있음.

□ 국가보훈부는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판례 경향 및 패소 세부 원인 분석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심사기준 등에 반영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와 비슷한 결론이 나

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소송비용 각자부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125]: 법정처리기한 준수율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조세심판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8.3%) 증가한 15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00	1,440	1,440	1,560	120	8.3

(자료: 조세심판원)

2)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126]

□ 하지만, 조세심판원 청구사건의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도 172일에서 2024년도 185일로 처리기간이 늘었고, 2025년도(9월 기준)에는 그 처리기간이 더욱 늘어 평균 226일로 나타남.

---

125)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126)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또한,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 사건 비율도 2023년 50%, 2024년 35.4%에서 2025년(9월 기준)에는 9.2%까지 큰 폭으로 낮아져 법정처리기한(90일) 미준수 사건 비율이 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

(단위: 일, %)

구분	법정처리기한(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0,178	185
2025. 9.	477	9.2	1,989	38.6	2,691	52.2	5,157	226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사건이 국제거래 증가 등 전문·복잡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진 반면 조직 및 인력은 적절히 강화되지 않아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동일 쟁점 사건이 대량으로 접수된 반면, 2025년에는 동일 쟁점 대량접수 사건이 거의 없어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났다는 설명임.

□ 그러나, 2025년(9월 기준)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비율(9.2%)은 작년(2024년)의 준수 비율(35.4%)과도 큰 차이가 있고, 2025년 9월 기준 조세심판원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2024년)에 비해 정원은 동일하나 현원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조세심판원 인력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원장	심판관	조사관	서기관/사무관	주무관
2023	정 원	122	1	8	18	65	30
	현 원	119	1	8	19	60	31
2024	정 원	122	1	8	18	65	30
	현 원	117	1	7	16	61	32
2025 (9월기준)	정 원	122	1	8	19	64	30
	현 원	122	1	7	17	65	32

(자료: 조세심판원)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127]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 지연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율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127)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128]: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은 국가 주요시책,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숙의공론화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및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6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이 사업은 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의제선정위원회 사업 1억 3,500만원, ② 공론화 과정의 진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사업 35억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	-	-	3,635	3,635	순증
- 의제선정위원회	-	-	-	135	135	순증
- 공론화위원회	-	-	-	3,500	3,500	순증

(자료: 국무조정실)

128) 세부사업: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7032-302)

2) 검토의견

□ 국무조정실은 국가 주요시책과 국민적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사안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집단지성에 기반한 대안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숙의공론을 활성화할 계획임.

○ 구체적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129](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국정과제, 주요 정책현안, 첨예한 갈등 사안 등을 대상으로 공론

---

129)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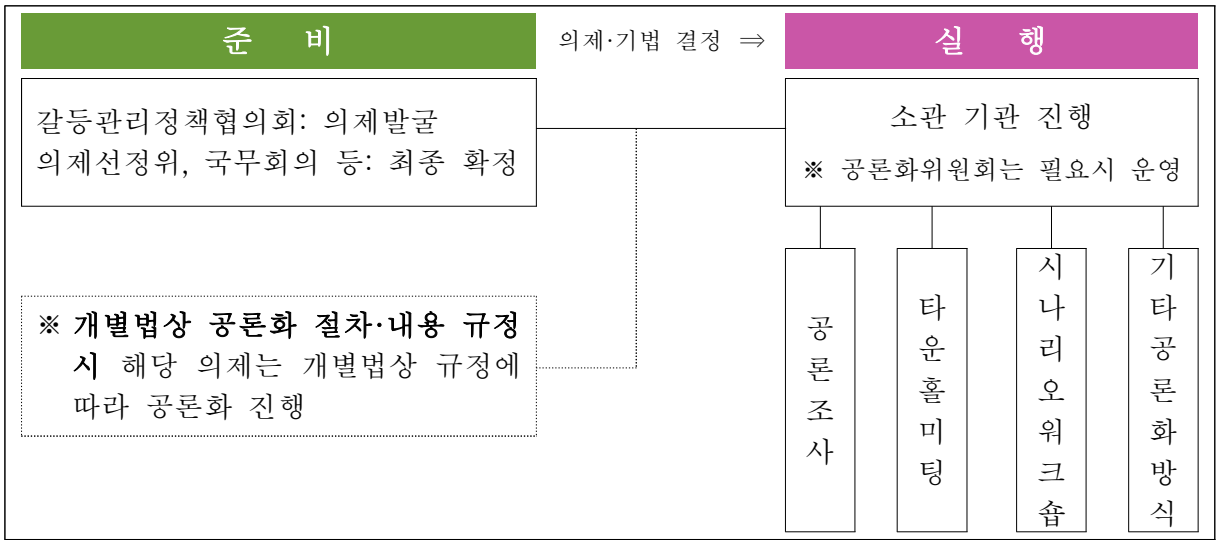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화 의제 후보를 발굴하고, 이후 국무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또는 의제선정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의제와 추진 방식을 확정하며,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등(신설 예정)을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추진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의제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시민참여단 등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금, 사무실·회의장 등의 등의 공사 또는 임차 등의 조성 비용과 위원회 및 지원단 등의 운영경비, 숙의공론화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은 의제선정위원회의 경우 30명의 위원이 위원회 회의 12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10명의 위원이 5개월 동안 월 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간담회의 경우 10명의 전문가와 5개월 동안 월 2회의 간담회를, 시민참여단의 경우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5개월 동안 월 1회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산출하였음.

<2026년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의제 선정 위원회 (135)	일반수용비 (210-01)	○ 참석수당: 200,000원×30명×12회=72,000천원 ○ 안건검토수당: 100,000원×30명×12회=36,0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12,000원×30부×12회=4,320천원	112
	임차료 (210-07)	○ 회의장 임차: 1,000,000원×12회=12,000천원	12
	사업추진비 (240-01)	○ 업무협의: 30,000원*30명×12회 = 10,800천원	11
공론화 위원회 (3,500)	일반수용비 (210-01)	○ 참석수당: 290,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200,000원×10명×2회×5월=20,000천원 3. 시민참여단: 100,000원×500명×1회×5월=250,000천원 ○ 안건검토수당: 20,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원×10명×2회×5월=10,0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28,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15,000원×10부×2회×5월=1,5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5,000원×10부×2회×5월=1,500천원 3. 시민참여단: 10,000원×500부×1회×5월=25,000천원 ○ 회의물품 구입비: 7,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원×2회×5월=1,0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원×2회×5월=1,000천원 3. 시민참여단: 1,000,000원×1회×5월=5,000천원 ○ 지원단 사무용품: 6,000천원 ○ 홍보비: 160,000천원 ○ 단수조정: △300천원	51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우편 및 택배요금: 6,750천원 ○ 망이용료: 1,000,000원×2회선×5월=10,000천원 ○ 전기요금: 500,000원×5월=2,500천원 ○ 여행자보험: 10,000원×535명×6일=32,100천원	51
	특근매식비 (210-05)	○ 지원단: 9,000원×15명×10일×5월=6,750천원	7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임차료 (210-07)	○ 회의장 임차료: 125,000천원 1. 공론화위원회: 1,000,000원×2회×5월=10,000천원 2. 전문가 자문 간담회: 1,000,000원×2회×5월=10,000천원 3. 시민참여단: 7,000,000원×3시간×5회=105,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12,000,000원×5월=60,000천원 ○ 차량 임차료: 1,200,000원×5월=6,000천원 ○ 냉온수기 임차료: 50,000원×2대×5월=500천원 ○ 버스 임차료: 180,000천원 1. 1박2일 토론회: 4,000,000원×15대×1회=60,000천원 2. 1일 토론회: 2,000,000원×15대×4회=120,000천원 ○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80,000천원 1. 전산장비(PC, 모니터 등): 8,000,000원×5월=40,000천원 2. 사무가구(탁자, 의자 등): 8,000,000원×5월=40,000천원	452
	유류비 (210-08)	○ 차량 유류비: 500,000원×5월=2,500천원	3
	일반용역비 (210-14)	○ 공론조사 영상제작: 50,000,000원×1식=50,000천원 ○ 행사운영 1,840,000천원 1. 여론조사: 50,000원×20,000명=1,000,000천원 2. 1박2일 토론회: 240,000,000원×1회=240,000천원 3. 1일 토론회: 150,000,000원×4회=600,000천원 ○ 공론화 홈페이지 구축: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생방송 토론회: 150,000,000원×1회=150,000천원	2,090
	기타운영비 (210-16)	○ 과운영비: 90,000원×3과×5월=1,350천원	1
	국내여비 (220-01)	○ 업무협의, 현장방문 등: 87,000원×15명×12일×5월=78,300천원 ○ 단수조정: △2,470천원	76
	사업추진비 (240-01)	○ 공론화위원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 전문가 자문 간담회: 30,000원×10명×2회×5월=3,000천원 ○ 시민참여단: 30,000원×500명×1회×5월=75,000천원 ○ 단수조정: 5,900천원	87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 위원회 대외 업무협의: 2,000,000원×5월=10,000천원 ○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업무협의: 30,000원×30명×5월=4,500천원 ○ 단수조정: △500천원	14
	직책수행 경비 (250-02)	○ 고공단(나급) 단장: 650,000원×5월=3,250천원 ○ 2. 3급 갑: 500,000원×5월=2,500천원 ○ 3. 4급 갑: 350,000원×5월=1,750천원 ○ 4. 4급 을: 300,000원×5월=1,500천원	9
	정책연구비 (260-02)	○ 정책연구용역: 50,000,000원×1식=50,000천원	50
	공사비 (420-03)	○ 사무실 공사 및 철거공사비: 50,000,000원×1식=50,000천원	50
	무형자산 (440-00)	○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	100
합 계			3,635

(자료: 국무조정실)

□ 이 사업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 공공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 보장,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조성과 공공갈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26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 지원단의 규모와 구성, 사무실·회의장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규모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사업 예산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거 유사사업 집행 규모만을 참고하여 산출하는 것은 예산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의 편성·집행방식은 예산의 낭비 또는 예산의 과도한 불용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130]

---

130) 참고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도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예산요구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하여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 산출근거와 규모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예산소요 산출기초·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 및 숙의공론화 예산액 비교>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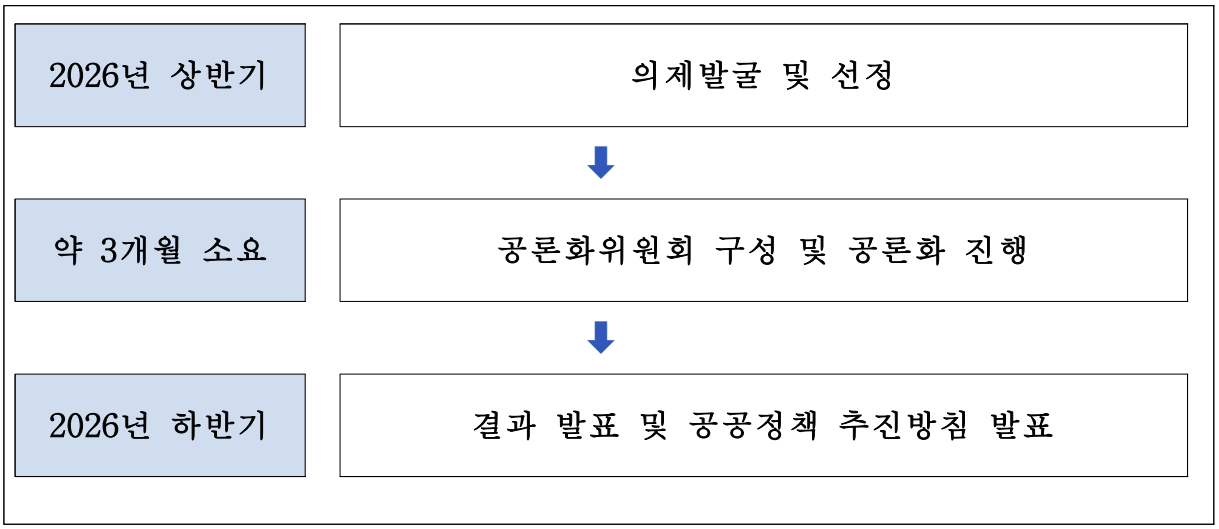
비목	내 역	신고리공론화 집행액	숙의공론화 예산액
합 계		3,727	3,635
상용임금	행정실무원 인건비	17	-
일반수용비	소 계	666	623
	온·오프라인 공론화 홍보	384	160
	사례금	106	418
	회의자료 인쇄, 지원단 사무용품 등	105	45
	저작권료, 소송비, 번역료, 속기사이용료 등	71	-
공공요금	우편요금, 여행자보험. 사무실 운영요금 등	11	51
특근매식비	지원단 특근매식비	9	7
임차료	소 계	177	463
	지원단 사무실 임차	103	60
	전산장비·사무가구, 토론회 장소, 버스 임차 등	74	403
유류비	지원단 유류비	1	3
복리후생비	행정실무원 복리후생비	1	-
일반용역비	소 계	2,603	2,090
	시민참여형 조사	2,401	-
	숙의 공론화 공론조사 영상제작(50), 여론조사(1,000), 1박 2일 토론회(1회, 240), 1일 토론회(4회, 600)	-	1,890
	생방송 토론회 및 권역별 토론회	202	150
	공론화 홈페이지 구축	-	50
기타운영비	지원단 과운영비	1	1
국내여비	국내여비	11	76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	32	98
관서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11	14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14	9
일반연구비	홈페이지 구축	22	-
정책연구비	공론화 연구용역	-	50
고용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	2	-
공사비	사무실 공사 및 철거비	-	50
무형자산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	100

(자료: 국무조정실)

□ 둘째,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소통 플랫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숙의 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공론화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정책 추진방침을 확정할 예정임.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로드맵(안)>



(자료: 국무조정실)

○ 이를 위해서는 의제선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 및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령에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131]

131) 참고로,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하여 공론화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9530호, 2025. 4. 1.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이 2025년 4월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특히,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 사안을 의제로 다루는 기구인 만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공론화 과정이 단순한 여론수렴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인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비례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위원을 결격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숙의 결과가 정책 결정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인권보호관 지원[132]: 대테러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133]에 따라 설치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33.4%) 감액[134]된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인권보호관 지원	357	410	410	273	△137	△33.4

(자료: 국무조정실)

□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135] 소속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136]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132) 세부사업: 인권보호관 지원(7032-304)

13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 주요 감액사유: 전문임기제 관련 기타직보수(약 8천만원) 예산이 ‘국무조정실 인건비(7001-100)’ 사업으로 이관되고, 공무직 퇴직금 예산이 감액(약 4천만원) 됨.

13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136)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음.[137]

2) 검토의견

□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 수집[138],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함.[139]

□ 이러한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는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 안건 관련 자문 및 개선 권고, ②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③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 활동, ④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시정권고인데[140], 이를 위해 매년 2~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137)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비상임 위촉직이며, 2016년에 최초로 인권보호관이 위촉된 후, 현재 제5대 인권보호관이 재임 중임.

1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

14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연도별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집행액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인권보호관 지원	324	263	352	373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상정안건 관련 자문·개선권고는 총 16차례, 관계기관 대상 인권보호 교육은 총 86회 실시되었지만,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및 민원처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인권보호관 업무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합계
테러대책위 상정안건 관련 자문·개선권고	4	3	0	4	5	**16**
인권교육	18	28	14	16	10	**86**
시정 권고	0	0	0	0	0	**0**
민원 처리	0	0	0	0	0	**0**

(자료: 국무조정실)

□ 시정권고 및 민원처리 실적 부진과 관련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된 관계기관 안건 관련 자문·개선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건의 자문·개선권고 중 5건이 ‘인권보호관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 및 ‘인권보호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나,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권보호관의 자문 · 개선권고 내용>

연도	안건명	검토의견 요약
2024 (4건)	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관련 의견	헌법상 자유권 침해 가능성 있는 대테러활동 전반에 대해 인권보호관에 적시 정보 공유 필요
	국내외 테러정세 및 테러위협 선제 대응 계획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 점검 활동 시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 개선 시 수인의무와 영업의 자유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	국외 경찰 파견, 관계기관의 부처 내 상황실 설치 관련 재외국민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인권보호관과 적시 정보 공유 필요
2025. 9. (5건)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대테러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및 실무매뉴얼 개정 등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사전참여 확대 필요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UN 대테러사무국 및 고등인권판무관, 미국·EU 등과의 적극적 정보협력을 통해, 우리 인권보호 정책·조직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실질화 필요
	2025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대테러활동 중 포탈·SNS 게시물 검열 및 쇼핑몰 거래 제한 등 행정조치 시 제한 대상·범위 등 결정에서 인권보호관과의 사전협의·검토 요청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경호안전대책기구(설치근거: 대통령경호법 제5조의2)에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 보장방안 수립 권고

연도	안건명	검토의견 요약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관계기관 소관 대테러 법령 및 관련지침 등 제·개정 시 인권보호관과 사전 협력 요청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시정권고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방지 실적 없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상정안건 관련 권고 및 인권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방안을 적극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 실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41]: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규모 및 홍보 주제 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4,100만원(42.3%) 증가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② 규제합리화회의 운영, ③ 국제협력, ④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의 총 4건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12	1,989	1,989	2,830	841	42.3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042	1,300	1,300	1,471	171	13.2
- 규제합리화회의 운영	416	218	218	378	160	73.4
- 국제협력	41	248	248	248	-	-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213	223	223	733	510	228.7

(자료: 국무조정실)

141)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1)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규모 및 홍보 주제 검토 필요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은 규제혁신 성과 홍보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억 2,3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228.7%) 증가한 7억 3,300만원임.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A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213	223	733	510	228.7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과 관련하여, ① 계기별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위해 3억 3,300만원, ② 규제혁신 블로그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2억 7,000만원, ③ 규제혁신 영상 콘텐츠 제작에 8,000만원, ④ 규제혁신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에 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인지도 높은 광고매체를 활용해 규제혁신 성과를 광고하고, 서포터즈 활용, 블로그 및 유튜브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보임.

<2026년도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계획안>

① 계기별 규제혁신 사례 홍보: 3억 3,300만원(증 3억원)
② 규제혁신 블로그 등 국민소통 채널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 2억 7,000만원(증 1억 6,000만원)
③ 규제혁신 영상 콘텐츠 제작: 8,000만원(전년 동)
④ 규제혁신 자체 유튜브 채널 운영: 5,000만원(신설)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소통이 필요하고, 규제혁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내역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국민소통’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목적 중 하나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규제의 정비’인데, 2024년도 홍보 콘텐츠를 살펴보면,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신설·강화 규제심사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콘텐츠는 부족하였음.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시행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비하는 것보다 규제 신설·강화 전에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만약, 국민소통을 위한 2026년도 홍보사업이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만 치중하고 신설·강화 규제 관련 국민 의견수렴 등은 소홀히 한다면, 정책 성과 홍보 등 기관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사업 수행 전에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의 홍보 주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규제혁신의 수혜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수혜대상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한정된다면 규제 소관 부처에서 그 대상을 특정해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은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면 될 것임.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홍보 콘텐츠가 수시로 포털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142]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규모(5억 1,000만원 증액, 228.7%)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143]

□ 종합하면,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사업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하

142) 참고로,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대상에 규제혁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정부부처는 규제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143)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의 홍보물은 개별 부처의 기존 콘텐츠들을 포털에 반영하는 수준(미러링)으로, 국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블로그, 유튜브 등 SNS 홍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여, 이미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규제혁신 수혜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규제 소관 부처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기존규제 정비 성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임.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각 부처 규제혁신 사례 홍보 예시[144]〉



144)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규제합리화 소식 中에서 선택

(2) 향후 성과지표(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운용과정에서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145]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의 정보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지출구조조정 등의 용도로 활용됨.

□ 국무조정실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146] 중 하나로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을 설정하고 있음.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측정산식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단위: %)	목표	-	-	-	77	77[147]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국무조정실)

145)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4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해, 총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는데, 다른 하나의 성과지표는 '청년위원 위촉비율'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전략목표Ⅰ.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Ⅰ-1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①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	(개선(부대) 또는 철회권고된 규제 수 / 중요규제 수) ×100
② 청년위원 위촉비율(%)	청년위원 위촉 수/청년참여 관리대상 정부위 위촉위원 수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147) 최근 5개년(2020-2024) 평균 실적치인 73.3%보다 5% 이상 상향한 77.0%을 2026년도 목표치로 설정함.

□ 그런데, 동 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중요규제심사 건수만을 대상으로 개선·철회권고 실적을 산출하고 있는데, 전체 규제심사 건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요규제심사 건수만을 모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부처 자체심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그 심사대상을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구분하는데, 파급효과가 적고 적정성이 인정되는 비중요규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심사 요청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원안 동의)함.[148]

한편, 중요규제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하고 있음[149].

148)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그런데, 연도별 규제심사 현황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2016년 신설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체 심사대상 규제 중 중요규제 비율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치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규제정책 방향과 규제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임.[150]

<2018년-2024년 연도별 규제심사 현황>

(단위: 건, %)

연도	심사규제 합계	비중요규제 (비율)		중요규제 (비율)		원안동의 (비율)		개선철회권고 (비율)	
2018	1,083	1,029	(95.0)	54	(5.0)	25	(46.3)	29	(53.7)
2019	974	952	(97.7)	22	(2.3)	8	(36.4)	14	(63.6)
2020	1,515	1,460	(96.4)	55	(3.6)	23	(41.8)	32	(58.2)
2021	1,129	1,082	(95.8)	47	(4.2)	15	(31.9)	32	(68.1)
소계	**4,701**	4,523	(96.2)	**178**	**(3.8)**	71	(39.9)	**107**	**(60.1)**
2022	819	748	(91.3)	71	(8.7)	17	(23.9)	54	(76.1)
2023	612	532	(86.9)	80	(13.1)	15	(18.8)	65	(81.3)
2024	842	727	(86.3)	115	(13.7)	20	(17.4)	95	(82.6)
소계	**2,828**	2,489	(88.0)	**339**	**(12.0)**	61	(18.0)	**278**	**(82.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149)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2016년 신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50) 반면, 국무조정실은 2022년 이후 중요규제 비율이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2022년부터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중요규제 심사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026년도 성과계획서(총괄)」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지표로 설정되어야 함.

□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설정한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은 전체 심사 대상 규제가 아닌 중요규제만을 대상으로 개선·철회 권고율을 산정하고 있고, 규제의 파급효과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중요규제 해당 건수가 극히 적어져 통계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성과목표 달성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라는 국회[151]와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전 지표인 '규제개혁 만족도'를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로 변경하여 2025년도 성과관리에 처음 적용하였으므로, 그 시행 내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국무조정실은 '중요규제 개선·철회 권고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성과지표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성과목표 달성도 사이의 괴리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임.

151) 2022년도 결산 관련 국회 시정요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프로그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152]: 종합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앞당길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유·무상 연계 등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700만원(△50.9%) 감소[153]한 26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6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788	5,396	5,396	2,649	△2,747	△50.9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①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고, ② 기획재정

152)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153)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은 ‘ODA 통합정보포털 고도화’ 사업 완료, 정책연구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임.

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③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 및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인데,[154] 2025년 10월 기준, 총 29명(위원장 1명, 정부·관계기관[155] 위원 16명, 민간위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년 단위) 및 종합시행계획(매년),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평가 및 점검 등 ODA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156]

연도별 ODA사업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매년 수립되는 종합시행계획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 시에 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

---

15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55) "관계기관"이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함.

15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 8월에 총 39개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7개 포함)의 ODA사업과 관련된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조 5,010억원 대비 1,423억원(△2.1%) 감소한 총 6조 3,587억원임.[157]

<연도별 ODA사업 예산>

(단위: 십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요구액)
총ODA(십억원)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501.0	6,358.7
양자간원조	2,775.0	2,926.1	3,115.7	3,673.9	5,128.2	5,445.1	5,209.3
비중(%)	(81.0)	(77.9)	(79.1)	(76.9)	(81.9)	(83.8)	(81.9)
유상원조	1,184.9	1,258.2	1,230.5	1,503.0	2,032.0	2,150.0	2,020.3
비중(%)	(42.7)	(43.0)	(39.5)	(40.9)	(39.6)	(39.5)	(38.8)
무상원조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3,295.1	3189.0
비중(%)	(57.3)	(57.0)	(60.5)	(59.1)	(60.4)	(60.5)	(61.2)
다자간원조	651.9	828.2	822.6	1,103.2	1,134.7	1,055.9	1,149.3
비중(%)	(19.0)	(22.1)	(20.9)	(23.1)	(18.1)	(16.2)	(18.1)

(자료: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2026년도 초에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의결하고, 2026년도 ODA 사업을 시행하게 됨.

157) 제5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5. 8.) 의결안건(제54-1호),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길 필요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40여 개에 이르는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ODA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ODA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음.[158]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159] 이렇게 설정된 로드맵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ODA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정책의 기본방향,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158) 「국제개발협력법안(1801698)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 4., P.14-15

15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때에는 이 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160]

□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ODA 예산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제4차 기본계획(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2026년 시행계획(요구액 기준)만 의결된 상태임.

---

16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즉,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이 의결되었고, 이 계획에 맞추어 2026년도 ODA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임.

□ 이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의결 시점을 확인해보면, 그 의결 시점이 점차 늦어져 적용 개시 연도 초에나 의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기본계획 역시 내년(2026년)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임.

<5년단위 기본계획 의결 현황>

구 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대상기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의결시점	2010. 12.	2015. 11.	2021. 1.	2026. 2. 예정

(자료: 'ODA KOREA홈페이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 의결일자 재구성)

□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년 시행되는 종합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며, 국가 ODA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수행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5년 2월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161]을 보면, 그 주요과제[162] 중 하나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분야별·지역

161)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2-2호), 「한국 ODA 발전방안」, 2025. 2. 20.
162) ①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② ODA 효과성 제고, ③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④ 국민과 함께하는 ODA

별 전략을 상호 연동하여 전략체계의 완성도를 향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기본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가 ODA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연동해 통합적 ODA 사업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과도 상충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 수립 시점을 앞당겨 예산안 국회 심사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 ODA 사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대형화 노력 제고 필요

□ 2026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의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6조 343억원[163]으로서, 사업당 평균 소요 예산액은 33.2억원으로 나타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고, 동 위원회가 2025년 2월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164]에서도 사업 대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ODA 예산안 편성 시에 연수사업들이 개별 시행기관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절성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규모 연수사업들을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이관하여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165]

□ 그러나, 여전히 총 39개 시행기관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5개 시행기관의 사업예산(총 ODA 예산의 91.7%)을 제외하면, 나머지 34개 시행기관의 사업 당 평균예산

163) 2026년도 ODA 예산안 요구액 6조 3,587억원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등(3,243.8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164)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2-2호), 「한국 ODA 발전방안」, 2025. 2. 20.
165) 외교부 소관 '글로벌연수' 사업 내에 '부처연수지원(N-1)'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안 30억원을 편성함.

액은 10.8억원에 불과해 소규모 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

(단위: 억원, 개)

구 분		예산안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당 평균예산
총 39개 기관 합계		60,343.2	100%	1,820	100%	33.2
5개 시행기관	합 계	55,341.5	91.7%	1,359	74.7%	40.7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포함)	24,709.9	40.9%	294	16.2%	84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25,762.4	42.7%	856	47.0%	30.1
	농림축산식품부	2,161.2	3.6%	49	2.7%	44.1
	교육부 (교육청 포함)	1,639.2	2.7%	104	5.7%	15.8
	보건복지부	1,068.8	1.8%	56	3.1%	19.1
34개 시행기관		5,001.7	8.3%	461	25.3%	10.8

(자료: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P.38 재구성)

□ 실제로, 2026년도 ODA사업을 계획 중인 시행기관 39개 중 사업당 평균예산안 10억원 미만 기관의 비율이 56.4%(22개)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2024년도(63.8%) 보다는 줄었지만, 2025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음.

<총 시행기관 대비 사업당 평균예산 10억원 미만 기관 수>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시행기관 수	47개	41개	39개
사업당 평균예산 10억원 미만 기관 수	30개(63.8%)	23개(56.1%)	22개(56.4%)

(자료: 연도별「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자료을 기초로 작성)

□ 국무조정실은 양적으로 확대된 ODA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도록 개별 ODA 사업을 대형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임.

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166]: 기후시민회의 논의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500만원(30.0%)이 증가한 65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4,719	5,049	5,049	6,564	1,515	30.0
- 위원회 운영	2,465	2,611	2,611	4,826	2,215	84.8
- 사무처 운영	2,254	2,438	2,438	1,738	△700	△28.7

(자료: 국무조정실)

○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명칭도 위 시행시기에 맞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으로 변경될 예정임.

166) 세부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2) 검토의견

□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167]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168]함으로써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법률 상 목표로 설정하였음.

○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중장기 감축목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169]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170]을 한 바 있음[171].

□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입법화하기 위한 공론화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

1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169)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70) 다만, 2026. 2. 28.을 시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

171)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확인]

반영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후시민회의 운영 관련 예산 18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172]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공정전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는 국민 참여 방안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2031년~2049년)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고,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구체적인 예산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후시민회의 운영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13억 5,000만원, 온라인 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기후시민회의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산안(백만원)	산출내역
기후시민회의 운영	· 기후시민회의 모집 및 구성(500명) · 국민대토론회 등	1,250	· 기후시민회의 운영 7억원 · 국민대토론회 및 영상백서 작성 등 5.5억원
대국민 의견수렴	· 패널추출·조사 등 (10,000명)	100	· 패널조사 기획·사례비 등 8,000만원 · 결과분석 2,000만원
온라인 숙의시스템	· 이러닝 학습 및 통계	450	· 개인별 이수 현황 등 통계관리 시스템 3억원 · 웹 및 모바일 디자인 0.5억원 · 이러닝 학습 영상 코딩 등 기타 1억원
합계		1,800	

(자료: 국무조정실)

172) 2025년도까지는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 1억원이 반영되어있었음.

□ 국무조정실은 기후시민회의를 직업·연령·지역·성별 대표성을 가진 일반국민 약 500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직접 논의의제를 선정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공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기후시민회의의 논의 결과가 단순히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8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173]된 바 있으나, 소관 위원회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174]의 논의과정에서 환경부는 기후시민회의 등 국가기후 거버넌스와 관련한 정부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173) [22125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174) 제429회 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2025년9월22일) 회의록

○환경부차관 금한승 … 기후시민회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국가기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 갈지 이런 것들을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기후시민회의와 관련한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대안반영폐기[175]되었음.

□ 기후시민회의에서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체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달되고, 실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176]하고 있음.

○ 위원회는 소속 조직으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177], 일반

---

175) 해당 법률안에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 변경(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의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었고, 해당 대안은 2025. 10. 26.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2026. 1. 2.에 시행될 예정임.

17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이하 각호 생략)

17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소속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부재한 상황임.

○ 참고로,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 중에 기후시민회의와 유사하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회의체의 설치 근거를 둔 사례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178] 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공론 결과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회의 입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7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179]: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00만원(255.1%) 증가한 2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센터 지정·운영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국제동향 조사·연구, 지속가능성 평가 수행 등 전문적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591	628	628	2,230	1,602	255.1
- 연구센터 지정·운영	-	-	-	1,500	1,500	순증

(자료: 국무조정실)

179)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 2022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net)[18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181]

○ 국가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설치 권고(1992년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언론·학계·경제계 등의 요구에 따라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182]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명칭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183]되었음.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18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18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182)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8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 2007. 8. 3., 제정)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동 법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184] 이 되었고, 종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음.[185]

○ 이후, 경제·환경·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하여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186]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추진 연혁>

근거	소속(소관)	기수	인원	기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대통령 (환경부)	1기	33명	2000. 9. ~ 2002. 9.
		2기	34명	2002. 10. ~ 2003. 6.
		3기	76명	2003. 12. ~ 2005. 12.
		4기	32명	2006. 5. ~ 2008.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5기	30명	2008. 5. ~ 2009. 4.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6기	24명	2010. 9. ~ 2012. 9.
		7기	34명	2012. 11. ~ 2014. 11.
		8기	32명	2015. 9. ~ 2017. 8.
		9기	33명	2018. 8. ~ 2020. 8.
		10기	32명	2020. 12 ~ 2022.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무조정실)**	**11기**	55명	2024. 10 ~ 2026. 9.

(자료: 국무조정실)

184) **「녹색성장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185)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86)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2021.12., 의안번호 2113765) 제안이유

2) 검토의견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었음(제27조[187]).

○ 그런데, 제정법 시행(2022. 7. 5.) 이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그 동안 연구센터 지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도에 센터장(1명)과 2개의 팀(전략·평가팀 4명, 국제·정보팀 4명)으로 구성되는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자료 분석·검토,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임.

---

18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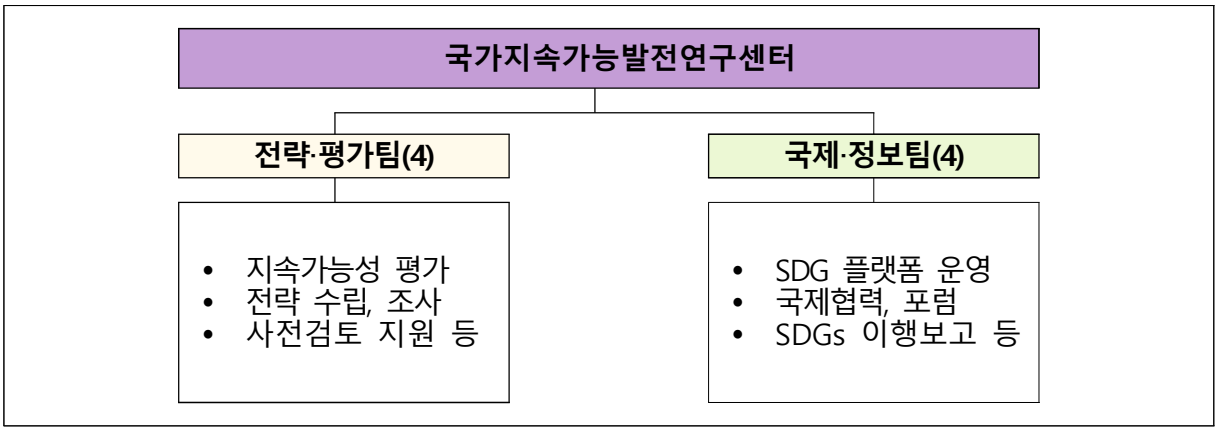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후 연구센터가 국가위원회, 추진단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DB 구축, 영향분석 연구, 사전 검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목표 설정→지표 설정→평가→공개→환류' 평가 프로세스 가동을 통하여 지속가능 전환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를 일관적·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업 예산안을 신규 편성하였음.

<연구센터 조직도(안)>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이 사업은 15억원이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었는데, ① 연구원 인건비 6억 6,000만원, ②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2억 500만원, ③ 정보망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억원, ④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등 2억원, ⑤ 경상여비 2억 3,500만원 등의 세부내역으로 구성됨.

<2026년도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민간 위탁 사업비 (320-02)	인건비	○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 연평균 임금 8,798만원×5명 + 연구원 5,500만원×4명 = 660백만원	660
	사무실 임차료 및 기자재	○ 사무실 임차보증금(30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68백만원), 공사비(50백만원) 등 148백만원 ○ 책상·의자·집기(29백만원), PC·모니터·SW·네트워크 구입(28백만원)	205
	정보망 고도화 ISP 수립	○ 빅데이터 기반 분석, 민관 소통협력 및 온라인 공론화 기능 등 ISP 수립(200백만원)	200
	지속가능 발전 관련 조사·연구 등	○ 2026 국가지속가능성 평가(100백만원) ○ SDG 민간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100백만원)	200
	경상경비, 여비, 일반관리비 등	○ 공공요금·운영경비(60백만원), 회의수당 등 회의비(45백만원), 일반관리비(85백만원) ○ 국내여비(29백만원), 국외여비(16백만원)	235
합 계			1,5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를 집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함.[188]

- 이에 국무조정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 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연구센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상 지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성과 축적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가 주요 업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189]를 참고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8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 10-3. 세부지침
> 가. 사업자 선정원칙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한다.

18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둘째,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2월에는 운영규정 마련, 연구센터 연구원 채용 및 조직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연구센터 공모절차나 인력채용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2026년도 연구원 인건비는 정부 출연연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연구센터 공모 및 인력채용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거나 연구원에게 과도한 인건비가 지급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190]: K-토론나라 참석수당 일부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은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 등에 대한 온라인 소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100만원(108.9%) 증가한 11억 9,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42	570	570	1,191	621	108.9
- 채널운영 및 콘텐츠 개발	474	502	502	492	△10	△1.9
-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	39	39	39	39	-	-
-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29	29	29	29	-	-
- K-토론나라 운영	-	-	-	631	631	순증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2) 검토의견

□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연계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K-토론나라 운영’ 관련 예산 6억 3,100

190) 세부사업: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7037-301)

만원을 편성하였음.

○ K-토론나라 운영을 위한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2억 7,500만원, 일반용역비 3억 2,000만원,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일반수용비는 K-토론나라에 참여하는 패널 및 사회자·석학 등 저명인사에 대한 사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용역비는 K-토론나라의 홍보를 위해 사전·사후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을 임차하기 위한 것임.

<K-토론나라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예산안 (백만원)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210-01)	275	· 콘텐츠 유통 : 500,000원×3편×26회=39,000천원 · 토론회 참석수당 : 200,000원×15명×26회=78,000천원 · 사회자, 석학 등 저명인사 사례 : 3,000,000원×2명×26회=156,000천원 · 관련 도서구입 : 200,000원×12월=2,400천원
일반용역비 (210-14)	320	· 운영경비 : 4,996,154×26회=129,900천원 · 사전 및 사후 콘텐츠 제작비 : 98,800천원 - 롱폼 영상 : 1,500,000원×2편×26회=78,000천원 - 숏폼 영상 : 300,000원×1편×26회=7,800천원 - SNS 홍보 : 500,000원×26회=13,000천원 · 장소 및 시설 임차 : 91,000천원 - 장소 임차 : 5,000,000원×13회=65,000천원 - 시설 및 장비 임차 : 1,000,000원×26회=26,000천원
국내여비 (220-01)	23	· 87,000×10명×26회=22,620천원 · 단수조정 : +380,000원=380천원
사업추진비 (240-01)	13	· 유관기관 업무협의 : 25,000원×10명×26회=6,500천원 · 전문가 의견 수렴 : 25,000원×10명×26회=6,500천원
합계	631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총리비서실이 예산안 편성 이후 제시한 구체적인 2026년 K-토론나라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년간 정기적으로 격주 개최(약 26회)를 목표로 청년과의 토론, 명사 인터뷰 포맷을 번갈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임.

○ 참고로, 2025년 제1회 K-토론나라는 10대부터 30대까지 25명 내외의 청년을 초청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회 K-토론나라는 명사를 초청하여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191]되었음.

○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를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및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미래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6년도 K-토론나라 운영 예산안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기 전 편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널 참석수당 및 명사 등에 대한 사례금이 계획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패널 참석수당으로 7,800만원, 저명인사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 5,600만원 등 참석 수당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6년에 각각 26회씩 운영

191) 2025. 10.말 기준, K-토론나라는 총 4회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5년의 경우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음.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토론나라 운영 방식을 격주로 개최(연간 26회)하되, 패널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토론 포맷과 명사에 대한 인터뷰 포맷을 번갈아가면서 개최(각각 13회)할 계획이므로, 각 13회 분량의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석 수당 관련 예산 2억 3,4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K-토론나라 참석수당 관련 조정 내역(안)>

구분	예산안	조정안
패널 참석수당	7,800만원 (200,000원×15명×26회)	3,900만원 (200,000원×15명×13회)
사회자, 석학 등 저명인사 사례	1억 5,600만원 (3,000,000원×2명×26회)	7,800만원 (3,000,000원×2명×13회)
합계	2억 3,400만원	1억 1,700만원
감액 조정: △ 1억 1,700만원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9.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192]: 시민통통 플랫폼 지속 운영 여부 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은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원활한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0만원(△3.5%) 감액된 8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883	852	852	822	△30	△3.5
- 당정협의체 운영	83	65	65	65	-	-
- 국회·정당 업무협의	23	23	23	23	-	-
-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지원	226	230	230	230	-	-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65	-	-	-	-	-
- 시민사회활성화지원	-	149	149	149	-	-
- 시민사회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327	277	277	247	△30	△10.8
- 특정업무경비	108	108	108	108	-	-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	50	-	-	-	-	-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192) 세부사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내역사업은 주요 사회현안 및 갈등현안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업무협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시민통통)운영, 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시민통통)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용역비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시민사회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327	247	△30	△10.8
(일반수용비)	64	64		
(관리용역비)	**80**	**80**		
(국내여비)	12	12		
(사업추진비)	91	91		
(일반연구비)	30	-	△30	△100

(자료: 국무총리비서실)

○ 시민통통 플랫폼은 2020년말에 신설된 이후, 2023년에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였음. 플랫폼의 주요 구성으로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전문가·시민의 의견 및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시민기고', '아이디어 공모', 법령·통계·정책자료 등을 제공하는 '지식교육DB'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시민통통 플랫폼의 접속자 수 및 콘텐츠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 접속자 수 및 콘텐츠 이용 건수 모두 종전 대비 급감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운영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플랫폼 접속자 수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개편된 2023년의 경우 월 평균 약 4,700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의 경우 월 평균 1,000명 이하가 플랫폼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남.

<시민통통 플랫폼 월별 접속자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1월	579	3,648	627	978
2월	545	3,572	467	1,178
3월	703	4,096	675	1,053
4월	767	6,077	692	1,009
5월	1,063	7,448	714	792
6월	832	8,067	580	830
7월	833	7,773	765	852
8월	886	6,761	609	806
9월	1,190	5,999	763	839
10월	3,797	1,649	2,426	-
11월	5,087	1,148	3,811	-
12월	3,940	606	1,845	-
합계	**20,222**	**56,844**	**13,974**	**8,337**
월평균	**1,685**	**4,740**	**1,164**	**926**

(자료: 국무조정실)

○ 다음으로, 콘텐츠 별 접속자 현황을 보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 접속자 수가 매우 저조하며, 특히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접속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시민통통 플랫폼 콘텐츠별 접속자 현황>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2023년	2024년	2025년
시민기고			-	3,932	3,574
소통협력	아이디어공모		479	2,997	319
지식교육DB	법령및통계	관계법령	159	598	126
		주요통계	189	510	118
	정책자료	시민사회위 백서	153	444	68
		정책연구	103	282	22
		학술자료	58	233	40
		컨퍼런스 자료	44	93	14
		해외연수 보고서	63	102	16
		시민사회 표준조례	31	85	17
		공익활동	5	122	179
	교육활동	교육교재	46	225	23
		NGO 강사은행	8	52	23
	시민사회 연구기관		135	610	132
	비영리단체		255	5,253	615
공지사항			325	945	288
소개	시민통통		187	693	129
	조직		147	671	276
합계			**2,387**	**17,847**	**5,979**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같이 저조한 시민통통 플랫폼 이용 현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통통 플랫폼의 운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시민통통 플랫폼을 사회대개혁위원회[193] 활동을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켜 재구성하고, 시민단체 활동소식·정보 등을 주기별 업로드로 하여 진정한 시민사회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시민통통 플랫폼의 기존 이용 현황, 향후 동 플랫폼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통통 플랫폼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93)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5. 10. 15. ~ 2025. 11. 5.까지 진행되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 연구기관 공통: PBS 폐지와 쟁점

1) PBS 제도의 연혁과 의의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는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쟁을 통하여 총 연구원가 방식(full cost)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원·관리하는 제도로 1996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반에 도입됨.

□ PBS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극적인 자체수입(정부·민간수탁사업 등) 확보 및 연구개발을 할 유인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음.

○ 먼저, PBS 도입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필요한 지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출연금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활발한 자체수입 확보를 할 유인이 부족하였음.

○ 다음으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할 유인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음.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구조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여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음.

○ 특히 1990년대에는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더불어 경쟁, 효율성, 성과주의, 고객 지향과 같은 가치가 중시되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논의가 전개됨.

□ PBS는 종전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정착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제고와 수요자(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194]

○ 첫째, 총원가에 연구비 산정 방식을 도입하였음.

즉, 연구개발사업 편성에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총연구원가로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된 출연금 예산은 줄이고,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는 금전적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촉진함.

○ 둘째, 연구책임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한 부여임.

연구과제 중심의 관리방식을 택함으로써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194) 이하의 내용은 아래의 2개 문헌 등을 참고함.
- 이민형·장필성,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vol. 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2. 5., p.15
- 길종백, 정병걸, 염재호, '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한국조직학회보(제6권 제2호), 2009. 8. 18., pp. 189- 190

참여연구원의 구성부터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인센티브 배분까지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서 중심이었던 기관운영이 연구자 중심으로 변모하는 데에 일조하였음.

나아가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다는 장점도 있음.

○ 셋째,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경쟁 확대임.

정부의 연구개발을 공개경쟁의 수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적 연구환경을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일조함.

2) PBS의 부정적 효과와 제도 폐지

□ 1996년부터 약 3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PBS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음.

○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수탁과제의 수주 경쟁은 연구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종전과 달리, 연구기관은 정부과제를 수탁하지 아니하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연구자는 과도한 수탁연구에 노출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성과의 저해를 유발함.

○ 둘째, 권한과 동시에 책임성을 부여받는 연구책임자는 도전적

연구과제보다는 적절한 연구비 집행이나 성과달성이 용이한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취지와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듦.

○ 셋째, 지나친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하여 연구기관 간 협력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의 중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비용이 발생하며 중·장기적인 성과보다는 가시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넷째,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상호 불신 문화가 조성됨.

대부분의 연구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목적 또는 사후 감사를 고려한 집행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음.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 반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수직적 관계가 고착되는 문제에 직면함.

○ 마지막으로 수주 경쟁을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므로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관 내 최대 부담요소로 작용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력 있는 연구자를 우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유발함.

여기에 2015년부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경력 연구자의 처우가 더욱 악화되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PBS의 한계 극복, 연구환경의 개선, 연구자 처우 및 창의성 향상 및 중·장기 기초연구의 확대 등을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6년,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PBS 폐지 방침에 따라 변화되는 연구개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PBS 폐지로 정부수탁과제의 수주 경쟁이 사라지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개발 위탁사업 예산은 감액되는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은 예년 대비 크게 확대 편성되었음.

즉,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 5,453억 9,200만원에 비해 약 29.7% 증가한 약 7,076억 3,8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 약 1,313억 1,100만원(38.3% 증가), 경상비 158억 8,800만원(28.3%)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율이 큰 편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정부안 (B)	증△감 (C=B-A)	C/A	비 고
합 계 (1+2+3+4)	545,392	707,638	162,246	29.7	-
1. 인건비	342,567	473,878	131,311	38.3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1,134) - 증원 및 처우개선 3.5% 등
2. 경상비	56,132	72,020	15,888	28.3	- 자체수입 출연금 전환 - 기관별 공통소요 등
3. 사업비	149,748	167,187	17,239	11.5	-
- 기관고유	56,232	56,632	400	0.7	-
- 일반사업	93,516	110,555	17,039	18.2	- 정부지원사업(+22,955) - 기관별 사업검토 등
4. 출연금 대체	△3,055	△5,447	△2,392	△78.3	- 2024년 결산기준, 집행잔액 출연금 대체 처분(△5,44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PBS 폐지로 개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위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일반사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이 신설되었음.

즉,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주관부처를 두고, 주관부처는 필요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뢰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주관부처가 의뢰한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지원사업’은 총 229억 5,500만원 규모로 전체 일반사업 예산 1,103억 5,500만원 중 약 20.8%를 차지함.

< '정부지원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주관부처)	출연금 편성	일반사업비 (A)	정부지원사업(B)	비중 (B/A)
합 계	707,638	110,355	22,955	2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215	11,116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504	1,953	57	2.9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35,443	6,741	1,380	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교부)	35,521	7,172	56	0.8
산업연구원(산업통상부)	30,230	3,356	444	13.2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통상부)	25,486	4,462	3,716	8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320	6,134	3,316	54.1
통일연구원(통일부)	11,932	1,168	-	-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61,268	9,441	4,709	49.9
KDI 대학원(기획재정부)	22,929	4,291	-	0.0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8,624	2,416	178	7.4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38,483	1,400	870	62.1
한국교통연구원(국토교통부)	30,138	2,297	830	36.1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1,017	2,457	688	2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22,919	2,282	878	38.5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17,898	4,019	150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9,578	4,300	262	6.1
육아정책연구소(성평등가족부)	9,536	1,765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19,549	3,329	42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획예산처)	47,360	8,295	1,920	2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고용노동부)	28,923	2,890	1,134	3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11,518	2,066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	31,267	5,796	1,323	22.8
한국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16,515	3,868	142	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	14,135	2,361	17	0.7
한국환경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	30,282	3,050	607	19.9
건축공간연구원(국토교통부)	14,048	1,930	236	12.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수탁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예: 민간위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탁과제 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행가능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 의의가 정부부처의 필요 과제에 대한 수요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종래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을 정부수탁과제로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정부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할 수밖에 없었으나, PBS 폐지 이후에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정부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과제 및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를 통한 수입금액은 총 2,935억원이므로 2026년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출연금 과제 및 중앙행정기관 수탁과제 외의 과제의 총량 한도는 약 1,467억 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2024회계연도 출연금 · 정부수탁과제 외의 과제에 따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24년 결산			제한기준 (A*50%)
	총 계 (A=B+C)	직접비 (B)	간접비 (C)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424	4,093	2,331	3,212
국토연구원	10,343	4,198	6,145	5,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17	500	1,317	909
산업연구원	1,442	396	1,047	721
에너지경제연구원	8,866	3,194	5,672	4,4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4	363	751	557
통일연구원	312	235	77	156
한국개발연구원	9,236	5,501	3,735	4,618
KDI 대학원	6,265	3,791	2,473	3,133
한국교육개발원	37,943	32,455	5,488	18,9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4,862	131,716	13,146	72,431
한국교통연구원	12,255	6,879	5,375	6,128
한국노동연구원	1,198	826	372	5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19	737	982	860
한국법제연구원	2,606	1,008	1,598	1,3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46	945	901	923
육아정책연구소	7,612	6,515	1,097	3,8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11	557	354	4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4	5	119	6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3,468	10,885	2,583	6,73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034	6,626	1,408	4,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663	2,056	1,607	1,831
한국행정연구원	2,814	1,772	1,042	1,4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81	312	269	290
한국환경연구원	7,118	4,388	2,730	3,559
건축공간연구원	928	518	410	464
합계	293,500	230,471	63,029	146,750

3) PBS 폐지에 따른 문제점

□ PBS가 가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첫째, 적절한 대안에 대한 설계 없이 30년간 운영하던 PBS 제도를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임.

○ 정부는 PBS가 가지는 그간의 비판적 측면을 고려하여 폐지를 선언하였으나, ‘PBS 폐지’라는 정책적 목적에만 몰두하였을 뿐 제도 폐지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하면서 고유의 연구역량 회복을 위한 재구조화에 돌입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달리, 경제인문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2026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

○ 예를 들어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출연사업,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정부지원사업’, 여전히 개별 부처가 보유한 수탁과제 예산의 수행에 따른 정부수탁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

○ 또한, PBS를 폐지하고 안정적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유인이 적다는 PBS 도입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도 폐지 이후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사업' 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지 아니함.

○ '정부지원사업'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관 부처(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탁한 연구과제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산출하여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4년만 산정기준으로 한 이유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지원사업'은 47억 9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의 약 49,9%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부지원사업'은 1,7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의 약 0.7%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지원사업'의 편성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고, 통일연구원,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지원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간 정부수탁과제의 수를 살펴보면, 2025년 한 해에만 총 1,282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편성된 ‘정부지원과제’ 예산 수준으로 종전 수준의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부부처는 여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정부지원사업’의 편성 기준과 운영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연구기관의 연간 자체수행 및 수탁과제의 수>

(단위: 건)

기관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합 계	1,083	1,539	885	3,516	923	1,530	811	3,246	925	1,282	636	2,758	775	12	19	806
연구회	30	-	-	30	15	-	-	15	15	-	-	15	15	-	-	15
과학	49	23	76	148	42	22	61	125	41	18	48	107	39	-	-	39
국토	39	146	92	185	42	136	100	277	38	134	80	449	39	-	-	39
대외	81	54	19	154	61	72	23	156	55	52	14	121	22	-	-	22
산업	39	129	98	168	34	129	83	266	39	89	85	394	33	-	-	66
에너지	46	39	77	162	41	32	84	157	43	30	53	126	22	-	-	22
정보	26	84	19	129	25	85	17	127	22	59	10	91	24	-	4	28
통일	24	7	3	34	23	9	2	34	21	5	2	28	19	-	-	19

(단위: 건)

기관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출연	정부	민간	총계
KDI	48	54	49	151	50	45	38	133	55	38	31	124	34	-	-	34
교육	23	45	34	102	26	43	20	89	35	38	20	26	36	-	-	36
평가원	42	140	5	187	37	164	5	206	37	108	2	147	39	-	-	39
교통	36	78	42	168	28	81	37	171	22	63	23	146	24			
노동	13	30	14	57	10	33	21	64	10	29	14	53	12	12	15	39
농촌	55	49	25	129	48	39	22	109	43	39	23	105	38	-	-	38
법제	33	61	48	94	31	58	48	142	29	33	38	204	18	-	-	222
보건	48	108	26	182	40	90	27	157	39	80	23	142	40	-	-	40
여성	43	50	9	102	43	52	15	110	43	43	10	96	39	-	-	39
조세	35	78	5	118	31	66	6	103	30	62	2	94	29	-	-	29
직능연	49	50	28	127	41	54	22	117	42	44	21	107	40	-	-	40
청소년	24	32	9	65	17	27	1	45	19	25	3	47	-	-	-	-
해양	69	99	57	225	70	104	41	215	57	89	39	185	43	-	-	43
행정	49	31	18	98	37	32	15	84	37	35	9	81	37	-	-	37
형사	41	39	9	89	35	28	8	71	32	32	4	68	27	-	-	27
환경	50	62	49	161	39	63	48	150	40	69	37	146	43	-	-	43
건축	44	27	6	77	46	23	4	73	38	26	4	68	34	-	-	34
대학원	18	7	50	75	20	2	50	72	18	3	47	68	15	-	-	15
육아	29	17	18	64	22	41	13	76	25	39	4	68	14	-	-	1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운용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됨.

○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로서 기본사업비 내에 ‘수시연구사업’을 운용해 왔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출연금 사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사업비	기관고유사업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 수시연구
		연구지원사업
특수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비	

(자료: 전문위원실)

○ 2026년도 예산안에도 경제·인문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7억 6,300만원의 ‘수시연구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기본연구사업 예산 214억 4,300만원 중 약 12.9%를 차지함.

○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은 정부부처의 수요에 따라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사전에 어떠한 과제를 요청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여 집행과정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 실익도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여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26년도부터 ‘수시연구사업’의 비중 한도를 기본연구사업비의 10%에서 20%로 높일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 내 수시연구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기본연구사업 예산(A)	수시연구사업 예산(B)	비율(B/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55	225	21.3
국토연구원	928	100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29	147	11.1
산업연구원	1,546	172	11.1
에너지경제연구원	792	80	1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6	24	12.9
통일연구원	555	100	18.0
한국개발연구원	680	68	10.0
KDI 대학원	2,337		-
한국교육개발원	1,298	165	1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87	159	10.1
한국교통연구원	414	42	10.1
한국노동연구원	780	154	1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8	129	10.0
한국법제연구원	849	109	1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60	120	10.3
육아정책연구소	764	123	1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08	113	1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36	70	13.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03	105	1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30	60	1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10	130	18.3
한국행정연구원	832	84	1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67	57	10.1
한국환경연구원	1,265	130	10.3
건축공간연구원	617	97	15.7
합 계	23,780	2,763	11.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게다가 우리 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수시연구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사업’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넷째, PBS를 폐지하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증대가 가능할지에 관한 사항임.

○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 외에는 연구기관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오히려 연구 자율성을 보다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여전히 1,618억 300만원에 불과하여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기 이전인 2023년 예산(1,780억 5,90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연도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3년	2024년(증가율)	2025년(증가율)	2026년(증가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232	9,309(△68.2)	12,047(29.4)	13,552(1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991	4,256(△14.7)	4,097(△3.7)	4,203(2.6)
국토연구원	6,736	6,625(△1.6)	8,108(22.4)	8,823(8.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536	11,632(△14.1)	12,633(7.0)	12,052(△4.6)
산업연구원	5,990	8,328(39.0)	6,872(△17.5)	5,875(△14.5)
에너지경제연구원	3,325	2,872(△13.6)	3,414(18.9)	6,149(8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329	3,525(5.9)	3,556(0.9)	6,982(96.3)
통일연구원	1,874	2,406(28.4)	203(△91.6)	2,466(1,114.8)
한국개발연구원	9,341	10,195(9.1)	10,346(1.5)	13,499(30.5)
KDI 대학원	13,310	13,677(2.8)	8,482(△38.0)	6,521(△23.1)
한국교육개발원	4,139	5,363(29.6)	4,337(△19.1)	4,287(△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12	2,986(△23.7)	2,962(△0.8)	3,456(16.7)
한국교통연구원	3,583	3,120(△12.9)	2,299(△26.3)	3,056(32.9)
한국노동연구원	4,202	3,606(△14.2)	3,649(1.2)	4,648(2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73	4,379(△13.7)	4,231(△3.4)	4,817(13.9)
한국법제연구원	5,963	5,587(△6.3)	6,555(23.1)	5,951(△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924	7,064(△10.9)	6,477(△8.3)	6,350(△2.0)
육아정책연구소	3,256	3,020(△7.2)	3,209(6.3)	2,818(△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013	4,742(△5.4)	5,297(11.7)	4,918(△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911	9,156(△7.6)	8,612(△5.9)	10,877(26.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698	3,540(△24.6)	4,041(14.2)	5,250(2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73	2,825(△13.7)	2,980(5.5)	2,785(△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21	6,625(△8.3)	5,915(△10.7)	6,775(14.5)
한국행정연구원	5,878	5,071(△13.7)	5,142(1.4)	5,064(△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60	3,973(11.6)	4,008(0.9)	2,961(△26.1)
한국환경연구원	5,959	4,128(△30.7)	4,445(7.7)	4,835(8.8)
건축공간연구원	2,830	2,664(△5.9)	2,776(4.2)	2,833(2.1)
합계	178,059	150,674(△15.3)	146,694(△2.6)	161,803(10.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다섯째,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사업에 매진하도록 수탁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수탁과제 외의 과제(예: 민간위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위탁과제) 수행은 제한할 방침(각 기관이 2024회계연도에 수행한 수탁과제 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행)인데, 일률적인 50% 한도설정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한 연구사업은 위탁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므로 위의 방침처럼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수탁과제 수행을 제한할 경우 일부 특별교부금 연구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의 연구과제 중 정치적 중립성 또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불가피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탁과제에 대한 일률적인 한도 설정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연구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 근본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PBS 폐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방안, 수행과제에 대한 정교한 성과평가 제도의 마련으로 해결되어야 함.

4) 향후 방향

□ PBS가 3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부처-경제·인문사회연구회-각 연구기관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PBS 폐지 이후에 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 정립, 연구개발 제도 설계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30년까지 PBS 제도의 완전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새 제도의 안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봄.

□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신규 편성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 정부수탁과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수탁하는 과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인센티브를 설계하여야 함.

○ 아울러 정부가 PBS 폐지로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수탁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내실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설계하여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과 함께 ‘수시연구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정부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부처는 위탁사업예산을 두고 있어 정부수탁사업의 운영방식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정부지원사업’을 편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나눌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정부지원사업’과 ‘수시연구사업’ 간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은 PBS의 급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부실한 제도 설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예산만 지원하고, 개별 정부부처에 필요한 과제 수탁예산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운용 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을 기본사업으로 변경 필요

1) 연구사업의 분류: 기관고유사업(기본사업, 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연구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관고유사업은 다시 기본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함.

○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이나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함께 특수사업으로 명명됨.

<연구사업의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은 일반사업에서 기본사업으로 변경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지원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총 106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들 사업은 모두 기관고유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임.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일반사업명	시작연도	2026 예산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2010	302
	출연연 통합 업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16	1,250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2017	1,266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2025	6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10	184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2016	101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7	3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07	350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016	26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5	2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7	152
통일연구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2010	59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6	458
KDI국제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024	285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개발	2006	115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03	824

기관	일반사업명	시작연도	2026 예산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4	1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2011	25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2024	344
한국교통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9	85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2022	69
한국노동연구원	통합유지보수사업	2019	1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2019	120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013	3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011	257
육아정책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05	135
	전산실 운영사업	2005	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011	2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003	29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2013	135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2017	9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1	217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2017	1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015	210
한국행정연구원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008	25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2011	169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2011	96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2016	135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2016	64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2	135
합계			10,67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성격상 한시적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먼저, 비록 여러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성과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개별 연구과제마다 매년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하는데, 필수사업에 가까운 정보시스템 예산에 대해 매년 존속 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일반사업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여 舊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적인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편성의 비일관성의 문제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 별도로 기관고유사업에 전산운영사업 등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지출목적과 내용이 실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KEEI-ERP)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 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 연구원	정보자료 (전산) 운영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인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환경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이 아닌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기관 공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예산 증액 필요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개요 및 연혁

□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195] 환경의 고유한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구축·운영된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접근 방식을 말함.

□ 정부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목표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나아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23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주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기관의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그 이용료를 지원받아 왔음(18개 기관, 67종 정보시스템).

○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였고. 2025년 11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1개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85종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19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네이티브 센터 사업으로 운용 중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는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공유하고, 원활한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정보시스템의 관리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인프라 비용의 절감·기관별 중복투자의 방지·필수서비스 공동활용 등의 장점이 있음.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자(MSP: Managed Service Provider)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MSP는 ㈜안랩클라우드메이트임.

○ 구체적으로 공용 인프라 및 통합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를 운용하는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원화되어 그 이용료를 지불함.

□ 2025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총 10억 4,600만원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그 이용료를 지원하였음.

○ 2025년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운용하는 22개 기관 중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12개 기관은 그 이용료를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거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MSP와의 협상을 통해 이용료 지출을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연구회	과학	대외	에너지	통일	노동	여성	해양	형사	육아	합계
예산	690	6	6	24	85	16	37	70	37	75	1,04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예산 증액 필요

□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운영 예산은 총 12억 500만원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억 9,000만원 등 9개 기관은 예산당국에 요구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요구액에 미달하였고, 이 중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4개 기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음.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명	예산요구액(A)	예산 편성 금액(B)	편차(A-B)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90	690	-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15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20	-
4	에너지경제연구원	30	30	-
5	통일연구원	129	85	44
6	한국개발연구원	40	40	-
7	한국교육개발원	36	36	-
8	한국노동연구원	16	16	-
9	한국법제연구원	31	-	31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9	37	52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5	45	-
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5	15	-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6	-	196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8	70	8
15	한국행정연구원	99	31	68
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41	-	141
17	건축공간연구원	129	-	129
18	육아정책연구소	110	75	35
합계		1,909	1,205	70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은 이미 종전의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관·전환한 후 MSP에게 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舊 서버로 다시 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를 통하여 이메일, 기관홈페이지, 행정·회계·결재 등을 지원하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도서관, 사내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예산당국에 반영을 요청하였던 금액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반영된 9개 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관련 예산 7억 400만원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연구기관 공통: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철저한 관리 · 운영 필요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국가정책수립 기여 및 구성원들의 사기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라 재계약 인원을 포함하여 매년 기관 정원의 10%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음[19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육아정책연구소를 제외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서 총 107명의 퇴직자를 고용할 예정으로, 참여 연구과제 및 실제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6년 예산안은 3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96)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한 표준지침으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의 선발대상·규모·절차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예산안>

(단위: 명, %, 백만원)

기관 (약칭)	예산정원 (A)	퇴직자재고용 인원(B)	비율 (B/A*100)	예산(안)
연구회	96	-	-	-
과학	162	5	3.1	174
국토**	276	3	1.1	-
대외	215	8	3.7	319
산업	204	11	1.5	513
에너지	170	-	-	-
정보	174	2	1.1	36
통일	98	4	4.1	242
KDI	467	12	2.6	441
대학원	167	-	-	-
교육	214	-	-	-
평가원*	352	-	-	-
교통	245	6	2.5	311
노동	148	8	5.4	390
농촌	126	2	1.5	103
법제	134	-	-	-
보건	206	7	3.4	274
육아*	62	-	-	-
여성	127	3	2.4	3
조세	369	-	-	-
직능	190	10	5.3	80
청소년**	91	1	1.1	-
해양***	197	6	3.0	-
행정	117	4	3.4	102
형사	104	2	1.9	32
환경	225	13	5.8	506
건축	111	-	-	-
합 계	5,047	107	2.1	3,526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미운영

** 국토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을 활용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탁사업 내 인건비 등을 활용하여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선발대상은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규직 재직기간 전체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우수성 심사)로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직종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각 기관별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토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은 선발기준, 평가방법 및 재계약 기준 등을 「운영기준」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5년 이상 근속 및 우수성 심사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수성 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197].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실제 운영 시에는 우수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또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징

197) **한국노동연구원 「정년퇴직자 임용지침」**
제3조 (임용) ① 정년퇴직자의 재직시와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이를 별정직원이라 한다.
②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명예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운영지침」
제3조 (대상) 공로우대자는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자로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임용요령」
제3조(대상) 공로우대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예정인 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자로 한다.

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 13개 기관[198]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토연구원[1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따라 임용된 퇴직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재고용 심의시 업무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 규정>

(2025. 10. 기준)

기관	선발요건 (15년 이상 근속, 우수성 심사)	선발제한 (중징계 이상)	업무평가	재계약 시 업무평가 활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x**	**o**	**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	o	o	o
국토연구원	**o**	**x**	**x**	**x**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	o	o	o
산업연구원	o	o	o	o
에너지경제연구원	**o**	**x**	**o**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	**x**	**x**	**x**
통일연구원	**o**	**x**	**o**	**o**
KDI	o	o	o	o
KDI국제정책대학원	o	o	o	o
한국교육개발원	o	o	o	o
한국교통연구원	o	o	o	o
한국노동연구원	**x**	**x**	**x**	**x**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x**	**o**	**o**

19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199) 다만, 국토연구원은 임용된 퇴직자에 대한 업무평가 없이 퇴직자 전문성 활용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기관	선발요건 (15년 이상 근속, 우수성 심사)	선발제한 (중징계 이상)	업무평가	재계약 시 업무평가 활용
한국법제연구원	**o**	**x**	**o**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x**	**o**	**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x**	**x**	**x**	**x**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o	o	o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	o	o	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	o	o	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	**x**	**o**	**o**
한국행정연구원	o	o	o	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x**	**o**	**o**
한국환경연구원	o	o	o	o
건축공간연구원	**o**	**x**	**o**	**o**
규정 미비 기관 합계	**3개**	**13개 기관**	**4개 기관**	**4개 기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보수지급 상한액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은 퇴직 2년 전 연봉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대외경제연구원[200] 등 7개 기관은 「운영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025. 10.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기관	보수 지급 상한
대외	「촉탁직 운영 기준」 - 정년퇴직 후 1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70% + 정년퇴직 당해연도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70% - 정년퇴직 후 2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60% + 1년차 재고용 연도의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60%

2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KIEP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 운영규칙」을 2025년 11월 중 제정할 예정으로 2026년 이후 재고용 직원은 60%이내의 보수지급 상한액의 적용을 받아 해당 기준에 맞춰 2026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답변함.
「KIEP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 운영규칙」 제10조(보수) ① 촉탁직원의 보수는 퇴직 2년 전 연봉의 60% 금액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관	보수 지급 상한
	- 정년퇴직 후 3년차: 정년퇴직 당해연도 임금피크 감액제도 적용 전 정상 기본연봉액의 60% + 2년차 재고용 연도의 성과평가액(분기별 고과평가급 총합)의 60%
에너지	「연구원공로자우대제도 운영규칙」 - 1차년도 명예직의 임금은 퇴직 직전 연봉급(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정 후, 평가등급 미반영 금액 기준)의 70% - 2차년도 이후 명예직의 임금은 퇴직 직전 연봉급(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정 후, 평가등급 미반영 금액 기준)의 40%
교육	「퇴직자 전문성 활용 지침」 - 일반분야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과제단위 위촉직 지급기준의 석사, 연구분야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과제단위 박사 기준의 초임보수 적용
노동	「연구원공로자 임용지침」 - 1차년도 : 만58세 연봉(B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의 65% - 2차년도 : 만58세 연봉(B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의 60%
농촌	「명예위원 선발요건 및 운영지침」 - 1년차 명예위원의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계약연봉의 70% 이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 중 월할 계산하고, 2년차 이후는 4천 1백만원 이내에서 원장이 근무형태 또는 업무 참여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형사	「공로연구위원 임용지침」 - 원장은 공로연구위원에 대하여 주5일제(월 보수액 100%), 주4일제(월 보수액 80%), 주3일제(월 보수액 60%)로 구분하여 처우
환경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 명예행정원 및 명예전문원 연봉은 임금피크 적용 전 3년 평균 연봉의 60%금액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러한 각 기관별 운영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내역을 보면, 「운영기준」에서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평가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1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업무평가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재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노동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내역>

구분	인건비 편성·지출 사업명	수행 업무	1차 계약 계약기간	업무 평가	재고용 여부 및기간
연구직	AI시대의 노동과정 변화와 고용 등	데이터 구축 및 실증분석 방법론 자문 등	2023.7.21.~ 2025.7.20.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연구직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등	실태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자문 등	2023.11.22.~ 2025.11.21.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전산)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그룹웨어 등 업무시스템 운영·개선 자문 등	2024.1.28.~ 2026.1.27.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출판)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 등	보고서 교정·교열 지원, 번역자료 검토 등	2024.2.13.~ 2026.2.12.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행정직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 등	토론회 및 세미나 기획·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2024.4.6.~ 2026.4.5.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 등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문 등	2024.4.17. ~ 2026.4.16.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전문직 (지식 자원)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 등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 자문	24.7.26. ~ 2026.7.25.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실태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자문	2024.11.2. ~ 2026.11.1.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외국인·이민자 수요 분석 및 영향평가 사업 등	외국인력 도입 허용분야 결정 관련 인력부족리스트 자문 등	2024.12.20. ~ 2026.12.19.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연구직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청년 고용정책 유형화 및 평가 자문, 통계집 발간 관련 수치 검토 등	2025.4.17. ~ 2027.4.16.	X	당초 2년 계약 후 종료 예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우수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노동연구원은 15년 이상 근속연수에 미달한 사람도 2026년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대상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년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대상 선발>

연구기관	퇴직자 재고용 명단 (무기명)	근속연수	우수성 심사 실시여부
한국노동연구원	000	29년	x
	000	24년	x
	000	**8년**	**x**
	000	35년	x
	000	28년	x
	000	34년	x
	000	31년	x
	000	29년	x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00	16년 10개월	x
	000	28년 7개월	x
	000	36년 5개월	x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제도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손실의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선발대상 및 절차,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을 명시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 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별 자격·선발절차·운영규모·계약의 적절성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연구기관 공통: 외부위탁용역·자문 등 표기 공통규정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중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되고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는 기본연구사업과 일반사업(정보화 사업 제외)의 자문비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외부용역비의 2026년도 예산안은 211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의 1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사업비[201] 내 자문비 및 외부용역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사업비 (A)	자문비 (B)	외부용역비 (C)	B+C	(B+C)/A
합 계(27)	106,906	5,107	16,063	21,170	19.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02	583	8,340	8,923	85.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666	226	6	232	8.7
국토연구원	5,909	228	1,306	1,534	2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095	19	485	504	6.2
산업연구원	4,198	307	278	585	13.9
에너지경제연구원	1,338	-	280	280	2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852	30	270	300	10.5
통일연구원	1,664	83	184	267	16.0
KDI	4,954	268	687	955	19.3
KDI국제정책대학원	6,228	37	-	37	5.9
한국교육개발원	2,890	40	262	302	1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32	36	104	140	8.1
한국교통연구원	1,727	158	338	496	28.7
한국노동연구원	2,379	312	230	542	2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72	227	143	370	14.4
한국법제연구원	4,214	63	415	478	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03	259	82	341	6.6
육아정책연구소	2,344	48	115	163	7.0

기관명	사업비 (A)	자문비 (B)	외부용역비 (C)	B+C	(B+C)/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68	209	150	359	1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317	5	557	562	6.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34	94	130	224	8.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70	89	-	89	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73	695	523	1,218	24.5
한국행정연구원	4,293	227	91	318	7.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63	52	350	402	15.1
한국환경연구원	3,509	492	437	929	26.5
건축공간연구원	2,412	320	300	620	25.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러나, 연구기관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용역이 아닌 원고 위탁 또는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위탁의 명목으로 자문비와 외부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협동연구사업 이외에 이러한 자문과 외부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판단 기준 및 표기와 관련한 연구회의 공통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사업에 대해서는「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202]에서 최종보고서 저자표기 공통기준을 정하면서, 저자란 해

201) 사업비: 기본연구사업비 + 일반사업비(정보화사업 제외)

202)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별표7>**

ㅇ 저자 표기 공통기준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저자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여)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한 자
  ② (책임)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③ (협의)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ㅇ 저자 등 표기 방법

-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
- 연구진은 연구보고서 내지에 저자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
-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
- 저자의 결정은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을 통해 결정한다.

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하고,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203]에서는 연구참여자 실명제를 규정하면서 연구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시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을 기여도 순에 의거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과 외부용역의 표기에 관련된 규정은 없음.

□ 또한, 연구기관별 자문 또는 외부용역에 대한 표기 기준을 살펴보면,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자문의 경우 저자 또는 기여 등에 표기하지 않고, 통일연구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연구원은 외부용역에 대해서도 저자 또는 기여 등에 표기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임.

---

203)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34조(연구책임자 실명제) ① 연구과제의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시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을 기여도 순에 의거 명기한다.
② 연구기여도가 연구보고서의 장·절 별로 명확히 구분되거나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절 별로 연구참여자를 구분하여 명기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등 자문 또는 외부위탁용역에 대한 표기 기준>

기관명	저자 또는 기여 등 표기		저자 또는 기여 등 기준	
	위탁	자문	위탁	자문
통일	O	X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저자 표기 · 기여, 책임, 협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저자 표기 ·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
교통	X	X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농촌	O	X	- 「연구업무관리규정」 · 내표지 이면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위탁연구자 등과 연구 참여분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해당없음
육아	O	X	-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 제3조 ②항 · 연구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공동저자로 표기	-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 제3조 ②항 · 보고서 작성에는 직접 기여하지 않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한 자문 역할만 수행한 자는 저자로 포함하지 않음
여성	O	X	-「연구발간물작성및발간 지침」 제9조	-「연구발간물작성및발간 지침」 제9조
조세	O	X	-「연구보고서 저자 인정 기준 및 표기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자 인정 기준) · 연구보고서 집필, 연구의 기획 및 설계, 수집된 연구 데이터의 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 기여를 한 자 ·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해당 연구의 참여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해당없음

기관명	저자 또는 기여 등 표기		저자 또는 기여 등 기준	
	위탁	자문	위탁	자문
직능연	O	X	-「연구·사업 운영지침」 제5조(연구진 구성과 외부 연구자 활용), 제5조의2(최종 보고서의 저자표기) -「외부 전문가 운영지침」 제12조(위촉요건), 제14조(수당) · '외부 공동연구원' 위촉 시에만 '공동 저자'로 인정	- 해당없음
청소년	O	X	「연구매뉴얼」 내의 I. 고유사업운영 및 관리 4. 연구사업 추진과정 1) 연구진 구성 · 저자: 연구진 간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합의한 자 ※공동연구원: 기여, 책임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	- 기타 기여자는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보고서 뒷부분 내지에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
형사	O	X	- 「연구윤리규정」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 저자: 연구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집필자로서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에 책임질 것을 동의하며, 연구진 간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저자 결정	- 해당없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같이 협동연구 외의 일반사업과 기본연구사업의 경우 외부용역 및 자문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최종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용역 또는 자문을 표기 하지 않는 것은 연구과제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204]에 따르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205].

□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연구 이외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외부용역 또는 자문의 저자 또는 기여 표기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 내부규정임.

2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부정행위"란 연구활동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회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시

6. 연구회 공통: 대외활동 관리 철저

□ 2024년 기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자문, 평가, 토론 등의 활동으로 한 해 동안 57,759건의 활동에 대해 총 195억 8,000만원을 신고하였음.

○ 대외활동 유형별 빈도는 자문 21,386건(63억 400만원), 평가 15,952건(42억 3,100만원), 기타 9,451건(5,712건), 토론 4,000건(8억 7,300만원), 강연 3,507건(15억 800만원), 발표 3,468건(10억 5,2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대외활동 빈도는 환경연구원은 5,174건, 국토연구원 3,593건, 산업연구원 3,281건, 한국교육개발원 3,110건 순으로 가장 높고,

○ 기관별 대외활동 사례금은 산업연구원 15억 3,700만원, 국토연구원 13억 7,200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억 6,1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억 9,500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대외활동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칭)	자문		평가		토론		발표		강연		기타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연구회	46	12	293	74	32	7	3	0.8	30	12	29	49	433	155
과학	637	278	884	334	87	25	187	87	91	62	1,057	475	2,943	1,261
국토	1,629	396	956	271	216	50	228	74	203	84	361	497	3,593	1,372

기관명 (약칭)	자문		평가		토론		발표		강연		기타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대외	574	262	565	131	262	54	167	52	174	96	448	211	2190	806
산업	**1,267**	**434**	**944**	**282**	**265**	**74**	**233**	**95**	**99**	**46**	**473**	**605**	**3,281**	**1,537**
에너지	540	172	158	39	179	45	133	48	41	16	79	49	1130	369
정보	168	83	501	128	253	62	51	19	42	30	187	95	1,202	416
통일	191	28	443	48	148	21	147	28	312	101	791	149	2,032	374.3
KDI	720	303	396	123	298	96	35	13	83	41	90	107	1,622	683
대학원	229	475	163	66	36	10	64	30	77	80	110	43	679	704
교육	**1,051**	**214**	**1,182**	**249**	**96**	**15**	**128**	**29**	**258**	**58**	**395**	**132**	**3,110**	**698**
평가원	461	126	414	101	22	3	34	9	209	81	41	88	1,181	408
교통	1,430	355	508	150	75	20	178	56	43	17	246	134	2,480	732
노동	1,094	276	730	238	120	25	167	53	111	46	598	445	2,820	1,085
농촌	800	199	674	202	157	34	134	45	154	67	168	116	2,087	662
법제	675	245.5	98	29	92	21.5	88	29.3	38	15.1	722	300	1,713	640
보건	**1,369**	**299**	**920**	**238**	**172**	**34**	**151**	**51**	**149**	**61**	**182**	**512**	**2,943**	**1,195**
육아	239	29	267	34	35	3	55	13	55	9	448	98	1,099	186
여성	433	83	526	111	141	24	136	32	128	47	740	121	2,104	418
조세	581	189	2	6	46	8	53	16	34	20	56	87	772	326
직능	773	255	639	367	111	31	77	28	59	25	358	407	2,017	1,113
청소년	899	224	718	200	57	13	56	17	105	49	301	232	2,131	633
해양	529	218	548	111	458	73	323	48	176	63	374	77	2,408	590
행정	1,358	428	562	169	98	22	68	21	274	121	532	378	2,892	1,139
형사	550	104	435	102	128	23	107	31	126	107	386	235	1,732	602
환경	**2,254**	**400**	**1,719**	**240**	**329**	**59**	**393**	**101**	**299**	**92**	**180**	**31**	**5,174**	**923**
건축	889	217	707	188	87	21	72	26	137	62	99	39	1,991	553
합 계	**21,386**	**6,045**	**15,962**	**4,231**	**4,000**	**873.5**	**3,468**	**1,052.1**	**3,507**	**1,508.1**	**9,451**	**5,712**	**57,759**	**19,580.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년도 기관별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신고 건수 및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에 따르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신고 건수는 1,935건이고, 동일인이 대외활동으로 100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됨.

<2024년도 기관별 대외활동 1회당 100만원 이상 /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

(단위: 건)

기관명 (약칭)	1회당 100만원이상 신고 건수	동일인 대외활동 신고 건수		
		50회 미만	51회-100회	100회 초과
연구회	19	44	-	-
과학	166	99	13	3
국토	157	59	13	2
대외	129	135	10	-
산업	225	137	13	3
에너지	21	104	4	-
정보	40	114	2	-
통일	38	49	14	2
KDI	101	1,622	-	-
대학원	28	60	2	-
교육	21	198	11	3
평가원	18	160	-	-
교통	31	154	7	-
노동	117	73	14	6
농촌	61	139	9	-
법제	78	71	10	-
보건	147	130	13	2
육아	19	38	4	-
여성	19	7	4	-
조세	43	112	1	-
직능	211	129	3	-
청소년	5	69	12	2
해양	91	197	3	-
행정	141	28	13	6
형사	-	70	6	2
환경	-	155	29	5
건축	9	70	13	2
합 계	**1,935**	**4,223**	**223**	**3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의「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사례금 상한액, 신고기한 등)[206]을 참고하고, 동 지침의 직원 대외활동 유형 및 유형별 관리기준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은 대외활동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외활동에 대해 시간 또는 횟수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기관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일부 기관의 경우 무제한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20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생 략)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구회, 산업, 통일, 교육, 교통, 법제, 해양, 행정, 형사, 건축 등 10개 기관은 대외활동의 시간 또는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연구회, 과학, 국토, 대외, 정보, 통일, KDI, 교육, 평가원, 교통, 노동, 직능,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건축 등 17개 기관은 연간 총액 등 대외활동 사례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기관별 대외활동 관리 규정>

(2025. 10. 기준)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연구회	-	-	-	o
과학	주 1회 4시간 이내(대학출강)	-	1	o
국토	월 28시간 이내(횟수제한 없음)	-	-	o
대외	(정기출강) 주 1회 4시간 이내, 업무보강계획 제출 (국외활동) 연 1회 제한, 본인의 연차 휴가 사용 (외부집필활동) 연간 6백만원 한도	-		o
산업	-	전체 대외활동 총액 제한기준은 없음. 단, 계약원고료의 경우 1회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o
에너지	(겸직활동) 주 1회 4시간 이내 (원외 대외활동) 월 3회 초과시 원장 승인	연간 총액 제한 기준은 없으나, 사례금 또는 대가 수령 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상한액을 한도로 하며, 500만원이상의 대외활동의 경우 원장 사전 승인이 필수임	1	o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정보	출강의 경우 1학기 1과목에 한하며, 근무시간 중 출강으로 이석시간이 주 1회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활용	-	-	o
통일	- (출강, 수강 제외)	-	-	o
KDI	월 3회 (월3회 초과시 원장 승인 필수)	-	-	o
대학원	<교원> 겸직 2개 초과금지, 사외이사 등은 1인 1사 제한, 출강 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 <직원> 월 3회 초과 시 총장승인	연간 총액 제한 기준은 없으나, 강의,발표 1시간당 100만원 초과 금지, 기고 1건당 100만원 초과 금지	-	o
교육	-	-	-	o
평가원	- (외부 사업 참여의 경우 사업 1개 참여가 원칙이며 2개 이상 참여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	o
교통	-	-	-	o
노동	① 출강은 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으로 함 ② 일회성이 아닌 근무시간 중의 수강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주 2일 이내로 함	-	-	o
농촌	월 3회	1,000만원 (원고료(장기 자문료) 기준)	-	o
법제	-	- (다만, 원고작성의 경우 건당 사례금 총액한도 300만원, 연간 사례금 1,200만원)	-	o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보건	시간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횟수로 제한 (단, 국가· 지자체 등은 한도 예외 적용) (일반활동 연 36회, 집필활동 연 4회로 제한)	집필활동에 대해서 건당 금액 제한 (집필활동 1건당 700만원 이하)	점검중	o
육아	월 12시간만 근무시간인정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금의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
여성	* 연 50회 제한(고유업무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 언론활동, 학술지 게재, 서면 자문 등은 예외)	- * 외부공동연구 연간 15백만원 이내	-	o
조세	주 1회 4시간 이내 (한 학기 단위의 출강 유형의 경우 주 1회 4시간 이내로 제한)	800만원 (공동연구, 각종 평가·자문 활동 중 1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합산금액 800만원 초과 불가)	-	o
직능	겸직활동 성격의 집필활동은 연 1회 기관장 사전 승인 원칙, 월별 대외활동 횟수는 최대 5회까지 제한	-	-	o
청소년	연간 200시간 이내로 한다. 단, 학기단위 수강자에 한하여는 200시간을 초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강 외 추가적인 대외활동은 할 수 없다.	-	-	o
해양	-	-	-	o
행정	-	-	-	o
형사	-	-	3	o

기관 (약칭)	시간 등 제한	연간 총액 등 사례금 제한	미신고 적발 건수	미신고 제재 조치
환경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은 제한함(「직원대외활동지침」 제4조(활동범위))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은 제한함(「직원대외활동지침」 제4조(활동범위))	-	o
건축	-	-	6 (2023년도)	o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같이 기관별로 대외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 무제한적 대외활동으로 인한 각 기관 고유 연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회는 대외활동에 제한을 두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소속 직원이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한국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2,300만원(15.6%)이 증가한 165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행정연구원	13,379	14,292	16,515	2,223	15.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5,500만원(74.4%)이 증가한 273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148	15,665	27,320	11,655	74.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행정연구원의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는 각 장비 및 시스템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①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2억 850만원)와 ②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운영관리(4,750만원)에 총 2억 5,600만원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한국행정연구원의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56,000천원**

가.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8,500천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 49,000,000원*1회=49,00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50,000,000원*1회=50,00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3,000,000원*1회=73,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0,000원*1회=20,000
-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유지보수: 16,500,000원*1회=16,500

나.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운영관리(47,500천원)

- VDI 및 윈도우 라이선스 갱신: 47,500,000원*1회=47,50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이 중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각 시스템별로 외부의 전문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달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임.

<한국행정연구원의 전산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계약내역(2025년)>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2025년도 전산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 1.~12. 31.	86,988	매달 집행
2025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 1.~12. 31.	69,841	매달 집행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구원의 보안장비, 전산장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① 보안장비 유지운영(4,600만원), ② 전산장비 유지운영(7,900만원), ③ 정보시스템 유지운영(2,700만원)에 총 1억 5,200만원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52,000천원**

가. 보안장비 유지운영(46,580천원)

- 내부 방화벽 유지보수 : 900×4회=3,600천원
- KVM 유지보수 : 770×4회=3,080천원
- 유무선 인증 유지보수 : 1,735×4회=6,940천원
- DDoS공격 차단 유지보수 : 900×4회=3,600천원
- OTP시스템 유지보수 : 1,250×4회=5,000천원
- SSO 유지보수 : 1,215×4회=4,860천원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유지보수 : 700×4회=2,800천원
- 보안USB 유지보수 : 1,575×4회=6,300천원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 300×4회=1,200천원
- 웹방화벽 유지보수료 : 1,000×4회=4,000천원
- 모의해킹(웹취약점점검) : 5,200×1회=5,200천원

나. 전산장비 유지운영(78,060천원)

・ 서버, 스토리지 유지보수 : 11,980×2회=23,960천원 ・ 개인전산장비 유지보수 : 12,010×2회=24,020천원 ・ 네트워크 유지보수 : 7,520×4회=30,080천원 다. 정보시스템 유지운영(27,360천원) ・ 오라클 DBMS 유지보수 : 6,000×1회=6,000천원 ・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 : 7,000×1회=7,000천원 ・ 법인카드 정보수신 서비스 : 730×4회=2,920천원 ・ 전자증빙시스템 유지보수 : 2,860×4회=11,440천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동 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 장비 및 시스템별로 외부의 전문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대부분 분기별로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안장비 등 유지운영 계약내역(2025년)>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보수	1. 1.~12. 31.	30,360	분기 집행
개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1. 1.~12. 31.	44,848	매달 집행
네트워크 유지보수	1. 1.~12. 31.	28,644	분기 집행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6,600	분기 집행
법인카드 정보수신 서비스	1. 1.~12. 31.	2,772	연 1회 (일시납)
전자증빙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10,890	분기 집행
내부 방화벽 유지보수	1. 1.~12. 31.	2,640	분기 집행
정보보안시스템(KVM, 유무선인증서버) 유지보수	1. 1.~12. 31.	9,528	분기 집행
DDoS공격 차단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3,421	분기 집행
OTP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4,752	분기 집행
SSO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4,620	분기 집행
개인정보스캔솔루션 유지보수	1. 1.~12. 31.	2,640	분기 집행
보안US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 1.~12. 31.	6,000	분기 집행
웹방화벽 유지보수	1. 1.~12. 31.	3,696	분기 집행
보안 웹하드 유지보수	1. 1.~12. 31.	2,719	분기 집행
2025년 KISDB DBMS 유지보수	1. 1.~12. 31.	5,224	연 1회 (일시납)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두 사업은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의 전문업체에 관련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므로, 필요 시 수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집행하는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비목이 아닌 '외부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외부용역비[207]>

구 분	내 용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연구기자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의 설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임차료: 시설, 장비, 차량, 물품 등의 임차에 관한 경비
외부용역비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다른 기관들도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외부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음.

<기관별 정보화 사업(일반사업)의 편성 비목>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과학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국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대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라이선스, 운영체제 및 보안솔루션 교체
산업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에너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정보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보안장비,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통일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료, 백신 프로그램 갱신

207)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p.29, 33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KDI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라이선스 등
대학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공공요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교통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보안시스템 연간라이선스 구독
노동	통합유지보수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농촌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법제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인터넷회선 사용료, 서버 및 PC 소모품구입비, 인터넷망 PC 임대료, 라이선스 갱신 등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방화벽, PMS, 랜섬웨어방지솔루션, PC지키미 등
육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 운영 비용 및 SSL복호화 장비 운영비용 등
여성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조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딩 이용료, 네트워크 장비
직능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요금,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청소년	통합유지보수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제안서 평가수당, 통합유지보수 과업심의 등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수용비, 회의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조달수수료, 업무회의, 라이선스 연장, 노후 보안장비 교체
해양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행정	E-KIPA 지식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라이선스 갱신

기관명	사업명	편성비목	비고
형사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공공요금,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클라우드이용료, 라이선스 갱신료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환경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DDoS 보안장비 및 개인백업 솔루션 스토리지 구성
건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자료: 각 기관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E-KIPA 지식행정 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와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비목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가 아닌 '외부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221억 2,200만원) 대비 20억 9,300만원(9.5%) 증가한 24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134억 5,7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111억 1,600만원 등임.

<2026년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839	22,122	24,215	2,093	9.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1)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등의 사용기준 마련 필요

□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란, 인공지능 기술의 한 유형으로서 방대한 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임.

○ 특히 많은 수의 매개변수(parameter)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프로그래밍되지 아니한 새로운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스스로 나타나는 '창발적 특성'을 지님.[208]

○ LLM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LLM은 일상부터 학술연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은 GPT-4(Open AI), PaLM2(Google DeepMind), LLaMA2(Meta AI), Claude(Anthropic) 등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연구과제 수행 시 LLM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들 기관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출연금 및 정부수탁 과제의 수행 중 LLM 구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총 약 6억 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8) Brown, Tom B., Benjamin Mann, Nick Ryder, Melanie Subbiah, Jared Kaplan, Prafulla Dhariwal, Arvind Neelakantan, et al. 2020.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77 - 1901. https://arxiv.org/abs/2005.14165

<과제 수행 과정에서 LLM에 지출한 금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총 사용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14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2,558
국토연구원	23,1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119
산업연구원	688
에너지경제연구원	27,9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6,370
통일연구원	4,120
한국개발연구원	24,111
KDI 대학원	11,312
한국교육개발원	21,7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332
한국교통연구원	60,627
한국노동연구원	32,7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576
한국법제연구원	6,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38
육아정책연구소	9,7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6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25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8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8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8,237
한국행정연구원	45,52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2,407
한국환경연구원	52,678
건축공간연구원	41,077
합 계	685,48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LLM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집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LLM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불요불급한 용도로 LLM을 사용하거나 연구자 또는 연구과제별 중복구독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LLM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LLM 사용이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연구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데이터나 연구결과물 등을 LLM에 무분별하게 입력할 경우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의 일환으로 그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Open AI가 미국 연방정부의 1년 구독료를 1달러로 정하면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보안에 유의하고 이를 모델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209], Grok도 1년 6개월 간 모든 미국 연방기관의 사용료를 42센트로 제시한 점[210] 등을 고려하여 LLM 사용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용 절감 노력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

209) 2025년 8월 6일, Open AI 보도자료(Providing ChatGPT to the entire U.S. federal workforce) 참조 https://openai.com/index/providing-chatgpt-to-the-entire-us-federal-workforce/?utm_source=chatgpt.com

210) 2025년 9월 25일, 미국연방조달청(GSA) 보도자료(GSA and xAI Partner on $0.42 per Agency Agreement to Accelerate Federal AI Adoption) 참조 https://www.gsa.gov/about-us/newsroom/news-releases/gsa-xai-partner-to-accelerate-federal-ai-adoption-09252025?utm_source=chatgpt.com

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ODA 정책 개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사업 구조개편 요청(2025년 7월)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부터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이관하였음.

○ 이에 따라 2026년도 특수사업비 과제 중 하나로서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예산이 총 14억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됨.

○ 신규편성된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은 종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수행하던 6개 ODA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대부분 외부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음.

<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

1. 통합 사업운영비: 200만원
2. 외부용역비: 14억 1,800만원
 - 콜롬비아 국가기술로드맵 개발 및 첨단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자문 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억원
 - 우즈베키스탄 테크노파크 국가전략 수립 자문 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억원
 - 가나 국가 연구개발혁신 관리체계 수립 및 역량 강화 자문사업(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억 9,400만원
 - 한국-인도네시아 산업연관통계 협력사업(산업연구원) 1억원
 - 과테말라 기반 중미지역 정책교육 거점화 사업(KDI 대학원) 4억원
 - 캄보디아 국가정책연구 역량강화 사업(KDI 대학원) 3억 2,400만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새 정부 국정과제[211]에 따라 ODA에 대한 전략적 조정 강화를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ODA 사업을 통합·운영하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첫째, 본 사업은 예산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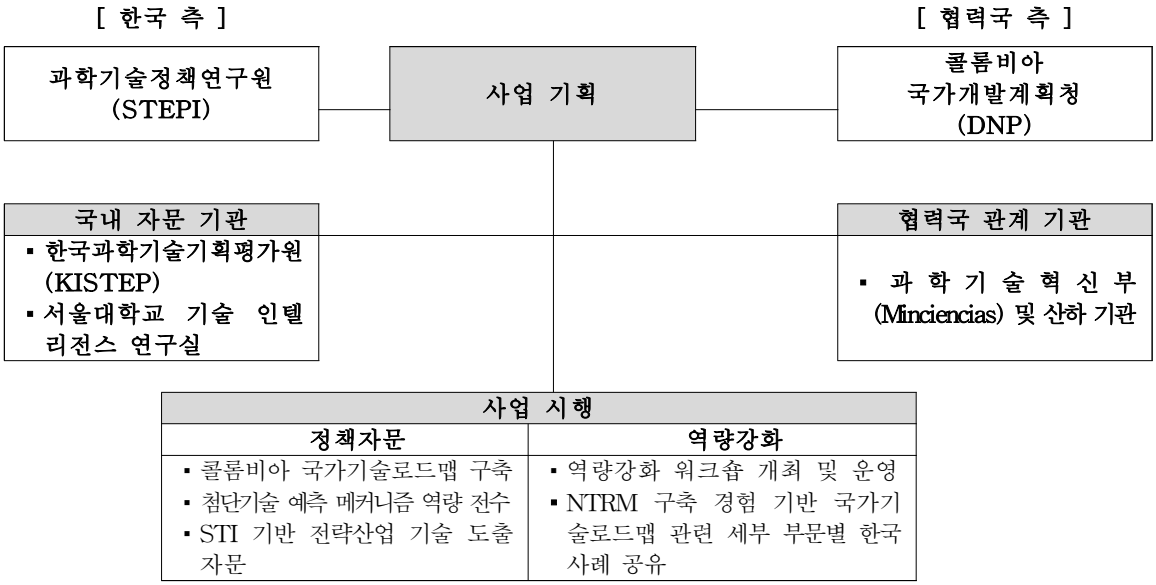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ODA 사업을 통합하여 소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만 할 뿐 사업의 기획·성과평가 등 실질적 역할 수행을 하지 않는 구조임.

예를 들어 내년도 ODA 사업 중 하나인 '콜롬비아 국가기술로드맵 개발 및 첨단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자문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할 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은 없는데도 해당 ODA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편성됨.

---

211)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콜롬비아 국가기술 로드맵 개발 및 첨단 기술 예측 전략 수립 정책 자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집행 절차>



○ 둘째,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발생임.

새로운 ODA 집행 구조하에서는 2026년부터 예산을 편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용역비로 편성된 ODA 예산을 계약당사자인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즉, 예년처럼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ODA 사업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각 기관이 사업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단순한 구조였으나, 2026년부터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ODA 사업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셋째, 일부 ODA는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KDI 정책대학원이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등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 사업(2026년도 예산안 13억 7,900만원)은 ODA임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이관되지 아니한 채 KDI 대학원의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면밀한 준비 없이 2025년 7월에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으로,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ODA를 형식적으로만 통합하였을 뿐 실질적인 ODA 사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6년에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ODA를 수행하는 예년의 방식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ODA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기획·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ODA의 기획·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조정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ODA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봄.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중복 우려 해소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은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대외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313억 4,000만원) 대비 41억 8,100만원(13.3%) 증가한 35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287억 9,9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71억 7,200만원 등임.

<2026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318	31,340	35,521	4,181	13.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6년도 기본사업비는 인건비 196억 9,100만원, 경상운영비, 37억 7,800만원, 기관고유사업비 53억 3,00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고유사업비는 23개 연구과제로 구성된 기본연구사업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연구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이 중 23개 기본연구사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고유 임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기획·심사하여 계획한 과제목록으로서 2026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3억 2,900만원임.

<2026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고유사업비 중 기본연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2026년 예산안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62
분절화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국제통화체제 변화 가능성 연구	68
AI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생산 요소 구조 변화	47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36
글로벌 산업정책 확산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42
경제안보 관점의 외국인직접투자 대응 전략 연구	62
국제통상환경의 지경학적 분석과 신통상질서 모색	78
AI 글로벌 가치사슬 경쟁력 분석과 한국의 참여전략 연구	46
미국·EU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 지형적 배경과 시사점	38
중국의 혁신 경쟁력 변화 요인 및 영향에 대한 연구	65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47
한·일 경제안전보장 협력 현황과 과제	35
한반도의 지경학 리스크 관리 전략 연구	35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발전 유형별 협력 방안	67
동남아 경제의 구조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방향	54
인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분석과 산업인력 협력 방안	54
중미 국가의 대미 수출 전진기지화: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와 제약	51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 연구	46
푸틴 5기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 개발 전략과 정책 시사점	62
국제기구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 연구	36
자국우선주의 부상과 개발협력: 주요 공여국 ODA 정책의 재편과 시사점	97
글로벌 AI 규범 수립의 과제와 한국의 정책방안	54
수시연구사업	147
합계	1,3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도 기본연구사업 중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3,600만원)는 산업연구원의 과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5년 수행한 정부수탁과제와 그 주제 및 방향이 매우 유사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소지가 있음.

○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계획한 기본연구사업은 무역(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 연구라는 점에서 2026년도 산업연구원의 기본과제인 ‘무역질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 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5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전략 검토’와 매우 유사함.

<연구과제 비교>

연구기관(실시연도)	과제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전략 검토
산업연구원(2026년)	무역질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

(자료: 전문위원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과 설립 목적이 다르므로 연구과제명만으로는 연구주제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통상협상에, 산업연구원은 산업별 통상전략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도 산업연구원의 과제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계획인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과제는 통상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는 의견임.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5년도 수탁과제는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협정(EPA)의 잠재적 발굴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2026년도 수행할 과제는 기존에 체결한 통상협정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모두 통상 관련 연구 및 정보수집을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세 연구 모두 무역(통상)환경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과 통상협정의 방향 제시는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도 해당 과제(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정책방향 연구) 예산 3,600만원은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 산업연구원: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사업 내실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산업·기술과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239억 7,300만원) 대비 62억 5,700만원(26.1%) 증가한 30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276억 1,8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33억 5,600만원 등임.

<2026년도 산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연구원	24,101	23,973	30,230	6,257	26.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산업연구원의 2026년도 특수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8억 4,700만원),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6억

3,300만원) 등 9개의 일반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산업연구원 특수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62	104	104	-	-
동아시아 진출기업을 통한 공급사슬 분석	155	105	94	△11	△10.5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	1,927	1,285	847	△438	△34.1
한-동남아정책연구협력센터	188	745	633	△112	△15.0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연구	-	300	300	-	-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방안연구	-	300	300	-	-
정보시스템및정보보호시스템	260	260	260	-	-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산업정책 체계 구축 연구	-	-	374	374	순증
정부지원사업비(산업)	-	-	444	444	순증
합계	2,999	3,437	3,356	△81	△2.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 중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212]과의 실질적이고 가시적

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실시한 사업임.

○ 구체적으로, 한-동남아 정책협력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함) 예산은 정책연구사업비 7,000만원, 한-동남아 정책지원센터 운영 3억 1,100만원, 국제세미나 사업 9,300만원, 정책다이얼로그 사업 1억 5,900만원으로 구성됨.

□ 센터는 2024년도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지연되었고, 공무원 파견 계획 역시 행정안전부의 별도정원 승인 불허로 변경되면서 2024년 12월에서야 법인 등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 부진, 예산집행율 저조, 예산 집행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의결하였음.

□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사업의 성과 저조임.

212)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산업연구원은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에 아세안(ASEAN) 측 싱크탱크와 정기적인 정책협력플랫폼(AKRD: ASEAN-ROK Think-tank Dialogue on Economic and Trade Policy)을 출범하고, 6월에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니켈 전방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다이얼로그 대화를 실시한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내년도 사업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획되어 있고, 정책다이얼로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 예산과 아세안 국가의 싱크 탱크 연사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국제세미나 예산이 각각 편성(1억 5,900만원, 9,300만원)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둘째, 예산 편성의 문제임.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여전히 사업비 항목에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약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견자의 해외근무수당 4,600만원, 자녀학비 지원 3,800만원 등을 비정규직 인건비로 편성하고, 파견자의 주택 임차료 6,500만원을 사업비의 임차료로 편성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해외파견자의 수당 등 인건비와 주택 임차료는 모두 기본

사업비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파견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기본사업비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센터에는 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1인도 각각 파견되어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본사업비 내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연구원이 국회의 시정요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 운용 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각각 예산을 이관할 필요가 있음.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1.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 재외근무수당(박사급) 4,600만원 (=$2,803×1명×12개월×1,380원/달러)
 - 가족수당 1,300만원 (배우자:재외근무수당 ÷ 4, 자녀: 1인당 $60×12개월×1,380원/달러)
 - 학비 지원 3,800만원
2. 기타수용비
 - 파견직원 보험료 200만원
3. 임차료
 -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 6,500만원

합계: 1억 7,400만원

(자료: 산업연구원)

○ 셋째, 파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산업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위원 1인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견하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내부기준에 따라 4급 상당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한 채 파견인력이 계약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함.

즉, 주택임차료의 경우, 공무원은 외교부예규인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로부터 임차료 지원 상한금액을 통보받고 있고,

2025년 기준 4급 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의 월 상한액은 $3,628, 4급 경력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월 상한액은 $3,465이고, 3급 공무원의 월 상한액도 $3,929인 데 반해, 산업연구원은 파견자에 대한 주택임차료로 월 $3,9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임차료 상한 없이 파견자가 계약한 주택 임차금액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는 동 센터에 파견 중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센터에 행정직원 1인을 파견하면서 재외근무수당 3,700만원, 자녀 1인에 대한 학비 지원 3,180만원, 주택임차료

7,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과도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지원함.

○ 넷째, 센터에는 산업연구원 직원뿐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직원도 각각 1인도 파견 중인데, 산업연구원은 이들 직원의 비자 유지를 위한 대행수수료도 2,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산업연구원은 센터의 운용 주체가 산업연구원이고 각 기관의 인력은 파견 신분이며 실무적으로 비자 대행은 모든 파견인력과 가족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므로 산업연구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파견자의 급여, 파견비용, 주택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을 각 기관이 지불하고 있다는 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순수 민간단체인데 해당 인력에 대한 비자 대행수수료를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연구원은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자 대행비용은 해당 기관이 직접 지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센터 파견인력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예산 반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156억 6,500만원) 대비 116억 5,500만원(74.4%) 증가한 27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212억 1,900만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61억 3,400만원 등임.

<202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162	15,665	27,320	11,655	74.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213]와 같은 영 별표1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중 하나로서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214]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영 제531호 부칙 제3조[215]에 따라 인가 및 신고제도 도입 전에 설치되었거나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5년 3월 보유하고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장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므로 교체할 것을 권장 받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당시 교체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올해 9월 29일에 청사 인근 케이블 사고로 순간 정전이 3회 발생하였으나, 노후화된 무정전전원

213)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14)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데이터 소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말함.

215)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존 무정전전원장치 대비 정전 대응력이 약 1/6 수준인 저스펙 장치를 임시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기능이 손실된 상태임.

□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에 따른 데이터 유실 등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이고, 현재 설치·운용 중인 배터리의 기능이 손실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 등을 감안하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예산 2억 2,600만원의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3,300만원(62.9%)이 증가한 301억 3,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통연구원	18,555	18,505	30,138	11,633	6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통연구원은 2001년 용인시의 의뢰로 ‘용인경전철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당 보고서에서 1일 평균 추정 이용수요를 13만 9천명으로 예측하였음.

○ 하지만 실제 탑승인원은 예측된 수요의 5~1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용인시는 막대한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은 올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함.

-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가 타당성 분석에 반영된 것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된 것에 따른 것임.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용인시가 주무관청임.
○ 2000. 9. 6.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인경전철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 2001. 9. 5.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 예측 결과가 포함된 용인시 경량전철 실행플랜을 용인시에 제출
○ 2004. 7. 27.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실행플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체결)
-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6,970억 원, 운영비 7,450억 원, 2008년 기준 1일 예상교통수요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30년간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이 정해짐
○ 2013. 7. 25.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변경협약 체결[216]
○ 2013. 4. 26. 용인경전철 운행 개시
- 운영 첫 해인 2013년의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약 9천 명에 불과, 2017년의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27천 명
○ 2013. 4. 11. 용인시 주민들 주민감사 청구
○ 2013. 10. 10. 용인시 주민들 주민소송 제기[217]
○ 2017. 1. 16.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3구합9299) : 각하
○ 2017. 9. 14. 제2심 판결(서울고법 2017누35082) : 각하
○ 2020. 7. 29.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63467) : 일부 파기환송 및 일부 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218]
○ 2024. 2. 14.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20누50128) : 일부 인용
- 전임 용인시장의 수요 예측 부실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연구원들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하여 214억 6,809만 5,900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사용자책임 부분에 대하여 42억 9,361만 9,180원의 주민소송 청구를 인용
○ 2025. 7. 16. 재상고심(대법원 2024두39158) : 상고기각 및 일부 파기환송[219]

(자료: 대법원 2024두39158 주민소송 사건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용인시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

---

216)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연간사업운영비보전(운임수입이 당해 분기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용인시가 부족 금액을 보조금 등으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217)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 32억 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

218) 용인경전철 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등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가능

219)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되었고, 수요 예측에 관한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개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개인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인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함.

9월 15일까지 42억 9,36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2025년 8월 5일 발송하였고,[220]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크고 별도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적립금[221]을 활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연구개발적립금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어[222]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

- 현재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 절차[223]의 최종 단계인 이사회 승인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 그런데,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지연이자의 발생[224]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노력하여 지급 재원과 시기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20) 주민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용인시는 전임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214억 6,809만 5,900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중 42억 9,361만 9,180원을 전임 용인시장과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함.

221) 연구개발적립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222)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0)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①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②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③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에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23) 현재 이사소위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기관) - 사업계획서 사무국/기평위 검토(연구회) - 사업계획서 소위 심의의결(이사소위) - 사업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이사회)

224)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225]

□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25) 이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중앙정부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지원 과제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참여를 지양하는 형태로 과제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 불확실성이 큰 연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예산·연구기간·투입연구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강화하는 등 과제 선정 절차를 보완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3. 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을 전제로 한 기관장의 국외 여비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400만원(18.1%)이 증가한 178억 9,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법제연구원	13,522	15,154	17,898	2,744	18.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은 법제도적 관점에서 AI 개발·혁신·활용 촉진 및 위험·부작용의 종합적 검토,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수집 및 활용 분야의 법적 장애 요인 해소 및 AI의 잠재적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등 규범적 규율 체계 연구하는 3개년 사업으로, 2026년도는 사업의 3차연도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① AI법제연구, ② 데이터법제연구, ③ 융합산업법제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2026년도 예산안
AI법제연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AI관련 정책 지속 추진 등 AI법제 쟁점 및 입법과제 연구	200,000
데이터법제연구	· AI 성능 향상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수집·활용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A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종합연구	200,000
융합산업법제연구	·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이후 AI가 활용되는 개별 정책 영역 및 융합 산업 등에 대한 입법 정비 방안 마련 연구	200,000
합 계		**600,000**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이 중 'AI법제연구'에서는 미국의 AI시장을 파악하고 해외 선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외여비 3,381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관련하여 법·제도·규제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스탠포드대학 HAI(Human-Centered AI)와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MOU를 추진하고 있고,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제법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운용되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국외출장 계획(안)>

○ 주관 부서 및 인원: 원장, AI·데이터법제센터(총 4명) ○ 출장목적: 연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미국의 AI 시장 파악 및 인공지능 사회적 수용 연구 선도기관인 스탠포드대학과의 네트워크 및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 출장기간: 4월(6박 8일) ○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샌프란시스코(Standford AI Lab, HAI / 구글·메타 본사 등, 상세일정 미정) ○ 출장계획(안) - 스탠포드 대학 AI Lab, HAI(Human-Centered AI) 등과의 MOU 체결 - AI 국제학술세미나 (가제) “인공지능 규제의 현황과 전망” 개최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기관장의 국외여비를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외여비 산출내역>

구분	원장	직원
항공료	7,447,000원 (7,447,000원×1명)	(연구위원) 6,984,000원(3,492,200원×2명) (부연구위원) 3,492,000원(3,492,200원×1명)
숙박비	3,220,000원 ($389×1,380원×6일×1명)	(연구위원) 3,692,000원($223×1,380원×6일×2명) (부연구위원) 1,457,000원($176×1,380원×6일×1명)
체제비	2,318,000원 ($210×1,380원×8일×1명)	(연구위원) 3,135,000원($142×1,380원×8일×2명) (부연구위원) 1,225,000원($111×1,380원×8일×1명)
기타	(여행자보험비) 160,000원 (비자발급비) 50,000원	(여행자보험비) 480,000원(160,000원×3명) (비자발급비) 150,000원(50,000원×3명)
합계	**13,195,000원**	**20,615,000원**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규정인 「교류협정(MOU)체결에 관한 예규」[226]에 따르면 협정서의 서명 권한은 원장에게 있으나, 2025년 10월 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스탠포드대학 HAI(Human-Centered

226) 제6조(협정서의 서명) ① 협정서는 원장과 체결기관의 장이 부서한다.
② 센터와 부서의 실무적 필요에 의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체결대상기관의 업무담당 책임자가 함께 서명할 수 있다.

AI)와의 MOU 체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으로 ‘국내외연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 중임(2026년도 예산 1억 4천만원).[227]

- 해당 사업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MOU 체결을 위한 출장비용은 ‘국내외연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국내외연구네트워크구축사업 주요 사업내용>

□ 관·산·학·연 신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외연 확장
 ○ 학계,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을 포함한 법제연구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교류 추진 및 협력 활성화
 ○ 국내외 법제관련 연구자·학자·실무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전문가 초청 포럼, 공동연구 등 연구교류 확대
□ 국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 구축
 ○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의 법제 관련 연구 동향 조사
 ○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성과확산 및 국제교류 활동 벤치마킹
 ○ MOU 체결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을 통한 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가 입법정책에의 기여를 위한 입법동향 및 긴급현안 조사

227) 기관고유사업의 연구지원사업 중 하나임.
<연구지원사업>

(단위: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7건	1,331,000		
1	법령번역사업	360,000	1.1.~12.31.	국제협력본부
2	국내외연구네트워크구축사업	140,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3	연구기획평가사업	202,300	1.1.~12.31.	기획경영본부
4	연구성과확산사업	185,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5	한국법교류협력사업	245,700	1.1.~12.31.	국제협력본부
6	법제정보아카이브운영사업	135,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7	청년인턴	63,000	1.1.~12.31.	기획경영본부

○ 국회 및 정부부처의 입법수요와 법제현안과제 등 파악 및 도출 ○ 연구보고서, 외국법제정보, 입법동향 분석자료 등 유관부처에 배포 ○ 정부 각 부처와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는 입법자료 제공 □ 법제현안에 대한 공동학술행사 개최 ○ 법제처, 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 입법연구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및 입법정책 연구 발전 모색 ○ 법제연구 성과 공유 및 지속적인 교류 네트워크 강화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은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의 여비 중 MOU 체결을 전제로 한 기관장의 국외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382억 7,800만원) 대비 90억 8,200만원(23.7%) 증가한 47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로 구성된 기본사업비에 395억 9,700만원,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로 편성된 특수사업비 82억 9,500만원 등임.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855	38,278	47,360	9,082	23.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1)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수행방식 변경 검토 필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특수사업비 중 일반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

(19억 2,000만원), ‘재정패널 DB구축사업’(18억 5,300만원)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특수사업비 중 일반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지원사업비	-	-	1,920	1,920	순증
공공기관 연구사업	887	912	912	-	-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	139	135	135	-	-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960	445	784	339	76.2
아태재정협력사업	260	247	267	20	8.1
재정성과평가사업	290	223	273	50	22.4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481	660	500	△160	△24.2
세정연구사업	606	417	547	130	31.2
민간 및 정부투자 정책분석	288	178	110	△68	△38.2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178	300	300	-	-
조세교육 운영사업	280	550	400	△150	△27.3
재정패널DB 구축사업	1,889	1,653	1,853	200	12.1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294	294	294	-	-
합계	6,552	6,014	8,295	2,281	37.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사업으로 미래 재정부담의 주체인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목적의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을 2022년부터 수행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억원이 편성됨.

□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가 활용비 500만원, 외부용역비 2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사실상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구조임.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의 세부 편성내역>

1. 전문가 활용비 - 위탁관련 외부 회계감사 400만원 - 사업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00만원 2. 외부용역비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억 800만원 - 대학생 활동지원비 2,000만원 - 행사 대행비 2,800만원 - 발대식 900만원 - 멘토링 워크샵 3,600만원 - 최종심사 및 보고회 2,500만원 - 상금지급 2,100만원 - 결과보고서 제작 400만원 - 기타 관리비 등 4,400만원 합계: 3억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와 같은 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 첫째, 정부가 사실상 출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예산액의 대부분을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NSI(舊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띰.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3억원의 예산 중 2억 9,500만원이 외부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 편성 내역도 예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교부하는 것[228]으로서,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 및 이자액의 반납의무 등이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과 연장평가, 실적보고, 엄격한 교부절차 등 법정 통제장치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우회하여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둘째, 본 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조세와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용역비로 지출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할 근거가 미약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사업에서 '국민과의 지식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기반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에서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그 목적에 불과함.

228) 송병철 외 4인,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2. p.3

○ 셋째, 출연금 예산 중 약 1억 800만원은 위탁수행기관 소속의 책임연구원 등의 인건비로 편성[229]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가 민간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결과를 가져옴.

□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은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내용을 위탁하더라도 출연금을 받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조세교육운영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사업으로 조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양과 바람직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하여 2023년부터 '조세교육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4억원이 편성됨.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사업, 함께하는 세심교실(체험형 교육),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예년과 달리, 약 1,200만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외출장 예산을

2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NSI 소속 연구원 8명의 8개월치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음.

‘중등 자유학기제 맞춤형 조세교육사업’의 교재 제작과 ‘초등 함께 하는 세심교실 조세교육사업’의 교육교재 설명회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변경한 계획안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한 사업 추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1억 6,400만원(48.2%)이 증가한 312억 6,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05	21,103	31,267	10,164	48.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북중미 지역에 물류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2026년도는 사업의 2차연도로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① 글로벌 물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컨퍼런스 운영, ②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③ 북중미 진출 물류기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2026년도 예산안
글로벌 물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컨퍼런스 운영	· 한미 해운조선물류협력 컨퍼런스(연 1회)	102,211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 북중미 물류동향 분석(한미 연구진 공동, 연 1편) · 북중미 물류정보지(현지 전문가 중심, 월 1회 총 12편) · 북중미 물류시장 이슈 연구(연 2편) · 북미 국적물류기업협의회 운영(반기별 1회)	151,549
북중미 진출 물류기업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북미 공급망 지도 제작 및 리스크 관련 DB 구축 · 국내 북미 물류시장 진출 방향 세미나	72,240
합 계		**326,0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이 중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에는 총 1억 5,1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중미 물류시장 주요 동향에 대한 한미 연구진의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북중미 물류공급망 정책 및 시장 동향 연구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수용비	사무용품비,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제작, 복사비	10,48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료	600
여비	국외출장 여비	34,014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특근매식비, 학회/컨퍼런스 등록비	6,050
전문가 활용비	물류공급망 이슈 원고자문	15,000

구 분	세부 내용	2026년도 예산안
회의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5,4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국제공동연구	80,000
합 계		151,54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을 출장지로 하는 60일의 장기 국외출장을 계획하였는데, 미국 전역에 분포된 우리 제조 및 물류 기업 본사 및 거점 등 방문,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 등 개최, 공동연구 점검 및 집중 회의를 위한 것임.

<국외출장 계획(안)>

○ 출장기간: 1회 장기출장, 총 2개월(60일)
○ 출장지: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 남부)
- ① 동부(뉴욕/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조지아), ② 서부(LA), ③ 중부(시카고), ④ 남부(텍사스)

○ 출장내용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 총 2회)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지난 9월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출장을 수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에 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 이민국의 한국기업 단속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축소(60→30일)하고, 장기체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회에 걸쳐 미국 동부·

서부 지역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 계획을 변경하며, 방문이 어려운 일부 지역 또는 물류현장 관련 현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국외출장 변경(안)>

구 분	기존(안)	변경(안)
출장 기간	- 1회 장기출장, 총 2개월(60일)	- 2주씩 2회 분할 출장, 총 1개월(30일)
출장지	- 미국 전역(동부, 중부, 서부, 남부) ·①동부(뉴욕/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조지아), ②서부(LA), ③중부(시카고), ④남부(텍사스)	- 미국 동(남)부·서부 중심 ·①동(남)부(뉴욕/뉴저지, 애틀란타), ②서부(LA) * 업무수행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중부 지역(시카고 등)은 출장지역에서 제외
출장 내용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 총 2회)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	- 현지 한국기업 공급망 및 물류 애로사항 파악 - 국제컨퍼런스 개최(1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세미나(서부·동부·동남부 총 3회) · 최근 1~2년 한국기업 투자가 집중된 동남부(애틀란타) 등 지역 세미나 개최 추가 * 공동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보고서 집필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수행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출장계획 변경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변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한국환경연구원[230]: 지구환경정보센터의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억 8,200만원(32.2%)이 증액된 302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액 요인은 PBS제도 폐지에 따른 인건비 증액(65억 9,600만원)과 Post 미세먼지·기후위기 시대의 딜레마, 고농도 오존 대응전략(2억 1,500만원),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성 평가 방안연구(2억 1,500만원) 등의 신규편성임.

<2026년도 한국환경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환경연구원	20,956	22,900	30,282	7,382	32.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0)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2) 검토의견

□ 지구환경정보센터 사업은 해외환경정책 정보 수집·분석·공유,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국내 환경법제, KEI 연구성과 및 국제협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사업비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	39	39	39	39	-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지구환경정보센터는 최근 3년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을 살펴보면, 지구환경전문가 인력교류 및 포럼 개최, 한국환경연구원의 영문홈페에지를 통한 영문정보·자료 제공, 「Global Environmental Issues」, 「해외환경정책동향」 각 연 2회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지구환경정보센터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 내역
2022	- 국제 환경 트렌드 및 주요국 환경정책 동향 파악·분석 - 해외환경정책동향 등 지구환경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 - 지구환경전문가포럼 운영을 통한 지구환경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 **KE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환경 법제 관련 영문정보·자료 제공**

연도	사업 내역
2023	- 해외 환경정책동향 정보 수집·분석 및 KEI 간행물 「해외환경정책동향」을 통해 해당 정보 공유·확산 - **영문 간행물 「Global Environmental Issues」 발간**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글로벌 환경 현안에 관한 지식 및 의견 공유 - **지구환경전문가포럼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환경 현안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 의견 교환 - **KEI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환경 법제 관련 영문 정보·자료 제공**
2024	- 내외 환경정책동향과 이에 관한 전문적 분석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영문 간행물인 「Global Environmental Issues」 발간(2회)** - 글로벌 환경 현안과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해외환경정책동향」 발간(2회)** - **'지구환경포럼'(4회)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환경 현안 및 연구 동향에 관한 **전문가간 의견 교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KEI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이용자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법제 관련 정보·자료 제공**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설명자료)

□ 연구회의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 중 연구지원사업은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번역, 간행물 발간 등을 하는 사업이고, 일반사업은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정부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연구기관 연구사업 구분>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

구분	내용
	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2006년부터 실시해온 계속 사업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정책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간행물의 주기적 발간을 통해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확산함으로써 연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지구환경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이 아닌 기관고유사업내 연구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지업 사업 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합계	총 8 건	648,079	
1	학술 및 정보교류 사업	63,000	○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류 확대** ○ **정보교류 활동 및 지원**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 **주요 환경현안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및 협력사업 추진 도모**
2	연구사업관리	51,000	○ 연구성과 향상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 실시 ○ 연구성과 평가결과 피드백 제도 운영으로 연구결과물 평가 및 추진성과 분석 ○ 연구윤리 자체검증체계 강화 체계 운영 등
3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90,079	○ **국제기구, 해외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유럽, 북미, 동남아지역 관련 기관 등)** ○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연구성과 확산 지원 (KEI 영문 홈페이지, 영문 뉴스레터 연계 등)**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4	연구기획사업	121,548	○ 연구사업 기획을 위한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 환경정책연구사업 계획 마련 ○ 연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워크숍 실시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과제 발굴 및 추진 ○ 정부 정책 수립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현안대응형 수시과제 발굴 및 추진
5	연구성과확산사업	74,502	○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언론 모니터링·홍보, 연구원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원 홍보 강화 ○ **환경정책(학술지), 환경관련 기획도서 등 간행물 발간 등 국내외 환경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 연구성과 홍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환경분야 정책 논의 활성화에 기여
6	정보자료운영	62,138	○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자료 구독 및 통합검색 제공 ○ 전자도서관을 통한 소장자료 및 발간물 전자원 문 제공 ○ 구독 자원 이용 활성화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공
7	전산운영	91,812	○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 KEI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활용성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행정 업무수행 환경 마련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보안 취약점 등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유실 방지와 데이

구분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개요
			터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연구성과물을 비롯한 KEI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
8	청년인턴	94,000	○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준비자의 정규직 취업 촉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률 제고에 기여 ○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제공 등으로 인턴직원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문 의 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담당	(6788-5111) (6788-51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담당	(6788-5109) (6788-5114) (6788-5115)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계획에 관한 검토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계획과 그 의의

□ 2025년 6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증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가 밝힌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증원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및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과 비상임위원[231]을 각각 1명 증원(전체 위원: 9인→11인)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계획>

(단위: 명)

증원 합계	고위공무원 가급	9급(상임위원 비서)
2	1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비상임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원을 증원하여 사건처리를 위한 심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임.

231) 비상임위원은 직제 개정사항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연간 평균 1,374건에 불과하였던 사건이 최근 5년에는 평균 2,495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상임위원은 증원되지 아니하여 최근 5년 기준 평균 소회의 심의 대기기간도 약 219일에 달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을 증원하여 경쟁, 카르텔, 기업거래, 소비자 부문의 4개 심의 분야로 운영할 계획임.

<소회의 평균 심의 대기기간(구술안건기준)>

(단위: 일)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5년)
평균 대기기간	89.1	69.2	84.2	113.4	183.4	107.6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5년)
평균 대기기간	234.2	229.5	208.0	251.5	173.8	219.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둘째, 상임위원 증원과 더불어 심판관리관 소속에 심판기능을 보좌하는 인력을 15명 증원하고 카르텔심판담당관을 신설하며, 송무 담당 인력을 4명 확대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심판보좌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카르텔심판담당관(신설)	+10	+1	-	+5	+2	+2
기업거래심판담당관	+5	-	+1	+3	+1	-
송무담당관	+4	-	-	-	+2	+2
합계	+19	+1	+1	+8	+5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과중한 심결 보좌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기존의 경쟁심판담당관에서 담합사건의 심의를 전담하는 카르텔심판담당관을 독립시키고,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의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가 2010년~2019년 17.2%에서 2020~2024년 24.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소송의 난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셋째,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으로서 하도급(기술유용) 분야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산업하도급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을 증원함.

또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하여 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여, 그 소속으로 종전의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의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거래조사과로 정규화하여 배속시키고, 대리점거래조사과를 신설하며 유통거래조사과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고위나	4급	4·5급	5급	6급	7급
신산업하도급조사과(신설)	+5	-	-	-	+3	+2	-
하도급조사과	+6	-	-	+1	+3	+2	-
기술유용조사과	+10	-	-	-	+5	+4	+1
가맹유통심의관(신설)	+1	+1	-	-	-	-	-
가맹거래조사과(신설)	+7	-	-	+1	+3	+2	+1
유통거래조사과	+1	-	-	-	+1	-	-
대리점거래조사과(신설)	+11	-	+1	+1	+4	+3	+2
합계	+41	+1	+1	+3	+19	+13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넷째, 시장감시국 소관으로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현행 전자거래감시팀을 전자거래감시과로 정규화하는 등 총 34명의 인력을 증원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5급	5급	6급	7급
전자거래감시과(신설)	+7	+1	+2	+2	+2
서비스업감시과	+5	+1	+2	+2	-
제조업감시과	+7	-	+4	+3	-
지식산업감시과	+11	-	+6	+4	+1
약관특수거래과	+4	-	+3	+1	-
합계	+34	+2	+17	+12	+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섯째,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이 다수 발생하는 카르텔조사국의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 서비스카르텔조사과로 격상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5급	5급	6급	7급
서비스카르텔조사과(신설)	+6	+1	+2	+2	+1
제조카르텔조사과	+4	+1	+1	+2	-
입찰담합조사과	+4	-	+2	+2	-
국제카르텔조사과	+3	-	+1	+1	+1
합계	+17	+2	+6	+7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여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분석을 위하여 경제분석 인원을 증원하고 조사 업무 전반의 경제분석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카르텔조사국 산하 경제분석과를 폐지하고, 경제분석담당관을 신설하여

조사관리관에 배치함.

또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포렌식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신설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경제분석담당관(신설)	+18	-	+2	+12	+2	+2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신설)	+19	+1	-	+2	+8	+8
합계	+37	+1	+2	+14	+10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하면 내년도 조사·심판 인력증원 소요는 총 150명이고,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는 2025년 예산 561억 5,200만원보다 13.2% 증가한 635억 4,400만원임.

○ 다만, 정기 직제(3월)를 통해 인력증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신규 채용 등 실제 증원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원되는 인력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반영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인력증원 계획>

(단위: 명)

분야	조직 (현 편제 기준)	주요 기능(증원인력 기준)	증원규모
심판	심판관리관 등	위원회 심의(심판) 수행	+17
		소송수행 등 송무 수행	+4
	소 계		+21
조사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사건처리	+41
	시장감시국	공정거래·소비자 사건처리	+34
	카르텔조사국	담합(카르텔) 사건처리	+17
	소 계		+92
지원	경제분석과	경제분석	+18
	조사총괄담당관	디지털포렌식분석	+19
	소 계		+37
총 계			+1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증원에 따른 직급 변화>

구 분		합계	정무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기존	정원(명)	647	2	16	12	36	48	212	184	84	27	19	7
	비중(%)	100	0.3	2.5	1.9	5.6	7.4	32.8	28.4	13.0	4.2	2.9	1.1
증원(명)		+150	-	+2	-	+3	+10	+64	+47	+23	-	+1	-
직급조정(명)						+4	-4						
변경	정원(명)	797	2	18	12	43	54	276	231	107	27	20	7
	비중(%)	100	0.3	2.3	1.5	5.4	6.8	34.6	29.0	13.4	3.4	2.5	0.9

* 기타 : 별정직(1), 전문경력관(5), 기록연구관(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증원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증원계획은 사건처리의 장기화라는 그간의 비판을 고려하여 심판·조사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인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232]을 개정하기 전에는 예산 증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상임위원의 증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한 업무 성격과 함께 다른 위원회 조직의 위원 정수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정부 부처 중 위원회 조직의 위원 정수>

(단위: 명)

부처명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체 위원 정수
공정거래위원회	5	4	9
금융위원회	8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7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4	7
원자력안전위원회	2	7	9
국가인권위원회	4	7	11
국민권익위원회	7	8	15

232)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둘째,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정원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한 증원이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정원은 647명인데, 정원의 약 23%에 달하는 150명의 인력을 갑자기 증원함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증원계획에 따르면 5급 64명, 6급 47명, 7급 23명 등 실무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무원 채용 절차나 부처 간 인력교류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직급의 공무원을 단기간에 대규모 증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원이 원활하게 충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충원하더라도 업무 전문성의 약화 또는 조직 융화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셋째,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장기화의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만 진단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잦은 순환보직 등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제도의 개선 논의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포렌식 전담인력의 경우 수사기관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수준으로 포렌식 전담인력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유사 기관의 포렌식 전담인력>

기관명	포렌식 전담인력
공정거래위원회	33명 (14명에서 19명 증원계획)
대검찰청	41명
경찰청	31명
서울지방국세청	55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증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규제 인력의 증대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 규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우려도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증원 규모의 타당성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카르텔조사국 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00만원(19.6%) 증가한 1억 6,500만원이 편성됨.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행태개선, 입찰질서의 공정화, 경제분석의 운영·지원 및 담합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80.6%) 증가한 15억 2,100만원이 편성됨.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23.4%) 감소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3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2	138	165	27	19.6
카르텔 환경개선	738	842	1,521	679	80.6
·카르텔 행태개선	196	190	140	△50	△26.3
·입찰질서 공정화	145	144	827	683	474.3
·경제분석운영	400	458	450	△8	△0.02
·담합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	50	50	100	50	100.0
·경제분석지원	-	-	5	5	순증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351	△23.4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672	1,192	853	△339	△28.4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3	305	255	△50	△16.4
·해외상생협력사례조사	4	4	-	△4	순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	43	43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기업협력정책관 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 증가(16.3%)한 9,300만원이 편성됨.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800만원(56.9%) 증가한 26억 9,600만원임.

<2026년도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2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8	80	93	13	16.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094	1,718	2,697	978	56.9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652	1,551	2,529	978	63.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574	62	52	-	-
・공시위탁운영	100	105	105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및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은 사건조사 업무에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관리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를 탐색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기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소(△ 2%)한 9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조사관리관실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만원(1.0%) 증가한 2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등 3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	1,877	1,877	순증
・포렌식 지원	-	-	169	169	순증
・포렌식 장비확충	-	-	1,692	1,692	순증
・포렌식 교육	-	-	16	16	순증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9	961	942	△19	△2
・장비확충	766	758	671	△87	△11.5
・유지보수	173	173	241	68	39.3
・포렌식 교육	30	30	30	-	-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87	198	200	2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음.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4,4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 증액된 6억 3,700만원을 편성함.

그런데 2026년도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 안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공간 임차 보증료 명목으로 1,27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됨.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 각각 ‘경제분석지원’(500만원) 내역사업과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4,293만원) 내역사업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그런데,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는 이미 주요 시장 및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분석운영(4억 5,000만원)’ 내역사업이 있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도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활동 지원을 위해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8억 5,300만원)’ 내역사업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 각각 신규로 신설되는 두 내역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내의 기존 내역사업과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의 재구축 명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7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 임차료와 임대보증금을 1,060만원 편성함.

○ 또한, 신규 편성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포렌식조사관의 여비 지급, 장비확충,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인데, 이미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포렌식 장비확충 및 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역시 포렌식 조사관의 출장여비 등을 편성하고 있음.

<동일 목적의 사업을 분산하여 편성한 사례>

<table>
<tr><th colspan="3">사업명 및 예산</th></tr>
<tr><td colspan="2">카르텔 환경개선</td><td>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td></tr>
<tr><td colspan="2">-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6억 3,700만원
- 경제분석운영 4억 5,000만원: 연구원 인건비, 여비, 사업추진비, 연구용역비
- 경제분석지원 500만원(신규): 여비, 사업추진비</td><td>-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업무공간 임차료 770만원(신규)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공간 임차보증료 500만원(신규)</td></tr>
<tr><td colspan="2">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td><td>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td></tr>
<tr><td colspan="2">-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개발비 4억 8,900만원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8,600만원</td><td>-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임차료 560만원(신규)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임대보증금 500만원(신규)</td></tr>
<tr><td>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신규)</td><td>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td><td>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td></tr>
<tr><td>- 포렌식조사관 국내여비 1억 6,900만원
- 포렌식 장비확충 16억 9,200만원
- 포렌식 교육1,600만원</td><td>- 포렌식 장비확충 (6억 7,100만원)
- 포렌식 교육(3,000만원)</td><td>- 포렌식조사관 국내여비 5,760만원
- 포렌식조사관 국외여비 530만원
- 포렌식 조사관 업무추진비 280만원</td></tr>
<tr><td colspan="3">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td></tr>
<tr><td colspan="3">-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6,610만원: 조사계획서 인쇄비, 현장조사비, 조사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비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700만원(신규): 심사보고서 인쇄비, 현장조사비, 조사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비</td></tr>
</table>

(자료: 전문위원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조사국과 기업협력정책관실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각각 편성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모두 용역 사업수행자가 상주할 공간에 대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 관련 예산인데,

이는 정부안 편성과정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고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청사 내 용역 사업수행자가 상주할 사무실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외부 임차를 위한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함.[233]

□ 동일한 세부사업('카르텔 환경개선' 및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내에서 서로 다른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사례 역시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기존 내역사업은 모두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증액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한편,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에 분산하여 편성한 포렌식 장비 예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직제 개편으로 증원될 인력이 사용할 수집용·분석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고, 종전 사업(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은 포렌식 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용권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233) 실무적으로 정부안 편성 시 사업비 편성을 먼저 완료하고 기본경비를 편성하기 때문임.

위의 사업들에 대해 제시한 것처럼 정부안 편성과 직제 개편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사업에 편성되었다는 의견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관련 사업은 같은 목적의 예산인데도 다른 프로그램[234]에 각각 편성할 경우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임.

○ 특히 행정부가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편성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모두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려는 사업이라는 점, 두 사업에 편성된 교육 예산은 동일한 전문교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실익도 적음.

○ 장비확충 예산의 경우 오히려 하나의 사업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234) 기본경비는 모두 '7000 공정거래 행정지원' 프로그램이고,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은 '1200 경쟁촉진',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은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 개선' 프로그램임.

전문교육 예산도 매년 2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편성인바 기존 인력과 증원 인력을 나누어 실시할 실익은 적음.

<최근 3년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현황>

일정	장소	교육과정	수료인원	교육시간 (이수시간)
2023. 4. 17. ~ 4. 19. 10. 10.~10. 12.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스크포렌식(Encase, EnScript) 분석, 클라우드 포렌식, 시나리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모바일포렌식 획득, 분석, 최신 주요기술 사례	12	24
2024. 8. 19. ~ 8. 21.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스크포렌식(Encase, X-Ways) 활용 / 모바일포렌식 획득, 분석심화	13	24
2025. 9. 30. ~ 10. 2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기법, Encase, Autopsy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잔디/팀즈/슬랙/클라우드/VDI 탐색 및 수집기법, 최신 디지털포렌식 사례 및 판례	15	2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은 각각 ‘카르텔 환경개선’,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으로 이관하고, 같은 세부사업 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편성한 신규 내역사업 예산은 기존 내역사업으로 이관하며, 신규로 편성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으로 통합하는 한편, 포렌식 조사관의 여비는 종전처럼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3.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인력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및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	1,877	1,877	순증
·포렌식 지원	-	-	169	169	순증
·포렌식 장비확충	-	-	1,692	1,692	순증
·포렌식 교육	-	-	16	16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사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2013년 1명의 민간전문가를 충원한 이후 2017년 이래, 14명 체제로 운영 중이고 각 조사관은 모두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직급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근무 중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현황>

직급/직위	근무기간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8.02.07.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20.04.06.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23.02.01.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0.07.20.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03.13.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03.13.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12.18.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1.15.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9.09.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9.30. ~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2014년 도입 당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외부 인력이 지원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장점 때문으로 보임.[235)]

□ 다만, 근무 인력의 신분 불안에 따른 근로 의욕의 저하 가능성, 조직 확대 계획에 따른 인력 추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운용에 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계속 조달하여 최신 조사기법이나 장비 운용 기술의 전파 등 효과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조사총괄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중 상당수가 근무 기간 5년 이상의 장기근무자인데,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임용령」[236]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예외

---

235)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36)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적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5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무 인력의 상당수는 성과가 탁월하더라도 계약해지 가능성에 따른 불안이 있고 정기적으로 계약 갱신도 하여야 하므로 조직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맹점도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일부 조사인력으로부터 신분 안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인력 운용의 방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역량 증대라는 목적으로 19명의 포렌식 전담인력을 추가함으로써 총 33명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역량의 강화 및 최신 조사기법의 도입 등 포렌식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증원 추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포렌식 조사인력을 일반임기제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함께 인력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함.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전담인력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전담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동 사업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 포렌식 조사관 전문교육 명목으로 각각 1,600만원(총 3,200만원)의 예산은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는 포렌식 전문가양성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 교육(서울대학교) 명목으로 교육 파견 인력 1명분의 예산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검찰청 직무 교육으로 실시 중인 포렌식 수사 과정(1주)에도 연간 2명 내외의 인력을 파견 중임.

○ 그러나 포렌식 조사관 전문교육은 운용 중인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등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교육이고, 서울대학교 위탁 교육은 장기교육훈련이므로 교육 이수 후 의무복무 규정이 적용되는바 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이며, 검찰청 직무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물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등을 위하여 총 16억 9,200만원을 자산취득비(430-01) 편성하였는데,

이 중 1억원은 포렌식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아닌 개발비 명목으로 편성한 것 인바, 이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 비목을 신설하고 1억원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4. 카르텔 환경개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등을 상시 감시하여 카르텔을 예방·적발·시정하고, 입찰담합 감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담합사건을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며, 주요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여 경쟁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80.6%) 증가한 15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카르텔 환경개선	738	842	1,521	679	80.6
·카르텔행태개선	184	190	140	△50	△26.3
·입찰질서공정화	142	144	827	683	474.3
·경제분석운영	366	458	450	△8	△1.8
·담합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	46	50	100	50	100.0
·경제분석지원	-	-	5	5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입찰질서공정화”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300만원 증액된 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237]는 공공부문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입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입찰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등 효율적인 담합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

<시스템 구축 경과>

연도	내 용
2006	□ 입찰상황판(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구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되는 50억 이상 공사, 25억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정보 수집

237)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	내 용
2009	□ 연계기관 추가 확대 - 입찰정보 연계기관을 조달청 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보유 11개 공기업까지 확대(총 12개 기관)
2018	□ 시스템 고도화 - 입찰유형별 평가지표 및 투찰이력분석 등 도입 - 수집 대상 입찰정보 확대(물품·용역 입찰 5억 → 1억 이상) - 입찰정보검색기능 탑재, 입찰정보 연계방식 개선 등 시스템 활용성 및 유지관리성 제고
2021	□ 연계기관 추가 확대 -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한전KDN, 신규 연계 기관 추가로 총 16개 기관 입찰정보 연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 공공자산처분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238]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입찰담합 감시 범위를 기존 구매입찰에서 판매입찰까지 확대하고(구매→구매+판매), 분석 정확도 및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0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1) 온비드 연계
- 현행 시스템은 구매입찰정보만 수집·감시하였으나 판매입찰(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까지 감시범위 확대 추진
  * 판매입찰정보와 구매입찰정보는 데이터형식이 상이해 판매입찰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필요

(2) 기능개선

238)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됨(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최종 투찰 결과만 수집되는 現 시스템을 개선해 유찰 시 기존 입찰 정보까지 정보수집 대상을 확대
- 발주기관 간 상이한 물품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물품군 통합 기능 개선
- 반복되는 입찰에서 참여자가 번갈아 낙찰받는 패턴의 유무 및 정도, 입찰참가자의 주소지 간 거리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등

(3) G 클라우드 전환
-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상 추진 일정>

구분	1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능개선 및 평가지표 고도화	■	■	■	■								
클라우드 이전	■	■										
ONBID 연계 및 담합징후 분석 확대				■	■	■	■	■	■	■		
감리		■	■	■	■	■	■	■	■	■		

※ 과업 기간 등은 추후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 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239)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240)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만 40

2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40)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제안서 제출/가격입찰→제안서 제출일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평가→가격평가→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 적격자 통지→협상 실시(우선 순위 협상 대상자)→협상

일 이상(긴급한 경우 10일 이상) 소요[241]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상당 시간이 필요함.

- 참고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상계약의 표준행정소요일수는 89일, 목표행정소요일수는 69일임.[242]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과업심의위원회[243]의 심의를 거친 후 발주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성립→(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낙찰자 선정→계약 체결

24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4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표준행정요소일수 등) ① 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협상계약 부분만 발췌)

계약방법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목표행정소요일수	비고
경쟁계약	국내입찰	협상계약	89일	69일	

24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카르텔환경개선 등: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리관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각 지방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카르텔환경개선” 세부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400만원(13.5%) 감소한 64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카르텔환경개선 등 11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카르텔환경개선	373	842	1,521	679	80.6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738	3,470	2,111	△1,359	△39.2
사익편취 행태개선	356	402	321	△81	△20.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351	△23.4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1	138	165	27	19.6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95	231	202	△29	△12.6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28	211	574	363	172.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96	348	78	△270	△77.6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2	87	89	2	2.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0	81	81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27	118	133	15	1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리관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각 지방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 인지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이때 제출되는 심사보고서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244]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각 회의에 제출과 동시에 피심인에게도 송부됨.[245]

---

24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24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및 심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위원회 구성원(3~9명) 및 피심인 모두에게 종이문서 형태로 제출 및 송부되고 있으며,[246] 이에 따라 매년 심사보고서 인쇄비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음.

- 2024년 심사보고서 인쇄비 집행액은 4억 7,310만원이고, 2025년에는 3억원(9월 기준)이 집행되었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조사 분야의 대규모 인력 증원을 예정하고 있는 바, 조사 인력의 증원으로 직권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의 인쇄비 집행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2026년 조사 부서와 각 지방사무소의 심사보고서 관련 인쇄

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6)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심사보고서 분량은 수백~수천 페이지(첨부자료 포함)에 달하고, 담합사건의 경우 한 사건에 2개~30여개 피심인이 포함되며 각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음.

비는 2025년 예산 3억 5,609만원 대비 5,183만원(14.6%) 증액된 4억 792만원이 편성되었음.

<일반수용비 중 심사보고서 관련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 현황>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19,200천원	・심사보고서 인쇄비: 19,200천원
기업거래결합 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하도급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63천원 ・유통·대리점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00천원 ・가맹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545천원 ・기업결합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00천원	・하도급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3,000천원 ・유통법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3,000천원 ・대리점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500천원 ・가맹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500천원 ・기업결합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6,200천원
카르텔환경개선	・카르텔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00,200천원 ・입찰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78,000천원	・카르텔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8,000천원 ・입찰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16,400천원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심사보고서 인쇄 등: 20,000천원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천원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0천원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천원
사익편취 행태개선	・심사보고서 등 유인비: 37,050천원 ・사익편취 사건처리 관련 인쇄비: 10,672천원	・심사보고서 등 유인비: 48,300천원 ・사익편취 사건처리 관련 인쇄비: 11,776천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쇄비: 22,000천원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조사관련 인쇄비(봉투포함): 9,000천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쇄비: 16,000천원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조사관련 인쇄비(봉투포함): 9,000천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심사보고서 인쇄비: 17,000천원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심사보고서 및 기타자료 인쇄비: 27,000천원	・심사보고서 및 기타자료 인쇄비: 27,000천원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심사보고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인쇄비: 2,000천원	・심사보고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인쇄비: 2,000천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심사보고서 인쇄비: 3,360천원	· 심사보고서 인쇄비: 5,040천원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인쇄비 및 유인비: 2,000천원	· 인쇄비 및 유인비: 2,000천원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
합 계	3억 5,609만원	4억 792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토대로 재작성)

□ 최근 3년간의 심사보고서 등 조사 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0억 5,700만원 중 95.7%(10억 1,180만원)가 2개의 인쇄업체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업체별 인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말	합 계
A업체	203,135	321,125	204,981	729,241
B업체	54,509	132,196	95,864	282,569
C업체	24,532	19,786	-	44,318
D업체	964	-	-	964
합 계	283,140	473,107	300,845	1,057,0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도태로 재작성)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중 건당 500만원 초과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비고
A업체	2023-04-04	심사보고서 인쇄 비용	7,868	
	2023-06-19	인쇄비 지급	6,174	
	2023-09-01	심사보고서 인쇄비	8,467	
	2023-10-24	심사보고서 등 인쇄비 지급	9,739	
	2023-12-19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8,316	
	2023-12-21	인쇄비(심사보고서 등)	6,007	
	2023-12-27	인쇄비(심사보고서)	6,325	
	2024-01-30	심사보고서 인쇄비	9,392	
	2024-02-21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5,310	
	2024-04-01	심사보고서 인쇄비 지급	5,315	

구 분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비고
	2024-04-08	심사보고서 인쇄비	8,789	
	2024-04-08	주요 사건 자료집 인쇄비	5,225	
	2024-07-16	심사보고서	8,582	
	2024-08-13	심사보고서 인쇄비 지급	5,862	
	2024-08-13	심사보고서	5,766	
	2024-12-13	심사보고서 인쇄비	6,144	
	2024-12-13	심사보고서 인쇄비	6,289	
B업체	2023-10-23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등)	9,903	
	2023-12-22	인쇄비(심사보고서 등)	5,015	
	2023-12-22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5,808	
	2024-08-28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5,753	
	2024-11-20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10,791	
	2024-11-21	심사보고서 소갑자료 인쇄비	7,414	
	2024-11-21	심사보고서 인쇄비	16,918	
	2024-11-22	인쇄비 지출(심사보고서)	16,280	
C업체	2023-11-28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21,032	
총 합(26건)			218,4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도태로 재작성)

○ 인쇄업체 두 곳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다년간 꾸준히 거래하여 업무 이해도가 높고 품질 등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고, 심사보고서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은 사건 및 기업에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업체에 분산하여 맡길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하지만, 심사보고서 인쇄비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연중 계속해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라는 점에서, 소수의 업체에 한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보안과 품질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여러 업체를 활용하는 등 집행의 다변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인쇄비 절감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에 구축하고자 하는 전자심의시스템[247]을 활용하여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집행이 소수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7) 2026년도 예산안에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04)

6.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 및 신산업 분야인 온라인 플랫폼 등 ICT 분야에 대한 상시·체계적 감시를 통해 거래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5,900만원(39.2%) 감소한 21억 1,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738	3,470	2,111	△1,359	△39.2
・독과점시장행태개선	131	129	227	98	76.0
・신고포상금제도운영	1,465	3,200	1,751	△1,449	△45.3
・ICT분야 경쟁법 집행 역량 강화	142	141	133	△8	△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4,900만원(45.3%)이 감소한 1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산출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32억원	**17억 5,1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 제도 홍보비: 50,000천원 □ 보상금(310-03) : 3,150,000천원 ○ 신고포상금: 3,15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1,000천원 ○ 제도 홍보비: 41,000천원 □ 보상금(310-03) : 1,710,000천원 ○ 신고포상금: 1,710,000천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2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보상금제도로 처음 도입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 추가되면서[248] 현재는 총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249]

248)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보상금제도 운영(20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2005.4),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추가(2015.8.), 하도급법위반행위 추가(2016.12.),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추가(2017.10.), 가맹거래법·대리점법위반행위 추가(2018.7.),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추가(2021.5.)

249)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신고·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됨. 또한,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조치수준,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산정되고,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

<14가지 행위 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신고포상금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2025년 9월말 기준)>

(단위: 건수,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합계)	지급건수	31	43	67	37	10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153,565
	예산액	2,130,000	3,130,000	3,350,000	3,000,000	3,150,000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건수	6	9	17	14	4
	지급액	2,186,000	2,486,220	3,214,290	897,757	1,142,63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지급건수	4	3	17	5	2
	지급액	7,200	892	75,385	2,550	4,730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지급건수	2	2	2	-	-
	지급액	650	300	300	-	-
부당한 지원행위	지급건수	2	2	-	1	-
	지급액	148,300	573,700	-	470,450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급건수	1	1	2	-	1
	지급액	400	6,120	20,270	-	800
사원판매행위	지급건수	-	-	2	-	-
	지급액	-	-	1,900	-	-
미등록다단계	지급건수	1	-	1	-	-
	지급액	1,000	-	250	-	-
사행적판매원	지급건수	-	-	-	-	-

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확장금지	지급액	-	-	-	-	-
대규모유통업법	지급건수	-	1	1	1	-
위반행위	지급액	-	51,955	31,760	17,238	-
하도급법	지급건수	-	-	-	-	1
위반행위	지급액	-	-	-	-	4,000
총수일가	지급건수	-	-	-	-	-
사익편취행위	지급액	-	-	-	-	-
가맹거래법	지급건수	15	24	22	13	2
위반행위	지급액	9,950	38,295	7,600	24,300	1,400
대리점법	지급건수	-	1	3	2	-
위반행위	지급액	-	500	9,760	700	-
기업집단 지정자료	지급건수	-	-	-	1	-
제출의무 위반행위	지급액	-	-	-	1,6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3년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153,565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액(비중)	2,186,000 (92.9%)	2,486,220 (78.7%)	3,214,290 (95.6%)	897,757 (63.5%)	1,142,635 (99.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모도 크게 산정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법 위반행위의 경우,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포상금 대상 행위 유형의 신고 사건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4	5	8	2	1
	부당한 공동행위	94	96	62	117	7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3	68	36	32	22
	불공정거래행위	104	102	101	105	91
방문판매법		16	16	17	18	15
하도급법		413	449	518	622	375
가맹사업법		139	179	153	131	92
대리점법		18	16	18	13	20
대규모유통업법		8	8	2	13	6
부당한 공동행위 제외한 타 유형의 합계		745	843	853	936	622

* 공정거래법 행위 유형 중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행위는 제외함

** 2021~2024년: 통계연보 기준, 2025.9월은 잠정수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타 유형의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25	34	50	23	6
지급액	167,500	671,762	147,225	516,838	10,9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법에서 명시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그런데,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법령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측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까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타 법령에 비하여 제외 대상의 범위가 넓음.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관련 규정>

구분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제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관련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저조한 실적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위반행위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250]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도급 분야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음.

○ 참고로, 국회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고포상금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251]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50)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보다는 직장인 사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카르텔 업무 설명회 등 전문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51) 정무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2025년 8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사건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

7.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의 운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23.4%) 감소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351	△23.4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672	1,192	853	△339	△28.4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3	305	255	△50	△16.4
・해외상생협력사례조사	4	4	-	△4	순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	43	43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으로 편성된 8억 5,300만원 중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의 편성 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2,300만원(전용회선비) ○ 공사비: 600만원 ○ 자산취득비: 9,2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5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 가맹정보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축된 시스템임.

○ 이후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업무는 2012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됨.[252)253)]

2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53) 2018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탁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임시로 방화벽을 해제하여 원격으로 업무망에 접속하고, 문서 작업 시에도 DRM[254](디지털 저작권 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등 보안에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안 위험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접근방식은 기존 GVPN[255](정부원격근무서비스,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으로 우회하여 가맹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던 형태에서 PC로 직접 접속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임.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 또한 가맹정보시스템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시스템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용 시스템 현황>

구분	운영	사용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공정위	(업무망) 공정위, 조정원, 지자체(서울·부산·인천·경기) (외부망) 가맹본부 등 대민 공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시스템	공정위	조정원, 피평가 기업, 평가위원, 대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4) 개별 파일을 암호화해 권한 없는 사용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255)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 행정기관 소속직원이 국·내외 출장지,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에서 행정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 접속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GVPN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므로, 가맹정보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으로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가맹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사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표준약관 교육,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900만원(△18.9%) 감액된 14억 5,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예산안은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강화에 따라 2억 7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6년 1월 22일 구축 완료 예정으로 구축비 6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운영비 2억 5,9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4억 100만원이 감액 되었음.

<2026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389	1,792	1,792	1,453	1,453	△339	△18.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37	1,792	1,792	1,792	567	196	-	1,453
· 소비자의날 행사	43	83	83	83	3	-	-	43
·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11	11	10	-	-	18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37	41	41	41	20	-	-	45
· 특수ㆍ전자거래 인식개선	40	40	40	40	30	-	-	20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150	150	150	150	3	-	-	150
·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154	40	40	40	20	-	-	40
· 표준약관 교육	11	11	11	11	7	-	-	11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5	29	29	29	7	-	-	29
·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61	181	181	181	12	-	-	388
·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47	50	50	50	20	-	-	50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92	-	-	-	-	-	-	-
·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	60	61	61	61	41	-	-	55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25	10	-	-	25
·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40	40	-	-	-	-
·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189	189	189	189	94	-	-	189
·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0	56	56	56	35	-	-	56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3	76	76	76	38	-	-	54
·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	38	40	40	40	-	-	-	11
·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9	9	9	9	1	-	-	9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	660	660	660	457	196	-	25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회의개최 주기에 따른 감액필요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은 ICPHSO[256],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257], UNCTAD 전자상거래 주간 회의[258] 등의 국제회의 참가,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또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된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 예산	추경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3	76	76	76	38	-	-	54
- 일반수용비 (210-01)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 (210-14)	32	50	50	50	-	-	-	32
- 국외업무여비 (220-02)	89	22	22	22	-	-	-	20
- 사업추진비 (240-01)	1	3	3	3	-	-	-	1
- 국제부담금 (340-02)	30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6) ICPHSO(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 1993년에 설립된 보건 및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국제포럼

257)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산하에 설치된 국제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및 규제 강화에 협력하는 국제기구

25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법규, 규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사업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함.

<2026년도 예산안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산출내역서>

(단위: 백만원)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4
- 국제회의 등록비[259] : 0.9*1명=0.9
-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참여: 3.9*1회*2명=7.8
- UNCTAD 정례회의 : 3.9*1명*1회=4
-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 42*1회=42**
  · **국외여비: 9**
  · **일반용역비: 32*1식=32**
  · **사업추진비: 1**

(자료: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소비자정책 협력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주기로 주최하는 소비자정책 당국자 간의 국제회의로, 2025년 9월에 AI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다음 회의는 2027년에 있을 예정임.

259) 국제회의(ICPHSO*) 참가를 위한 등록비용

〈최근 5년간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장소	예산 및 집행액	참석자	주제
2021	9.28.	엘타워	37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온라인 위해제품과 소비자 안전 등 논의
2023	9.8.	엘타워	32	공정위 사무처장,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소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이슈 및 협력방안 등 논의
2025	9.11.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50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AI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논의

(자료: 공정거래위위원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260]에 한국대표로 3인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260)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소비자정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3국간 MOU를 체결(2006.11.)함. MOU에 따르면,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24년에 한국에서 개최하였으므로, 2026년 중국, 2028년 일본, 2030년 한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10년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개최국	집행액	참석자(인원)	주제
2016	7. 7. ~ 8.	한국	42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261](2), CCA[262](2) (일본) CAA[263](5), NCAC[264](2) ※ 국내 학계 및 소비자단체 100여명	· 3국간 소비자정책 및 최근 현황 정보교류 · 3국간 소비자피해 발생정보의 공유수준 및 방법 등
2019	12. 11. ~ 13.	중국	3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1), CCA(6) (일본) CAA(1), NCAC(6)	· 초국경 거래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
2021	12. 6.	일본 (온라인)	-[265]	(한국) 공정위(2), (중국) SAMR(2), CCA(1) (일본) CAA(4), NCAC(1)	· 코로나시대의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 · 국경간 법 집행 협력과 소비자 분쟁해결 등
2024	9. 4.	한국	38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2), CCA(1) (일본) CAA(6), NCAC(2) ※ 국내 학계 및 소비자단체 80여명	· 한중일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 한중일 소비시장 트렌드 및 국경 간 협력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61)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262)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263)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264) 일본국민생활센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265)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이 온라인회의(Zoom)으로 주최함.

○ 2026년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 한국대표 3인이 참석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국외여비 6백만원임.

<2026년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가 관련 필요예산 내역>

항목	산출근거	소요예산
국외업무여비	· 항공운임: (900천원×2인)+(1,800천원×1인): 3,600천원 · 일비: (30$×3일×2명)+(35$×3일×1명): 285$ · 식비: (44$×3일×2명)+(58$×3일×1명): 438$ · 숙박비: (106$×2박×2명)+(130$×2박×1명): 684$	6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2026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5,400만원은 3,500만원(일반용역비 3,2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수정의견>

2026년도 예산안		수정의견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4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9
- 일반수용비(210-01)	1	- 일반수용비(210-01)	1
- 일반용역비(210-14)	32	- 일반용역비(210-14)	-
- 국외업무여비(220-02)	20	- 국외업무여비(220-02)	17
- 사업추진비(240-01)	1	- 사업추진비(240-01)	1

□ 또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회의 개최 주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수당 과다편성 등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266]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소비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현실화 및 대면평가 강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66)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소지바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181	181	12	-	-	388
- 일반수용비 (210-01)	88	88	88	88	6	-	-	215
- 임차료 (210-07)	-	-	-	-	-	-	-	15
- 일반용역비 (210-14)	20	40	40	40	-	-	-	80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3	3	-	-	3
- 포상금 (310-03)	50	50	50	50	-	-	-	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음[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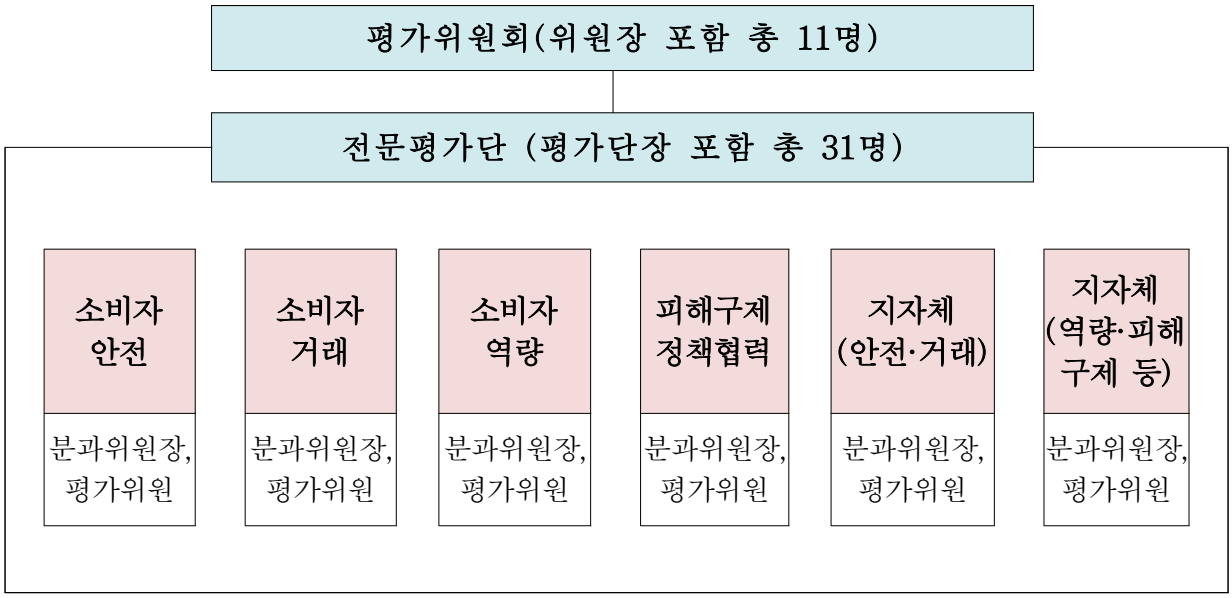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절차와 일정을 총괄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추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267)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155개 과제에 대해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 ~ 2026)」에 따른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2025년에 평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음.

전문평가단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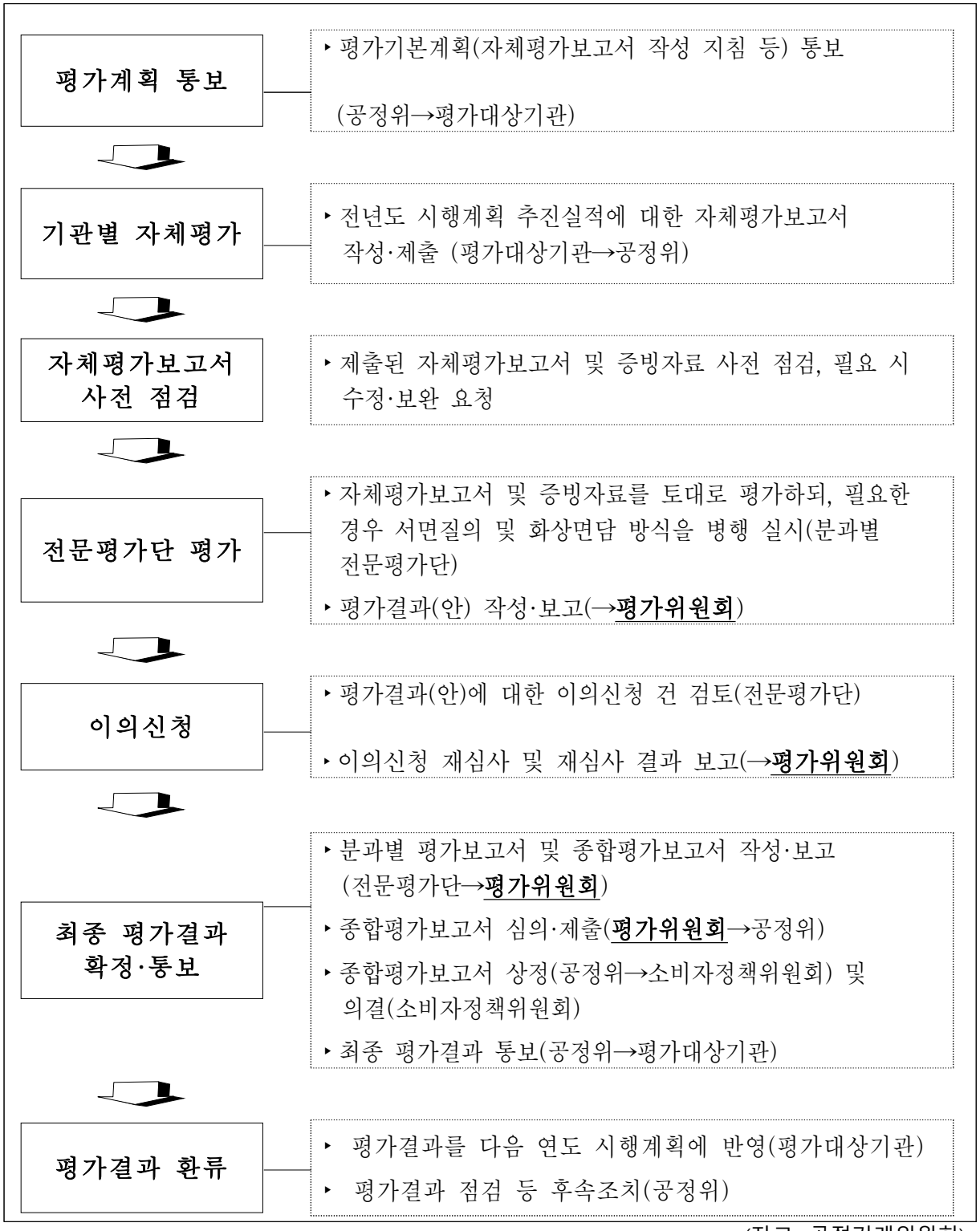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전문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전문평가단은 6개 분과 총 31명(평가단장 포함, 각 분과별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평가체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세부 주요 절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평가위원 및 전문평가단의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500만원, 대면(화상) 평가 수당 3,100만원, 평가내용 컨설팅 1,250만원,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산출내역서>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181	388
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 서면평가 수당: 190개*5명*0.05=47.5 - 평가서 작성 수당: 190개*0.05=9.5 - 평가보고서 작성 수당: 7명*1=7 -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35개*0.05=2	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 서면평가 수당: 157개*5명*0.1=78.5 - 평가서 작성 수당: 157개*0.05=7.8 - 평가보고서 작성 수당: 7명*1=7 -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100개*0.05=5 - 대면(화상) 평가 수당: 31명*2일*0.5=31 - 평가내용 컨설팅: 5명×0.5*5회=12.5
나. 평가위원회 회의 및 교육 - 평가회의 참석수당(평가위원회): 8명*4회*0.12=4 -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명*2회*0.2=12 - 자료인쇄비, 회의비 등: 4회*1=4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40*1회=40 - 추진실적 평가회의 및 업무협의: 0.02*25명*2회=1	나. 평가위원회 회의 및 교육 - 평가회의 참석수당(평가위원회): 8명*3회*0.3=7.2 -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명*5회*0.2=31 - 자료인쇄비, 회의비 등: 6회*1.7=10.2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40*2회=80 - 추진실적 평가회의 및 업무협의: 0.02*25명*2회=1 - 임차료 등 대관비: 3회*3=9
다.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행사준비(자료 등): 1회*2=2 -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 오찬: 0.02*100명*1회=2 - 포상금: 10*5개사례 = 50	다.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행사준비(자료 등): 2회*5=10 - 임차료 등 대관비: 2회*3=6 -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 오찬: 0.02*100명*1회=2 - 우수사례집 및 기관장 인터뷰 홍보 책자 발간: 500부*0.03=15 - 포상금: 5*15개사례 = 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6년 예산안에 이의제기[268] 재심사 건수를 100건을 설정하여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최대 33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은 15.8건에 불과하므로, 300만원 감액이 필요함.

<2026년도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100개*0.05=5	33개*0.05=2

<최근 5년간 이의제기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의제기 건수	33	18	19	2	7
재심사 결과	수용3건, 일부수용 6건, 불수용 24건	수용4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 12건	수용1건, 일부수용 10건, 불수용 8건	일부수용 2건	재심사 대상 없음*

* 2025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신청서 검토 결과 재심사 대상 과제가 아니라 판단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68) 자체평가결과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평가단의 평가의견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행정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안)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둘째, 2026년도 예산안에 전문평가단의 평가회의 횟수를 5회로 설정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문평가단의 평가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평가단 워크숍(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이의신청 접수 검토 등을 위해 2회 ~ 3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1,240만원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수당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31명*5회*0.2=31	31명*3회*0.2=18.6

<최근 5년간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개최 내역>

연도	일시 및 방식	내역 및 참석자
2021년	2. 25. ~ 26.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 25. 10명, 2. 26. 9명
	4. 22. ~ 27. 대면회의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7명
	5. 18. 대면회의	③ 제2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 평가결과(안) 검토 및 확정 - 참석자: 7명
2022년	2. 24. ~ 25.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 24. 21명, 2. 25. 10명

연도	일시 및 방식	내역 및 참석자
	5. 12. ~ 13. 대면회의 토즈 수서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5분과 21명, 6분과 5명 참석
	5. 24. 화상회의	③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추가)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6분과 추가 회의) - 참석자: 4명
2023년	2. 22. 대면회의 2. 28.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22. 수)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추가워크숍(화상, 2.28) - 참석자: 31명
	5. 9. ~ 10. 12. 대면/서울지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5분과 19명, 6분과 5명 참석
2024년	2. 26, 2. 29. 대면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26/29. 이비스명동 19층)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6일 11명, 29일 15명
	5. 9. ~ 10. 대면/서울지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 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22명
2025년	2. 27., 3. 5. 대면회의 화상 병행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 27. ~ 3. 5. 서울지원)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 2. 27. 서울지원 대면 26명, 2. 28. 화상 4명, 3. 5. 서울지원 대면 1명
	5. 7.~ 12. 대면/서울지원 화상 병행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 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25명(대면 23명, 화상 2명)
	7. 16. ~ 18. 서면회의	③ 제2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이의신청 접수 검토내역 - 참석자: 11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셋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과 관련한 연구,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평가운영, 세부평가지표 개선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동 용역비를 활용하여 2022년부터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개선을 위해 실적이 부진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정책컨설팅을 시행해 오고 있음[269]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는 평가내용 컨설팅 수당으로 5명의 전문평가단원이 5회의 컨설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1,250만원을 신규로 편성[270]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정책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와 중복되므로,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 8,000만원 중 1,250만원 감액이 필요함.

<2026년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 평가내용 컨설팅: 5명×0.5*5회=12.5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40*2회=80**	- 평가내용 컨설팅: 5명×0.5*5회=12.5 -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27.5*1회+40*1회=67.5**

269) (2022년도) 5개 지자체 → (2023년도) 6개 지자체 → (2024년도) 8개 지자체 → (2025년도) 7개 지자체

27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컨설팅을 중앙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4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2	40	40	20	2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 **(5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2. 11. ~ 12.)
2023	40	20[271]	20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용역 **(6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3. 8. ~ 12.)
2024	40	40	20	20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연구 **(8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4. 5. ~ 12.)
2025	40	40	40 (집행예정)	-	2025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7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5. 4. ~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넷째,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2022),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연구’(2024)은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272].

271) 평가위원 수당 부족으로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7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

□ 따라서,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3억 8,800만원은 이의제기 재심사수당 300만원, 전문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1,240만원,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일반용역비 1,250만원 등 총 2,79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01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를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합계	388	**합 계**	360.1
- 일반수용비(210-01)	215	**- 일반수용비(210-01)**	199.6
- 임차료(210-07)	15	- 임차료(210-07)	15
- 일반용역비(210-14)	80	- 일반용역비(210-14)	-
- 사업추진비(240-01)	3	- 사업추진비(240-01)	3
- 일반용역비(260-01)	-	**- 일반연구비(260-01)**	67.5
- 포상금(310-03)	75	- 포상금(310-03)	75

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3)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내역사업인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은 표시·광고 사건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성 여부 및 정도를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및 실증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25	10	-	-	25
- 일반수용비 (210-01)	25	25	25	25	10	-	-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 인식조사에 2,000만원, 실증자료 전문가 자문비 500만원으로 2,500만원 전액을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 소비자 인식조사: 2회*10=20
 - 실증자료 전문가 자문 1회*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소비자 인식조사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소비자 조사 용역을 ㈜한국리서치 등 전문 설문조사 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연도	예산 비목	집행 금액	소비자 인식조사 내역	수행기관	계약기간
2021	210-01	11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소비자 조사」용역	㈜한국리서치	2021. 11. 24. ~ 12. 31.
	210-01	14	「법률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용역	㈜한국리서치	2021. 11. 25. ~ 12. 31.
2022	210-01	14	e커머스 멤버쉽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2. 11. 25. ~ 12. 31.
	210-01	10	스마트폰 표시,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2. 11. 25. ~ 12. 31.
2023	210-01	10	라돈 저감 페인트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3. 10. 10. ~ 11. 8.
	210-01	9	광고대행사의 후기광고 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3. 10. 23. ~ 11. 23.
2024	210-01	10	온라인 유료구독 서비스의 상품 가격표시 방식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4 1. 26. ~ 2. 29.
	210-01	3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2024 9. 30. ~ 10. 11.
	210-01	10	브랜드 로고 숫자 표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2024 10. 15. ~ 11. 2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은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고,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적용범위>

□ **일반수용비(210-01)**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등

○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

□ **일반용역비(210-14)**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따라서,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이 아닌 설문용역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용역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동 플랫폼 구축이 2026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구축비 6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운영비 2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억 100만원이 감액된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10.)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660	660	660	457	196	-	259
-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259
- 일반연구비 (260-01)	-	660	660	660	457	196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결혼 및 적립식 여행 등을 위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및 재화 등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 수 및 가입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업체 수	84개	75개	73개	79개	78개
가입자 수	636만명	684만명	729만명	833만명	892만명
선수금	58,838억원	66,649억원	74,761억원	83,890억원	94,486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단위: 개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	합계
폐업업체 수	16	41	8	-	3	3	1	7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동 사업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당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안)>

소비자	사업자	정부(공정위・지자체)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확인 ○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 시장상황・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	○ 경영・재무정보 제출・관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관리 ○ 선수금 등 정보 제출・관리	○ 시장 현황・통계 관리 ○ 법 위반내역 관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4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하였고, 2025년에 제한경쟁 방식으로 에스큐아이소프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25. 10.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계약자	계약방식	계약기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ISP	200	114	114	㈜아던트	제한경쟁	2024. 3. 22. ~ 2024. 6. 20.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53	457 (선금)	에스큐아이 소프트 (주)	제한경쟁	2025. 6. 25. ~ 2026. 1. 2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전자정부법」 및 시행령[273]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

273)**「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리 대상임에도 별도로 감리용역비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제안요청서에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등 감리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53p>

ㅇ 정보시스템 감리
①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274]”에 의거 하여 별도의 감리 절차는 진행 하지 않는다.**

(자료: 나라장터)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플랫폼의 감리용역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의 낙찰차액 670만원과 자체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감리용역 및 할부거

27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고시로「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래법 개정[275]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플랫폼 구축 계약 기간[276]을 2026년 3월 ~ 4월로 연장한 후 기간 내 감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의 사업의 주요 기능은 소비자의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등으로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또는 예치금의 정보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법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등의 정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및 제36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의 정보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동 정보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277]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202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통합 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 플랫폼 구축 완료 전까지 감리용역을 실시하

275) 제22대 국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13446호, 제2213855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276)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계약 기간: 2025. 6. 25. ~ 2026. 1. 22.
277)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31p.

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 수집·제공 및 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6년 예산안은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12개월 운영비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4개월분의 운영비 8,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3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합계	259	합 계	173
- 관리용역비(210-15)	259	- 관리용역비(210-15)	173

9.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00만원(6.4%) 증가한 2억 9,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90	281	299	18	6.4
・운영비	47	46	50	4	8.7
・직무수행경비	243	235	249	14	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78]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279] 토대로 재작성)

27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공정거래위원

□ 이 중 서울사무소의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1,800만원이 증액[280]되었는데, 증액의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의 현행화에 따른 것임.

○ 각 지방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편성되어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81]의 특정업무경비를 내역변경[282]하여 집행하였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각 지방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5년간의 집행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정원 대비 결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결원 상태를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서울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복리후생비 산출내역>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비고
특정업무경비	2억 160만원	240,000원×12월×**70명**	
복리후생비	340만원	50,000원×**70명**	단수조정 (△1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토대로 재작성)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280) 특근매식비 39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1,310만원 증액

281) 코드: 일반회계 7011-200

282)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396)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서울사무소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85	83	82	82	83
현원	74	69	69.5	72.5	7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지방사무소별 민원접수건수와 사건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방사무소의 업무가 2021년 14,906건에서 2024년 19,810건으로 4,904건(2021년 대비 32.9%) 증가하는 등 지방사무소의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민원접수건수 및 사건처리건수>

(단위: 건)

소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서울	민원접수건수	9,573 (70.8%)	8,470 (68.4%)	10,246 (71.4%)	14,257 (76.8%)	7,380 (80.2%)
	사건처리건수	628 (45.2%)	575 (47.6%)	675 (47.8%)	637 (51.2%)	502 (55.7%)
부산	민원접수건수	1,250	1,175	1,319	1,509	641
	사건처리건수	188	250	291	223	164
광주	민원접수건수	934	1,098	1,065	936	389
	사건처리건수	202	132	172	160	99
대전	민원접수건수	953	858	917	934	325
	사건처리건수	218	136	127	109	67
대구	민원접수건수	806	774	812	929	467
	사건처리건수	154	116	147	116	69

* ( ): 당해 전체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건수 및 사건처리건수 중 서울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특히, 서울사무소의 업무량은 같은 기간 4,693건 증가하여 전체 지방사무소 증가분의 약 95.7%를 차지하고 있음.

- 즉, 지방사무소 업무 증가의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에 상당수의 결원이 존재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1년	85	74	26	22	21	20	19	16	18	15
2022년	83	69	27	27	21	20	18	17	18	16
2023년	82	69.5	26	24	21	18	18	17	18	18
2024년	82	72.5	26	26.5	20	18	18	18	18	17
2025년	83	75.5	26	26.5	19	17	18	18	18	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비고
			조사인원	비조사인원 283)	
서울	83	75.5	77	2.5	* 조사인원 중 4인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음 (4인은 수습근무 중임).
부산	26	26.5	26	0.5	
광주	19	17	17	-	
대전	18	18	18	-	
대구	18	18	1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사무소의 규모가 타 지방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휴직·파견 등 일시적 인력 상황에 따

283) 서울: 비서 1인, 운전직 1인, 기록물관리 임기제 0.5인
부산: 기록물관리 임기제 0.5인

라 정·현원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하지만, 수년간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운용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바탕으로 한 정원의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가급적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가 있음.

10. 심판관리관실·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국외업무 여비의 집행 계획 철저 수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각각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책국의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각각 전년 대비 6,300만원(19.3%) 증가, 200만원(△0.5%) 감소한 3억 8,800만원, 3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2개 부서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심판관리관실	549	325	388	63	19.3
경쟁정책국	378	376	374	△2	△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챙국은 각각 부서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국제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반영하고 있음.

○ 심판관리관실의 2026년도 국외업무여비는 1,7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경쟁정챙국의 국외업무여비는 1억 2,800만원으로 2025년(1억 3,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다른 부서와 달리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책국은 예산 편성 시 계획하였던 국외업무여비 집행과 실제 집행 내역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리관실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ICN 참석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단 한 차례도 ICN 참석을 한 적이 없고, 경쟁정책국 역시 매년 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행사는 집행하지 아니함.

○ 또한, 경쟁정책국은 매년 ICN 연차총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출장 인원에 장관급 인력을 포함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제 집행시에는 장관급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 국제행사의 실시 및 참석 여부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예산 편성 시점에는 다음연도의 행사 참석 여부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가

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편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공정거래지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홍보, 직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운영’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100만원(7.9%) 증가한 12억 4,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1.294	1,157	1,248	91	7.9
·공정거래정책알리기	546	548	654	106	19.3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4	158	142	△16	△10.1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299	116	116	-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64	△7	△9.9
·청년인턴 운영	230	264	272	8	△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예산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내역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원(19.3%) 증가한 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1억 3,500만원을 뉴미디어 매체 홍보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대부분(8,000만원)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약 8,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는데, 대부분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2024년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홍보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콘텐츠명	인플루언서	예산			
		예산	집행	조회수	게시일
선넘은 거래(10편)	조수연 (코미디언)	15	15	23만	5~11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이제 그만!(6편)	유튜브 서울신문	24.2	24.2	19.5만	3월
될성부른 프랜차이즈(4편)	홍석천	49.9	49.9	54만	11월
공정동행(6편)	MC 김우진			2만	12월
공정위 사용설명서(2편)	아나운서 정승조			0.2만	12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역시 대부분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음.

<2025년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홍보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콘텐츠명	인플루언서	예산			
		예산	집행	조회수	게시일
전국퀴즈자랑(6편)	MC 김우진	1.4	1.4	16.5만	9~11월
유튜브 숏드라마 '공정한 패밀리G'(총13편 2편 게재)	조지훈(감독)	26	20	10만	11~12월
웹툰 '공정거래위원회' (총 8편 예정)	엄국수 (웹툰 작가)	7.5	3.0	-	11월 게재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관 또는 정책의 홍보를 연중 고르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연말에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홍보 예산을 집중하여 집행할 경우 그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봄.

(2)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내역사업에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파악,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 진단 등의 목적으로 매년 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는 외부고객(민원·사건 처리 만족도, 정책만족도)과 내부고객(만족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가장 최근의 만족도 조사 결과(2024년)에 따르면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73.1점, 정책만족도 76.5점, 내부만족도 80.8점임.

□ 이 중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사건처리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지방사무소 중 지속적으로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의 결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연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022	60.7	56.6	67.6	78.1	73.7
2023	61.5	63.7	68.8	66.1	68.2
2024	60.3	65.1	66.4	78.0	7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사무소의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민원·사건서비스의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임.

○ 민원·사건서비스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게 형성되기 어렵고,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가 높을수록 신속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일면 타당성이 있음.

〈연도별 지방사무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22년				2023				2024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서울	494	84	578	575	491	217	708	675	498	107	605	637
부산	135	60	195	250	137	157	294	291	166	36	202	223
광주	89	50	139	132	111	74	185	172	131	24	155	160
대전	89	35	124	136	74	75	149	127	76	16	92	109
대구	84	22	106	116	68	77	145	147	66	45	111	116
계	891	251	1,142	1,209	881	600	1,481	1,412	937	228	1,165	1,24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사무소의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업무량에 비례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주관한 컨설팅 회사의 결과보고서에서도 서울·부산·광주 사무소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만큼 이들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및 평가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지방사무소별 직원 현황〉

구분	관할구역	직원수(명)	개소일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74	2005. 12. 19.
부산	부산, 울산, 경남	26	1990. 8. 2.
광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8	1990. 8. 1.
대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8	1990. 7. 31.
대구	대구, 경북	17	1992. 4. 2.

12.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신규로 68억 4,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	6,842	6,842	순증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	6,842	6,842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국회는 행정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민원인의 행정 편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를 신설[284]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 전반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해당 조문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 일정을 고려하여 2027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시행 예정인 해당 조문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본 사업을 편성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20억 1,000만원,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비용 6억 7,400만원,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

284)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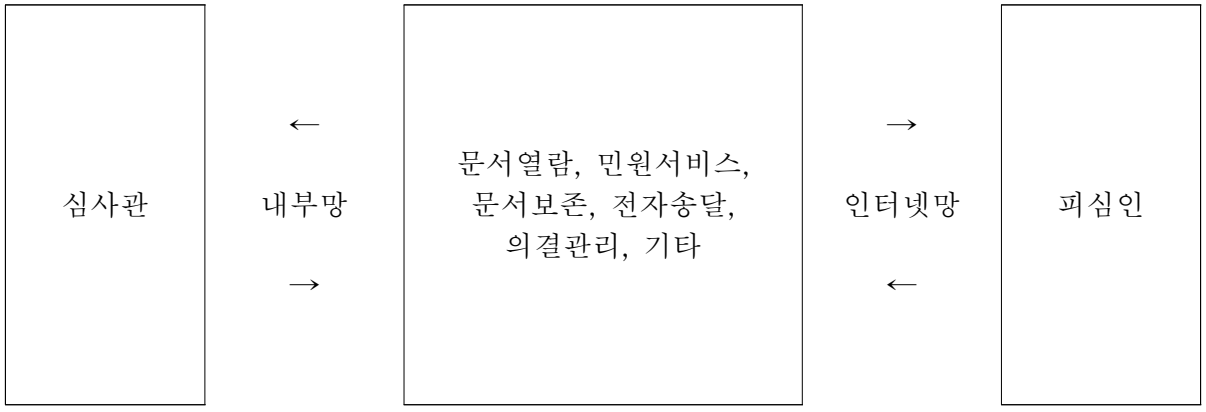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비용 5억 5,4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35억 5,600만원, 조달수수료 4,800만원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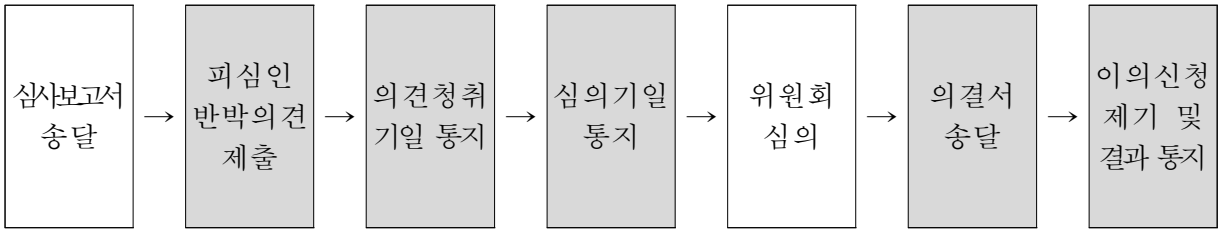
□ 전자심의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의결서 송달까지 생산·접수되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심의를 받는 사업자도 관련 문서를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원의 전자소송, 행정심판위원회의 전자행정심판, 특허심판원의 전자특허심판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축될 예정임.

〈전자심의시스템의 주요 기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업무절차와 전자시스템의 활용 예〉



※ 음영은 전자심의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절차를 말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세부 구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심의업무의 디지털화와 검색기능의 고도화로서 피심인에게 심의 일정과 현황, 결과 등을 통합 제공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 제출 및 송달 확인 등의 기능을 구현하며, 유사 심결례 검색 등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온라인 문서 송달을 통해 문서 수·발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문서의 무결성·진본성 등을 확보함.

○ 셋째, 심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넷째, 현재의 대민서비스 기능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통합테스트를 거쳐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7년 2월)에 맞추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 착수의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일정이 다소 촉박하므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개통 예정일(2027년 2월)로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 정보화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찰이나 설계 기간의 변동이 잦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1차연도 구축사업의 착수가 1년(2024년 5월 → 2025년 5월)이나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차연도 고도화 사업도 순연되면서 일반연구비 등 32억 3,6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음.

대법원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과업기간의 변경 및 집행률 저조에 관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음.

○ 다음으로, 목표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시스템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 잦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사업도 당초 118개 행정심판기관의 통일된 적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28개

행정심판기관이 배제된 채 개통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말까지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부터 개통까지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13.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6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됨.

□ 2026년도 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7,800만원(6%) 증가한 601억 1,8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571억 4,600만원과 자체수입 29억 7,2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7,800만원(6%) 증가한 601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 396억 1,300만원, 사업비 144억 4,800만원, 운영비 46억 2,300만원, 예비비 14억 3,400만원으로 구성됨.

□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안전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및 시험평가 설비 고도화 사업비 증액 등임.

<2026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55,564	56,740	60,118	3,378	6.0
정부출연금	52,842	53,696	57,146	3,450	6.4
자체수입	2,722	3,044	2,972	△72	△2.4
□ 지 출	54,681	56,740	60,118	3,378	6.0
인건비	37,642	37,950	39,613	1,663	4.4
사업비	12,723	12,885	14,448	1,563	12.1
운영비	4,316	4,517	4,623	106	2.3
예비비	-	1,388	1,434	46	3.3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1)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제품·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신유형·신기술 및 국민 다소비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의 정보 대응력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안전 사각지대 제품 위해성 평가 사업 신설 및 노후 시험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사유로 전년 대비 10억 3,300만원(18.9%) 증액된 6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470	6,503	6,503	1,033	18.9
- 소비자안전	2,450	2,755	2,755	305	12.4
- 시험검사	3,020	728	728	728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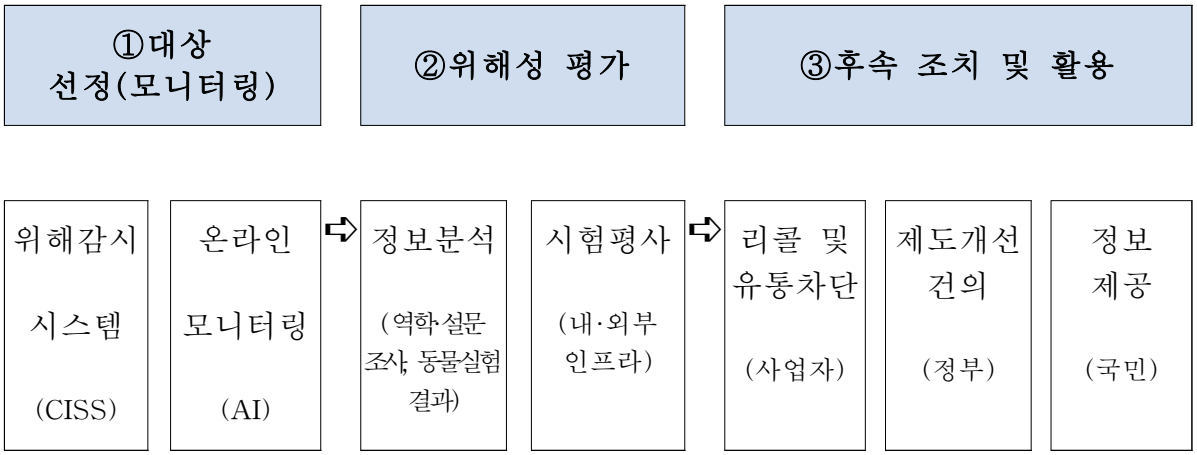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융복합 기술 발전, 신소재 개발 등으로 기존 법·제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신유형·해외 제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벗어난 비규제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고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사업을 신설하였음.

○ 위해감시시스템(CISS)[285]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역학·설문조사·동물실험 결과를 통한 정보분석 및 시험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건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소비자·사업자·정부 등 주체별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85)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

<위해성 평가 절차(안)>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동 사업을 연 10회 실시할 계획으로, 단계별 시험평가를 위한 연구 시약 및 재료비, 외부 시험용역 의뢰 등의 내역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예산안 산출내역>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 635백만원(신규)

○ 단계별 시험평가를 위한 연구 시약 및 재료비(420백만원)
▪ 연구 시약 및 재료비 : 42백만원 × 10회 = 420백만원
- 유해성 확인 : 12백만원 × 10회 = 120백만원
- 시나리오 기반 분석법 개발 : 12백만원 × 10회 = 120백만원
- 노출평가 : 18백만원× 10회 = 180백만원

○ 외부 시험용역 의뢰(90백만원)
▪ 연구인력 인건비 : 18백만원 × 5회 = 90백만원
- 책임연구원 : 3,706천원 × 6개월 × 참여율 50%× 5회 = 55백만원
- 연구원 : 2,842천원 × 6개월 × 참여율 30% × 5회 = 25백만원
- 연구보조원 : 1,900천원 × 6개월 × 참여율 20% × 5회 = 10백만원
*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 적용
* 5회 기준으로, 자체시험 설비·인력을 활용한 내부 시험 불가 항목에 한해 의뢰

○ 소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115백만원)
▪ 설문조사 : 1,000명 × 10천원 × 10회 = 100백만원
▪ 전문가 자문 : 5회 × 30천원 × 10회 = 15백만원

○ 자료 구입 및 여비(10백만원)
▪ 자료 구입 : 역학 조사 결과 등 각종 데이터 구입 500천원 × 10회 = 5백만원
▪ 여비 : 자문·회의 참석, 현장조사 등 50천원 × 2명 × 5회 × 10회 = 5백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현행 정부 부처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법령에 따른 특정 품목군 중심의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도입은 안전 사각지대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비자기본법」[286] 및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처리규정」(한

286)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생 략)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국소비자원 내부규정)[287]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정보 후속조치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등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나 이행 대한 강제성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할 수는 있으나 반영 의무가 없음.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비관리(비규제) 제품 시정권고 사업자 수락율은 2021년 57.7%에서 2025년 8월 현재 77.4%로 개선되고 있으나 5년간의 평균 수락율은 67.8%로 저조한 것으로 보임.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7)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처리규정」**
제11조(위해정보의 후속조치) ①위해정보 처리팀은 제10조에 의해 이관받은 위해정보건에 대하여 사실확인(필요시 시험검사 포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1. **사업자 시정권고 : 물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사업자에게 1)리콜권고, 2)안전기준 준수 권고, 3)품질·시설·표시개선 권고**
2. **시정조치 건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1)리콜건의, 2)단속건의, 3)기타 조치건의**
3. **제도개선 건의 : 중앙행정기관에 1)안전기준, 법령 제·개정 건의, 2)안전관리방안 마련 건의**
4. **소비자정보제공 :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5. 기타

②제10조제2항의 위해정보에 대하여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위해정보건은 위해정보 처리팀으로 이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경우, 위해정보 처리팀은 해당 위해정보의 처리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비관리 제품 시정권고 사업자 수락율>

(단위: 건, %)

연 도	시정권고 (C=A+B)	수락			불수락 (B)	수락율 (A/C*100)
		이행	이행계획 미체출	소계(A)		
2021	130	75	-	75	55	57.7
2022	138	84	-	84	54	60.9
2023	152	108	-	108	44	71.1
2024	182	130	-	130	52	71.4
2025. 8.	115	89	-	89	26	77.4
계	717	486	-	486	231	67.8

※ 이행계획 미제출 시 불수락으로 간주

(자료: 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반영률에 따르면, 2021년 58.8%에서 2025년 8월 현재 75%로 개선되고 있으나 5년간의 평균 수락율은 52.9%로 저조함.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국가 · 지자체에 시정조치 · 제도개선 권고 반영률>

(단위: 건, %)

연 도	건의 (C=A+B)	반 영			미반영 (B)	반영률 (A/C*100)
		전부반영	일부반영	소계(A)		
2021	34	9	11	20	14	58.8
2022	32	17	2	19	13	59.4
2023	26	6	1	7	19	26.9
2024	21	7	5	12	9	57.1
2025. 8.	8	6	-	6	2	75.0
계	121	45	19	64	57	52.9

(자료: 한국소비자원)

○ 또한, 한국소비자원장은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288]을 건의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이러한 시정요청 건의가 전무함.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발생 우려 시 후속조치 현황>

(단위: 건)

연 도	위해정보 분석건수*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사실의 공표	사업자 시정 권고	국가·지자체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공정위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 건의
2021	269,466	10	46	582	34	-
2022	420,442	16	44	772	32	-
2023	394,214	14	43	635	26	-
2024	480,818	10	43	794	21	-
2025. 8.	372,070	7	27	628	8	-
합 계	1,937,010	57	203	3,411	121	-

* 후속조치 등에 활용된 위해정보 건수의 합계(중복 건 존재)
** 소비자안전주의보[289] 발령 실적(해당 기간내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실적은 없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

288)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 명령,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89)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업무처리규정」(한국소비자원 내부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요건(동일한 물품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유형의 위해정보가 1개월 이내에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 위해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함.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제품 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율,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반영률 등을 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 건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사건적체 및 사건 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겪는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합의·조정하여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1.3%)이 감액된 1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905	1,881	1,881	△24	△1.3
- 피해구제	861	961	961	100	11.6
- 분쟁조정	751	677	677	△74	△9.9
- 지방소비자	293	243	243	△50	△17.1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290]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

290)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00만원 감액된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분쟁조정의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조정부 확대 운영을 사유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분쟁조정 예산안 산출내역서>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25백만원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② 분쟁조정제도 프로세스 개선, ③ 의료 분쟁조정회의 운영, ④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⑤ 조정제도 홍보, ⑥ 교육 등 역량 강화 (6개 사업×54.2백만원)

○ **분쟁조정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조정부 운영 280백만원**
-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합의권고 기능 활성화 및 사건처리 신속성 확보(2,800건×100천원)**

○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 환경 구축 72백만원(신규)
- 모바일·PC를 활용한 조정위원·당사자의 회의 참석 인프라 구축(2식×36백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118건(2022년)→6,390건(2023년)→9,731건(2024년)으로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5,613건(136.3%) 증가함에 따라, 처리건수가 5,065건(2022년)→5,180(2023년)→6,969(2024년)으로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1,904건(37.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해결 건수는 1,558건(2022년)→2,768건(2023년)→5,530건(2024년)으로 2024년에 2022년 대비 3,972건(255%)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2022	2023	2024	2025. 8.
신청(A)	4,118	6,390	9,731	8,347
전년도 미결(B)	**2,505**	**1,558**	**2,768**	**5,530**
처리 대상(C=A+B)	6,623	7,948	12,499	13,873
처리(D)	5,065	5,180	6,969	5,827
처리율(D/A*100)	76.5	65.2	55.8	42.0
성립률	70.5	67.6	70.7	70.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러한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폭증에 따른 미결·적체 사건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291]에 따라 조정회의 상정 이전에 소비자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비상임위원[292]을 사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실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여 원만한 합의권고를 유도하는 신속조정부를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 규칙」
제16조(위원장의 합의권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합의권고의 결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합의된 내용대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292) **「소비자기본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분야별 비상임위원 구성 현황>

(2025. 8. 기준, 단위: 명)

분야	신분	인원
소비자대표	민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8
사업자대표	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28
법조계	변호사 등	30
전문분야	의료, 금융·보험, 식품, 정보통신, 자동차, 여행, 약관광고, 가전, 건축 및 기타 소비자 문제 해결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관련 분야 전문), 의사, 대학 교수, 관련 공공기관·협회 전·현직 임직원 등	59
합계	-	1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간 신속조정부 예산집행내역 및 사건처리 건수에 따르면, 2024년은 1,661건을 처리하여, 신속조정부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2년 812건 대비 2배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신속조정부 예산집행내역 및 사건처리 건수>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7.
예산	당초	36	66	80	80
	수정	41	66	153	118
집행		40	51	153	118
처리 건수	조정결정*	655	413	1,168	714
	합의이행	85	49	162	110
	기타**	72	48	331	252
	합 계	**812**	**510**	**1,661**	**1,076**

* '성립', '불성립', '기각', '성립기간중'인 사건
** 신청취하, 각하(불개시)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145인 중 사전조정위원 활동이 가능한 20명~30명을 활용해 연간 신속조정 사건 규모를 현행 800여 건[293]에서 2,800건 수준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 내 적체사건 해소를 600여 건으로 축소할 계획임.

<신속조정부 운영 확대에 따른 적체사건 해소 시나리오>

(단위: 건,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접수 건(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년 미결 건(B)	5,526	7,706	7,106	5,726	3,566
처리 대상 건(C=A+B)	15,526	17,706	17,106	15,726	13,566
자체 처리 건(D=a×b)	7,020	7,800	8,580	9,360	10,140
처리 인력(a)**	36	40	44	48	52
인당 처리건(b)	195	195	195	195	195
신속조정부 처리 건(E)	800	2,800	2,800	2,800	2,800
전체 처리 건(F=D+E)	7,820	10,600	11,380	12,160	12,940
당해 미결 건(G=C-F)	7,706	7,106	5,726	3,566	626

* 지속 증가 중이나,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권고 활성화 등을 통해 2024년도 접수 건 수준 (약 1만 건)으로 유지 노력

** 공공기관 인력증원 절차를 통해 연간 4명(2025~2026년도 정기 증원 인력의 평균) 증원 가정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러나, 이러한 신속조정부의 운영이 내용 및 당사자 이해관계 등이 비교적 단순 명료해 정식 조정절차 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대폭 확대된 규모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

293) 2024년, 2025년 당초 예산 규모를 처리사건을 800여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처리사건이 800건을 초과하여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는 신속조정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속조정부를 도입한 2022년 이후에 2024년 분쟁조정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약 92일로 2022년 약 112일 대비 약 20일(△17.9%) 단축하였으나, 법정기한인 30일[294]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분쟁조정 평균처리 기간>

(단위: 건, %, 일)

구분	2022	2023	2024	2025. 8.
평균처리기간	111.9	84.4	91.5	122.8

(자료: 한국소비자원)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제도 취지가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으로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내부 인원 재배치를 통한 분쟁조정담당 인력 보강, 분쟁조정담당 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실시, 조정위원회 회의 간소화 절차 도입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294) **「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6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수탁사업비로 편성됨.

□ 2026년도 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5억 8,3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145억 900만원과 수탁사업비 15억 500만원, 기타수입 5억 6,9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5억 8,300만원으로, 인건비 93억 9,700만원, 운영비 26억 8,000만원, 사업비 30억 100만원, 수탁사업비 15억 500만원으로 구성됨.

□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신규 사업인 공정거래 종합지원사업비 편성 등임.

<2026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13,927	14,662	16,583	1,921	13.1
정부출연금	11,742	12,757	14,509	1,752	13.7
수탁사업비	1,099	1,296	1,505	209	16.1
기타수입	1,086	609	569	△40	△6.6
□ 지 출	13,834	14,662	16,583	1,921	13.1
인건비	7,544	8,504	9,397	893	10.5
운영비	2,550	2,698	2,680	△18	△0.7
사업비	2,641	2,164	3,001	837	38.7
수탁사업비	1,099	1,296	1,505	209	16.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종합지원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대리점거래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불공정거래 및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상담, 소송지원 등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종합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설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임차료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비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세부 내역
공정거래 종합지원	-	680	680	- 소송대리지원금 및 소송지원심의회 안건 검토비 등 97백만원 - 온라인플랫폼 및 입점사업자 등 연석회의, 간담회 등 개최·추진 23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공공요금 15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 등 50백만원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여비 28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경비 및 일반수용비 등 12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관리용역비 등 162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임차료 등 293백만원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지원 대상이 다를 뿐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가맹종합지원센터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영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295]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

2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296](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4호, 2020. 6. 11., 제정)에 따라 지정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3월에 정식 개소하였음.

○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297]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298](공정위고시 제2022-8호, 2022. 6. 8. 제정)에 따라 지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3월에 정식 개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발란 등 온라인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로 영세 입점업체들에게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사업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기능이 현재 부재한 상황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96)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9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98)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전 갑을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적시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안) 비교>

(2025. 10. 기준)

구 분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안)
센터운영 근거	· 가맹사업법 제31조의2 · 공정위 고시 제2020-4호	· 대리점법 제12조의4 · 공정위 고시 제2024-5호	-
지원대상	영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및 하도급,유통,약관 분야등 모든갑을분야 사업자
센터지정일	2020. 9.	2022. 9.	-
센터개소일	2021. 3.	2023. 3.	2026. 3.
인원 (팀장, 팀원, 변호사)	9명 (팀장 1명, 팀원 8명(변호사 2명 포함))		16명
장소	서울상공회의소 (2020. 10. 30.)	-*	임차 예정
2025년도 예산	203백만원	138백만원	-
2026년도 예산(안)	317백만원**		680백만원
사업내용	① 맞춤형 전문상담 ②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주, 수급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중소사업자 법률지원 ③ 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④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및 갈등완화 촉진 ⑤ 정책 및 제도 홍보		

* 대리점종합지원 관련 신규 예산 및 인력 부족, 경상운영비 감액(△118, 공공기관 공통감액)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여 운영공간을 조성

** 2026년부터 통합 편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포함한 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예산·결산 등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2조[299]에 따르면 국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특정한 목적 달성 필요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 출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300].

299)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00)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220302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458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 금융위원회 소관 】

1. 자금세탁방지추진[301]: 국제 분담금 부족분 증액 여부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자금세탁방지추진”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과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0만원(1.3%) 증가한 8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자금세탁방지추진	756	846		857	11	1.3
-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675	745		772	27	3.6
- FATF 상호평가 후속 점검대응	15	39		24	△15	△3.8
-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67	61		61	-	-

(자료: 금융위원회)

301) 세부사업: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2) 검토의견

□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대응’,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따라 3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서는 2025년 대비 2,700만원 증가한 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3개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 분담금 6억 5,000만원, 후발국 컨설팅 등 대외협력 국외여비 400만원, 영문에디터(2인) 인건비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비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내역사업)	675	745	745	772	27	3.6
- 국제분담금(340-02)	592	630	630	650	20	3.2
- 국외업무여비(220-02)	-	8	8	4	△4	△50.0
- 상용임금 등 (110-03, 320-09, 210-12)	83	106	106	117	11	10.4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동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 에그몽그룹(Egmont) 등 총 3개로, 모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현황>

구분	국제기구명	납부기간	주요 역할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2009년~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
APG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1998년~	· 역내 국가들의 FATF 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후발국들의 기준 이행을 지원
Egmont	에그몽그룹	2002년~	· 각국 FIU간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 체계화·활성화 및 비밀 보호

(자료: 금융위원회)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에 당초 편성한 분담금에 비해 더 큰 금액의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부족한 분담금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다른 내역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의 경우에는 확정된 분담금이 당초 편성액 대비 4,000만원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에서 2,8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2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는 4,800만원이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에서 3,700만원, 일반수용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분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2024년	일반수용비	△2	국제부담금	40
	국외업무여비	△28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계	**△40**	**계**	**40**
2025년	상용임금	△6	국제부담금	48
	일반수용비	△6		
	국외업무여비	△36		
	계	**△48**	**계**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분담금 증가율보다 실제 증가율이 높았고, 실제 납부 시 환율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분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기관	편성액			집행액			(B-A) (천원)
		원화(A) (천원)	납부화폐 기준	환율 (원)	원화(B) (천원)	납부화폐 기준	환율 (원)	
2024	FATF	301,024	EUR 211,989	1,420	330,256	EUR 222,123	1,486	△29,232
	APG	226,926	AUD 260,835	870	229,228	AUD 260,835	878	△2,302
	Egmont	25,292	USD 19,455	1,300	32,830	USD 23,754	1,382	△7,538
	소계	**552,420**			**592,313**			**△39,893**
2025	FATF	342,908	EUR 236,000	1,453	385,228	EUR 242,827	1,586	△42,320
	APG	251,834	AUD 286,500	879	259,262	AUD 279,974	920	△7,428
	Egmont	35,880	USD 26,000	1,380	32,817	USD 23,645	1386.5	3,063
	소계	**630,388**			**678,388**			**△48,00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의 국제 분담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제 분담금의 증가율 및 환율 변동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외 출장 등 국제공조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 분담금과 실제 납부 예상액을 살펴본 결과, 2026년에는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전에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된 ‘에그몽그룹(Egmont)’의 분담금은 적정 규모로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예상액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확정된 ‘APG’와 ‘FATF’의 예상 분담금을 원화로 추산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국제 분담금 6억 5,0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을 초과한 7억 9,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2026년도 국제분담금 편성액 및 예상액 산출내역>

구분	2026년도 분담금 확정 일정	2026년 편성액(정부안)			2026년 예상액		
		분담금	환율(원)	원화(천원)	분담금	환율(원)	원화(천원)
Egmont	2025. 7. 9.	35,733(USD)	1,380	49,312	35,733(USD)	1,440	51,455
APG	2025. 8. 27.	260,000(AUD)	895	237,175	314,249(AUD)	940	295,394
FATF	2025. 10. 20.	229,000(EUR)	1,590	364,110	266,744(EUR)	1,660	442,795
합 계				650,597			789,644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결과는 2025년도에 실제 집행한 분담금 규모에 미치지 못하도록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302]되는 등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저조한 측면에서 기인하나, 분담금 납부 대상 국제기구 중 2개 기구의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이후 결정되는 구조 상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에그몽그룹(Egmont)'의 경우 매년 7월경,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의 경우 매년 8월경에 회원국이 모이는 연차 총회에서 차년도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매년 10월경 또는 차년도 2월경 연차 총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302) FATF: 2025년도 실제 납부액 EUR 242,827 → 2026년도 편성액 229,000(EUR)
APG: 2025년도 실제 납부액 AUD 279,974 → 2026년도 편성액 260,000(AUD)

○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기구 별 분담금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에그몽그룹(Egmont)’의 경우 7월경 확정된 다음연도 분담금을 동 사업에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경우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다음연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예산안에는 차년도 분담금의 예상액을 추정하여 반영하고 있음.

○ 그 결과 정부의 예산안 편성 확정 이후 분담금 규모가 확정되는 ‘FATF’는 편성액 대비 약 8,000만원, ‘APG’는 편성액 대비 약 6,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국제 분담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에 예상되는 실제 분담금 집행 규모와 편성된 예산안 규모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증액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분담금 예산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303]: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는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FIU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3.0%) 감소한 48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626	4,947	4,947	4,801	△146	△3.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FIU 정보시스템 중 심사분석시스템[304]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305] 예산 3억 5,2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303) 세부사업: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1332-501)

304) FIU 정보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고·분석·활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금융회사의 위험수준 진단을 위한 위험평가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위험평가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2025년도 예산에 차세대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중임.

305) 정보화 전략계획: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202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함)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306]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307]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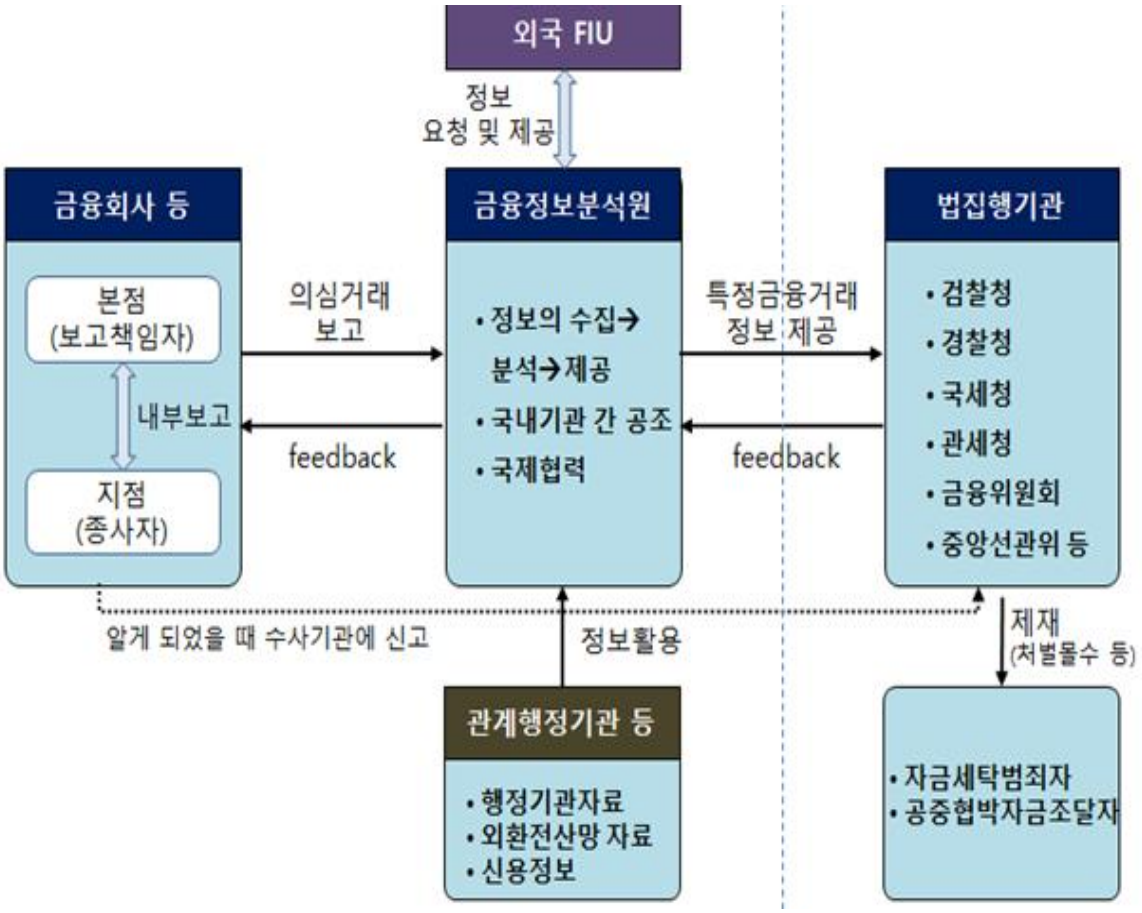
○ 심사분석시스템은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법집행기관에 의심자료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2002년 처음 구축한 이후 관련 장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2021년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3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3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 국세청장, 관세청장, …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각 호 생략>

〈 FIU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흐름도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ISP 예산은 심사분석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시스템은 가상자산 등 다양화·지능화하는 자금세탁 유형을 신속·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상계좌, 전자지급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신설[308]되기 전 구축이 진행[309]되어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기초로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음.

○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 및 수사기관 제공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심사·분석할 인력은 한정적인 상황[310]에서 현행 심사분석시스템에 AI를 적용하여 전제범죄 예측, 보고서 자동생성, 혐의자 거래 흐름 분석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자금세탁 행위를 신속히 분석·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5년간 자금세탁과 관련한 의심거래(STR) 보고건수 및 수사기관 제공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와 제공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25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308)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
309)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은 2019. 5. ~ 2020. 12. 까지 ISP,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음.
310) STR상세분석관 총 30명 중 가상자산 분석 전담인력 1명

보고건수와 제공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임.

<연도별 전체·가상자산 STR 보고·제공 건수 현황>

(단위: 건)

연도	보고건수		제공건수	
	전체	가상자산	전체	가상자산
2021	884,655	199	42,595	-
2022	822,644	10,797	39,750	1,349
2023	906,462	16,076	38,676	2,324
2024	1,084,143	19,658	49,543	2,205
2025.9월	975,218	40,116	49,938	2,438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1년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유지보수 용역 과정에서 가상자산 및 AI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므로,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ISP 수행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복 투자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당초 2020년까지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신설되지 않아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것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및 분석 관련 기능을 개선해왔음.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심사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유지관리 용역		연도	기능개선사항	비고
용역명	집행액(백만원)			
21년도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828	2021	· 가상자산 STR 보고서식 및 첨부거래 보고 기능 개발	
22-24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233	2022	· 가상자산 첨부거래 및 지갑주소 조회 기능 개발	
		2023	· 가상자산 STR 대용량 첨부거래 보고/접수 기능 개발	
		2024	· 가상자산 STR별/인물별 집계 테이블 생성 기능 개발 · 가상자산 지갑주소 기준 거래요약 조회 기능 개발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현재 자금세탁 관련 거래내역 분석에 사용 중인 혐의도 산정시스템에 최신의 AI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2025년 FIU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상 AI 기능 개선 사항>

요구사항 명	세부내용
최신AI를 적용하여 혐의도 산정시스템 기능개선('25년)	○ 현재 STR 거래내역 분석에 사용 중인 혐의도 산정시스템에 최신의 AI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 - 자동학습 기능적용으로 금융거래 환경 변화가 적용된 룰(Rule)을 생성하여 추천 - 기존 룰을 조합하여 변경된 룰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수행 - 변경된 룰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 ○ 혐의도 산정 룰 개선 - 현행 FIU정보시스템 DB 환경에 최적화하여 룰 개선 - 배치 프로그램에 부하를 최소화하여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 변화된 금융환경 및 법률, 규정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ISP 실시, 예산 요구 및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9년에 신규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나,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단지 등 범죄조직에서의 자금세탁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ISP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 중 ISP를 실시하여 2027년에 다음 연도(2028년도) 예산안을 요구한 후, 2028년에 확정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9년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임.

○ 다만, 2025년도 우리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 규모가 2024년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ISP 수립 중이라도 다음연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AI 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과정에서 기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수행한 가상자산 및 AI 관련 기능 개선과 중복되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한 신규 시스템 구축 일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청년미래적금[311]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312]: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7,446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청년미래적금	-	-	-	744,625	744,625	순증
- 기여금 지원	-	-	-	739,500	739,500	순증
- 인프라 구축	-	-	-	4,815	4,815	순증
-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	-	-	310	31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28억 7,000만원(64.2%) 감소한 1,241억 8,500만원이 편성됨.

311) 세부사업: 청년미래적금(1831-891)
312)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청년도약계좌	312,161	347,055	347,055	124,185	△222,870	△64.2
- 기여금 지원	302,993	336,804	336,804	119,446	△217,358	△64.5
- 인프라 구축	8,664	9,707	9,707	4,737	△4,970	△51.2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544	544	2	△542	△99.6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은 구체적인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참여 은행 모집 등을 거쳐 2026년 6월경 상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상품의 기본구조는 청년이 매월 5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6%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일반형),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313]한 청년의 경우 보다 강화된 12%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우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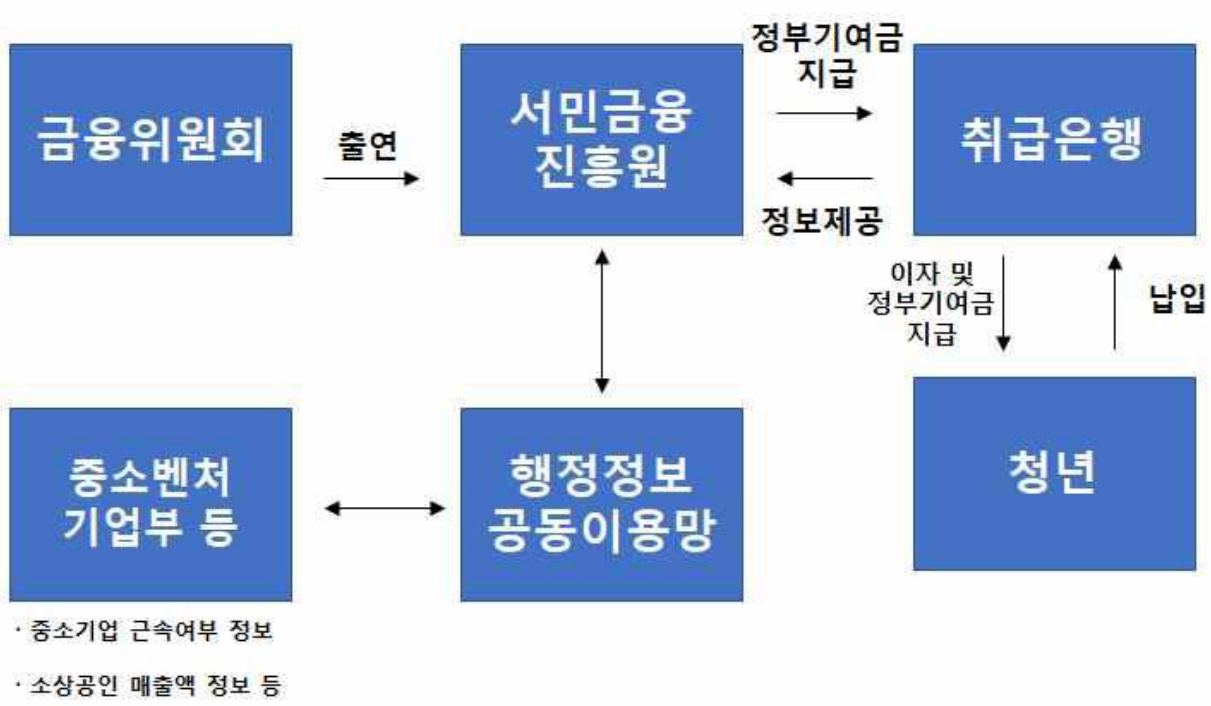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② 총급여 7,500만원 이하[314]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③ 가구 중위소득[315] 200% 이하인 사람임.

313) 채용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자로서, 3년을 근속하여야 함.
314) 단,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 예정
315) 2024년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원)	2,228,445	3,682,609	4,714,65	5,729,913	6,695,73	7,618,369	8,514,994

○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단축된 3년이고, 본인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316]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317].

<청년미래적금 사업 운영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사업,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다수 존재하며, 지원대상,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316) 적용금리는 미정
317) 2025년 10월 28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발의

월 납입한도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존재함.

<청년자산형성 사업 간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기간		2022. 2. 21.~2022. 3. 4.	2023. 6.~2025. 12.	2026. 6.(예정)~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 매칭지급(최대 36만원)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매칭지급 (3~6%, 최대 월3.3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지급 (일반형: 6%, 우대형*: 12%) (일반형 최대 월 3만원) *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채용 및 3년 근속 시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 조특법 개정 추진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50만원,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기본금리 5%(최대 6.0%)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미정
이자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	만기일시지급	미정
취급은행		12개 은행	11개 은행	미정
비고		-	2년 이상 성실 납입자에 대한 부분인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제도 신설('25. 7.~)	미정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청년자산형성 사업들과 동일(19세 이상~34세 이하)하나, 가구소득 요건이 청년도약

계좌에 비해 강화되었고, 대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요건을 신설하였다는 특징이 존재함.

○ 또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비율을 3~6%로 차등 적용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318] 가입 유형을 일반(6%)과 우대(12%)로 구분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마지막으로, 청년미래적금의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70만원)에 비해 하향되었고, 만기 역시 단축(5년→3년)되었음.

□ 동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예산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출연금으로 민원상담 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약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의 전용계좌에 기여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임.

○ 또한 진흥원에 출연되는 출연금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비용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318)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정부기여금은 미지급할 예정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출시 후 운영협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2) 검토의견

(1) 가입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정부기여금 편성 필요

□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은행의 청년미래적금 계좌[319]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등 정부기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에 따라 기존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까지만 받고 2026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인데,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자 수는 약 192만명(누적 230만명)이고 2025년말 기준 예상[320] 가입유지자 수는 약 223만명(누적 270만명 예상)임.

---

319) 협약은행별로 청년미래적금을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320) 금융위원회 추산

○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 중단 및 일부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감안하여,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에는 2025년말 기준 예상 누적가입자수(약 270만명)의 절반인 135만명에 대한 기여금 소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2026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액 = ①-② = 119,446백만원
① 소요 기여금 372,700백만원 = 기 가입자('23~'25년 누적 가입자 약 270만명 예상) 중 26년 평균 가입유지자(약 135만명)×납입율(91.05%)×평균 매칭비율(4.24%)×평균 납입액(59.6만원)×가입기간(12개월)
② 유보 예산 약 253,300백만원 : '25년말 예상 잔여 기여금 1,832억원, 예상 이자수입 333억원, 예상 기여금 환수액 368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안 편성 시 2026년도 6월[321]부터 12월까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 지급 대상자 약 584만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473만명의 청년이 일반형 상품에 가입하고, 10만명의 청년이 우대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기여금 예산액을 총 7,395억원으로 산출하였는데,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년미래적금 가입수요 예측은 과다하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예산안의 적정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21) 6월 상품 출시 및 7월 심사를 가정하여 실제 기여금 지급은 심사·정산 후 8월부터 개시될 계획임.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739,500백만원 = {473만명('26년도 일반형 가입자)×기여금 30,000원(6%) + 10만명('26년도 우대형[1] 가입자)×기여금 60,000원(12%)} × 5개월

주1)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중 6개월 이내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3년 근속한 경우 가입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먼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지원대상 연령은 동일하나 소득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소득 요건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강화되어 있는 대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요건이 신설되었음.

- 소득 요건 차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추계한 지원 대상자 수에도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약 6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은 청년 소득자 547만 명과 소상공인 37만 명을 합하여 총 약 584만 명 수준으로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 규모보다 적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지원대상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소득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대상자 수 (2024년 기준)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 청년 소득자 수: **668만명** **▪ (기여금 지급대상)** - 소득자 수: **640만명**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 청년 소득자 수: **615만명** (중소기업 신규채용자 10만명[3] 포함) - 청년 소상공인 수: **37만명** **▪ (기여금 지급대상)** - 소득자: **547만명**[2] - 소상공인: **37만명**

주1)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본인납입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제공

주2) 정부안 편성 당시 200% 이하 소득구간 자료가 부재하여 근사치인 220% 이하 가구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상자 수는 604만명이었음
→ 이에 따를 시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급대상 총 약 640만명 수준으로 추산

주3) 가입조건이 유사한 고용노동부 舊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의 2018~2022년 연평균 가입자 수로 추정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이후 2025년말까지의 예상 누적 가입자수[322]가 총 27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체 지원대상 범위가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의 2026년도 하반기 신규 가입자수가 4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22) 2023년 6월 출시 이후 약 2년 6개월 간의 누적 가입자 수

○ 물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본인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6% → 6% 또는 12%),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아(5년→3년) 납입에 따른 부담이 적은 측면이 있어 청년층의 가입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일정 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청년미래적금의 매칭비율이 높은 대신 월 납입한도가 줄어듦(70만원 → 50만원)에 따라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최저 소득구간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액이 감소[323]된 측면 역시 존재하고, 청년도약계좌 역시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일부(60%)를 지원하고 있어 만기 단축에 따른 수요 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323)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총 기여금 지원금액이 감소함(33,000원→30,000원).

참고로, 2025년 7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명)

소득 구간별	가입자 수 (비중)
2,400만원 이하	1,242 (55.2%)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561 (24.9%)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318 (14.1%)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12 (5.0%)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17 (0.8%)
합계	**2,250** (100%)

※ 청년희망적금 연계 일시납입자 27.9만명 포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지원내용 비교>

<table>
<tr><th></th><th colspan="2">청년도약계좌</th><th colspan="2">청년미래적금</th></tr>
<tr><td>월
납입한도</td><td colspan="2">70만원</td><td colspan="2">50만원</td></tr>
<tr><td>정부
기여금
매칭률</td><td colspan="2">- 3%~6%(소득구간별 매칭한도 및 매칭률 상이),
- 매칭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월 납입한도(70만원)까지 3% 추가적용</td><td colspan="2">일반형 6%, 우대형 12%</td></tr>
<tr><td rowspan="4">월 최대
정부
기여금</td><td>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td><td>33,000원</td><td rowspan="2">일반형
(소상공인 포함)</td><td rowspan="2">30,000원</td></tr>
<tr><td>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td><td>29,000원</td></tr>
<tr><td>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td><td>25,200원</td><td rowspan="2">우대형</td><td rowspan="2">60,000원</td></tr>
<tr><td>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td><td>21,000원</td></tr>
<tr><td>비과세
혜택</td><td colspan="2">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td><td colspan="2">조특법 개정 추진 중</td></tr>
<tr><td>만기</td><td colspan="2">5년</td><td colspan="2">3년</td></tr>
<tr><td>금리</td><td colspan="2">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td><td colspan="2">미정</td></tr>
</table>

○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6년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 중 약 135만명[324]이 가입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예산 역시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동시가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35만명을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자 483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추계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4) 연 평균치

□ 높은 기여금 매칭률, 단축된 만기 등 가입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수년간의 누적 가입자가 270만명 수준으로 추계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483만명을 단 6개월 안에 신규 가입시킨다는 목표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가입인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가입 방안 등 조속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상품이 출시된 2023년 6월 이후 매월 신규 가입자를 받아 만기인 5년이 도과[325]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에 상응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신규 출시하게 되면서 2026년 1월부터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026년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개시할 계획임.

□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연계가입방안 및 세부계획이 부재한 상황인바[326],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정부기여금 및 이자 비과세 등 핵심 혜택을 승계하면서 신규 상품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을지 여부

325) 2025년부터는 3년 이상 가입한 자에 대하여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됨.

326)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간 논의를 진행하여 가입요건, 가입심사방안 등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2026년도 1분기 중 상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전환기의 불확실성은 청년 자산형성 상품 수요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기까지 장기간 남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물론, 2025년 하반기 신규 가입을 계획했던 청년층 역시 기존 상품의 납입 지속, 중단, 혹은 신규 상품 가입 대기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하게 되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꾸준한 저축을 통한 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과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당시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및 만기 시점이 특정 기간으로 한정되어[327] 일괄적인 연계 방안 수립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상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입자별 만기 시점이 상이하고 잔여 계약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수성이 존재함.

□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청년 수요층의 혼선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중단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입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존 혜택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7)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상시 가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가입자의 만기 역시 2년 후 특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3) 청년자산형성 사업 간 인프라 구축 예산액 배분 조정 필요 등

□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각각 내역사업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소득심사센터, 콜센터 운영 등 가입자 지원·상담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소득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규인력 인건비, 상품 가입을 위한 자격조회·연계기관 정보 활용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가입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상담 용역비, 기타 홍보·연구·임차료 등 운영비를 위한 경상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의 청년자산형성 사업별 인프라 구축 예산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배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2026년 신규 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의 개인소득 유지심사, 중도해지 상담·접수 등 지속적인 콜센터 업무 수요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 용역비 예산(41억 5,500만원) 전액이 청년미래적금 사업에만 편성되고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배정되지 않았음.

○ 또한 신규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 모집 및 운영에 필수적인 콜센터 통신비(5억 2,200만원), 임차료(9억 3,400만원), 연구용역비(2억 500만원) 등 핵심 경상운영비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만 편중 배정되어 있는바, 각 사업의 실제 집행 소요를 반영하기보다 예산안 편성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결과로 보임.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6년 예산 총합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1. 인건비	**1,320**	**1,051**	**269**
2. 전산구축비	**1,845**	**1,845**	**-**
3. 민원상담 용역비	**4,155**	**-**	**4,155**
4. 경상운영비	**2,232**	**1,841**	**391**
- 운영비	1,862	1,471	391
일반용역비 · 홍보콘텐츠 제작비, 광고매체비	386	-	386
공공요금 및 제세 · 콜센터 통신비	522	522	-
임차료 · 연간 콜센터 1개층 임대료 및 관리비	934	934	-
일반수용비 · 회의 준비용 소모품 및 회의 참석수당(10백만) · 인쇄비 등(5백만)	15	15	-
복리후생비	5	-	5
- 여비(국내여비)	5	5	-
- 업무추진비	4	4	-
- 연구용역비	205	205	-
일반연구비 · 청년층 인식조사, 중도해지자 설문조사,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	205	205	-
- 유형자산	156	156	-
자산취득비 · PC, 가구 등 자산취득 및 사무환경 개선	156	156	-
계	**9,552**	**4,737**	**4,81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자산형성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규모의 출연금 교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026년 6월 상품 출시 이전에 신규 가입심사 및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나, 2026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전산구축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진행중인바[328], 향후 ISP 중간산출물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적정 규모의 전산구축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329].

328) 용역기간: 2025. 8. 25.~2025. 12. 5.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 사전 협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예산을 전용하여 용역을 수행중임.

329) 참고로, 지난 청년도약계좌 전산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사업관리(PMO) 및 감리 용역,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프라(SW 및 HW) 구매를 위한 예산 총 147억 4,0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이번 청년미래적금 전산시스템 구축 시에는 이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330]: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준비 철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일반회계 및 복권기금)과 금융권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을 공급해왔으며, 2025년도 중에는 총 6조 2,100억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30) 세부사업: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1831-889)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재원별 보증공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보증재원 합계	4,470	5,186	5,221	6,688	본예산 7,866 → 1차 추경 8,381
금융회사 출연금	1,800	2,296	2,741	3,028	4,350
정부 출연금	2,670	2,890	2,480	3,660	본예산 3,516 → 1차 추경 4,031
일반회계	-	480	280	1,460	본예산 1,460 → 1차 추경 1,825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	480	280	560	본예산 560 → 1차 추경 925
햇살론15	-	-	-	900	900
복권기금	2,670	2,410	2,200	2,200	본예산 2,056 → 1차 추경 2,206
근로자햇살론	2,080	2,050	1,750	1,750	1,750
햇살론유스	590	360	450	450	본예산 306 → 1차 추경 456
보증상품 대출공급액	49,744	69,400	67,032	51,886	본예산 60,000 → 1차 추경 62,100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2021년 6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개정[331]을 통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었음.

<금융회사 출연 현황>

(단위: 억원)

업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은행	1,078	1,184	1,291	2,130
보험	191	190	217	283
여신전문금융	166	159	178	241
상호금융	736	729	780	1,090
저축은행	126	478	562	606
합계	2,296	2,741	3,028	4,350

(자료: 금융위원회)

331) 법률 제1822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0. 9. 시행(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조항의 유효기간: 2026. 10. 8.까지)

○ 그런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진흥원에 출연하게 된 금융기관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속적으로 별도 신설[332]하는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에 따른 불편사항(예시)>

❶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도 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서금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서금원 보증료율 9.9% = 15.9%

❷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 (햇살론15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❸ 신용평점 하위 10%를 초과하는 국민은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되어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불가하여 사각지대 발생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품 유사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도부터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를 통합·개편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32) 근로자햇살론(2010. 7.), 햇살론15(2019. 9.), 햇살론유스(2020. 1.), 햇살론카드(2021.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022. 9.),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3. 3.), 햇살론119(2025. 4.)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금원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하고,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하도록 할 계획임.

- 기존 '햇살론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연소득 3,500만원 이하)되고 신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신용 하위 20% 이하)될 계획임.

- 상품 통합 이후 2026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에 정부재정 총 4,500억원을 투입하여 2.6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인데,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000억원, 복권기금 계획액으로 총 3,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및 보증공급 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보증공급	2,800	6,500[1)]	11,000[2)]	3,000	23,300	23,300	3,000	26,300

주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시 10,500억원
주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2,300억원) 합산시 33,3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2025년 현재 햇살론15 상품은 은행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취급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취급기관 현황>

상품	업권	협약 금융기관	협약체결일
햇살론15	은행	하나은행	2019. 9. 2.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2020. 10. 5.
		케이뱅크	2025. 7. 31.
최저특례	은행	광주은행	2022. 9. 29.
		전북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2022. 9. 29.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2026년도부터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햇살론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상품 취급 업권 역시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으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2025년)			개편 후(2026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목적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연체 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
재원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취급 기관	은행	은행, 저축은행		모든 업권 (협약 금융회사)
지원 대상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존정책서민금융 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1,400만원* * '25년말까지 최대한도 600만원 상향 (1,400만원→2,000만원)	최대 1,000만원* * 최초 500만원 內 6개월 후 추가대출		최대 1,000만원
대출 금리	15.9% (보증료 9.9% 포함)	15.9% (보증료 7.9~8.9% 포함)		15.9% 이내 (보증료 7.9~9.9% 포함)
보증 비율	100% (위탁 및 직접보증)	100% (직접보증)		100%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전에 적극적인 업권별 협의를 진행하여 상품체계 개편에 따른 취급기관 확대 및 보증공급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보험사에서는 개편 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근로자햇살론 상품만을 취급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근로자햇살론과 요건이 동일한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 외에 근로자햇살론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신용요건이 강화[333]되고 수취금리가 낮은[334]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또한 카드사의 경우 개편 전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카드 상품만을 취급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카드사·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기관 전체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상품을 통한 정책성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기존 취급상품에 비해 수취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신규 특례보증 상품 취급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금융위원회는 낮은 수취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채널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취급해 본 경험이 부족한 기관들 역시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비재무

---

333) **(근로자햇살론)**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무관) 또는 ②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근로소득자
→ **(햇살론 특례보증)**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포함)

334) **(근로자햇살론)** 상호금융·보험사 수취금리 약 6~9%(2025년 2분기 기준)
※ 상품설계상 대출금리 최대로 적용 시 11.5%까지 수취 가능
→ **(햇살론 특례보증)** 대출금리 15.9%(최대) 적용 시 보증료를 제외한 수취금리 약 6~7%
※ 만일 대출금리를 15.9%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 수취금리는 6~7% 수준보다 낮을 수 있음.

적 인센티브[335]를 부여하는 등 협약 체결 유인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6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동 세부사업의 명칭은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인데, 햇살론유스 상품 보증공급을 담당하는 별도의 복권기금 사업[336]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부사업의 명칭에 ‘햇살론유스’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보임.

○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을 햇살론유스에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사업이 서민금융 예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사업명을 미리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2026년도에 동 일반회계 예산은 햇살론유스 지원에 사용되지 않을 예정인바, 불확실한 미래의 집행 가능성만을 근거로 사업명을 오인의 가능성이 있게끔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집행내용과 사업명이 불일치할 경우 재원별 성과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업관리상 혼선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335) 정부 포상이나 공식인증, 주요 경영평가 지표에 상생금융 기여도 항목 반영, 국책사업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336) 2026년도 복권기금 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328)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예산 3,039억원, ‘햇살론유스’ 예산 46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집행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업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 사업 예산의 중장기적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37]: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지표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22.3%) 증가한 19억 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628	1,205	1,559	1,906	347	22.3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337)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338]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339]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관계인 지원의 경우 지원건수가 2024년도 10건, 2025년 8월까지 4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관계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채무자 본인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예산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였음.

---

33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 (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39) 동 제도는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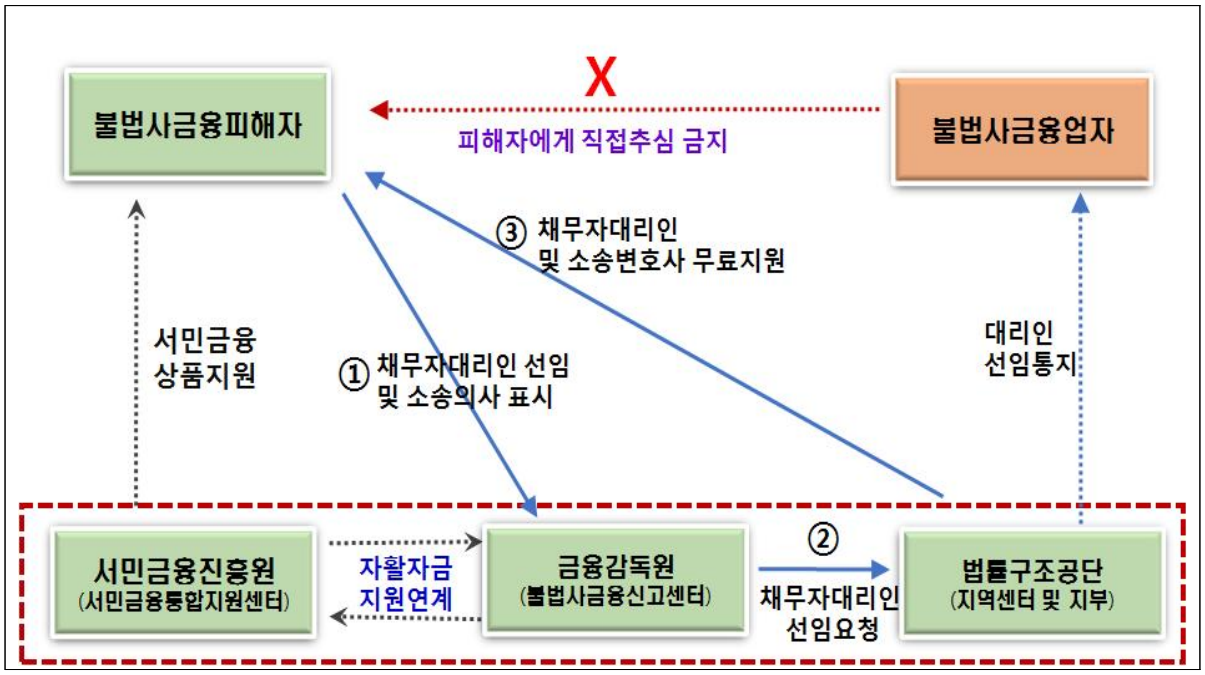
구 분		산출내역	
		2025년도 제2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
대리인 선임	본인	5,411건×208천원=1,125,000천원	8,911건×208천원=1,853,488천원
	관계인	4,560건x70천원=319,200천원	18건x70천원=1,260천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28건x497천원=13,916천원	110건x466천원=51,260천원
홍보비		100,000천원	-

(자료: 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동 세부사업의 운영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340]으로 이루어짐.

340) 예산 비목: 민간경상보조(320-0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12억 5,500만원 중 45.5%인 5억 7,100만원만을 실제 사업 수행에 활용하는 데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4년도 말부터 신청요건 완화, 신청창구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한 결과 2025년 상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현황>

(단위: 건)

연도	채무자대리			관계인지원			소송대리			계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신청	지원	종결
2020	1,211	893	30	-	-	-	41	26	13	1,252	919	43
2021	5,560	4,747	1,363	-	-	-	97	94	97	5,657	4,841	1,460
2022	5,184	4,473	3,790	-	-	-	41	37	32	5,225	4,510	3,822
2023	3,746	3,236	5,761	-	-	-	14	13	23	3,760	3,249	5,784
2024	3,314	2,924	1,850	11	10	-	164	162	88	3,489	3,096	1,938
2025 (~10.)	9,607	8,691	3,741	6	6	9	122	122	129	9,735	8,819	3,879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건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취약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단위: 건)	목표	5,020	3,865	4,152	3,911	8,911	최근 5개년 ('21~'25)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건수(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실적 통계
	실적	4,510	3,249	3,096	-	-			
	달성도	89.8%	84.1%	74.6%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341]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는 등 동 제도가 단순 대응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을 관리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음[342].

○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343].

- 실제로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34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6.7%는 동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이후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재조치가 미흡함”,

341) 2025년 8월 26일 정무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음.

342) **(지적사항)** 지원 인력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일부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인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1.1%에 그치고, 소송 전 구조건수가 2024년과 2025년 모두 0건으로 파악되는바, 동 제도가 단순 대응단계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채무 종결 여부 및 재추심 발생 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율 관리 등 사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결산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추심 발생 여부를 표준 양식으로 의무 집계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할 것

343) **(추경안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44) 금융위원회(갤럽 위탁 설문조사 수행), 2024. 10.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음" 등을 든 점이 확인됨.

○ 또한 과거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불법사금융업자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넘겨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에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음[345)346)].

○ 한편,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347)348)],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에도 역시 동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5월 처음으로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동 사업의 초기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하

---

345)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20년 집행액은 예산의 14.3%인 1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상 수혜자 수 2,800명의 32.7%인 915명을 지원하는 데 그쳐 2020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결산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불법사금융업자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넘겨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에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실적을 포함할 것

346)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신청 접수 시 불법사금융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를 수행하고, 해당 실적을 예·결산 공통요구자료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음.

3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 동 사업이 ‘지원 건수’를 성과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투입 지표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 2025년 8월 실시한 보조사업 연장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동 사업의 지원수요가 증가한 점이 확인되므로 예산 감축은 불필요하나, 현행과 같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실적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와 같이 취약채무자의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의 예방·근절이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방안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및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집행률 개선을 위한 보완 외에도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성과지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49]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건수 등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들의 법률대응권 보장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사

349)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등

후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신고 · 상담 추이〉

구 분	시행 이전 2개월 (5. 22.~7. 21.)	개정 대부업법 시행 (7. 22.)	시행 이후 2개월 (7. 22.~9. 21.)	증가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2,744건	→	3,652건	+33.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545명		668명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신청	368명		507명	+37.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 10. 2.)

-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대신, 대리인 선임 이후 재추심 발생률(또는 건수) 등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리·집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350]: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351]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3차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352]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353].

350) 세부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1431-301)
351)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352)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와 민간이 주도하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 7. 12.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354]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355],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도 또는 광역도 외 지역개발 프로젝트[356]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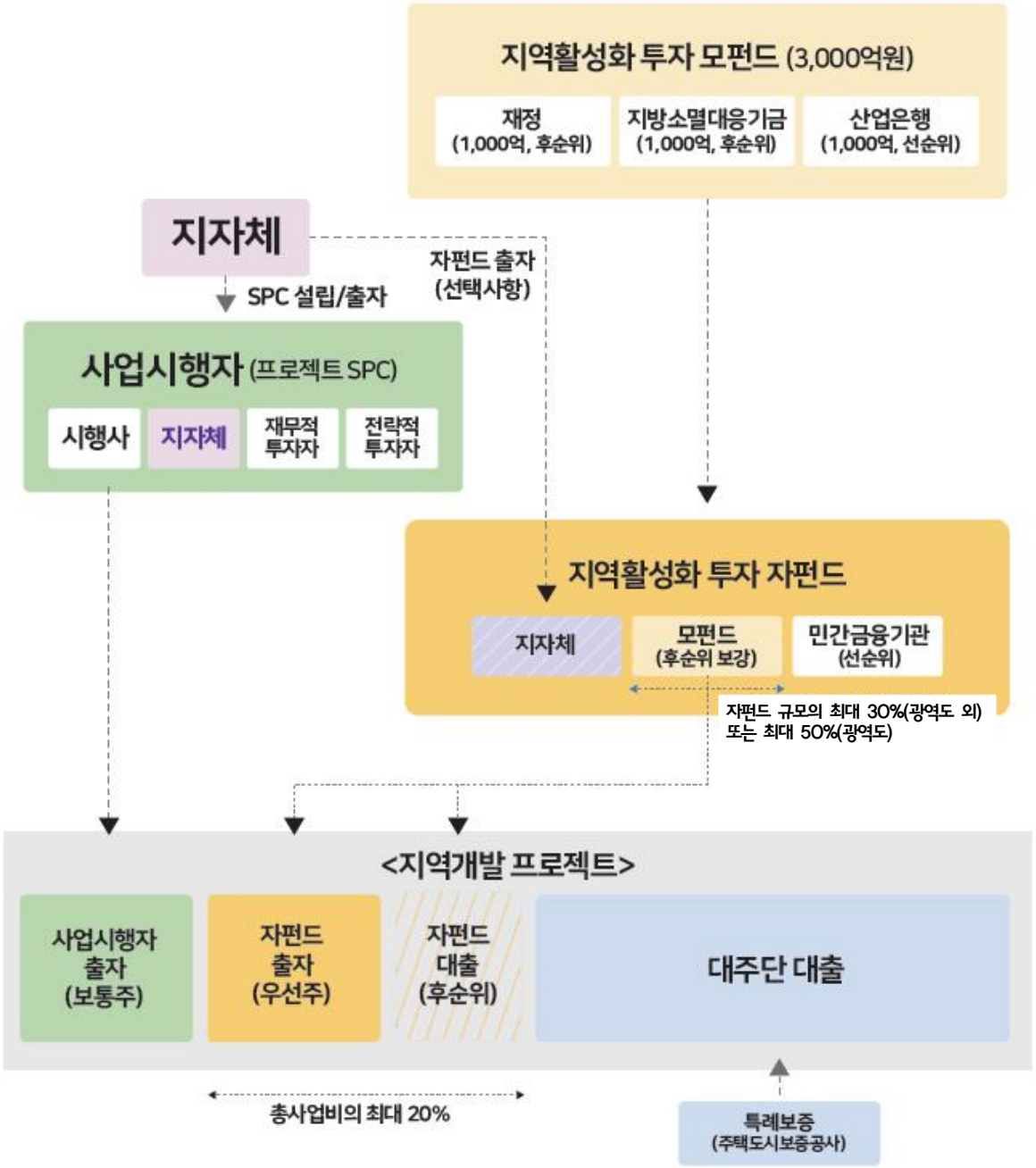
353) 이하 사업설명은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를 참조함.

35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355) 모펀드는 광역도 외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광역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356)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 및 2025년 프로젝트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6년도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1차 년도인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음. 이에 따른 모펀드 약정액은 약 2,418.5억원 수준으로, 모펀드 한도(3,000억원)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여짐.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주1)]	충남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 묘도	경북 경주	충남 서산
투자기간	2026년~2028년	2025년~2028년	2024년~2028년	2026년~2028년	2026년~2026년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호텔 및 어드벤처 시설 개발)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 및 농업융복합단지 건설
총사업비	**1,133억원 →680억원**	**1,239억원 →925억원 →876억원**	**1조 4,362억원**	**7,716억원 →8,191억원**	**1,300억원 →900억원**
모펀드 약정액	**68억원**	**39억원**	**1,435.5억원**	**786억원**	**90억원**

주: 2025년 10월말 기준
주1) 경주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말 현재 재심사 중이며, 상기 표의 내용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2024년 내에는 자펀드 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3건의 자펀드만 조성된 상황임.

〈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경과 〉

	단양	구미	여수	경주[주1)]	서산[주2)]
최초 선정연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펀드 결성 예정액	(최초) 226억원 (재) 136억원	(최초) 178억원 (재선정) 178억원 (재재선정) 78억원	2,872억원	(최초) 1,543억원 (재선정) 1,572억원	(당초) 260억원 (신규) 180억원
심사일	(최초) '24.2.16 (재선정) '24.11.26	(최초) '24.2.22 (재선정) '24.11.26 (재재선정) '25.1.23	'24.8.29	(최초) '24.11.26 (재선정) **심사중**	(당초) '24.12.24 **(신규) '25.9.26**
1차연장	(최초)'24.6.16~'24.9.19 (재선정)'25.3.28~'25.6.27	(최초)'24.6.22~'24.9.24 (재선정)'25.3.28~'25.6.27 (재재선정)'25.5.27~'25.8.25	'25.1.3 ~'25.4.2	(최초)'25.3.28~'25.6.27 (재선정) 심사중	
2차연장	(최초)'24.9.19~'24.12.19 (재선정)'25.6.28~'25.9.29	(최초)'24.9.24~'24.12.24 (재선정)'25.6.28~'25.9.29	-	-	-
결성일	**'25.9.26**	**'25.8.21**	**'25.2.28**		
투자집행액 (2025. 10말)	-	-	317억원	-	-

주1.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여 및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주2. 심사 이후 내부결재 등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과 선정통보일이 일부 상이
주3. 투자금액 집행액의 경우 2025.10월말 기준 자펀드의 투자금액 기준으로 작성
주1) 경주 프로젝트의 경우 자펀드 운용사가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자체 요청 등으로 제안을 철회('25.9.24.) 후 모펀드 운용사에 다시 제안('25.9.26)하였으며, 모펀드 운용사는 현재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주2) 서산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자펀드 운용사가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규 자펀드 운용사를 통해 재심사 진행하였고, 지난 9월 26일 선정되어 자펀드 결성중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또한, 5건의 프로젝트 중 4건은 사업내용 변경 등을 이유로 재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음. 자펀드 운용사가 2차 연장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제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안하면, 모펀드 운용사 내규에 따라 재심사 및 결성시한을 신규로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 번 선정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재추진되고 있음[357].

○ 한편, 2025년도에는 10월말까지 신규 프로젝트가 1건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에 신규로 신청한 건수도 3건에 불과함[358].

〈 2025년도 프로젝트 신청 현황 〉

(단위: 억원)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모펀드 약정액 (신청액 기준)	심사 경과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025년 9월 신청)	372.5	심사중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025년 10월 신청)	420	심사중
충남 태안 Seed Farm 1호(2025년 10월 신청)	17	심사중

주: 2025년 10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모펀드의 잔여 약정총액은 581.5억원[359]이고, 2025년 예산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없어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의

357)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자펀드 결성 지연 관련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재심사 및 결성시한 신규 부여에 대한 일부 제한을 관계기관(기재부, 산은 등)과 협의 중으로, 제도 개선 추진 예정임

358) 2025년도 프로젝트 심사 건수는 4건이었으나, 이 중 「충남 서산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선정되었던 프로젝트로, 이후 제안이 철회되었다가 운용사 및 사업구조 변경 후 재신청하여 선정된 것이며, 「경북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도 2024년 11월 선정되었던 것을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하고 있음.

359) 재선정 심사 중인「경북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모펀드 약정액 772억원→786억원)까지 모펀드 약정액으로 포함.

잔여 약정총액은 3,581.5억원에 이르는 상황임[360].

□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이 부진한 결과, 산업은행 정책모펀드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이 상당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2024년 및 2025년 편성된 예산의 집행 흐름을 살펴보면, 2024년 및 2025년 예산(각 1,000억원)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361].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한국산업은행 자체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재정모펀드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로 2024년 및 2025년 총 53억 5,000만원을 출자[362]하여, 10월말 현재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계정에는 1,946억 5,000만원의 유보금이 있음.

○ 2년간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산업은행 자체자금(각 2,000억원씩)에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 출자하기로 계획한 금액 총 6,000억원 중 실제로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 출자된 자금은 총 160억 5,0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158억 6,700만원이 자펀드에 출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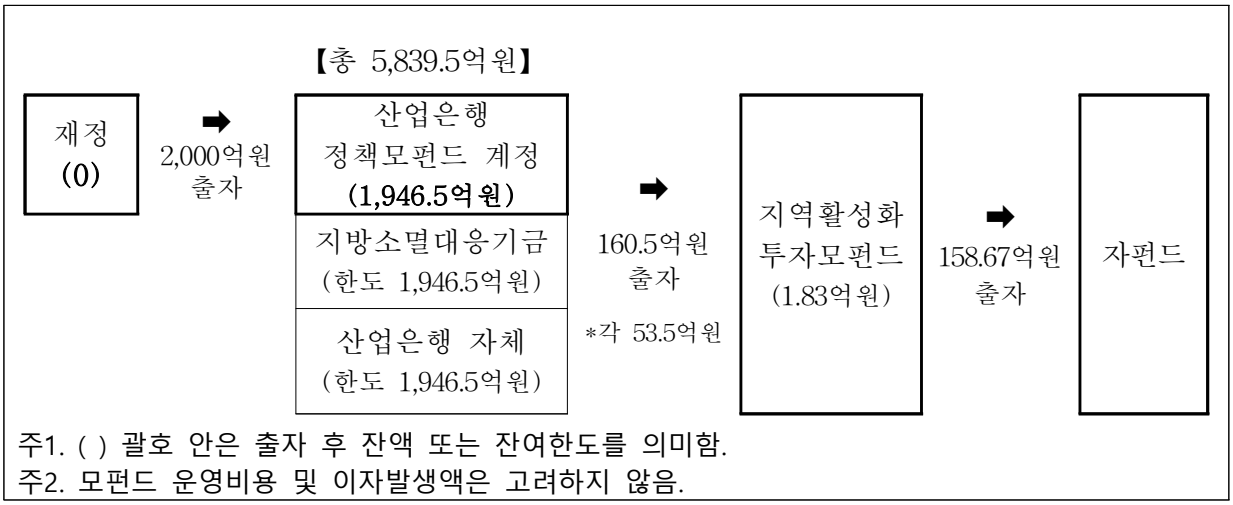
---

360) 2025년 신규로 신청된 3건의 프로젝트가 모펀드 약정 신청액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의 잔여 약정총액은 2,772억원임.

361) <(재정-산은) 출자시기 및 출자액>
2024년 4월(400억원), 7월(600억원),
2025년 6월(400억원), 7월(100억원), 9월(300억원), 10월(200억원)

362) <(산은-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출자시기 및 출자액>
2024년 8월(0.5억원), 2024년 9월(27.5억원),
2025년 9월(8.5억원), 2025년 10월(17억원)

〈 2024년 및 2025년 예산 흐름 (2025년 10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은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투입의 연속성, 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투자 소진률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2026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363]하였고, 만약 현시점에서 재정투입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출자된 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에 여력(3,581.5억원)이 있어 수시 접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 변경,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모색된 것이 아니므로, 2026년에 3,000억원 규모의 지

363) 기획재정부 담당팀의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로드쇼 발굴,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신청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추진 희망 프로젝트는 총 21개, 총사업비는 약 7.3조원으로 파악됨(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역활성화투자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2026년 집행 경과를 보아가며 2027년 예산안에 이를 다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64].

364) 2026년 신규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7. 국민성장펀드(신규)[365]: 조속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민성장펀드”사업은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국민성장펀드	-	-	-	1,000,000	1,0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366]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 규모를 150조원으로 상향[367]하기로 함.

○ 이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368]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먼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민간자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365) 세부사업: 국민성장펀드(2414-326)
366)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367)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368)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 출범할 예정임.

조성하고자 함.

○ 국민성장펀드는 산업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및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임.

○ 국민성장펀드는 기업 수요에 따라 ① 직접지분투자, ② 간접지분투자, ③ 인프라 투·융자 및 ④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임[369].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운용방안 개요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주1)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주2) (2026년 1조원 예산 반영)

주1)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

주2)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

(자료: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369)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 지금

②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

③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

④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2) 검토의견

(1) 조속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2026년 예산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안 편성 당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규모 및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위해 마중물 및 후순위 보강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 10조원과 민간자금 1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 유치규모 10조원의 10%에 해당하는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함.

〈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ㅇ 국민성장펀드 : 1,000,000백만

- 1년 민간투자 유치규모 10조원 × 정부재정비율 10% = 1,000,000백만원

구분 (조원)	2026년 투자규모(아래 수치 예시)				재정역할 비율
	소계	기금	민간	**재정**	
❶직접지분투자	2	1	1	**0.2**	마중물+후순위
❷간접투자(펀드)	4.6	1.2	3.4	**0.4**	후순위보강(5~40%)
❸인프라 투융자	6.7	1.1	5.6	**0.4**	후순위 7~8%
초저리대출	6.7	6.7	-	-	산은 자체 감당
합계	20	10	10	**1(후순위)**	

※ 초저리대출은 재정출자 대상 제외, 산은 자체 감당

※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용이나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구체적 계획 사업 내용 변경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예산안 편성 후 국민성장펀드 조성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26년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추진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370]. 금융위원회는 혁신산업펀드 일부와 반도체생태계펀드를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음. 혁신성장펀드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되는데, 당초 국민성장펀드는 혁신산업펀드만을 포괄하고, 성장지원펀드는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함.

〈(운영중)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성 펀드 개편방안(안)〉

(단위: 억원)

사업명	목적	조성목표	재정	旣조성	투자집행	개편방향
혁신성장	혁신산업 +성장지원	2023~2027 15조원	1.5조원 (연 3,000)	2023~2025 9조원	14,502	
혁신산업	혁신산업전반 생태계강화	7.5조원	7,500 (연 1,500)	4.5조원	9,189	'국민성장펀드' 흡수
성장지원	벤처·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7.5조원	7,500 (연 1,500)	4.5조원	5,312	**별도 운영 (예산안 미반영)**
반도체 생태계펀드	반도체소부장 생태계 지원강화	2025~2027 8,000억원	3년간 2,000 ('26, 850억)	2025년 1,200억	펀드 조성중	'국민성장펀드' 흡수

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370)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성장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하도록 정부 정책방향이 설정됨.

○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제출시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필요한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업추진 방향이 변경되어 성장지원펀드도 국민성장펀드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벤처·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재정투입비율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정해지는데,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조성시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투입비율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에 투자할 예정인데, 기존 정책성펀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산업계, 사업부처 등 범부처의 적극 지원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관계기업 발굴 중인 상황임. 일반적으로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발굴, 준비 및 시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이 5년으로 제한[371]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71)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2)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한 계획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일부는 과거 2021년부터 추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와 유사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로 추진할 계획임.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372] 형태도 참여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에 선순위 출자하고, 재정은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임.

○ 후순위 출자의 경우,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후순위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초과수익 발생 시 선순위에 앞서 수익을 취함[373].

○ 이와 같은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는 국민이 정책펀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성장의 성과를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투자 손실 위험을 줄임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그간 추진되었던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낮은 수익률, 일정 기간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인해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막아 투자 매력이 감소하였고 국가 재정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함에 따른 공정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음[374].

372) 일반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공모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함.
373) 이수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188호, 2021. 2. 22.

○ 실제로 만기[375]가 도래하여 청산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펀드수익률을 살펴보면, 재정자금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10개 중 7개의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376].

<국민참여 뉴딜펀드(청산펀드)수익률>

(약정총액: 억원, 수익률: IRR %)

펀드명	약정총액	일반국민 체감 기준[주1)] (공모펀드)	자펀드 기준 (뉴딜펀드)	재정자금 기준 (재정 후순위)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35	-4.37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1.02	-6.95	-25.22
신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4.62	3.99	2.68
안다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7.79	10.48	13.39
오라이언 뉴딜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1	1.14	0.89	0.38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84	-6.07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6.18	-12.62	-29.12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5.23	5.65	6.19
파인밸류 성장뉴딜 POST IPO 4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5.22	5.65	6.14
포커스 뉴딜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3	4.61	3.62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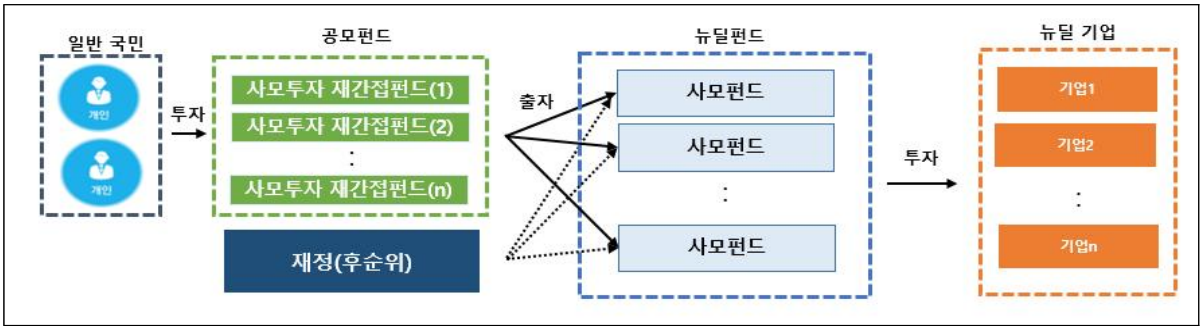
주1. 국민참여 뉴딜 조성 구조[377] 참조
주2. 음영표시는 재정이 후순위로서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공모펀드 수익률>자펀드 수익률)한 경우
주1) 재정모펀드의 후순위 보강 등을 반영한 일반국민 참여 공모펀드의 실수익률

(자료: 금융위원회)

374) 한경, '국민 재테크 상품' 홍보했지만... 예금에도 못미친 뉴딜펀드 수익률, 2022. 8.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80192611)
뉴시스, 일혀진 '정책형 뉴딜펀드' 4년 수익률 5%대...부진한 수익률로 마무리, 2025. 3. 2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5_0003112330)
동아일보, '사실상 원금보장' 뉴딜펀드... "낮은 수익률, 자금 흡수 어려울 듯", 2020. 9. 3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3/102780402/1)
375) 각 펀드의 만기일은 펀드결성일부터 46개월
376) 정책펀드의 경우 대체로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7~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5% 수익률은 우수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377) <참고: 국민참여 뉴딜 조성 구조>

□ 따라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를 다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과거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시사점을 감안하여 설계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할 계획으로, 주목적 투자분야 확대, 세제 혜택 부여 등 펀드 수익률 제고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재정의 후순위보강(원금 보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선부담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 수익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함.



8.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신규)[378]: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예산 심사 방안 모색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미 관세협상(2025. 7. 31.)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630,000	6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지난 7월에 있었던 한-미 관세협상 결과[379], 한국은 대미 투자를 위한 1,500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378) 세부사업: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2414-327)

379) 2025년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주요내용>

(미국) 8월 1일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하향. 향후 관세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다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 (최혜국대우)

(한국)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 미 조선수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부냥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미주통상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025. 7. 31.)

○ 이 중 조선협력펀드는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미국 내 조선소의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380]),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임.

○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유지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미국 진출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제조 영위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산업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381].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조선협력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투자·대출·보증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6,300억원을 편성한 것임[382].

---

380) Manitenance(정비), Repair(보수), Overhaul(정비)의 약자로,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보수, 정비, 개조작업을 의미함.

381)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미주통상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2025. 7. 31.

382) 한편, 타 부처 소관 예산안에도 유사한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 관련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3236-304)”사업에 7,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부역보험공사 기금 여력 확충 및 중소형 조선사 보증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예산을 2025년도보다 2,205억원 증액 편성함.

<2026년도 타 부처의 관련 예산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기재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	700,000	700,000	순증
(산업부)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00	80,000	380,000	600,500	220,500	58.0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부에 따르면, 조선협력 펀드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향후 미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투자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투자처 및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조선협력 펀드 실행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확충을 하기 위한 예산을 6,300억원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6,300억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6,300억원 규모의 한국산업은행 현금출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정책자금의 규모는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 정책자금 공급방식에 좌우되므로, 실제 공급가능한 자금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대출 및 보증이 직접투자에 비해 출자금 대비 공급효과가 크며, 금리 및 보증비율 우대조건 등에 따라 실제 공급한도 역시 달라짐.

○ 다만, 6,300억원 출자시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약 18bp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383].

383) 한국산업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현금출자만 고려

□ 2025년 10월 말 한미 추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한국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 또는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되 기획재정부가 동 사업을 수시배정사업[384]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세부 내용에 따라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방법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

□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ㅇ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 ㅇ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 ㅇ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 ㅇ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 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 ㅇ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 ㅇ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ㅇ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 ㅇ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함(2025년6월말 기준 정부출자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BIS 민감도 비율을 가정하여 산출).

384)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 대상 사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385]: 포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은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9,000만원(175.6%) 증가한 12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450	450	1,240	790	175.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제28조 제5항[386]).

385) 세부사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35-309)

○ 구체적으로,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접수·검토[387]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하면 4개월 이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며,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388]

---

38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387)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에 대한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밖의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회계부정 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각각 접수·검토함.

388)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른 분·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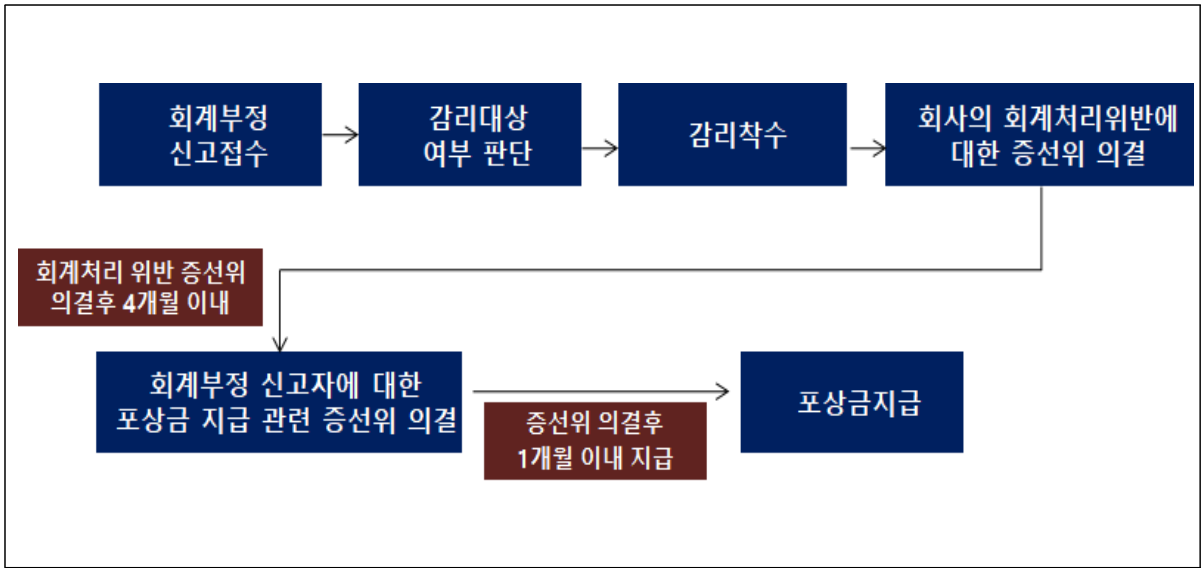
②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부정 신고는 2019년 81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17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2019년 1억 1,940만원(2건)에서 2024년 4억 700만원(7건)으로 증가하였음.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 말
신고건수[1)]	81	105	125	130	141	179	72
포상금 지급건수	2	12	5	3	8	7	4[2)]
포상금 지급액	119	408	229	70	251	407	450

주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건 및 유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첩건 합계

주2) 2025년 5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지급된 1건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1년 42.3%, 2022년 13.0%로 부진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한도를 변경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최대 5억원→10억원)하는 한편, 기여도 차감요소 중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389](2023. 5.)하였으며, 최근 포상금 지급 규모의 증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9	120	119	99.5	-	1
2020	483	408	84.5	-	75
2021	540	229	42.3	-	311
2022	540	70	13.0	-	470
2023	407	251	61.7	-	156
2024	407	407	100.0	-	-
2025	450	450	100.0	-	-

주: 2025년은 5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389)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 5.) 주요내용(자료: 금융위원회)
1.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 간소화(10개→ 4개) 및 등급별 기준금액 인상

□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 규정의 개정, 회계부정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포상금 지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7억 9,000만원(175.6%)이 증액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증액 편성된 2026년도 포상금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이미 포상금 지급이

개정 전

(단위: 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50,000
2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30,000
3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20,000
4등급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15,000
5등급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10,000
6등급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7,000
7등급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	5,000
8등급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과실Ⅱ단계 조치	3,000
9등급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2,000
10등급	경고 또는 주의	1,000

개정 후(2023. 5.)

(단위: 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 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00
4등급	과실 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00

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상기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2.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총 8개→3개)

결정된 건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분 8,590만원을 2026년에 지급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중 약 17억 2,800만원[390]의 포상금 지급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 4,000만원의 포상금은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포상금 지급(예정) 제재안건 목록>

(단위: 천원)

연번	회사명	제재안건 상정(예정)일	포상금안건 상정(예정)일	포상금 (예상)액	포상금 지급 여부
1	A사	2024. 10. 2.	2024. 12. 28.	12,900[1)]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완료 (331.9백만원)
2	B사	2024. 10. 2.	2025. 1. 22.	140,000	
3	C사	2024. 10. 2.	2025. 1. 22.	100,000	
4	D사	2024. 10. 23.	2025. 2. 12.	79,000	
5	E사	2025. 1. 8.	2025. 4. 23.	204,000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완료 (118.1백만원) **2026년 예산으로 지급 예정 (85.9백만원)**
6	F사	2025. 1. 22.	2025. 5. 8.	32,700	**2026년 예산으로 지급 예정 (1,727.9백만원)**
7	G사	2025. 7. 2.	2025년 하반기	325,000	
8	H사	2025. 10. 15.	2025년 하반기	168,000	
9	I사	2025. 10. 29.	2025년 하반기	37,500	
10	J사	2025. 7. 11.	2025년 하반기	345,000	
11	K사	2025. 9. 10.	2025년 하반기	650,000	
12	L사	2025. 10. 29.	2025년 하반기	3,400	
13	M사	2025. 12.(예정)	2025년 하반기	139,033[2)]	
14	N사	2025. 8. 6.	2025년 하반기	9,900	
15	O사	2025. 8. 6.	2025년 하반기	17,400	

주1) 2024년 12월 포상금 지급 의결(28.7백만원)이 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포상금 일부는 2025년 예산으로 지급

주2) 금융감독원 접수·검토대상 신고건에 대한 개정 포상규정 적용 건의 평균액

(자료: 금융위원회)

39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정치이며, 최종 제재수준 등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있음.

○ 또한, 2019년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융위원회 패소가 확정[391](2025. 7.)됨에 따라 포상금 추가 지급 소요[392]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포상금 규모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2026년도에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이 신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물론, 이 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겠으나, 과거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있었던 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는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의 증가[393]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394]

□ 이를 종합하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과소편성

391) 2019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포상금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신청을 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 이에 신고자가 제기한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포상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19구합63133 판결)하였으며, 2025년 7월 상고가 최종적으로 기각(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두33581 판결)되어 금융위원회의 패소가 확정되었음.

392) 금융위원회 추정 5억원 이상

393) 참고로, 2024년 기준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규모는 50억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6년도 예산에 ① 2025년에 지급이 결정되어 있는 포상금 소요, ②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재산정을 통하여 추가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 소요, ③ 2026년 신규 발생할 포상금 소요 등의 반영 여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말
회계 위반 과징금	5,163	9,355	19,339	28,070	9,669	42,608	28,365
신고 관련	707	3,123	5,084	1,219	840	5,035	4,378
회계 위반 과태료	276	284	252	353	67	169	185
신고 관련	40	38	48	-	38	-	-
합계	5,439	9,639	19,591	28,423	9,736	42,777	28,550
신고 관련	747	3,161	5,132	1,219	878	5,035	4,378

주: 관련 안건의 최종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394) 한편,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증가분을 수입 예산에 함께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총괄]

1. 성과계획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계획서’에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1개)-프로그램 목표(1개)-성과지표(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개(100.0%)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55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회계연도까지는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 7개의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만을 운영하고,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21년 이전 성과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 분	전 략 목 표	프로그램 목 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7	6	1	-
비율(%)	-	-	100	85.7	14.3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이전 목표 및 관리과제 내용>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부 문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1)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재정
	(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재정
	(3) 국민고충해소	일반재정
	(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재정
	(5) 행정심판	일반재정
	(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재정
	(7)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정 보 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청렴권익문화확산 등 7개 단위사업비 예산현액 555억원 중 92.4%인 513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단위로 1개만 운용함으로 인해 집행률이 92.4%임에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를 기록하게 됨.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단위사업별 성과달성률을 알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률 또한 전혀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예를 들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공익신고제도운영 세부사업' 및 '행정심판운영 세부사업'은 모두 집행률이 90% 미만이지만 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사업의 만족도 또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는 (舊)국가청렴위원회,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 (舊)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2008년 출범된 조직으로, 현재도 차관급인 3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등 크게 3가지의 업무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패방지업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유용하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만으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의 성과지표를 부활시키거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국가보훈부의 경우, 2022회계연도 이후에도 프로그램 단위 외에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성과지표 외에도 새로운 성과지표를 꾸준히 개발하여 사업별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이행 미흡

□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은 총 14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0건을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힘.

□ 14건 중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7건으로, 이 중 2025년 10월 기준 보고가 완료된 건은 2건에 불과함.

○ 또한,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권익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395]

<2025년도 예산안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 조치 결과>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과태료 징수결정액 등 현황을 고려하려 2026년 과태료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5년) 180백만원 → ('26년) 120백만원	조치 완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해석·기준을 면밀히 검토·적용하는 등으로 권익위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할 계획임	조치 완료

395) p.36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참조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3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한다.	○향후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액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법정 상환기간 내(3개월) 상환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 공공기관이 상환금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매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장기 연체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조치완료
4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수납률 증가 노력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2026년 본예산 편성 협조요청 공문 발송(2025. 9. 8. 245개 지자체) - 납부기한(3개월)을 도과한 기관에 납부독려 공문 발송(총 70회) - 장기 연체기관 대상 현지점검 실시(2개 기관) - 정무위 보고 예정	조치중
5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 800만원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조치중
6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2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우리 위원회는 '24년 위원장, 부위원장(3인)에 대한 업무추진비 배정액 9,7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한 8,500만원을 '25년에 배정하였으며,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중임	조치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7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 사용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도 국외 출장보고서를 차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용 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관용차를 운영하고 있음 ○규정상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대국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보고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조치 완료
8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고 통합 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소청·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하였으며('25.6월, 현재 90개 기관 통합완료),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통합해 나갈 예정임	조치중
9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 제도개선 연수 사업 예산을 축소(△48백만원)하였으며, ○'25년 말까지 수원국을 총 74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25.9월 기준 74개국·592명 외국 공직자 대상 반부패 연수 과정 실시 완료 ※ 2026회계연도 세부사업 폐지	조치 완료
10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25년도 신규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의 세부 과제로 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을 추진 - '25.5.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명 규모의 시민상담관 위촉 - '25.6.부터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상담·교육	조치 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수요 신청을 받아 시민상담관을 배정·지원토록 함 - 시민상담관이 각급 기관을 방문하여 '25.8월말 총 72회 상담·교육 실시 - 향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관련 국회 보고 예정 * (용어변경) 특별민원→특이민원, 상담요원→시민상담관	
11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초등학생 청렴캠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초등학생 청렴캠프 교육 횟수·인원 : ('24년) 2회·53명 → ('25년) 3회·150여명	조치 완료
1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나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 조치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2024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부패·공익신고 연도별 신고자보호 실적을 보고함 ○또한, 국회 업무 보고시 신고자 보호조치 실적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조치 완료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여부를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선택하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는 「행정심판 시행규칙」 개정 완료('25.9.) ○국선대리인 선임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중	조치중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14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 추진’ 중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으로 통합·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대의견에 포함된 홍보비(140백만원)는 ‘행정심판운영’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의결됨 ○원스톱 온라인행정심판사이트를 개통(‘25.6.) 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라디오, 옥외광고, 유튜브 광고로 전액 집행 완료	조치 완료

3.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 필요

1)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396] 등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청렴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2024년에는 71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하였고, 각급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39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청렴도 평가 주관 기관임에도 정작 평가에 빠져 있으므로 청렴도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아[397] 자체 청렴수준 측정 방안 마련 후 2023년부터 자체 청렴수준을 측정하고 있음[398].

○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의 종합청렴도는 88.3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5.9점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외부체감도가 3.9점 하락하고 내부체감도가 10.7점 하락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단위: 점)

연도	종합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	부패실태
		합계	외부(70%)	내부(30%)		
2024(A)	88.3	84.3	90.5	69.6	94.3	발생사건 없음
2023(B)	90.4	90.2	94.4	80.3	90.9	발생사건 없음
비교(A)-(B)	-2.1	-5.9	-3.9	-10.7	3.4	-

* 2025년도 자체 청렴수준 측정 용역은 현재 진행중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397)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시정)

398)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일반연구비로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와 함께 일괄 발주

○ 외부체감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고, 갑질행위 및 업무 처리기준·절차 공개 항목은 공공기관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외부체감도 항목별 결과 비교>

(단위: 점)

연도	부정청탁	사익추구	특혜제공	절차위반	소극행정	갑질행위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2024 (A)	93.2	94.4	92.2	90.9	88.5	91.1	83.5
2023 (B)	97.6	97.7	96.3	96.2	90.0	95.7	87.5
비교 (A)-(B)	-4.4	-3.3	-4.1	-5.3	-1.5	-4.6	-4.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내부체감도는 외부체감도에 비해 점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큰 항목은 부당지시(-15.9점), 갑질행위(-13.8점), 특혜제공(-12.8점) 등의 순이었고, 부당지시와 갑질행위 항목은 공공기관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내부체감도 항목별 결과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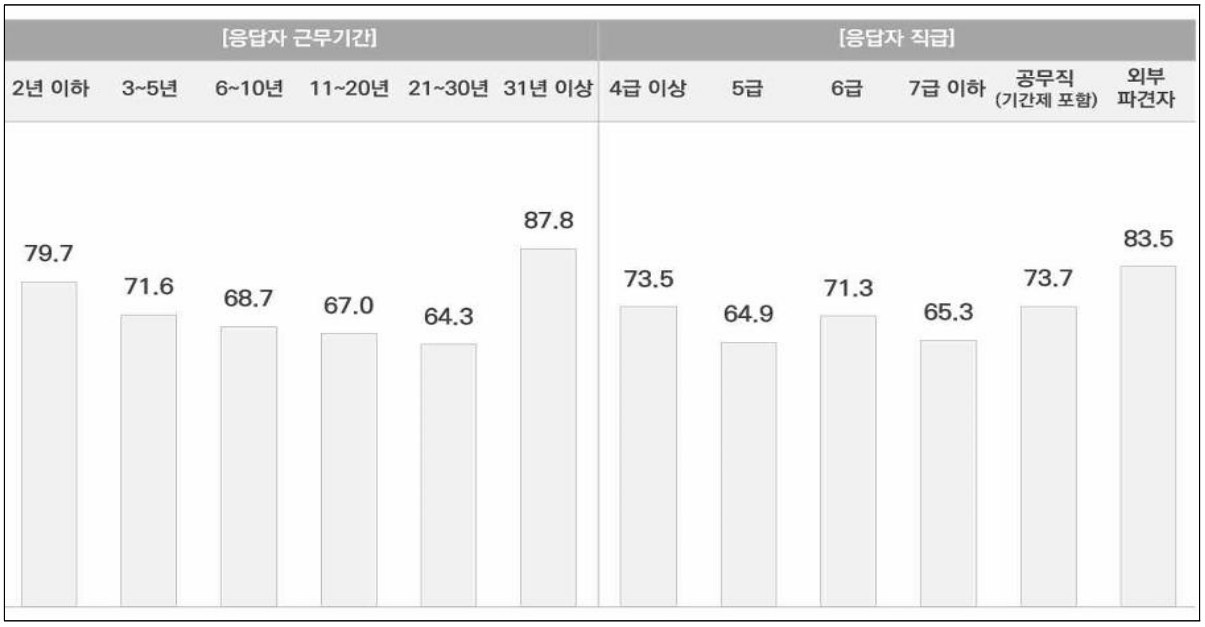
연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갑질행위
2024 (A)	58.2	69.0	63.9	78.6	61.9	75.9	59.3
2023 (B)	71.0	81.5	79.8	89.7	73.6	82.8	73.1
비교 (A)-(B)	-12.8	-12.5	-15.9	-11.1	-11.7	-6.9	-13.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응답자 특성별 내부체감도를 살펴보면, 근무기간 21~30년, 5급 직원의 체감 청렴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내부 직원에 비해 외부 파견자의 체감 청렴수준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응답자 특성별 내부체감 청렴수준>

(단위: 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청렴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 기관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개선하기 위한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자체 청렴수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청렴컨설팅 제도와 같이 원인과 문제점 분석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세입]

1. 과태료[39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만원(△33.3%) 감소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4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401]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402]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

399) 세부사업: 과태료(56-563)

4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000만원을 계상함.

<2026년도 과태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73	180	120	△60	△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실제 수납 가능 범위 내의 예산 편성 필요

□ 권익위는 2020년 3,000만원부터 2025년 1억 8,000만원까지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해오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함.

○ 권익위는 2025년 예산인 부패/공익/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각 6,000만원에 대해, 각 유형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6,000만원→4,000만원), 이는 최근 징수결정액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은 2023년 1억 2,800만원, 2024년 9,3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2,000만원임.

□ 그러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액상 괴리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징수결정액은 2022년 2억 6,000만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2024년은 9,300만원, 2025년은 10월 기준 2,000만원에 불과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보다 훨씬 저조한데, 최근 5년간 수납률은 최고 78.5%(2024년)에 불과하고, 2024년을 제외한 연도에는 모두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은 3,960만원에 불과함.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B)	이행강제금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2020	30	147	37	123.3	25.2	110
2021	60	200	40	66.7	20.0	160
2022	100	260	110	110.0	42.3	150
2023	110	128	△62	△56.4	△48.4	190
2024	160	93	73	45.6	78.5	20
2025.10	180	20	-	-	-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2025년 8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2020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97	7	7.2	9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50	30	60	20
2021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180	20	11.1	1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20	20	100.0	-
2022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170	20	11.8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90	90	100.0	-
2023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150	-	-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32	△62	△100.0	3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2024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53	43	81.1	1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30	30	100.0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2025. 10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10	-	-	1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	-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① 이행강제금 수납 5건(대법원 승소 1건), 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16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1건 중 76.1%가 취소되었음.

<2022년~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결정 2022.9.19.
5	2021-07-20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2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3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선고)
14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15	2024- 03-04	5백만원	5백만원	-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3.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 2024.5.13. - 2024.6.17. 수납
16	2024 -07-02	10백만원	-	1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17	2022- 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7.26. 수납
18	2022- 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6.30. 수납
19	2022- 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2.8.31. 수납
20	2023- 12-18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4.1.31. 수납
21	2022- 11-29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 2024.12.16. 수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권익위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하거나 소송 패소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전년도 미수납액이 포함되어 실제 수납액보다 과대 계상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6년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960만원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403]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00만원(△1.8%) 감소한 44억 5,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189	4,533	4,455	△78	△1.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의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하려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403) 세부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그런데,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세출 예산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404]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전체 및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본행정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집행함.

□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예산이 아니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을 각각 관련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음.

404)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인건비는 세부사업 코드 100~199, 기본경비는 세부사업 코드 200~299,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 코드 300~799를 부여하여 구분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8 (35만원×23회)	8 (35만원×23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3)	**4 (40만원×10회)**	**4 (40만원×10회)**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 - 364)	**14 (35만원×40회)**	**24 (50만원×48회)**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7 (35만원×20회)**	**7 (35만원×20회)**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8 (40만원×20회)**	**8 (40만원×20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세출예산은 편성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405]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운용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경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을 관련 주요 사업 경비로 이관 편성하여야 할 것임[406].

40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06)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를 편성한 것을 시정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함.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의 통합 편성 · 집행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던 신고자 보·포상금을 2025년 예산안부터 통합 편성[407]하였는데,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도 연도별 자문 소요의 편차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 부족 또는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 확대 적용 및 활성화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업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제도[408]'를 타 사업에 도입하는 등 제도의 일원화 및 확대가 예상되는 바, 예산 통합 운용을 통한 효율적 집행 및 원활한 제도 확대가 요구됨.

---

407) 사업별 부족, 불용 발생으로 매년 자체 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포상금 비목을 일원화

408) 2024. 2. 6.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부 신고자지원을 위한 조사 및 쟁송절차, 보호신청 등에 소요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제도'가 도입됨.

〈연도별 · 사업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23			2024			2025.10월 현재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8,050	3,550	44.1	8,050	2,300	28.6	8,050	4,900	60.9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4,000	3,100	77.5	4,000	5,500	137.5	4,000	1,550	38.7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 - 364)	12,600	12,050	95.6	12,600	9,500	75.4	14,000	5,950	42.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1136-366)	7,000	1,000	14.3	7,000	3,000	42.9	7,000	700	10.0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8,000	3,400	42.5	8,000	3,600	45.0	8,000	1,800	2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보호보상국 신설과 관련하여 수시직제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직제 심사 완료 후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을 통합 편성[409]하고, 우선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를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사업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별로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의 부족 또는 불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09) 보·포상금의 경우 동일한 부서 소관으로 통합 편성할 수 있었으나, 비실명 대리신고는 각 사업별 신고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바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2.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410]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는 부패·공익·청탁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렴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411]하여 2026년 예산안은 12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	-	-	1,274	1,274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은 범정부 반부패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 1,200여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음.

---

410) 세부사업: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1132-323)

411) 행정정보시스템운영(1132-320) 사업의 권익행정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시스템이고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은 범정부 시스템으로, 시스템 성격 및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가 달라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위해 분리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청렴포털 연도별 이용기관 확대 현황>

(단위: 개)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9월 현재
신고 가능 기관 수	349	912	928	1,225	1,2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청렴포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친화적 기능 도입 필요

□ 청렴포털의 2026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비에 12억 6,400만원, 운영경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내에 편성되었던 규모와 동일함.

<2026년도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물량·단가	금액
부패방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개발SW 유지관리	(개발비)9,656백만원×(요율) 9.34%	902
	· 상용SW 유지관리	(도입비)2,104백만원×(요율) 10.41%	219
	· 헬프데스크 운영	(IT지원기술자)2명×5.95백만원×12월	143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공공요금	1식(SMS등 3종)×6.5백만원	6.5
	· 일반수용비	1식(평가수당 등2종)×3.5백만원	3.5
합계			1,27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매년 12억 6,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 대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기능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렴포털의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은 2023년부터 실시[412]되었는데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 2024년에는 공공기관 추가, 2025년에는 대국민 추가 의견수렴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공공기관 이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 중 1건만이 반영되었고, 대부분 예산 투입 등의 사유로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413]되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5년의 개선의견에는 2024년 제시한 의견에 대해 피드백 없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의견을 제시[414]한 내용도 있음.

□ 또한, 타 범정부, 대국민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친화적 기능이 미흡[415]하므로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매뉴얼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등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7년 고도화 사업 진행 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

41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는 세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이어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시스템 구축 이후 2019년 공공기관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것임.

413) 온나라 시스템 연계 기능,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수령 내역 조회 기능 등

414) 신고자에게 부패, 공익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415) 범정부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동영상 매뉴얼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기능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416]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필요

□ 청렴포털 이용자의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헬프데스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 20%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이용자가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청렴포털 연도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 현재
국민	884,357	1,534,769	954,055	662,394	745,575
공공기관	3,002	11,593	16,175	20,876	24,787

* 대국민 이용자는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방문자 수로 집계, 공공기관 이용자는 누적 회원가입 기준으로 집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하위 4대 시스템 유형별 헬프데스크 이용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대국민	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의결	기타	합계
2022	실적	731	198	5,394	6	4	6,333
	비율	11.54	3.13	**85.17**	0.09	0.06	100
2023	실적	1,509	194	6,896	20	-	8,619
	비율	17.51	2.25	**80.01**	0.23	-	100
2024	실적	1,525	200	6,571	15	2	8,313
	비율	18.34	2.41	**79.04**	0.18	0.02	100
2025.9월 현재	실적	1,033	135	4,958	17	-	6,143
	비율	16.82	2.20	**80.71**	0.28	-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16) "공공기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또한, 매년 연말 실시하는 청렴포털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국민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만족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청렴포털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연도	2021	2022	2023	2024
대국민	77.9	82.4	82.7	86.4
공공기관	82.7	78.3	79.9	78.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구체적으로 2024년 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사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에는 청렴포털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 2023년 만족도 조사 시에는 청렴포털 이용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 실시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그런데,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자로 하는 교육은 연 1회, 2시간 가량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그쳤음[417]. 온라인 교육은 영상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여 홈페이지 내 동영상 교육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면 교육이 없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은 헬프데스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

417)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등 권역별 통합 설명회에서 15분~20분 정도 청렴포털 소개 시간이 포함된 바 있음.

<공공기관 청렴포털 연도별 온라인 교육 현황>

연도	일시	방법	참석자
2023	7. 25.(화) 14:00~15:40	온라인 교육 (ZOOM 이용)	공공기관 신고처리 담당자 등 318명
	8. 29.(화) 14:00~15:40		공공기관 신고처리 담당자 등 110명
2024	6. 17.(월) 14:00~16:00		공공기관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등 509명
2025	6. 23.(월) 14:00~16:00		공공기관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등 435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을 이용한 2024년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5.3% 급증한 21,659건으로 역대 최대이고, 공공기관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스템 이용자 교육 강화를 통한 각급 공공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청렴포털 신고 접수 건수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9월
국민권익위원회	11,336	10,786	12,346	10,859
공공기관	6,422	7,998	9,313	7,807
합 계	**17,758**	**18,784**	**21,659**	**18,66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은 1,200여개 기관이 신고처리 외에도 실태조사, 청렴도평가,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이용자 교육부터는 온라인으로 영상 녹화를 진행하여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고, 온라인(영상) 도움말·FAQ 제공, 문의게시판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의 운영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수행 업무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상담창구운영[418]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세종)와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7.9%) 증가한 102억 8,3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콜110운영’ 사업은 국민이 정부민원을 단일번호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8.1%) 증가한 100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			(B-A)/A
종합상담창구운영	11,129	9,526	9,526	10,283	757	7.9
- 국민콜110 운영	10,967	9,330	9,330	10,087	757	8.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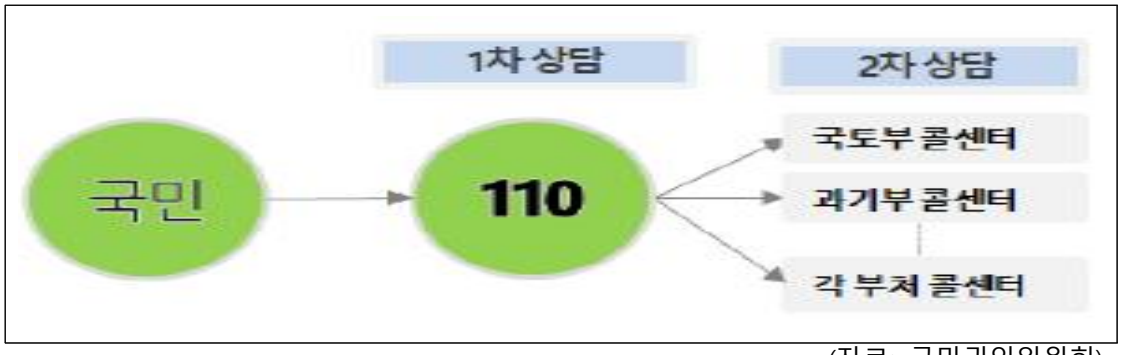
418) 세부사업: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2) 검토의견: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상담인력 확보 필요

□ 국민콜110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이 단일번호 110번을 통하여 정부 업무와 관련된 문의·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6개 부처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정부 관련 일반상담 서비스 및 대표번호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2018년),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업무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이상 2014년), 인사혁신처(2015년)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419] 교육부(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외교부(이상 2015년),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이상 2016년)의 업무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는 대표번호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420]

<110대표번호 연계사업 민원상담 흐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19)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이상 3개 부처는 별도로 부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420) 대표번호 연계사업이란 부처 민원에 대한 문의를 110번으로 한 경우, 1차적으로 110콜센터에서 상담하고, 추가적인 상담(2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콜센터 번호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그런데, 국민콜110의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인입콜(국민콜110에서 접수한 상담콜), 응대콜, 일평균 인입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응대콜 중 20초 내에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 비율을 나타내는 서비스레벨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4년에는 그 수치가 크게 하락하여 80% 이하를 기록하였음.

○ 응대율과 서비스레벨의 격차 또한, 2022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콜110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려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냄.

<2021년~2024년 국민콜110 상담 현황>

구분	인입콜	응대콜	일평균 인입콜*	응대율 (A)	서비스레벨** (B)	차이 (A-B)
2021년	3,097,391건	2,851,423건	11,346건	92.1%	80.9%	11.2%p
2022년	2,665,492건	2,482,728건	9,826건	93.1%	85.0%	8.1%p
2023년	2,552,476건	2,393,661건	9,428건	93.8%	84.5%	9.3%p
2024년	2,439,681건	2,156,801건	9,178건	88.4%	77.5%	10.9%p

* 일평균 인입콜 : 평일 인입건/평일 근무일수
** 서비스레벨: 응대콜 중 20초 내에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의 비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부족 및 충원 지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110콜센터 상담사는 2021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휴·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2021년~2024년 콜센터 상담사 휴·퇴직자 수>

(단위: 명, 연말 기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휴·퇴직자 수	25	22	22	32
휴직자	14	7	14	12
퇴직자 (3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11	15	8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중도퇴직 인원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휴직·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부족한 상담사 인원이 적시에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2024년 상담사 중도퇴직 인원 및 이로 인한 예산 불용액>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중도퇴직 인원 수	18	10	24
예산 불용액	245,188	195,719	435,8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매년 상담사 인건비(상용임금) 예산은 정원(228명)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집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을 유발하게 됨.

<2021년~2024년 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6,838	7,014	7,202	**7,401**
집행액(B)	6,343	6,520	6,591	**6,785**
차이(A-B)	495	494	611	6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상담사 인력 확보 문제는 국민콜110을 이용하는 국민이 상담사와의 신속한 연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국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게 됨.

○ 국민콜110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상담사 연결 신속성과 관련된 항목의 조사결과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개선사항으로 '상담원 연결' 관련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

<2022년~2024년 국민콜110 만족도 조사(연결 신속성) 결과>

(단위: %, 점)

구 분	사례 수	'상담원과 신속하게 연결되었다' 항목					항목 서비스만족도 점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사항목 중	
								최고 점수	최저 점수
2022년	(2012)	63.7	18.7	11.0	3.7	2.8	84.2	91.3	84.2
2023년	(2019)	48.3	21.0	19.4	6.9	4.4	75.5	85.2	75.5
2024년	(2000)	(해당 설문항목 삭제)						90.6	85.8

<2022년~2024년 국민콜110 만족도 조사(서비스 관련 개선 및 제안점) 결과>

구 분	사례수	응답내용*	빈도수
2022년	(2012)	전화 연결이 어렵다	126
		상담원 연결이 신속하지 않다 /대기시간이 길다	48
		상담원이 친절하지 않다.	19
2023년	(2019)	상담원과 연결이 신속했으면	91
		상담원과 연결이 잘 됐으면	67
		대기시간이 짧았으면	28
2024년	(2000)	신속한 상담 연결/연결이 너무 오래 걸린다	66
		원활한 상담 연결/연결이 어렵다	49
		상담원의 친절한 태도 필요	15

* 서비스 관련 개선 및 제안점에 대하여 응답한 의견 중 빈도수 1위~3위까지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의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 인력 중도 퇴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상담 인원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고충민원조사활동[421]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9,900만원(18.7%) 증가한 18억 9,9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27.6%) 감소한 1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299	18.7
- 특이민원 중점관리	-	145	145	105	△40	△27.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21)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2) 검토의견: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및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이민원(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① 특이민원 시민상담관(특이민원 상담요원) 운영, ②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교육·컨설팅 실시, ③ 특이민원 피해 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으로 계획되었음.

<2025년도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계획>

구 분	내용	편성내역
특이민원 중점관리(신규)	-	1억 4,500만원
① 시민상담관 운영	분야별 전문가·민원처리 베테랑을 활용하여 **특이민원 상담·설득·대안 제시 등 수행**	5,000만원 (25만원×200건)
②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교육·컨설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실시**	4,500만원 (450만원×10회)
③ 정책연구용역	특이민원 피해 현황 실태조사·분석을 통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하는 연구 추진	5,000만원 (5,000만원×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중 2025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을 감액하고, 민원 업무 현장 방문, 워크숍

교육 등을 위한 출장 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민상담관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구 분	2025년	2026년
시민상담관 수당	**5,000만원**	**5,000만원**
워크숍 등 개최	4,500만원	4,500만원
정책연구용역 수행	5,000만원	-
현장 방문 등 출장 여비	-	1,000만원
계	1억 4,500만원	1억 5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 중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사업은 타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특이민원 상담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상담관을 배치하고, 시민상담관은 타 기관의 특이민원의 상담·설득·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민상담관이 각 기관에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음.

〈2025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방식〉

타 기관	➡	타 기관	➡	권익위	➡	권익위
특이민원 발생		특이민원 상담 요청		특이민원 운영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통보 → 시민상담관 배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시민상담관 20명을 위촉하였으며, 9월 말 기준 현재 총 110건의 시민상담관 활동이 이루어졌음.

□ 그런데, 동 사업의 현재까지 활동 실적을 보면, 시민상담관이 특이민원을 상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던 사업계획과 달리, 시민상담관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컨설팅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시민상담관 활동 실적>

구분			활동 실적 건수
대상	내용		
對 공직자	계		109건
		교육	72건
		상담	37건
對 민원인	계		1건
		상담	1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는, 최초 특이민원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동 사업의 목적·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상담관의 활동 내용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하여 운영된다면,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특이민원 대응 지원” 효과 달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모집 공고상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활동 내용〉

- **(특별민원 대응 지원)** 위원회 및 각급 기관 특별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 청취 및 설득·대안 제시, 관련 법령 설명 등 특별민원 대응 지원
  ※ 상담요원이 특별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님
-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각급 기관의 특별민원 대응 요청에 따라 요청 기관을 방문하여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 등 교육·컨설팅 지원
- **(피해공무원 상담 및 법적 대응)** 특별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고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 지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식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422)]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의 내역사업인 ‘청렴컨설팅 운영’ 사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23)]에 따라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741	△243	△8.1
- 청렴컨설팅 운영	41	60	6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컨설팅 방법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개 멘토기관(청렴도 1~2등급 기관)과 2~3개 멘티기관(청렴도 4~5등급 기관)이 그룹을 이루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멘토·자문위원·위원회가 멘티기관의

422)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4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14개 그룹(28개 멘티기관)을 선정·실시함.

○ 2023년부터는 컨설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멘티 기관 중 일부를 별도 선정하여 '심층진단·분석[424]'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1,800만원[425]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7개 기관을 선정·실시함.

<연도별 청렴컨설팅 운영 내역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청렴컨설팅 운영	18	42	42	60	60
-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18	18	18	18	18
- 심층진단·분석 (일반연구비)	-	**24**	**24**	**42**	**4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흐름도>

선정 (1월)	진단분석 (2~4월)	관리 (5~8월)	확산 (9월~11월)
희망기관 신청 및 대상기관 선정 ('25년 기준 28개 멘티기관 선정)	청렴도 저조원인 및 문제점 분석	맞춤형 대안 제시 및 이행상황 점검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 공유
	+ 심층진단·분석('25년 기준 7개 기관, 3~6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24) 기관 내·외부의 고착화된 부패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하여 조직 내부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

425) ('24) 5개 기관 × 4.8백만원 → ('25) 7개 기관 × 6백만원

2) 검토의견

(1) 청렴컨설팅 효과의 지속성과 내재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낮은 점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은 컨설팅 기관의 종합청렴도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은 컨설팅 실시 당해연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보인 기관이 다수였으나, 1~2년 경과 후에는 일부 기관에서 청렴도 등급이 초기 미흡 등급(4~5등급)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됨.

<연도별 청렴컨설팅 실시기관(멘티)의 종합청렴도 변화 분석>

연도	컨설팅 대상기관	컨설팅 당해연도	1년 경과	2년 경과
2021년	22개	상승 17개 동일 3개 하락 2개	상승 15개 **동일 7개** **하락 없음**	상승 12개 **동일 8개** **하락 1개** *평가제외 1개
2022년	23개	상승 17개 동일 6개 하락 없음	상승 14개 **동일 8개** **하락 1개**	상승 13개 **동일 9개** **하락 1개**
2023년	24개	상승 13개 동일 11개 하락 없음	상승 16개 **동일 7개** **하락 없음** *평가제외 1개	25년 평가 진행중
2024년	24개	상승 18개 동일 5개 하락 1개	25년 평가 진행중	

* 청렴도 변화 분석 기준: 컨설팅 이전 연도 등급과 비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컨설팅 효과가 단기간에는 긍정적이나, 지속성과 내재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므로[426], 컨설팅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컨설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상 기관의 조직 문화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후속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26)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유사 지적이 있었음.

(2) 심층진단 · 분석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단·분석'의 목적은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및 청렴도의 장기적인 상승[427]에 있으므로, 청렴컨설팅만을 받은 기관과 비교하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및 2024년의 컨설팅 실시 기관 중 각각 4개 기관이 2등급 이상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우수기관(2등급)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모두 컨설팅만을 실시한 기관으로, 심층진단·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개선된 사례는 없음.

<청렴컨설팅 실시기관 및 심층진단 · 분석 실시기관 청렴도 개선 비교>

연도	컨설팅 대상 (심층진단·분석 대상)	컨설팅만 실시한 기관	컨설팅+심층진단·분석 실시 기관
2023년	24개 (4개)	20개 기관 중 **4개 기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개선	4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없음**
2024년	24개 (5개)	19개 기관 중 **4개 기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개선	5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없음**

*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은 현재 진행중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심층진단·분석은 시행한 지 3년차로 장기적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428]가 있으나 아직 뚜렷한 차별적 효과

427)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용역 제안요청서

428) 현재 기준 2023년 실시기관의 2024년 청렴도 상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컨설팅만 실시한 기관은 상승 13개, 동일 7개 / 심층진단·분석 실시 기관은 상승 3개, 평가제외 1개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 컨설팅 예산의 2배 이상을 투입하여 소수 기관('25년 기준 7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청렴컨설팅 수용률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심층진단·분석 예산을 일반 컨설팅으로 이관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렴컨설팅 신청기관 대비 수용률>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 그룹 수	24개 그룹	32개 그룹	35개 그룹	39개 그룹
선정 그룹 수	11개 그룹	12개 그룹	12개 그룹	14개 그룹
수용률(선정비율)	**45.8%**	**37.5%**	**34.3%**	**35.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층진단·분석' 사업이 일반 컨설팅 사업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수 없음.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42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600만원(23.1%) 증가한 29억 6,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967	556	2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계획의 현실화 및 구체화 필요

□ 내역사업인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은 청렴연수원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150%) 증가한 2억원이 편성되었음.

429)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내내역사업인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에 일반연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렴연수원은 단기교육과정(3일 이하) 위주로 운영[430]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분야를 망라하고, 학습자에 맞춘 장기적·전문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예산안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일반연구비(260-01): 8,000만원** 가. 청렴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500만원×2식 =7,000만원 나.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000만원×1식 =1,0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2억원(+1억 2,000만원)** 가. 청렴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500만원×1식 =3,500만원(△3,500만원) 나.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500만원×1식 =1,500만원(+500만원) **다.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1억 5,000만원(신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교육과정 개발 · 연구 계획(안)>

구분	내용
장기 교육체계 설계	·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한 장기 교육모델(2~4주)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 - 공직 입문단계의 신규 공직자 및 일선 현장의 민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내재화 및 민원 처리·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과정 도입 및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	· AI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청렴교육 강사 양성체계 및 질적 관리방안 연구 등을 통해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30) '25년 연수원 교육계획 중 원내 집합교육(84회) 중 3일 이하 교육은 약 94%(79회)

□ 장기 교육의 주 대상으로 계획 중인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5급 신임관리자과정은 16주(집합 13주, 온라인 3주), 7급 신규자과정은 4주(집합 3주, 온라인 1주)로, 공직가치, 국정비전, 직무·정책기획(직무·전문성), 공직리더십(성장 잠재력) 등의 교과가 편성되어 있음. 상기한 교육 과정에 비추어 공직가치 중의 하나인 청렴에 대한 교육과정을 2주~4주라는 장기간 교육 과정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직자 등이 그러한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교육 체계 설계시 교육 대상 수요 분석, 참여 가능성 및 교육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권익위는 ‘장기 교육체계 설계’ 외에도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가지 내용을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타 부처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1억 5,000만원 수준임. 다른 교육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에 비추어 2026년 예산안은 두 가지 장기 교육과정을 완성도 있게 연구·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과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 · 기관 교육과정 개발 예산 현황[431]>

연도	부처·기관명	용역	예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1.5억원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체부 산하 기관)	문화다양성 전문인력(교원) 직무연수 커리큘럼 연구개발	1.9억원
2023년	대한체육회 (문체부 산하 기관)	2023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과정 교안 개발 용역	1.5억원
2024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계급별 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사업	1억원
2025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식약처 산하 기관)	mRNA 백신 교육과정 개발 용역	1억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교육과정의 현실적 운영 가능성, 공직자 등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부실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31) 국민권익위원회는 교과목, 콘텐츠 개발 사례는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례는 없음.

(2) 대학 청렴교육 예산 규모 조정 필요

□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일반국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원(6.0%) 증가한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교육보조원 인건비 등의 예산과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나뉘는데, 교육운영비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 8,000만원(△37.6%)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 3,000만원(△50.0%)을 감액하고, 청렴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2,784만원(190.2%)과 업무협의를 위한 사업추진비 200만원(4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운영비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2025년 교육운영비: 3억 4,520만원	□ 2026년 교육운영비: 3억 6,504만원(+1,984만원)
○ 일반수용비(210-01): 6,720만원 가. 청렴교육 운영비: 420만원×16회=6,72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억 9,504만원(+1억 2,784만원) 가. 청렴교육 운영비: 424만원×46회=1억 9,504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억 1,300만원 가.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 1억 300만원 나.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5,500만원×2식=1억 1,0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억 3,300만원(△8,000만원) 가.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 1억 300만원(전년동) 나.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3,000만원×1식=3,000만원(△8,0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5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기관 업무협의 5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700만원(+2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기관 업무협의 7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6,0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개발: 3,000만원×2식=6,0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3,000만원(△3,0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개발: 3,000만원×1식=3,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확대를 위한 강사료 및 강사여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는 설명임.

○ 2025년 9월말 기준 2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정규교과 10개교, 청렴특강 20개교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함.

<국민권익위원회 ·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현황>

('25.9월말 기준)

연번	학교명	지역	체결일자	연번	학교명	지역	체결일자
1	청주교대	청주	'25.2.6.	12	충남대	대전	'25.6.18.
2	호서대	충남	'25.3.12.	13	숙명여대	서울	'25.6.19.
3	한국교원대	청주	'25.3.26.	14	대구대	대구	'25.6.27.
4	서원대	청주	'25.4.1.	15	동국대	서울	'25.7.9.
5	국립공주대	공주	'25.4.15.	16	대구경북과기원	경산	'25.7.17.
6	부산대	부산	'25.4.25.	17	이화여대	서울	'25.7.24.
7	전북대	전주	'25.5.7.	18	목원대	대전	'25.7.28.
8	청주대	청주	'25.5.8.	19	인천대	인천	'25.8.13.
9	한양대	서울	'25.5.9.	20	국립부경대	부산	'25.9.18.
10	광주과기원	광주	'25.5.23.	21	공군사관학교	청주	'25.9.22.
11	신성대	당진	'25.6.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청렴교육 강화 예산 편성 내역>

구분	개교	산출내역	산출내역
대학 청렴 정규교과 운영(일반수용비)	10	9,900만원	· 강사료 : 60.7만원×14차시×10개교 · 강사여비 : 10만원×14차시×10개교
대학협업 청렴특강 (일반수용비)	20	2,900만원	· 강사료 : 135만원×20개교 · 강사여비 : 10만원×20개교
간담회·업무 협의 등 (업무추진비)	30	200만원	·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 10만원×20개교
총계		**1억 3,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대학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전사회적 청렴 문화 확산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규교과 및 청렴특강 운영에 소요되는 외부 강사료 등을 전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1개 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내용을 보면 비용 부담에 관해 협의하도록 명시[432]되어 있고, 실제 '25년 정규교과를 운영 중인 대학 중 외부 강사 외 대학 자체 강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예산안은 정규교과 10개교 운영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 9월말 기준 정규교과 운영이 확정된 곳은 총 4개교(5회)에 불과함[433].

<2025년 대학 정규교과 운영 현황>

학교명		집행(예상)액 (여비포함)			비고
		강사료	공연료	총계	
울산과학기술원	1학기 (8차시)	580천원 × 7회 = 4,059천원 (차시 당 2시간)	2,000천원 × 1회 (공연)	6,059천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1차시)
	2학기 (8차시)	714천원 × 7회 = 5,000천원 (차시 당 2시간)	1,000천원 × 1회 (공연)	6,000천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1차시)
한양대학교 (2학기, 15차시)		500천원 × 9회 = 4,500천원 (차시 당 1시간)	-	4,500천원	대학 자체 강사(2차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4차시)
전북대학교 (2학기, 15차시)		750천원 × 2회 = 1,500천원 (차시 당 3시간)	500천원 × 1회 (공연)	2,000천원	대학 자체 강사(13차시)
한국교원대학교 (2학기, 15차시)		500천원 × 13회 = 6,500천원 (차시 당 2시간)	1,500천원 × 2회 (명사특강, 공연)	9,500천원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32)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 현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33)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1월 현재 정규교과 추가 개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임.

○ 셋째, 동 내역사업의 교육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대학생, 청년 세대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것은 대상자별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434].

<교육 대상별 예산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 유형	대상	집행액		
		'23년	'24년	'25.9월
초등학생 청렴캠프	**초등학생**	58	44	34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초중고 학생**	64	105	53
수능 이후 고3 청렴교육	**고등학생**	12	5	-
대학협업 청렴특강	**대학생**	4	6	20
대학 정규교과 운영		-	-	6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청년 세대**	46	59	41
청년인턴 청렴교육		-	7	10
퇴직공직자 활용 찾아가는 청렴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24	미운영*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이 운영되었으나('17년~), '23년 사업 중단으로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현재는 미운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실제 운영 실적 및 비용 부담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렴교육의 수혜 계층 전반에 걸쳐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434)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 지원이 가능한 초중고와 달리 대학 청렴교육의 경우 직접 지원이 필요하기에 예산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함.

(3) 학술지 발간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내역사업인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위원회 업무와 새로운 반부패·권익구제 관련 이론 등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0만원(25%) 증가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술지 발간을 전년 대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편성[435]하였음에도, 편집비, 원고료 등에 440만원, 편집·윤리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포상금 신설에 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예산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2,800만원 ※ 2회 발간 기준 ○ 일반수용비(210-01): 2,800만원 가. 학술지 발간: 1,980만원 · 편집비: 65만원×2회=130만원 · 원고료: 5만원×20면×9편×2식=1,800만원 · e-book 제작: 50만원×1회=50만원 나. 편집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820만원 · 안건검토수당: 5만원×7인×9편×2회=630만원 · 편집수당: 10만원×7인×2회=140만원 · 연구윤리위원수당: 10만원×5인×1회=50만원	□ 2026년 예산: 3,500만원(+700만원) ※ 1회 발간 기준 ○ 일반수용비(210-01): 3,440만원(+640만원) 가. 학술지 발간: 2,420만원(+440만원) · 편집비: 360만원×1회=360만원 · 원고료: 8만원×25면×10편=2,000만원 · e-book 제작: 60만원×1회=60만원 나. 편집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020만원(+200만원) · 안건검토수당: 5만원×14인×10편=700만원 · 편집수당: 20만원×12인=240만원 · 연구윤리위원수당: 20만원×4인=80만원 ○ 포상금(310-13): 60만원(+60만원) 가. 우수 논문 포상금: 30만×2회=60만원(+6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35) 2024년과 2025년 모두 2회 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1회 발간(2025년은 10월 31일 발간)

□ 그런데, 타 기관의 학술지 예산 단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법제」, 감사원의 「감사논집」, 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 등과 비교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편성한 원고료, 편집수당, 연구윤리위원수당 등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음.

<타 기관 학술지 예산 편성 단가>

구분	학술지명	원고료	논문 심사료 등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200만원** (8만원×25면×10편=2,000만원)	-안건검토수당: **5만원** (5만원×14인×10편=700만원) -편집수당: **20만원** (20만원×12인=240만원) -연구윤리위원수당: **20만원** (20만원×4인=80만원)	**30만원** (30만원×2인=60만원)
법제처	법제	**100만원** (5만원×20면×8편×4회=3,200만원)	-안건검토수당: **5만원** (5만원×5인×8편×4회=800만원) -편집수당: **10만원** (10만원×7인×4회=280만원) -연구윤리위원수당: **10만원** (10만원×10인×1회=100만원)	-
감사원	감사논집	**100만원** 100만원×9편=900만원	-논문 심사료: **10만원** 10만원×50편=500만원 -편집위원회 자문료: **20만원** 20만원×10인×3회=600만원	-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50만원** (기획논문 외부 저자 2인 한정, 그 외 원고료 없음.)	-논문 심사료: **5만원** (동일위원 재심사료 2만원) -편집위원회 자문료: **20만원** (서면 10만원)	-

(자료: 각 기관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의 「법제」 등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로, 인지도가 높아 투고가 많은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은 '24년 창간된 미등재 신생 학술지이므로 투고 동기가 낮아 우수 논문 투고를 위한 유인이 필요하므로 원고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설명임[436].

□ 그러나, 당초 2회 발간 계획에서 1회 발간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로 투고 논문 증가('24년 16편→'25년 21편) 추세 등으로 운영 여건상 연 1회만 발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미 계획보다 많은 논문이 투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보전금(31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포상금 관련 공통집행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6)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창간 2년차임을 고려하여 발간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기보다 타 기관의 규모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436)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논집」의 경우 201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전 원고료는 200만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임.

7.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437]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신고제도 교육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00만원(△9.2%) 감소한 49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4,994	△506	△9.2
- 신고자 보·포상금 등	4,104	5,425	4,875	△550	△10.1
- 제도 운영경비 등	56	60	84	24	40.0
- 공익신고제도 교육	15	15	35	20	1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①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근거 마련 필요

437)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의 내역사업인 ‘제도 운영경비 등’ 사업은 합리적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자문 사례금 지급,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40.0%) 증가한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도 운영경비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제도 운영경비 등	56	60	84	24	40.0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30	30	-	-
-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	14	14	순증
- 보호보상제도 운영 지원		19	29	10	
-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11	11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 중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내내역사업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중요 보호사건을 심의할 민관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안건검토 사례금, 회의 운영경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보호심의위원회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산출 근거
▪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4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7명 × 4회 = 4.2
(안건검토 사례금)	300천원 × 7명 × 4회 = 8.4
(회의 운영경비)	350천원 × 4회 = 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심의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이고, 사회적 이슈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보호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심의할 예정으로 분기별 1회, 연간 4회 기준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준하여 편성하였음.

<보호심의위원회 개요>

목 적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
심의 내용	사회적 이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보호사건의 처리방향 등
구 성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민간단체, 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 분야 전문가 등 7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보호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438]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국회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구성·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규모 등 운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4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설치 근거 등 주요한 내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나, 심의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439]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및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규정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보호심의위원회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신고자 및 관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보호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 설치 근거뿐 아니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3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편), p.289

② 보호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보호 절차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보호의 적시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조치, 신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제도 전체를 포함한 평균 처리기간은 ('23년) 158.3일 → ('24년) 76.6일 → ('25년) 49.0일로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접수 건수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1	287	252	45	37	20	150	100.9
2022	289	244	47	25	28	144	110.4
2023	297	358	27	39	39	253	158.3
2024	466	464	34	69	30	331	76.6
2025.9.	588	486	40	28	10	408	49.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 심의 절차로 인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 방안 및 보호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자 보호 교육영상 제작 예산 적정 비목 편성 필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의 내역사업인 ‘신고제도 교육’ 사업은 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133.3%) 증가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고제도 교육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신고제도 교육	15	15	35	20	133.3
- 공공,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9	10	10	-	-
-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6	5	5	-	-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영상 제작	-	-	12	12	순증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	-	8	8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기관 담당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 영상·자료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영상 제작에 1,200만원, 교육 자료 제작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신고자 보호 교육 관련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내역	산출 근거
일반수용비 (210-01목)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	12,000천원 × 1식 = 12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10천원 × 4권역 × 200부 = 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예산안 편성 지침>

일반수용비(210-01목)	일반용역비(210-14목)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영상 제작 사업비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1.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440]: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의 편성 비목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성과를 홍보·공유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2.6%) 감소한 18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2,017	1,938	1,888	△50	△2.6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578	478	478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485	500	450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	174	180	181		
-개인정보보호 정책 운영지원	780	780	77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40)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2) 검토의견

□ 이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공유’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날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행사 등을 추진함.

□ 그런데 동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정책 홍보 행사(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주간) 관련 예산을 모두 일반용역비(210-14)[441]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각각 금융의 날, 회계의 날, 소비자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이는 것과 대비됨.

441) 일반용역비(210-14) : 행사대행 등 기타 일반 업무의 대행 용역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기획재정부)

〈타 부처 유사사업 예산 편성 내역과 비교〉

부처	정책성과 공유 사업	편성내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중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	**<90.7백만원>** 일반용역비 90.7백만원
금융위원회	**금융의 날**	**<90백만원>** 일반수용비(심사수당, 기념품) 13.3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일반용역비 45백만원(행사준비,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0.8백만원, 사업추진비 0.9백만원
금융위원회	**회계의 날**	**<77백만원>** 일반수용비 6.4백만원, 임차료 30백만원, 일반용역비 38백만원, 국내여비 0.8백만원, 사업추진비 1.8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소비자의 날 행사**	**<43백만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일반용역비 39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자료: 각 부처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등이 2023년까지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4년부터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출연금 편성 구조를 준용하여 행사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통합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 정책성과 공유행사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출연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취지[442]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행사 예산을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42)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 책임성 확보 등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443]: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71.8%)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150	△381	△7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2025년까지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인정보 교육 지원(1031-302)” 사업으로 이관함.

443)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1031-304)

2) 검토의견

(1) 예산 세부사업구조 개편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사업이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에는 신기술개발지원 사업만 남게 되었음.

○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은 ①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444]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사업과 ② 기술개발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사업[445]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446]에 따라 2026년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

○ 이에 따라 2026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기술개발 정책연구 및 과제기획 명목으로 1억 5,000만원만 편성되었음.

444) 개인정보 보호ㆍ활용기술을 발굴ㆍ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회의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기업에게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445)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함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사업 분야 및 방향에 적합한 맞춤형 멘토링 매칭, 투자유치 및 IR 교육 등 사업화를 전반적으로 지원함

446)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3. 9.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내역사업	2025년 예산	2026년예산안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지원	①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보급: 450백만원	① <전액 감액 편성> * 타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폐지
	② 기술개발 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 81백만원 * PbD 시범 인증	② 기술개발 정책연구 및 과제 기획 등: 150백만원 * PbD 시범 인증 품목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교육: 334백만원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99백만원	- * 개인정보 교육지원사업으로 이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편, 보호위원회는 ② 기술개발과제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447]) 인증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PbD 시범 인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PbD 시범 인증[448] 사업은 개인정보 처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위원회가 PbD 인증서 및 인증마크[449]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6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증 대상 제품군을 확대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447)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448) ▲(인증기준) 4개의 인증영역 총 71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인증절차) 신청접수 → 제품 선정 → 인증시험(㈜한국IT평가원) → 인증서 부여
▲(인증체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험·인증 수행

449)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마크>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bD’ 이니셜을 각각의 개인으로 묘사하고 전체적 형상은 방패로 표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강조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주요사업이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PbD 인증 시범사업만 남게 되었으며, 현재 그 외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PbD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PbD 인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어 PbD 인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PbD 인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시범 운영 중인 상황임.

<PbD 시범 인증 사업 경과>

○ ('22년)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조사 및 PbD 인증항목 개발
○ ('23년) 3종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 (적합) 1개 제품(가정용 CCTV SK쉴더스(주))
  - (부적합) 3개 제품(취약점 보완 불가로 미인증)
○ ('24년) 4종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추진 및 인증마크 확정(전액 위원회 예산, 사업자 부담 없음)
  - (적합) 3개 제품(로봇청소기 삼성전자㈜,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엔트랩,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블록오디세이)
  - (부적합) 1개 제품(취약점 보완 불가로 미인증)
  - (인증마크) 인증 제품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착
○ ('25년)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중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재 시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시범 인증 4년차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PbD 인증제 도입 및 확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450]: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해외 주요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강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대상 규제대응을 지원하며, 동등성 인정[451] 및 국외이전 인증제도[452]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3,400만원(△39.3%) 감소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 GPA[453]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해 일시적으로 증액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임.

---

450)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1031-305)

451) 동등성 인정: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내(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인정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인정받은 대상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국내에서의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이전 및 처리 가능.

452)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호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제도

453) 미, 영, 일, EU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1,442	2,376	1,442	△934	△39.3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597	1,746	571	△1,175	△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03**	**315**	**552**	**237**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42	315	319	4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은 글로벌 개인정보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며, 국외 이전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를 운영하는 사업임.

○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454]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45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국외이전전문위원회[455]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1) 국외이전 승인 2) 동등성 인정 3)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현재는 동등성 인정을 위한 평가 기능만 수행하고, 국외 이전 인증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평가한 사례는 아직 없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 등 회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산출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일반수용비(210-01): 19,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19,000천원) · 세부산출 : 12회×1,583천원=19,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20,000천원) · 세부산출 : 5회×4,000천원=20,000천원
○ **임차료(210-07): 16,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16,000천원) · 세부산출 : 4회×4,000천원=16,000천원	○ **임차료(210-07): 5,000천원** 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5,000천원) · 세부산출 : 5회×1,000천원=5,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455) 2024년 1월 30일 최초 구성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학계 2명, 법조계 3명, 산업계 2명, 시민단체 2명, 기타(한국인터넷진흥원) 1명

□ 그런데 2024년 1월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24년 3회, 2025년 1회로, 총 4회이며, 2024년에는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사에서, 2025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음. 즉, 그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사례가 없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회의 개최 실적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요 안건
2024. 1.	**개인정보위 청사**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및 운영세칙 의결
2024. 10.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여부 중간 평가
2024. 11.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평가 의결
2025. 7.	**서면**	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서면 검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2026년에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년간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실적이 없고, 해당 회의를 특정 일자에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위원회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호위원회는 2026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를 약 5차례 운영할 것은 기준으로 회의체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5번의 회의를 모두 외부 회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456]: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검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9,200만원(81.1%) 증가한 64억 5,6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328	3,564	6,456	2,892	81.1
-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314	314	-	-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2,537	2,214	5,742	3,528	159.3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400	1,036	400	△636	△61.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내역사업 ‘가명정보 제도운영’,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구분되며, 동 사업 예산은 전액 사업출연금(350-02) 형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됨.

456)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 ‘가명정보 제도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실태 모니터링,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점검·운영,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한 사업이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2) 검토의견

(1)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보호위원회는 내역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의 일환으로 2026년도부터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인데,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처리 역량 부족에 대응하여 가명정보 제공 전(全) 과정을 공신력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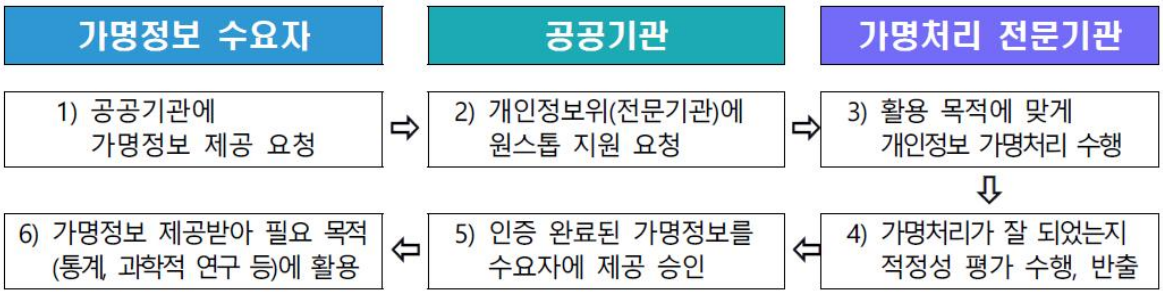
○ 최근 AI 발전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위한 역량은 부족하여 외부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실제로 가명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례가 저조한 실정이고[457], 가명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장기화[458]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57)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호위, 국가승인통계)
- 전체 797개 기관 중 최근 1년 내 가명정보 제공 경험 있는 기관은 18개뿐(2.3%)
- (주요 애로사항) 기술지원 부족(60.3%), 전문인력 부족(56.8%), 예산 부족(41.2%)

○ 이에 보호위원회는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가명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기관에 보호위원회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및 행정부담 축소를 도모하고자 함.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주요내용>

구분	내용
운영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처리 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위탁 (예산 출연)
지원 서비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제공하기 위한 전(全) 과정 지원 ① 가명·익명처리 : 공공데이터를 위탁받아 직접 가명(익명)처리 수행 ② 적정성 평가 : 안전하게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적정성 평가 수행
지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총 797개)
지원 절차	공공기관에 가명정보 제공 요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전문기관을 통해 원스톱 지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58)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시 소요되는 기간: 건당 평균 310일
(보호위원회, 2021~2024년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사례 분석결과)

□ 다만,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외부기관 위탁·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2조[459]에 따라 법률상 출연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지원 사무에 대한 출연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개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호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의 위탁 및 출연의 근거 역시 미흡한 상황임.

〈보호위원회의 사무 위탁 및 출연 관련 근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459)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각 목 생략>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사업 추진 시 가명정보 처리 지원 업무를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위탁·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원스톱 서비스 예산안 편성 시 5인의 가명처리 전문가 및 4인의 적정성 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간 총 3,280건의 가명처리 및 반출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목표건수(3,280건)는 현재까지 가명정보 처리·제공 실적이 전무한 공공기관(656개[460])이 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되는 가명정보 등 관련 실적[461] 일부를 달성하기 위한 가명처리 소요를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산출한 건수임.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운영 예산 및 목표 처리건수>

○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예산: 936,000천원
・가명처리 : 5명×8,742천원×12월=524,500천원
・적정성평가 : 4명×8,573천원×12월=411,500천원
※ 절차 : ①데이터 선별 → ②식별 위험성 검토 → **③가명처리** → **④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⑤반출
○ 연간 처리 목표건수: 3,280건으로 예상(656기관* x 5건)**
* 2025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전체 797개 中 가명정보 처리·제공 경험이 전혀 없는 656개 공공기관이 새롭게 가명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조사-국가승인통계)
** 실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가명정보 결합 건수 등을 감안한 가명처리 수요로 산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462] 시 기관이 가명정보 등 관련 가점을 최대로 취득하려면 총 10건의 가명정보 제공 또는

460) 전체 대상기관(797): 중앙행정기관(51),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시도교육청(17), 지정공공기관(327), 지방공기업(159)

461) 2025년부터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 포함(건당 1점, 총 10점)
보다 구체적으로, 만점인 10점을 획득하려면 공공기관 대상 5건, 민간 대상 5건을 제공·공유하여야 함.

462)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운영 개요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

합성데이터 개방[463]을 수행하여야 하며, 2026년도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예산안에는 지금까지 가명정보 처리·제공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656개)들이 기관당 평균 5건의 가명정보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액이 편성되었음.

○ 가명처리 제공 관련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만큼 2026년도에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 활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요는 예산액 추계의 기반이 된 기존 처리 실적이 없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자체 처리 경험이 있는 기관들로부터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정된 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이전에 기관별 기존 가명정보 처리 실적, 자체 수행 역량, 데이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신청 소요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업무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 권한과 책임 하에 수행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

463)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대상)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된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건
▸개방: 국민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반복적으로 보호위원회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처리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개별 기관의 영구적인 의존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제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내역사업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의 내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464]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동 내내역사업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2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관련 예산 산출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0,000	○ **사업출연금(350-02) : 810,000천원** **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 810,000천원** = 370,000천원(구축지원) + 440,000천원(운영지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 : 370,000천원 = 1개 기관×37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지원 : 440,000천원 = 2개 기관×22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설 운영, 운영심사 등 지원	810,000 <신규>	○ **사업출연금(350-02) : 3,702,000천원** **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지원 : 810,000천원** = 370,000천원(구축지원) + 440,000천원(운영지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 : 370,000천원 = 1개 기관×37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지원 : 440,000천원 = 2개 기관×220,000천원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시설 운영, 운영심사 등 지원 **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 2,892,000천원** = 604,000천원(클라우드 전환) + 2,288,000천원(허브 구축) ·클라우드 전환 지원 : 604,000천원 = 2개 기관x302,000천원 ·연계 허브 구축 : 2,288,000천원 = 1식x2,288,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란 제로트러스트[465]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연구자 등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되

464) 2024년도 신규 편성 당시 명칭은 ‘개인정보 안심구역’이었으나, 2025년부터 명칭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변경함.

465)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 검증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고, 이노베이션 존 내에 보관·활용되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재사용이 가능하며[46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PET[467])의 실증을 위하여 보호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심의·검증[468]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상반기 중 공모방식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지정하여 가명정보 이용계획·분석결과물 등에 대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관 중 1곳에 대하여는 보안장비·인프라·SW 구축비, 담당인력 인건비 등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존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안심구역[469],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부처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466) 기존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보관·활용되고 있는 가명정보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 내로 제공받아 다른 목적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전제조건: ❶「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내 활용, ❷ 원 보유기관과의 협의 ❸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❹ (필요시) 처리 목적·환경에 따른 추가 가명처리

467)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통칭함

468) 개별 신청 프로젝트 건마다 개인정보위가 직접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7인)를 구성하여 처리 목적·방법·위험성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해당 심의위원회의 반출심사를 받은 뒤 반출하게 됨.

469)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2021년 법적 근거 마련 이후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중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런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기준 총 5개 기관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말 추가 이용 계획이 있는 5건을 제외할 경우 2025년도 이노베이션 존 평균 이용실적은 기관당 약 2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및 운영 현황>

구분	1차 지정		2차 지정		
	국립암센터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유형	국비지원형	자체구축형	자체구축형	자체구축형	국비지원형
지정일	2023. 12. 27.	2023. 12. 27.	2024. 7. 2.	2024. 7. 2.	2024. 7. 2.
운영일	2024. 7. 12.	2024. 3. 28.	2024. 12. 17.	2024. 12. 31.	2025. 3. 10.
중점분야	보건의료	국가통계	사회복지	정밀의료	국토교통
위치	경기 고양	대전 서구	서울 광진	강원 춘천	경북 김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이용 현황(2025년 10월 기준)>

(단위: 건)

구분		국립암센터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합계
24년	내부	4	-	-	-	-	4
	외부	-	1	-	-	-	1
		4	1	-	-	-	5
25년 8월	내부	4	-	-	-	2	6
	외부	1	(1)	2(1)	(3)	2	5(5)
		5	(1)	2(1)	(3)	4	11(5)

주) ( ): 연도 내 추가 이용 예정 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년도 이노베이션 존 예산 신규 편성 당시 실시하였던 예상 수요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총 5개 기관의 연간 예상 이용건수가 총 36건으로 기관당 연평균 7.2건에 이르렀으나, 사업 개시 이후 실제 이용신청 건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470] 지정신청 예상 수요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471]>

구분	공적기관			민간기업	
	국립암센터	통계청	NIA	SK주식회사	LG CNS
연간 예상 이용건수	15건	6건	6건	6건	3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특히,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기관 중 통계청과 더온비즈온의 경우 2025년 10월 현재까지 2025년도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들의 이용실적이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호위원회는 이노베이션 존 지정 해지[472]를 포함하

470) 수요조사 당시 공식명칭은 '개인정보 안심구역' 이었음.
471) 2023. 9. 6.~2023. 10. 3. 실시
472)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 준비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p.29
□ 개요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이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지 할 수 있음
- 다만, 해지사유①과 해지사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함

□ 해지 사유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해산·폐업하는 등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운영기관이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위한 협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여 사업 목적 달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구축’ 예산 28억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이노베이션 존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개별 운영중인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 허브를 도입하려는 것임.

○ 해당 신규 정보화사업은 데이터 분석 환경의 효율성·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운영중인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구축 사업 예산(28억 9,200만원)이 연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구축 및 운영지원 예산(8억 1,000만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473].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저조한 이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신규 정보화 사업이 이노베이션 존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수요 확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할

473) 참고로 동 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이기는 하나 연차별 시스템 구축 소요가 아닌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SW/HW) 구매 등 단년도에 종료되어 별도의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되어 ISP 수립을 생략하였음.

수 있도록 투자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가명정보 활용 수요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474]을 수립·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74)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모델을 수립하여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명정보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475]: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및 보호위원회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연계 교과목 개설, 실습 등을 통하여 석·박사급 개인정보 보호·활용 인력 배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	3,000	순증	순증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개인정보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정보 법·기술 정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30억원, 2027~2030년도 각 연 40억원의 예산액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475) 세부사업: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1033-309)

○ 기존에는 교육부의 “혁신인재양성” 사업[476][477]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대학 학부과정 신설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 2월부로 해당 재정지원은 종료되었음.

-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유지·운영하고 있음[478]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기 양성된 학부 인력을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동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교육부 혁신인재양성 사업 지원으로 개설된 개인정보보호 학부과정 현황>

구 분	대상 학교명	25학년도(2025.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과 및 전공명 현황
1기 (2022. ~2025. 2.)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개인정보보호 전공
2기 (2023. ~2025. 2.)	고려대	개인정보보호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 전공
	중앙대, 한라대(컨소시엄)	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AI정보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강원대, 강릉원주대(컨소시엄)	사이버보안학과(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융합보안학과 內 개인정보보호 가상학과(석사)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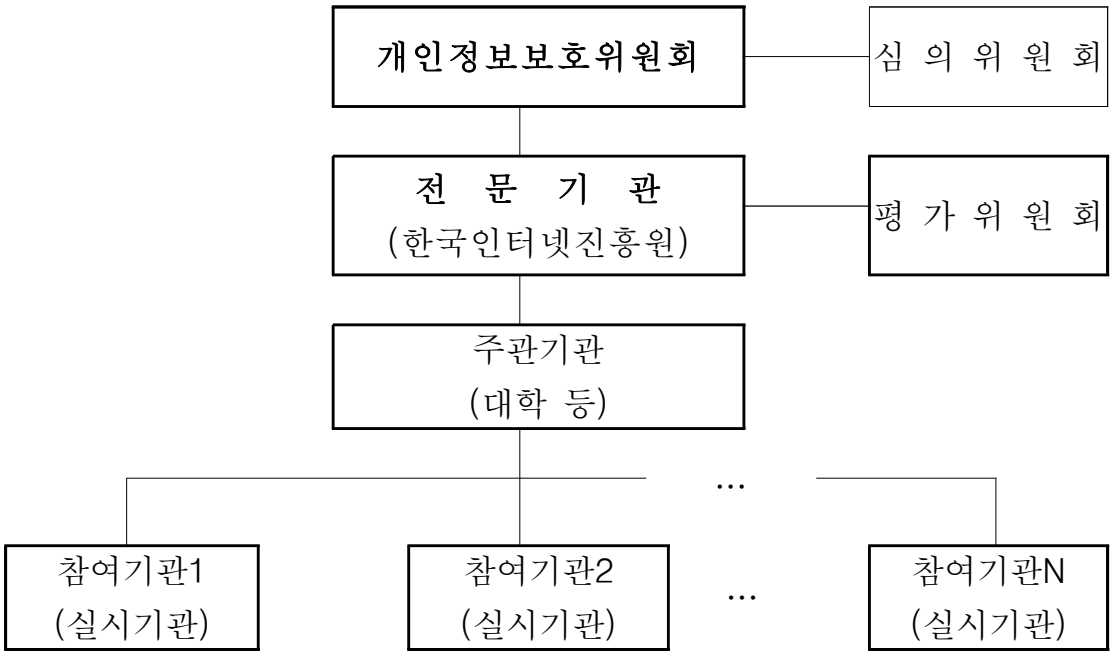
476)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교육부) 개요
- ◆ (목적)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 대학 특성화 지원(2024년 25억원)
- ◆ (기간) 2022.3.~2025.2.(3년)
- ◆ (대상) 국내 4년제 대학 중 총 5개교(서울여대,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 ◆ (내용) 전공개설, 교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실습환경 및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및 취·창업 역량 강화

477)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기간(3년) 종료 후 2025년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개편되었음.

478) - 서울여대는 부·복수 전공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 학과 지속 운영
- 한라대는 정부지원 종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과정 운영 종료
- 강원대는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영역으로 개인정보 보호 과정 명맥 유지
-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는 기 개설된 과정은 우선 운영할 계획

○ 사업 예산은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금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며, 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2개교를 공모·선정하여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계획임.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 추진체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연구기획보고서)

2) 검토의견

□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개발 및 표준 선점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인력 양성은 학부 수준의 기초 교육 및 재직자 교육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히, 과징금 처분 기준 강화[47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자격요건 법제화[480]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이슈 등으로 인해 공공·민간 부문 전반에서 법률·기술·경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형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됨에 따라 인공지능, 가명·익명처리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동 R&D 사업은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석·박사급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47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3.): 과징금 부과금액 상한 기준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함.

48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24. 3.):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CPO로 지정하여야 함.

□ 먼저, 동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R&D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안기술을 포괄하는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호위원회는 본 사업만의 특화된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차별화된 교과목 발굴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481].

○ 참고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482]” 사업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산학협력 기반의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부과정 교육기반 강화 및 직무중심[483]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선도기술핵심인재양성(R&D)[484]”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대학, 기업, 지역 등이 연계하여 융합인재, 지역인재, 글로벌인재 등 ICT 유망·핵심기술 분야의 석·박사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내역사업

481) 동 사업의 사전기획보고서(보호위원회 연구용역, 2025. 5.)에서도 타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으로서의 추진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원 범위 중 데이터보안, AI보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범위와의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내 법·제도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전 컨설팅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482)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33-308)

483) <직무별 특성화 목표(택 1)>

특성화 목표	주요/연관 직업명
① 정보보호관리·운영	**보안시스템·정책 관리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② 보안사고분석대응	**침해대응 전문가,** 침해**사고 분석가, 보안관제** 등
③ 보안SW개발	**보안SW개발자**, **보안엔지니어링** 등

484)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디지털선도기술핵심인재양성(R&D)(2133-301)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을 통해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공 과정(학부 및 석사)은 고려대학교 등 5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반면 일반 정보보안·보호 관련 전공 과정은 이미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 수십 여개의 대학에서 운영 중인 상황인데, 보호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일반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 정보보안 관련 학과·전공 내 개인정보 보호 교과과정을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의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검토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과 개설 현황>

학교명	학과/전공명	비고
고려대학교	개인정보보호대학원(특수대학원)	석사
	개인정보보호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학부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석사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개인정보보호 전공	학부
한라대학교	AI정보보안학과 개인정보보호 전공	학부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 전공	학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고로 현재 정보보호 대학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정책, 암호화 기술·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목과 일부 부분이 중첩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개인정보 교육과정과 정보보호 대학원 교과목간 비교>

	개인정보 교육과정 필수 교과목[1]	정보보호 대학원 내 개인정보 관련 교과목[2]
법령 관련	①개인정보보호법, ②신용정보보호법, ③해외 법제도(GDPR 등)	정보보호법제, 사이버법률, 법률과 정책론, 개인정보보호정책
제도 관련	④개인정보보호제도 (관리수준진단,상시평가제), ⑤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⑥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 내부관리계획), ⑦ISMS-P 인증제	정보보호이론,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개론,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체계론, 암호수학 등
기술 관련	⑧가명/익명정보 기술	-
	⑨영상정보처리기술	-
	⑩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보안공학, 접근제어, 위험관리
	⑪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현대 암호학, IT 융합 보안, 전자서명
	⑫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기술	-
	⑬차세대 개인정보보호기술 * AI, 생체정보, 위치정보, 클라우드 등 신기술별 보호대책	생체인증, 프라이버시 향상기술 등
	-	정보보호 기술개론

주1) 개인정보위 연구용역 결과(2021) 도출된 13개 필수 과목(CPO 등 실무자용)
주2)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2023) 교과목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목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연구기획보고서)

○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관리자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위 과정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동 R&D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배분계획에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예산은 보호위원회의 일반예산 사업인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당 예산을 일반예산 사업과 R&D 사업에 각각 편성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간 집행 및 성과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연도별 사업비 세부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건비	390	540	540	600	600
커리큘럼 개발 운영	130	200	200	230	230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	0	350	500	500	500
시설 개선비	300	300	200	200	200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400	200	150	60	60
국제화 프로그램	80	150	150	150	150
사업운영비(간접비)	140	180	180	180	180
합 계	**1,440**	**1,920**	**1,920**	**1,920**	**1,9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에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 관련 예산 총 4억원(=2억원×2개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 내 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존을 별개의 사업을 통해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경우 사업 중간점검, 최종 성과평가 등 사업 관리 측면 및 클라우드 및 연계허브 구축 등 관련 시스템 운영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간 연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485].

485) 참고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담당부서는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개인정보 보

○ 추가적으로, 보호위원회는 학교 내 이노베이션 존 이용대상자를 해당 대학 학생으로 한정할지, 기존 이노베이션 존과 같이 기업·연구자 등 일반을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차년도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결론적으로, 보호위원회는 동 신규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일반 정보보안·보호 교과목의 심화·발전 가능성 검토 등 동 사업의 고유한 영역 확보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특화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보호위원회 소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사업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사업의 담당부서는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로 상이함.